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박종철 박영호
손기웅 전성훈
최수영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통일연구원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박종철 박영호
손기웅 전성훈
최수영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통일연구원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인 쇄 2005년 12월

발 행 2005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남북관계연구실

등 록 제2-2361호 (97.4.23)

주 소 (142-887)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3 (팩시밀리) 901-2543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가 격 9,000원

© 통일연구원, 2005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 박종철, 박영호, 손기웅, 전성훈, 최수영.

— 서울 : 통일연구원, 2005

p. ; cm. — (연구총서 ; 05-22)

참고문헌수록

ISBN 89-8479-299-3 93340 : ₩9,000

336.0911-KDC4

331.095193-DDC21

CIP2005002696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목적	3
2. 연구내용	4
3. 연구방법	5
II. 북한관련 인식	9
1. 북한에 대한 인식	11
2. 북한의 변화 정도	13
3. 북한의 핵개발 이유	15
4. 북한의 핵무기 보유선언	17
5.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18
6. 새터민에 대한 감정	20
III. 통일관련 국제환경 인식	29
1. 통일에 우호적인 주변국	31
2. 2010년 한국의 우호 국가	34
3. 통일을 위한 협력 국가	41
4. 한·미동맹이 통일에 미치는 영향	44

IV. 대북정책관련 인식	55
1. 평화번영정책 평가	57
2. 평화번영정책과 햇볕정책 비교	58
3. 대북지원 및 경험 평가	60
4. 대북정책의 문제점	65
5. 대북정책의 주안점	67
6.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원칙의 효과	68
7. 북핵문제 해결에서 한·미공조의 중요성	70
8. 북핵문제 악화시 남북관계	72
V. 국민적 합의형성관련 인식	93
1. 통일의 당위성	95
2. 통일이 필요한 이유	96
3. 통일의 기대 이익	98
4. 통일 대비 국내적 기반 조성 과제	100
5. 통일비용 충당	102
6. 통일 후 국내 상황	105
7. 통일정책과 국민적 합의	113
8. 청소년의 통일관심 정도	116
9.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	118
10. 한국의 반미정서	120

VI. 사안별 심층 분석	145
1. 통일관련 국제환경	147
2. 북핵문제와 반미정서	152
3. 대북정책과 이념갈등	156
4. 국민적 합의형성	169
VII. 요약 및 결론	205
1. 북한관련 인식	207
2. 통일관련 국제환경 인식	209
3. 대북정책관련 인식	212
4. 국민적 합의형성관련 인식	215
5. 결론	218
부록	221
최근 발간자료 안내	239

표 목 차

<표 I-1> 응답자의 특성	8
<표 II-1> 북한에 대한 인식	23
<표 II-2> 북한의 변화 정도	24
<표 II-3> 북한의 핵개발 이유	25
<표 II-4> 북한의 핵무기 보유선언	26
<표 II-5>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27
<표 II-6> 새터민에 대한 감정	28
<표 III-1> 통일에 우호적인 주변국	47
<표 III-2> 2010년 한국의 우호 국가: 정치 분야	48
<표 III-3> 2010년 한국의 우호 국가: 안보 분야	49
<표 III-4> 2010년 한국의 우호 국가: 경제 분야	50
<표 III-5> 2010년 한국의 우호 국가: 문화 분야	51
<표 III-6> 통일을 위한 협력 국가	52
<표 III-7> 한·미동맹이 통일에 미치는 영향	53
<표 IV-①> 2003년 조사와 2005년 조사 결과 비교	66
<표 IV-1> 평화번영정책 평가	79
<표 IV-2> 평화번영정책과 햇볕정책 비교	80
<표 IV-3> 대북지원정책 평가	81
<표 IV-4> 금강산 관광사업 평가	82
<표 IV-5> 개성공단사업 평가	83
<표 IV-6> 남북경협사업 평가	84
<표 IV-7> 대북정책의 문제점	85

<표 IV-8> 대북정책의 주안점	86
<표 IV-9>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원칙의 효과	87
<표 IV-10> 북핵문제 해결에서 한·미공조의 중요성	88
<표 IV-11> 북핵문제 악화시 금강산 관광사업	89
<표 IV-12> 북핵문제 악화시 개성공단사업	90
<표 IV-13> 북핵문제 악화시 대북지원	91
<표 V-①> 2003년 조사와 2005년 조사결과 비교	98
<표 V-1> 통일의 당위성	123
<표 V-2> 통일이 필요한 이유	124
<표 V-3> 통일의 기대 이익	125
<표 V-4> 통일 대비 국내적 기반 조성 과제	126
<표 V-5> 통일비용 충당	127
<표 V-6> 통일 후 국내 상황: 정치적 민주화	128
<표 V-7> 통일 후 국내 상황: 경제성장	129
<표 V-8> 통일 후 국내 상황: 빈부격차	130
<표 V-9> 통일 후 국내 상황: 물가	131
<표 V-10> 통일 후 국내 상황: 실업문제	132
<표 V-11> 통일 후 국내 상황: 지역격차	133
<표 V-12> 통일 후 국내 상황: 주택문제	134
<표 V-13> 통일 후 국내 상황: 법치문제	135
<표 V-14> 통일 후 국내 상황: 가치관 혼란	136
<표 V-15> 통일 후 국내 상황: 국제적 위상	137

<표 V-16> 국민의견의 정부 통일정책 반영도	138
<표 V-17>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시 우선순위	139
<표 V-18> 통일정책 추진시 가장 영향력이 큰 집단	140
<표 V-19> 청소년의 통일 관심 정도	141
<표 V-20> 청소년의 통일 관심 제고를 위한 우선순위	142
<표 V-21>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	143
<표 V-22> 한국의 반미정서	144
<표 VI-1> 통일에 우호적 주변국과 한·미동맹이 통일에 미치는 영향	148
<표 VI-2> 통일에 우호적 주변국과 2010년 한국의 우호 국가: 정치분야	149
<표 VI-3> 통일에 우호적 주변국과 2010년 한국의 우호 국가: 안보 분야	150
<표 VI-4> 통일에 우호적 주변국과 2010년 한국의 우호 국가: 경제 분야	150
<표 VI-5> 통일에 우호적 주변국과 2010년 한국의 우호 국가: 문화 분야	151
<표 VI-6> 통일에 우호적 주변국과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할 국가	151
<표 VI-7> 북한의 핵보유 선언과 한국의 반미정서	153
<표 VI-8>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의 효과와 한국의 반미정서	154

<표 VI-9>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공조의 중요성과 한국의 반미정서	155
<표 VI-10> 북한에 대한 이념별 인식	156
<표 VI-11>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이념별 차이	158
<표 VI-12> “통일이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민족적 과업이라는 주장”에 대한 이념성향별 응답	159
<표 VI-13> 통일 이후 예상 변화에 대한 이념별 평가	161
<표 VI-14>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이념별 찬성과 반대의 비율	163
<표 VI-15> 구체적인 대북정책 내용에 대한 이념별 시각의 차이	164
<표 VI-16> 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한 이념별 응답	165
<표 VI-17> 북한 핵문제와 대북사업의 연계에 대한 이념 집단별 인식의 차이	167
<표 VI-18> “국민의 의견이 정부 통일정책에 반영되느냐”에 대한 이념별 응답률	168
<표 VI-19> 통일 후 정치적 민주화에 대한 전망: 연도별 비교	181
<표 VI-20> 통일 후 경제성장에 대한 전망: 연도별 비교	182
<표 VI-21> 통일 후 빈부격차에 대한 전망: 연도별 비교	183

<표 VI-22> 통일 후 물가에 대한 전망: 연도별 비교	186
<표 VI-23> 통일 후 실업문제에 대한 전망: 연도별 비교	187
<표 VI-24> 통일 후 지역격차에 대한 전망: 연도별 비교	188
<표 VI-25> 통일 후 주택문제에 대한 전망: 연도별 비교	190
<표 VI-26> 통일 후 법치문제·범죄문제에 대한 전망: 연도별 비교	192
<표 VI-27> 통일 후 가치관 혼란에 대한 전망: 연도별 비교	193
<표 VI-28> 국민적 합의에 중요한 요인: 성별	198
<표 VI-29> 청소년의 통일에 대한 관심도	201
<표 VI-30> 청소년의 북한·통일문제에 대한 태도	201
<표 VI-31> 한국사회조사연구소의 설문조사: 통일에 대한 의견	202

그림 목 차

<그림 II-1> 북한에 대한 인식	13
<그림 II-2> 북한의 변화 정도	15
<그림 II-3> 북한의 핵개발 이유	16
<그림 II-4> 북한의 핵무기 보유선언	18
<그림 II-5>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20
<그림 II-6> 새터민에 대한 감정	22
<그림 III-1> 통일에 우호적인 주변국	33
<그림 III-2> 2010년 한국의 우호 국가: 정치 분야	36
<그림 III-3> 2010년 한국의 우호 국가: 안보 분야	37
<그림 III-4> 2010년 한국과 우호 국가: 경제 분야	39
<그림 III-5> 2010년 한국의 우호 국가: 문화 분야	41
<그림 III-6> 통일을 위한 협력 국가	43
<그림 III-7> 한·미동맹이 통일에 미치는 영향	46
<그림 IV-1> 평화변영정책 평가	58
<그림 IV-2> 평화변영정책과 햇볕정책 비교	59
<그림 IV-3> 대북지원정책 평가	61
<그림 IV-4> 금강산 관광사업 평가	62
<그림 IV-5> 개성공단사업 평가	63
<그림 IV-6> 남북경협사업 평가	65
<그림 IV-7> 대북정책의 문제점	67
<그림 IV-8> 대북정책의 주안점	68

<그림 IV-9>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원칙의 효과	70
<그림 IV-10> 북핵문제 해결에서 한·미공조의 중요성	72
<그림 IV-11> 북핵문제 악화시 금강산 관광사업	75
<그림 IV-12> 북핵문제 악화시 개성공단사업	76
<그림 IV-13> 북핵문제 악화시 대북지원	78
<그림 V-1> 통일의 당위성	96
<그림 V-2> 통일이 필요한 이유	98
<그림 V-3> 통일의 기대 이익	100
<그림 V-4> 통일 대비 국내적 기반 조성 과제	102
<그림 V-5> 통일비용 충당	104
<그림 V-6> 통일 후 국내 상황: 정치적 민주화	106
<그림 V-7> 통일 후 국내 상황: 경제성장	107
<그림 V-8> 통일 후 국내 상황: 빈부격차	107
<그림 V-9> 통일 후 국내 상황: 물가	108
<그림 V-10> 통일 후 국내 상황: 실업문제	109
<그림 V-11> 통일 후 국내 상황: 지역격차	110
<그림 V-12> 통일 후 국내 상황: 주택문제	110
<그림 V-13> 통일 후 국내 상황: 법치문제	111
<그림 V-14> 통일 후 국내 상황: 가치관 혼란	112
<그림 V-15> 통일 후 국내 상황: 국제적 위상	113
<그림 V-16> 국민의견의 정부 통일정책 반영도	114
<그림 V-17>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시 우선순위	115

<그림 V-18> 통일정책 추진시 가장 영향력이 큰 집단	116
<그림 V-19> 청소년의 통일 관심 정도	117
<그림 V-20> 청소년의 통일 관심 제고를 위한 우선순위	117
<그림 V-21>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	120
<그림 V-22> 한국의 반미정서	122
<그림 VI-1> 통일 후 분야별 전망 변량분석(ANOVA): 1992년 조사	178
<그림 VI-2> 통일 후 분야별 전망 변량분석(ANOVA): 2003년 조사	178
<그림 VI-3> 통일 후 분야별 전망 변량분석(ANOVA): 2005년 조사	179
<그림 VI-4> 시민참여와 자치역량의 스펙트럼	196

I

서론*

1. 연구목적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남북장관급 회담을 비롯한 각종 실무회담이 개최되었으며 개성공단사업, 남북철도·도로 연결 등이 진행되고 있고, 금강산 육로관광이 정례화됨으로써 북한을 찾는 관광객의 수는 2005년 6월 백만 명을 돌파하였다. 또한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종 교류·협력이 진행됨으로써 남북관계가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관계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의 서해 교전과 대포동 미사일 시험발사 등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지속되고 있음을 상기시킨다. 또한 2002년 부시 행정부가 ‘악의 축’으로 북한을 지목함으로써 경색되기 시작한 북·미관계는 2002년 10월 북한의 농축핵 프로그램 개발문제 대두, 2003년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로 긴장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다행히 2005년 9월 19일 발표된 6자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북핵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했으나, 한편으로는 핵개발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교류·협력을 진행하는 북한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는 대북정책의 수립과 추진 상에도 많은 혼선과 어려움을 가져왔다.

특히, 북한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은 ‘남남갈등’이라고 일컬어지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6·15 및 8·15 공동행사, 대북지원 등을 통해 남북화해를 모색하고 한 ‘민족’으로서의

* 본 조사연구의 자료정리와 교정을 위해 김인숙 연구원, 박소영 석사, 김민영이 수고하였음.

중요성을 강조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정권에 대한 강한 비판과 국방·안보 및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북한의 의도 및 대북인식에 대한 인식 상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남남갈등과 한·미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국민들이 북한 변화, 국제적 환경, 북핵 문제, 정부의 대북정책 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본 조사는 통일문제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 국민의 여론을 파악·수렴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평가를 토대로 정부의 대북정책 수립 및 실행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2005년도 국민여론조사는 통일문제 관련 사항을 북한관련 인식, 통일관련 국제환경 인식, 대북정책 및 북핵문제에 대한 인식, 국민적 합의에 대한 인식 등 네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제2장 북한관련 인식에서는 북한에 대한 인식(문1), 북한의 변화 정도(문2), 북한의 핵개발 이유(문3), 북한의 핵무기 보유선언(문4),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문5), 새터민에 대한 감정(문6), 제3장 통일관련 국제환경 인식에서는 통일에 우호적인 주변국(문7), 2010년 한국의 우호 국가(문8), 통일을 위한 협력 국가(문9), 한·미동맹이 통일에 미치는 영향(문10) 등에 대해서 물어 보았

다. 그리고 제4장 대북정책관련 인식에서는 평화번영정책 평가(문11), 평화번영정책과 햇볕정책 비교(문12), 대북지원 및 경험 평가(문13), 대북정책의 문제점(문14), 대북정책의 주안점(문15),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원칙의 효과(문16), 북핵문제 해결에서 한·미공조의 중요성(문17), 북핵문제 악화시 남북관계(문18)에 대해 질문하였다. 제5장 국민적 합의형성관련 인식에서는 통일의 당위성(문20), 통일이 필요한 이유(문21), 통일의 기대이익(문22), 통일 대비 국내적 기반 조성 과제(문23), 통일비용 충당(문24), 통일 후 국내 상황(문25), 통일정책과 국민적 합의(문26, 27, 28), 청소년의 통일관심 정도(문29, 30),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문31), 한국의 반미정서(문32)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리고 제6장에서는 2, 3, 4, 5장에서의 분석을 토대로 사안별로 심층 분석을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 통일관련 국제환경, 북핵문제와 반미정서, 대북정책과 이념갈등, 국민적 합의형성에 대해서 중요 쟁점이 되는 사항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방법

이 여론조사는 2004년 12월 말 주민등록상의 인구를 기준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서울특별시, 6개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및 8개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가운데 성·연령·지역별비례할당표집에 의해 추출된 1,000명을 조사대상자로 하여 다단계 지역 무작위 추출법(multi-stage area sampling)을 사용하여 실시되었다. 실제의 표집은 다음과 같은 4

단계로 이루어졌다.

1단계에서는 ‘2004 주민등록통계’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및 6개 광역시와 8개도에서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성·연령·지역별 인구비율에 따라 표본수를 배분하였다. 2단계에서는 읍·면을 선정하고, 3단계에서는 동에서는 통반을, 읍·면에서는 리를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에 따라 전국에서 99개의 최종표집단위를 선정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최종표집단위인 반과 리에서 성별 및 연령에 근거하여 할당량을 부여하는 할당표집방법을 택하여 각 표집단위별로 12명 내외의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조사대상자가 부재시 또는 응답을 거절할 경우 동일 지역 내에서 성별, 연령 등이 같은 다른 응답자로 대체하였다.

설문작성은 먼저 조사에 앞서 분야별로 조사항목을 정한 다음 분야별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설문을 작성하였으며, 사회조사 연구의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게 이에 대한 기술적 문제를 검토하게 하였다. 그리고 2005년 5월 초 연구원내에서 자체 예비조사(pre-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항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문을 간결하고 쉬운 용어로 수정하여 최종 문항을 확정하였다.

본 조사는 2005년 6월 22일부터 7월 30일까지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의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주)현대리서치연구소의 주관 아래 현지조사를 통해 실시되었다. 조사방법으로는 면접원의 가구방문에 의한 1:1 면접조사가 사용되었다.

표집된 자료는 응답내용의 논리성 및 범위 검토와 Editing-Coding-Key-in-Programming 과정을 거쳐 통계패키지인 SPSS

PC+(ver 8.0)에 의해 처리되었다. 항목별로 기본빈도(frequency)를 구하고,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도시규모, 지역, 본인소득, 가구소득, 고향, 북한친척유무 등 배경변수와 교차분석(cross-tabulation)하여 조사결과를 분석하였다.

이 여론 조사에서 사용된 교차분석은 $P < 0.05$ 의 유의도가 있는 것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결과의 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pm 3.1\%$ 를 넘지 않는다.

본 여론조사는 만 19세 이상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표집된 1,000명은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이러한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대표한다. 현지조사 결과 총 1,000개의 설문지는 모두 회수되었다. 여론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약간의 편차는 있으나 2004년 12월말 주민등록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모집단의 특성을 대체로 잘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표 I-1> 응답자의 특성

구분		표본수(명)	구성비(%)
전체		1000	100.0
성별	남성	490	49.0
	여성	510	51.0
도시규모	서울/광역시	485	48.5
	중소도시	413	41.3
	읍면	102	10.2
연령	20대	216	21.6
	30대	218	21.8
	40대	235	23.5
	50대	165	16.5
	60대 이상	166	16.6
학력	고졸이하	518	51.8
	전문대학	90	9.0
	4년제 대학	358	35.8
	대학원 이상	34	3.4
직업	전문직	73	7.3
	공무원 및 사회단체	20	2.0
	기업체/은행/금융업	82	8.2
	판매/서비스직	125	12.5
	생산직	48	4.8
	농어민	59	5.9
	학생	132	13.2
	주부	300	30.0
	무직/기타	161	16.1
지역	서울	221	22.1
	부산/울산/경남	158	15.8
	대구/경북	115	11.5
	인천/경기	253	25.3
	광주/전라	114	11.4
	대전/충청	102	10.2
	강원	37	3.7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317	31.7
	200-299만원	281	28.1
	300-399만원	270	27.0
	400만원 이상	132	13.2

II

북한관련 인식

1. 북한에 대한 인식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과 관련하여 “귀하는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 질문에 대해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한 응답자가 전체의 41.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지원대상’으로 23.1%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전체 응답자의 2/3 정도(64.9%)는 북한을 협력 또는 지원 대상이라고 여기는 등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인 ‘경계대상’은 20.9%, ‘적대대상’은 10.2%로 나타났다. 한편 북한을 비교적 중립적으로 바라보는 ‘경쟁대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는 4%에 불과해 더 이상 북한이 우리의 경쟁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인식은 성별, 연령, 학력 등 배경변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남자보다는 여자가 북한을 다소 긍정적인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 66.5%가 북한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반해 남자의 경우에는 63.3%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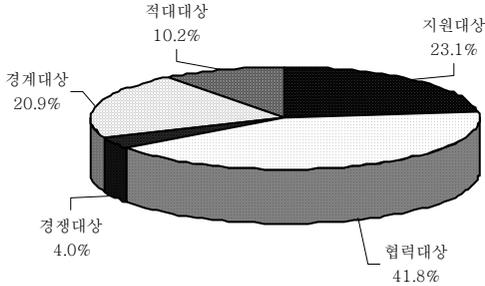
연령별로 북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30대의 경우 7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40대(67.5%)와 20대(67.1%)로 나타났다. 50대와 60대 이상의 경우 북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각각 61.2%, 53.6%로 나타나 30대부터는 나이가 많을수록 북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력의 경우 북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고졸 이하 58.9%, 전문대학 64.4%, 4년제 대학 72.4%, 대학원 이상 79.4%로 나타나 학력과 북한에 대한 인식 사이에는 뚜렷한 경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학력이 높을수

록 북한을 더욱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와 본 연구원이 실시한 과거 여론조사의 비교를 통해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조사시점 및 남북관계의 진전 등에 따라 상당히 유동적임을 알 수 있다. 1994년도 조사시 긍정적 인식은 59.6%(‘도와주어야 할 대상’ 39.2%, ‘대등한 협력대상’ 20.4%)였다. 그러나 1995년 조사에서는 긍정적 인식(‘지원대상’ 11.7%, ‘협력대상’ 25.2%)은 36.9%로 낮아졌고, 부정적 인식(‘경계대상’ 43.7%, ‘적대대상’ 15.9%)이 59.6%로 높아졌다. 이것은 대북 쌀지원 과정에서 보여준 북한의 비상식적인 돌출행동이 국민들을 자극하였고 그 결과 전반적인 남북관계가 경색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후 1998년 조사에서도 긍정적 인식은 37.2%, 부정적 인식은 54.4%로 나타나 1995년 조사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렇지만 2003년도 조사에서는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해 긍정적 인식(‘협력대상’ 38.2%, ‘지원대상’ 16.2%)은 55.4%, 부정적 인식(‘경계대상’ 28.6%, ‘적대대상’ 12.5%)은 41.1%로 나타났다. 이번 2005년 조사결과는 북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더욱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북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있는 금강산 관광사업, 개성공단사업, 철도·도로 연결사업과 같은 3대 남북 경협사업의 순조로운 진행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그림 II-1> 북한에 대한 인식



2. 북한의 변화 정도

모든 사회가 항상 어느 정도 변화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다른 국가와는 달리 북한의 변화는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이런 북한의 변화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최근 2~3년 동안 개혁·개방과 관련하여 북한이 어느 정도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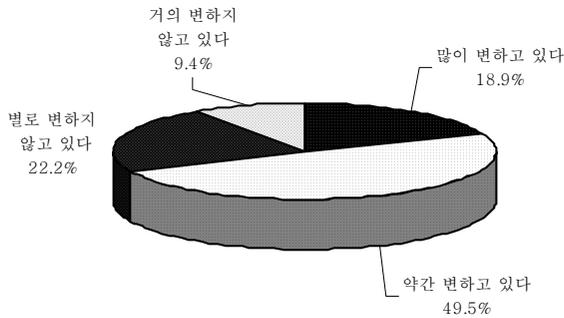
이 질문에 대해 ‘많이 변하고 있다’와 ‘약간 변하고 있다’는 응답이 각각 18.9%, 49.5%였고, 반면 ‘별로 변하지 않고 있다’와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각각 22.2%, 9.4%였다. 따라서 북한의 변화 정도에 대해 변하고 있다는 응답자(68.4%)가 변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자(31.6%)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수별로 보면 성별, 직업, 본인소득, 고향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 응답은 남성(70.6%)이 여성(66.3%)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직업에서는 전문직(80%)과 판매·서비스직(80.8%)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 북한이 가장 많이 변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본인소득과 관련해서는 소득(‘120만원 이하’ 66.4%, ‘120~199만원’ 72.4%, ‘200만원 이상’ 73%)이 높을수록(본인소득이 없는 경우 제외) 북한의 변화 정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향이 경기·인천(74%) 및 광주·전라(75.6%)인 사람들이 북한의 변화 정도를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해외·이북·기타(57.9%)인 경우가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설문내용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2003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볼 때 이번 조사결과에서 우리 국민들은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데 더욱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조사결과는 변하고 있다가 60.6%(‘많이 변하고 있다’ 16.1%, ‘약간 변하고 있다’ 44.5%), 반면 변하지 않았다가 39.4%(‘별로 변하지 않았다’ 28.2%, ‘거의 변하지 않았다’ 11.2%)였다. 1999년 여론조사에서는 북한이 변하고 있다가 65.6%(‘많이 변하고 있다’ 12.1%, ‘약간 변하고 있다’ 53.5%)였고, 변하지 않았다가 28.2%(‘별로 변하지 않았다’ 19.3%, ‘거의 변하지 않았다’ 8.9%)였다. 2005년도 조사는 1999년도 조사와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림 II-2> 북한의 변화 정도



3. 북한의 핵개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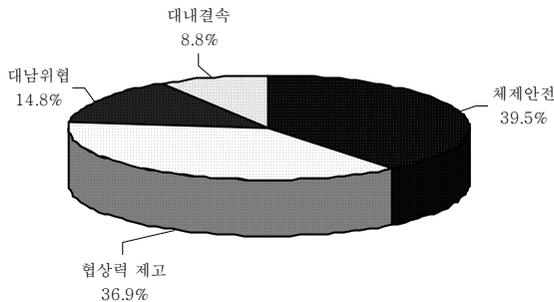
북한의 핵개발 문제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및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북한의 핵개발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북한이 핵개발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체제안전’, ‘협상력 제고’, ‘대남위협’, ‘대내결속’ 등 4가지 이유를 제시하였다.

이 질문에 대해 북한이 ‘체제안전’을 위해 핵개발을 한다는 응답자가 39.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협상력 제고’로 36.9%를 차지하였다. ‘대남위협’과 북한의 ‘대내결속’이 이유라는 응답은 각각 14.8%, 8.8%로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만 놓고 보면 국민들 다수는 북한의 핵개발이 우리에게 위협적이라기보다는 북한 자체의 생존과 이익 때문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 이유와 관련해서 학력과 직업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4년제 대학 및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은 응답자보다 ‘체제안전’ 및 ‘협상력 제고’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4년제 대학 학력자의 40.5%, 대학원 이상 학력자의 50%가 북한의 핵개발 이유를 ‘체제안전’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협상력 제고’라는 응답은 4년제 대학 학력자의 43.6%, 대학원 이상 학력자의 41.2%로 나타났다.

직업에 따라서는 북한의 핵개발 이유에 대해 다소간 편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체제안전’에 대해서는 기업체·은행·금융업 종사자가 47.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생산직 41.7%, 판매·서비스직 41.6%, 전문직 41.1%로 나타났다. ‘협상력 제고’라는 응답은 전문직과 학생에서 각각 42.5%, 4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농어민의 경우 ‘체제안전’ 32.2%, ‘협상력 제고’ 30.5%, ‘대남위협’ 23.7%, ‘대내결속’ 13.6%로 응답하여 전체 응답자와 비교해 볼 때 가장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II-3> 북한의 핵개발 이유



4. 북한의 핵무기 보유선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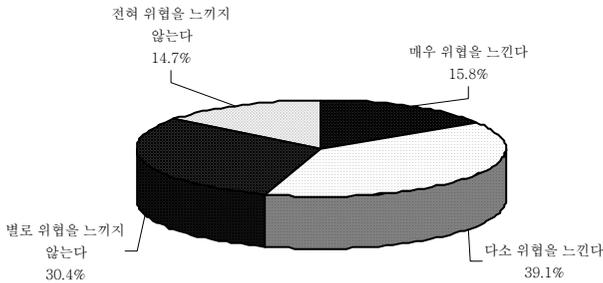
북한의 핵무기 보유 여부 및 보유하고 있다면 몇 개 정도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선언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위협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귀하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선언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 ‘매우 위협을 느낀다’는 응답이 15.8%, ‘다소 위협을 느낀다’는 응답이 39.1%로 북한의 핵보유 선언에 대해 위협을 느낀다는 응답이 54.9%를 차지하였다. ‘별로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과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은 각각 30.4%와 14.7%로 나타나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는 인식이 45.1%를 차지하였다. 북한의 핵보유 선언에 대해 위협을 느끼는 국민들이 그렇지 않은 국민들보다 약 10%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배경변수별로는 성별, 연령, 직업, 본인소득, 고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핵무기 보유선언에 대해 여성(58%)이 남성(51.6%)보다 더욱 위협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위협을 느낀다는 응답은 60대 이상(64.5%)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20대(56.5%)였다. 30대와 40대의 경우에는 위협을 느낀다는 응답이 비슷하였다. 직업에 따라서 위협을 느낀다는 응답은 주부(62%)가 가장 높았고, 공무원 및 사회단체(60%), 농어민(57.6%), 기업체·은행·금융업(57.3%), 학생(56.1%)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생산직과 판매·서비스직에서는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이 각각 60.4%, 59.2%로 나타나 위협을 느낀다는 응답보다 높았다. 본인소득(소득 없음 제외)에서는 소득이 낮을수록 위협을 느낀다

는 응답비율(120만원 미만 58.2%, 120~199만원 53.3%, 200만원 이상 45%)이 높았다. 고향이 해외·이북·기타(68.4%), 대전·충청(62.7%), 부산·울산·경남(58.5%), 대구·경북(57.6%), 서울(56.7%) 순으로 위협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광주·전라와 강원이 고향인 경우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이 각각 55.6%, 54%를 차지하였다.

<그림 II-4> 북한의 핵무기 보유선언



5.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귀하는 북한이 남한을 무력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북한 정권의 무력도발 감행 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이에 대해 북한이 무력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은 43%(‘매우 많다’ 7.2%, ‘약간 있다’ 35.8%), 가능성이 없다는 응답은 57%(‘별로 없다’ 35.7%, ‘전혀 없다’ 21.3%)로 나타나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없다는 응답이 있다는 응답보다 14%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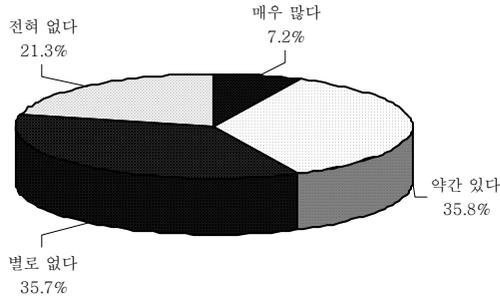
배경변수별로 살펴보면 성별, 연령, 직업, 도시규모, 본인소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성의 경우 가능성이 있다(48.4%)와 없다(51.6%)의 응답비율에서 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 가능성이 없다(62.7%)는 응답이 가능성이 있다(37.3%)는 응답보다 훨씬 높았다. 연령에 있어서는 가능성이 없다는 응답은 30대(64.2%), 40대(60%), 50대(59.4%), 60대 이상(54.2%), 그리고 20대(46.8%) 순으로 나타났다. 20대를 제외한다면 나이가 적을수록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직업의 경우 가능성이 없다는 응답은 판매·서비스직(72.8%), 기업체·은행·금융업(69.5%), 생산직(68.8%), 전문직(60%), 농어민(57.6%) 등이 전체 응답 평균보다 높았고, 무직·기타(55.3%), 주부(49.3%), 학생(45.5%) 등에서 낮았다. 이 결과만 가지고 본다면 뚜렷한 직업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도시규모가 작을수록 무력도발 가능성이 없다는 응답(서울·광역시 54.4%, 중소도시 59.3%, 읍면 59.8%)이 높았다. 본인소득과 관련해서 무력도발 가능성이 없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무소득(41.8%)과 120만원 미만(52.8%)에서 낮았고, 120~199만원(70.5%)과 200만원 이상(68.7%)에서 높았다.

설문 내용과 응답 내용에 있어 다소간 차이가 있지만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 2005년 조사결과는 과거 조사결과와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전쟁도발 가능성이 없다는 응답은 1995년 45.3%, 1998년 38.9%, 1999년 50.8%, 2003년 39.9%였다. 지난 10년을 통해 이번 2005년의 조사결과가 북한의 전쟁도

발 가능성을 가장 낮게 평가하고 있다.

<그림 II-5>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6. 새터민에 대한 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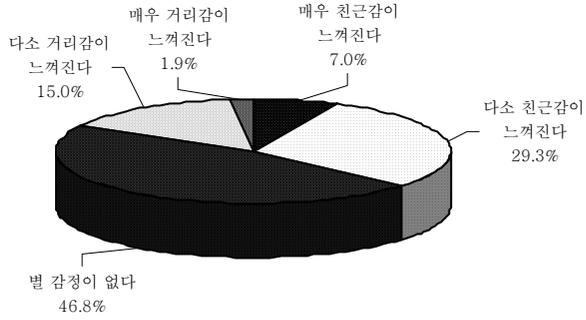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에 거주하는 새터민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를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한국에 거주하는 새터민(북한이탈 주민)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에 약간 못미치는 46.8%는 ‘별 감정이 없다’고 응답해 특별히 호·불호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친근감이 느껴진다’(‘매우 친근감이 느껴진다’ 7%, ‘다소 친근감이 느껴진다’ 29.3%)는 응답이 36.3%로 ‘거리감이 느껴진다’(‘다소 거리감이 느껴진다’ 15%, ‘매우 거리감이 느껴진다’ 1.9%)는 응답 16.9%보다 훨씬 높아 국민들은 새터민에 대한 애정 또는 연민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경변수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연령, 학력, 직업, 가구소득에

서 발견되었다. 20대(55.6%), 30대(52.3%), 40대(52.8%)에서 ‘별 감정이 없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반면, 50대(37%)와 60대 이상(29.5%)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특히 나이가 상대적으로 많은 장년층에서 새터민에 대한 애증이 엇갈리고 있다. 60대 이상의 경우 ‘친근감이 느껴진다’는 응답이 53%로 매우 높았고, 50대의 경우 ‘거리감이 느껴진다’는 응답이 23.6%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에 따라서 ‘별 감정이 없다’는 응답은 생산직(58.3%), 판매·서비스직(56%), 학생(55.3%), 전문직(53.4%)에서 높았다. ‘친근감이 느껴진다’는 응답은 농어민(47.5%), 공무원·사회단체(45%), 무직·기타(44.7%)에서 높았으며 ‘거리감이 느껴진다’는 응답은 기업체·은행·금융업(24.4%)과 주부(20%)에서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에서 ‘별 감정이 없다’는 응답비율은 중간 소득계층(‘200~299만원’ 48.8%, ‘300~399만원’ 54.4%)이 최상·최하위 소득계층(‘200만원 미만’ 39.4%, ‘400만원 이상’ 44.7%)보다 높았다. ‘친근감이 느껴진다’는 응답은 최상·최하위 소득계층이 중간 소득계층보다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친근감이 느껴진다’는 응답비율이 높았던 최하위 소득계층에서 ‘거리감이 느껴진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주목해야 할 사실이다.

<그림 II-6> 새터민에 대한 감정



<표 II-1> 북한에 대한 인식

		사례수	지원대상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	유의도
전체		1000	23.1	41.8	4	20.9	10.2	
성별	남성	490	20.2	43.1	4.5	19.4	12.9	$\chi^2=12.132$ $p=0.016$
	여성	510	25.9	40.6	3.5	22.4	7.6	
연령	20대	216	22.7	44.4	5.1	17.6	10.2	$\chi^2=32.615$ $p=0.008$
	30대	218	22	50	1.4	17.4	9.2	
	40대	235	26	40.9	5.1	22.6	5.5	
	50대	165	23	38.2	4.2	23.6	10.9	
	60대 이상	166	21.1	32.5	4.2	24.7	17.5	
학력	고졸 이하	518	22.6	36.3	5	24.9	11.2	$\chi^2=25.940$ $p=0.011$
	전문대학	90	24.4	40	3.3	20	12.2	
	4년제 대학	358	23.5	48.9	2.5	16.2	8.9	
	대학원 이상	34	23.5	55.9	5.9	11.8	2.9	
직업	전문직	73	19.2	46.6	4.1	24.7	5.5	$\chi^2=39.983$ $p=0.157$
	공무원 및 사회단체	20	10	50	5	15	20	
	기업체/은행/금융업	82	23.2	51.2	1.2	15.9	8.5	
	판매/서비스직	125	25.6	41.6	4.8	16.8	11.2	
	생산직	48	16.7	37.5	10.4	29.2	6.3	
	농어민	59	25.4	42.4	1.7	20.3	10.2	
	학생	132	22.7	47.7	6.1	15.2	8.3	
	주부	300	26.3	38	3.7	23	9	
지역	무직/기타	161	19.9	37.3	2.5	24.2	16.1	$\chi^2=24.565$ $p=0.43$
	서울	221	24.9	36.7	4.1	23.1	11.3	
	부산/울산/경남	158	24.7	41.8	2.5	22.2	8.9	
	대구/경북	115	21.7	39.1	5.2	22.6	11.3	
	인천/경기	253	20.6	48.2	2.8	19.8	8.7	
	광주/전라	114	29.8	44.7	3.5	14	7.9	
	대전/충청	102	18.6	40.2	5.9	21.6	13.7	
본인 소득	강원	37	18.9	32.4	10.8	24.3	13.5	$\chi^2=13.513$ $p=0.333$
	120만원 미만	593	24.8	40.6	3.7	21.1	9.8	
	120~199만원	105	21.9	37.1	3.8	27.6	9.5	
	200만원 이상	211	21.3	47.9	3.3	17.5	10	
가구 소득	없음	91	17.6	40.7	7.7	19.8	14.3	$\chi^2=20.826$ $p=0.053$
	200만원 미만	317	22.1	39.7	4.7	21.5	12	
	200~299만원	281	18.9	43.4	6	22.4	9.3	
	300~399만원	270	25.6	43.7	2.6	20.7	7.4	
고향	400만원 이상	132	29.5	39.4	0.8	16.7	13.6	$\chi^2=34.532$ $p=0.184$
	서울	164	20.7	40.9	4.9	23.2	10.4	
	경기/인천	89	21.3	41.6	2.2	20.2	14.6	
	강원	50	22	40	6	24	8	
	대전/충청	158	22.8	39.9	5.7	20.3	11.4	
	광주/전라	205	25.9	49.8	2.9	14.1	7.3	
	대구/경북	144	26.4	34.7	5.6	25	8.3	
부산/울산/경남	171	21.1	44.4	2.3	21.6	10.5		
	해외/이북/기타	19	21.1	15.8	0	36.8		26.3

<표 II-2> 북한의 변화 정도

	사 례 수	많이 변함	약간 변함	별로 변하지 않음	거의 변하지 않음	종합		4점 평균	유의도	
						변함	변하지 않음			
전체		1000	18.9	49.5	22.2	9.4	68.4	31.6	2.78	
성별	남성	490	22.7	48	19.4	10	70.6	29.4	2.83	$\chi^2=11.412$ $p=0.01$
	여성	510	15.3	51	24.9	8.8	66.3	33.7	2.73	
연령	20대	216	15.3	49.1	26.9	8.8	64.4	35.6	2.71	$\chi^2=12.201$ $p=0.43$
	30대	218	17.9	50.5	24.3	7.3	68.3	31.7	2.79	
	40대	235	20.9	50.6	17.4	11.1	71.5	28.5	2.81	
	50대	165	20.6	47.9	23.6	7.9	68.5	31.5	2.81	
	60대 이상	166	20.5	48.8	18.7	12	69.3	30.7	2.78	
학력	고졸 이하	518	19.5	50.6	20.8	9.1	70.1	29.9	2.81	$\chi^2=7.614$ $p=0.574$
	전문대학	90	17.8	41.1	31.1	10	58.9	41.1	2.67	
	4년제 대학	358	18.7	48.9	22.3	10.1	67.6	32.4	2.76	
	대학원 이상	34	14.7	61.8	17.6	5.9	76.5	23.5	2.85	
직업	전문직	73	24.7	45.2	24.7	5.5	69.9	30.1	2.89	$\chi^2=40.689$ $p=0.018$
	공무원 및 사회단체	20	10	70	20	0	80	20	2.9	
	기업체/은행/금융업	82	20.7	52.4	14.6	12.2	73.2	26.8	2.82	
	판매/서비스직	125	28	52.8	13.6	5.6	80.8	19.2	3.03	
	생산직	48	33.3	35.4	22.9	8.3	68.8	31.3	2.94	
	농어민	59	16.9	50.8	20.3	11.9	67.8	32.2	2.73	
	학생	132	15.2	47	28.8	9.1	62.1	37.9	2.68	
	주부	300	14.7	50.7	25	9.7	65.3	34.7	2.7	
무직/기타	161	16.8	48.4	21.7	13	65.2	34.8	2.69		
지역	서울	221	19.9	49.8	19.5	10.9	69.7	30.3	2.79	$\chi^2=21.477$ $p=0.256$
	부산/울산/경남	158	19.6	51.9	19	9.5	71.5	28.5	2.82	
	대구/경북	115	13	51.3	28.7	7	64.3	35.7	2.7	
	인천/경기	253	17.4	48.6	25.3	8.7	66	34	2.75	
	광주/전라	114	28.1	49.1	14	8.8	77.2	22.8	2.96	
	대전/충청	102	15.7	44.1	28.4	11.8	59.8	40.2	2.64	
	강원	37	18.9	54.1	18.9	8.1	73	27	2.84	
본인 소득	120만원 미만	593	16.5	49.9	22.9	10.6	66.4	33.6	2.72	$\chi^2=19.357$ $p=0.022$
	120~199만원	105	21	51.4	22.9	4.8	72.4	27.6	2.89	
	200만원 이상	211	26.5	46.4	17.1	10	73	27	2.9	
가구 소득	없음	91	14.3	51.6	28.6	5.5	65.9	34.1	2.75	$\chi^2=7.046$ $p=0.632$
	200만원 미만	317	20.8	48.9	20.2	10.1	69.7	30.3	2.8	
	200~299만원	281	16.7	52	22.4	8.9	68.7	31.3	2.77	
	300~399만원	270	16.3	49.3	25.2	9.3	65.6	34.4	2.73	
고향	400만원 이상	132	24.2	46.2	20.5	9.1	70.5	29.5	2.86	$\chi^2=32.796$ $p=0.049$
	서울	164	18.9	45.7	25	10.4	64.6	35.4	2.73	
	경기/인천	89	14.6	53.9	22.5	9	68.5	31.5	2.74	
	강원	50	24	50	20	6	74	26	2.92	
	대전/충청	158	13.9	54.4	18.4	13.3	68.4	31.6	2.69	
	광주/전라	205	28.8	46.8	18	6.3	75.6	24.4	2.98	
	대구/경북	144	19.4	47.2	25.7	7.6	66.7	33.3	2.78	
부산/울산/경남	171	13.5	50.9	25.1	10.5	64.3	35.7	2.67		
해외/이북/기타	19	5.3	52.6	26.3	15.8	57.9	42.1	2.47		

<표 II-3> 북한의 핵개발 이유

		사례수	체제안전	협상력 제고	대남위협	대내결속	유의도
전체		1000	39.5	36.9	14.8	8.8	
성별	남성	490	39.8	37.1	14.1	9	$\chi^2=0.407$ $p=0.939$
	여성	510	39.2	36.7	15.5	8.6	
연령	20대	216	32.9	41.7	15.7	9.7	$\chi^2=16.240$ $p=0.18$
	30대	218	41.7	40.8	9.2	8.3	
	40대	235	39.6	37	15.7	7.7	
	50대	165	43.6	30.9	15.8	9.7	
	60대 이상	166	41	31.3	18.7	9	
학력	고졸 이하	518	38.8	31.9	19.3	10	$\chi^2=30.938$ $p=0$
	전문대학	90	35.6	37.8	15.6	11.1	
	4년제 대학	358	40.5	43.6	8.9	7	
	대학원 이상	34	50	41.2	5.9	2.9	
직업	전문직	73	41.1	42.5	9.6	6.8	$\chi^2=37.001$ $p=0.044$
	공무원 및 사회단체	20	35	35	30	0	
	기업체/은행/금융업	82	47.6	35.4	7.3	9.8	
	판매/서비스직	125	41.6	36.8	9.6	12	
	생산직	48	41.7	33.3	6.3	18.8	
	농어민	59	32.2	30.5	23.7	13.6	
	학생	132	34.1	42.4	15.2	8.3	
	주부	300	38.3	36.7	17.3	7.7	
	무직/기타	161	42.2	34.8	17.4	5.6	
지역	서울	221	44.8	38.5	12.2	4.5	$\chi^2=17.856$ $p=0.465$
	부산/울산/경남	158	38	36.7	16.5	8.9	
	대구/경북	115	39.1	36.5	16.5	7.8	
	인천/경기	253	35.6	37.2	13.8	13.4	
	광주/전라	114	36.8	38.6	16.7	7.9	
	대전/충청	102	40.2	34.3	16.7	8.8	
	강원	37	48.6	29.7	13.5	8.1	
본인 소득	120만원 미만	593	37.4	36.9	16.7	8.9	$\chi^2=10.725$ $p=0.296$
	120~199만원	105	45.7	34.3	10.5	9.5	
	200만원 이상	211	44.1	37.9	10	8.1	
	없음	91	35.2	37.4	18.7	8.8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317	39.4	31.2	19.6	9.8	$\chi^2=16.520$ $p=0.057$
	200~299만원	281	37.7	39.5	14.2	8.5	
	300~399만원	270	40.4	37.8	13.7	8.1	
	400만원 이상	132	41.7	43.2	6.8	8.3	
고향	서울	164	36.6	39.6	14	9.8	$\chi^2=10.685$ $p=0.969$
	경기/인천	89	36	39.3	16.9	7.9	
	강원	50	44	32	12	12	
	대전/충청	158	41.1	36.1	14.6	8.2	
	광주/전라	205	39.5	39.5	13.2	7.8	
	대구/경북	144	40.3	34	16	9.7	
	부산/울산/경남	171	40.9	35.1	14.6	9.4	
해외/이북기타	19	36.8	31.6	31.6	0		

<표 II-4> 북한의 핵무기 보유선언

	사 례 수	매우 위험 느낌	다소 위험 느낌	별로 위험 느끼지 않음	전혀 위험 느끼지 않음	종합		4점 평균	유의도	
						위험 느낌	위험 느끼지 않음			
전체	1000	15.8	39.1	30.4	14.7	54.9	45.1	2.56		
성별	남성	490	14.5	37.1	30.4	18	51.6	48.4	2.48	$\chi^2=8.928$ $p=0.03$
	여성	510	17.1	41	30.4	11.6	58	42	2.64	
연령	20대	216	13	43.5	31.9	11.6	56.5	43.5	2.58	$\chi^2=25.180$ $p=0.014$
	30대	218	12.4	38.5	33.5	15.6	50.9	49.1	2.48	
	40대	235	12.8	38.3	32.8	16.2	51.1	48.9	2.48	
	50대	165	19.4	34.5	31.5	14.5	53.9	46.1	2.59	
	60대 이상	166	24.7	39.8	19.9	15.7	64.5	35.5	2.73	
학력	고졸 이하	518	18.7	39.2	28.2	13.9	57.9	42.1	2.63	$\chi^2=14.285$ $p=0.113$
	전문대학	90	16.7	40	26.7	16.7	56.7	43.3	2.57	
	4년제 대학	358	11.2	39.7	34.6	14.5	50.8	49.2	2.47	
	대학원 이상	34	17.6	29.4	29.4	23.5	47.1	52.9	2.41	
직업	전문직	73	8.2	42.5	31.5	17.8	50.7	49.3	2.41	$\chi^2=48.897$ $p=0.002$
	공무원 및 사회단체	20	10	50	30	10	60	40	2.6	
	기업체/은행/금융업	82	12.2	45.1	22	20.7	57.3	42.7	2.49	
	판매/서비스직	125	14.4	26.4	40	19.2	40.8	59.2	2.36	
	생산직	48	6.3	33.3	37.5	22.9	39.6	60.4	2.23	
	농어민	59	22	35.6	27.1	15.3	57.6	42.4	2.64	
	학생	132	9.8	46.2	33.3	10.6	56.1	43.9	2.55	
	주부	300	19.7	42.3	28	10	62	38	2.72	
무직/기타	161	21.1	34.2	28	16.8	55.3	44.7	2.6		
지역	서울	221	18.6	39.4	29.4	12.7	57.9	42.1	2.64	$\chi^2=20.373$ $p=0.312$
	부산/울산/경남	158	13.3	36.1	35.4	15.2	49.4	50.6	2.47	
	대구/경북	115	16.5	44.3	26.1	13	60.9	39.1	2.64	
	인천/경기	253	12.6	40.7	31.6	15	53.4	46.6	2.51	
	광주/전라	114	16.7	28.1	32.5	22.8	44.7	55.3	2.39	
	대전/충청	102	18.6	45.1	25.5	10.8	63.7	36.3	2.72	
본인 소득	강원	37	18.9	40.5	27	13.5	59.5	40.5	2.65	$\chi^2=22.451$ $p=0.008$
	120만원 미만	593	16.4	41.8	28.2	13.7	58.2	41.8	2.61	
	120~199만원	105	15.2	38.1	34.3	12.4	53.3	46.7	2.56	
	200만원 이상	211	11.4	33.6	33.2	21.8	45	55	2.35	
가구 소득	없음	91	23.1	35.2	34.1	7.7	58.2	41.8	2.74	$\chi^2=10.288$ $p=0.328$
	200만원 미만	317	19.2	36.6	27.4	16.7	55.8	44.2	2.58	
	200~299만원	281	13.9	40.6	32.4	13.2	54.4	45.6	2.55	
	300~399만원	270	15.2	41.9	30.7	12.2	57	43	2.6	
고향	400만원 이상	132	12.9	36.4	32.6	18.2	49.2	50.8	2.44	$\chi^2=38.661$ $p=0.011$
	서울	164	17.7	39	28	15.2	56.7	43.3	2.59	
	경기/인천	89	15.7	37.1	37.1	10.1	52.8	47.2	2.58	
	강원	50	8	38	30	24	46	54	2.3	
	대전/충청	158	17.7	44.9	26.6	10.8	62.7	37.3	2.7	
	광주/전라	205	13.7	30.7	34.1	21.5	44.4	55.6	2.37	
	대구/경북	144	15.3	42.4	32.6	9.7	57.6	42.4	2.63	
부산/울산/경남	171	14.6	43.9	27.5	14	58.5	41.5	2.59		
해외/이북/기타	19	42.1	26.3	21.1	10.5	68.4	31.6	3		

〈표 II-5〉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사례수	매우 많음	약간 있음	별로 없음	전혀 없음	종합		4점 평균	유의도	
						있음	없음			
전체	1000	7.2	35.8	35.7	21.3	43	57	2.29		
성별	남성	490	5.9	31.4	37.6	25.1	37.3	62.7	2.18	$\chi^2=14.763$ $p=0.002$
	여성	510	8.4	40	33.9	17.6	48.4	51.6	2.39	
연령	20대	216	6	47.2	31.9	14.8	53.2	46.8	2.44	$\chi^2=23.416$ $p=0.024$
	30대	218	7.8	28	40.8	23.4	35.8	64.2	2.2	
	40대	235	6.4	33.6	36.2	23.8	40	60	2.23	
	50대	165	6.7	33.9	37.6	21.8	40.6	59.4	2.25	
	60대 이상	166	9.6	36.1	31.3	22.9	45.8	54.2	2.33	
학력	고졸 이하	518	8.7	35.3	35.9	20.1	44	56	2.33	$\chi^2=14.349$ $p=0.11$
	전문대학	90	10	38.9	30	21.1	48.9	51.1	2.38	
	4년제 대학	358	4.2	37.2	36.9	21.8	41.3	58.7	2.24	
	대학원 이상	34	8.8	20.6	35.3	35.3	29.4	70.6	2.03	
직업	전문직	73	2.7	34.2	41.1	21.9	37	63	2.18	$\chi^2=64.240$ $p=0$
	공무원 및 사회단체	20	15	25	30	30	40	60	2.25	
	기업체/은행/금융업	82	6.1	24.4	45.1	24.4	30.5	69.5	2.12	
	판매/서비스직	125	8	19.2	44.8	28	27.2	72.8	2.07	
	생산직	48	6.3	25	33.3	35.4	31.3	68.8	2.02	
	농어민	59	5.1	37.3	40.7	16.9	42.4	57.6	2.31	
	학생	132	6.1	48.5	32.6	12.9	54.5	45.5	2.48	
	주부	300	9	41.7	34.3	15	50.7	49.3	2.45	
무직/기타	161	6.8	37.9	26.1	29.2	44.7	55.3	2.22		
지역	서울	221	7.7	38.5	34.8	19	46.2	53.8	2.35	$\chi^2=24.289$ $p=0.146$
	부산/울산/경남	158	10.1	37.3	31.6	20.9	47.5	52.5	2.37	
	대구/경북	115	10.4	34.8	36.5	18.3	45.2	54.8	2.37	
	인천/경기	253	4.3	34.8	39.1	21.7	39.1	60.9	2.22	
	광주/전라	114	6.1	23.7	43.9	26.3	29.8	70.2	2.1	
	대전/충청	102	7.8	41.2	26.5	24.5	49	51	2.32	
강원	37	2.7	45.9	32.4	18.9	48.6	51.4	2.32		
본인 소득	120만원 미만	593	7.1	40.1	33.9	18.9	47.2	52.8	2.35	$\chi^2=39.347$ $p=0$
	120~199만원	105	4.8	24.8	48.6	21.9	29.5	70.5	2.12	
	200만원 이상	211	7.1	24.2	38.9	29.9	31.3	68.7	2.09	
	없음	91	11	47.3	25.3	16.5	58.2	41.8	2.53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317	8.2	36.3	32.8	22.7	44.5	55.5	2.3	$\chi^2=11.107$ $p=0.268$
	200~299만원	281	7.5	40.9	33.5	18.1	48.4	51.6	2.38	
	300~399만원	270	5.9	31.5	41.5	21.1	37.4	62.6	2.22	
	400만원 이상	132	6.8	32.6	35.6	25	39.4	60.6	2.21	
고향	서울	164	6.1	39	29.3	25.6	45.1	54.9	2.26	$\chi^2=31.319$ $p=0.069$
	경기/인천	89	3.4	33.7	43.8	19.1	37.1	62.9	2.21	
	강원	50	4	44	30	22	48	52	2.3	
	대전/충청	158	6.3	38	37.3	18.4	44.3	55.7	2.32	
	광주/전라	205	5.9	27.3	41.5	25.4	33.2	66.8	2.14	
	대구/경북	144	9.7	37.5	35.4	17.4	47.2	52.8	2.4	
	부산/울산/경남	171	9.9	38.6	32.7	18.7	48.5	51.5	2.4	
해외/이북/기타	19	21.1	31.6	21.1	26.3	52.6	47.4	2.47		

<표 II-6> 새터민에 대한 감정

		매우 친근감 느껴짐	다소 친근감 느껴짐	별 감정 없음	다소 거리감 느껴짐	매우 거리감 느껴짐	종합			5점 평균	유의도	
							친근감 느껴짐	별 감정 없음	거리감 느껴짐			
전체		1000	7	29.3	46.8	15	1.9	36.3	46.8	16.9	3.25	
성별	남성	490	8.6	30.2	46.7	12.2	2.2	38.8	46.7	14.5	3.31	$\chi^2=9.122$ $p=0.058$
	여성	510	5.5	28.4	46.9	17.6	1.6	33.9	46.9	19.2	3.19	
연령	20대	216	4.6	22.7	55.6	16.2	0.9	27.3	55.6	17.1	3.14	$\chi^2=57.928$ $p=0$
	30대	218	7.8	26.1	52.3	12.4	1.4	33.9	52.3	13.8	3.27	
	40대	235	4.7	28.1	52.8	14	0.4	32.8	52.8	14.5	3.23	
	50대	165	8.5	30.9	37	20	3.6	39.4	37	23.6	3.21	
	60대 이상	166	10.8	42.2	29.5	13.3	4.2	53	29.5	17.5	3.42	
학력	고졸 이하	518	8.1	31.1	40.9	17.6	2.3	39.2	40.9	19.9	3.25	$\chi^2=31.485$ $p=0.002$
	전문대학	90	5.6	22.2	46.7	23.3	2.2	27.8	46.7	25.6	3.06	
	4년제 대학	358	5.3	28.2	55.3	10.1	1.1	33.5	55.3	11.2	3.27	
직업	대학원 이상	34	11.8	32.4	47.1	5.9	2.9	44.1	47.1	8.8	3.44	$\chi^2=57.200$ $p=0.004$
	전문직	73	6.8	32.9	53.4	6.8	0	39.7	53.4	6.8	3.4	
	공무원 및 사립단체	20	5	40	45	10	0	45	45	10	3.4	
	기업체/은행/금융업	82	7.3	22	46.3	24.4	0	29.3	46.3	24.4	3.12	
	판매/서비스직	125	5.6	23.2	56	12	3.2	28.8	56	15.2	3.16	
	생산직	48	6.3	27.1	58.3	8.3	0	33.3	58.3	8.3	3.31	
	농어민	59	6.8	40.7	30.5	18.6	3.4	47.5	30.5	22	3.29	
	학생	132	3.8	27.3	55.3	12.1	1.5	31.1	55.3	13.6	3.2	
지역	주부	300	5.3	30.7	44	18	2	36	44	20	3.19	$\chi^2=17.422$ $p=0.83$
	무직/기타	161	14.3	30.4	37.9	14.3	3.1	44.7	37.9	17.4	3.39	
	서울	221	7.7	24.9	51.1	13.6	2.7	32.6	51.1	16.3	3.21	
	부산/울산/경남	158	8.2	32.9	39.9	16.5	2.5	41.1	39.9	19	3.28	
	대구/경북	115	4.3	31.3	45.2	17.4	1.7	35.7	45.2	19.1	3.19	
	인천/경기	253	6.7	27.7	49	15.8	0.8	34.4	49	16.6	3.24	
	광주/전라	114	7.9	32.5	43.9	12.3	3.5	40.4	43.9	15.8	3.29	
본인 소득	대전/충청	102	6.9	27.5	49	15.7	1	34.3	49	16.7	3.24	$\chi^2=16.754$ $p=0.159$
	강원	37	5.4	40.5	43.2	10.8	0	45.9	43.2	10.8	3.41	
	120만원 미만	593	7.3	31.7	43.8	15.5	1.7	39	43.8	17.2	3.27	
	120~199만원	105	3.8	26.7	55.2	12.4	1.9	30.5	55.2	14.3	3.18	
	200만원 이상	211	7.1	27.5	51.7	12.3	1.4	34.6	51.7	13.7	3.27	
	없음	91	8.8	20.9	45.1	20.9	4.4	29.7	45.1	25.3	3.09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317	7.9	32.5	39.4	16.4	3.8	40.4	39.4	20.2	3.24	$\chi^2=26.472$ $p=0.009$
	200~299만원	281	6	29.5	48.8	14.2	1.4	35.6	48.8	15.7	3.25	
	300~399만원	270	5.6	23.7	54.4	15.9	0.4	29.3	54.4	16.3	3.18	
	400만원 이상	132	9.8	32.6	44.7	11.4	1.5	42.4	44.7	12.9	3.38	
고향	서울	164	7.9	27.4	48.8	14	1.8	35.4	48.8	15.9	3.26	$\chi^2=23.109$ $p=0.728$
	경기/인천	89	9	20.2	51.7	18	1.1	29.2	51.7	19.1	3.18	
	강원	50	4	34	54	8	0	38	54	8	3.34	
	대전/충청	158	7.6	26.6	47.5	16.5	1.9	34.2	47.5	18.4	3.22	
	광주/전라	205	6.3	32.2	44.4	14.1	2.9	38.5	44.4	17.1	3.25	
	대구/경북	144	4.2	34	43.8	16.7	1.4	38.2	43.8	18.1	3.23	
	부산/울산/경남	171	8.2	27.5	46.2	16.4	1.8	35.7	46.2	18.1	3.24	
해외/이북/기타	19	10.5	47.4	36.8	0	5.3	57.9	36.8	5.3	3.58		

Ⅲ

통일관련 국제환경 인식

1. 통일에 우호적인 주변국

남북관계가 변하고 한국의 통일외교정책 역량 신장, 동북아 역학관계 변화 등이 발생하고 있다. 남북한이 한반도문제 해결의 주된 당사자이지만, 한반도 주변 4국도 한반도의 현상 변화가 자국에 미칠 영향에 따라 한반도문제에 대해 깊은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통일이 동북아 국제질서의 역학구조를 변경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변 4국들은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주변국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귀하는 한반도 주변 4국 중 어느 나라가 한반도 통일에 가장 우호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거의 과반수인 49%가 “어느 나라도 한반도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6·15 남북공동선언 이전인 1999년에 통일연구원이 실시한 조사에서 동일한 질문에 대한 응답비율(49.7%)과 거의 동일하다.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두 사람 중 하나는 주변국들이 분단된 한반도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 입장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불신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통일은 결국 우리 민족이 해야 할 일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주변 4국 중에서는 미국이 23.2%로 한반도 통일에 가장 우호적인 국가로 평가되었다. 이어 중국 15.8%, 러시아 8.2%, 일본 3.8%의 순으로 나타났다. 1999년의 조사와 비교하면 미국

의 비율이 3.6% 감소한 반면, 중국은 10%나 증가하였고, 러시아도 7.2% 증가하였다. 일본의 비율은 0.5% 밖에 감소하지 않았으나, 가장 덜 우호적인 국가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의 경우 특히 부시 행정부 등장 이후 우리 사회에서 고조된 반미감정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며, 중국의 경우 지난 5년여에 걸쳐 한국의 제1교역 대상국으로 떠오르고 관광, 문화 등 한·중 교류관계가 급속도로 증가한 데 따른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는 독도 영유권문제, 역사교과서 왜곡문제, 야스쿠니 신사참배문제 등으로 우리 국민의 호감을 사고 있지 못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미국을 한반도 통일과 관련 가장 중요한 국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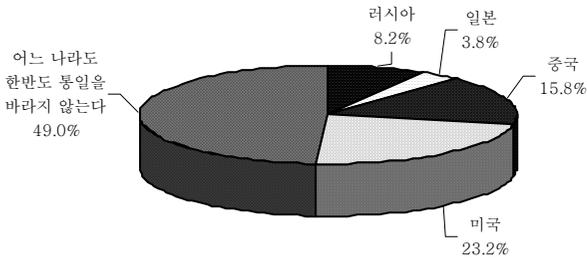
배경변수별로 볼 때, 1999년의 경우처럼 나이가 많을수록 통일을 바라는 주변 강대국이 없다는 비율이 낮아지고, 미국을 한반도 통일에 가장 우호적인 나라로 인식하는 비율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세대별로는 20대와 60대 이상이 인식하는 경향이 매우 차이가 났다. 즉 60대 이상은 과반수에 이르는 정도(43.4%)가 미국을 우호적으로 본 반면에 20대는 14.4%의 비율을 보였다. 특히 20대는 미국보다 중국을 한반도 통일에 가장 우호적인 국가로 본 비율이 높았다(17.6%). 40대의 경우는 미국 20.4%, 중국 20.0%로 거의 동일하였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지역 거주자들이 미국(15.8%)보다 중국(17.0%)을 우호적인 국가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인천·경기

지역이 중국과의 교역과 교류의 관문이 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 다른 지역 거주자들의 경우에는 미국을 가장 우호적인 국가로 본 비율이 중국을 가장 우호적인 국가로 본 비율에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도 어느 나라를 한반도 통일에 우호적으로 보는가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미국을 가장 우호적으로 본 비율이 높았으나, 그 비율은 월 400만원 이상의 가구에서 18.2%로 가장 낮은 반면 200만원 미만의 가구에서는 30.3%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비율을 보였다.

<그림 III-1> 통일에 우호적인 주변국



2. 2010년 한국의 우호 국가

남북정상회담 이후 지난 5년간 남북관계는 여러 측면에서 발전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물론 여전히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로 남아 있는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남북 간에도 상호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평화체제가 수립되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는 국가전략 차원에서 한국은 주변국가와 정치·안보·경제·문화 등 제반 측면에서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의 대중문화가 동북아는 물론 동남아시아까지 확산되는 ‘한류(韓流)’ 현상도 우리와 주변국가와의 관계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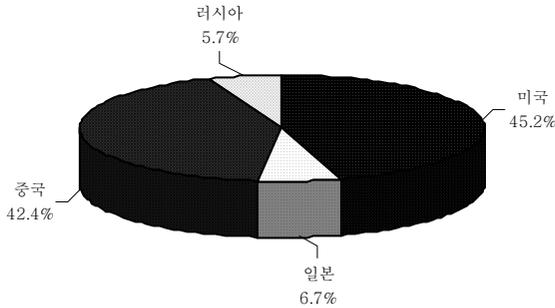
통일 추진에 있어서 주변국가와의 관계는 남북관계 못지않게 중요한 변수이다. 남북관계 개선이나 장기적인 통일정책 추진과정에서 우리 정책의 실효성이나 주변국의 협력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주변국가의 한반도 현상 변화에 대한 인식은 우리의 전략과 전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주변국과의 관계 변화를 예측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금부터 5년 후인 2010년경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와 가장 가까워 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였다.

가. 정치 분야

정치 분야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순으로 나왔으

나, 미국과 중국에 대한 친밀도의 합이 87.6%로 압도적이었으며, 일본과 러시아와의 관계는 그다지 친밀할 것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현상은 미국이 가장 가까운 나라일 것이라는 응답이 45.2%, 중국이 가장 가까운 나라일 것이라는 응답이 42.4%로서 우리 국민들이 미국과 중국에 대해 느끼는 친밀도의 비중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순위를 가중하여 평균을 낸 수치는 미국이 30.8%, 중국이 30.7%로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2002년 이후 한국 사회 내에서의 반미감정이 뚜렷하게 부각되는 반면 무역, 한류, 관광 등의 분야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발전되고 있다는 인식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령별로 중국과 미국에 대한 친밀도의 수준에서 대조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미국에 대한 친밀도는 60대 이상에서 가장 높고 20대가 가장 낮았던 반면에 중국에 대한 친밀도는 2~30대에서 가장 높았고 60대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60대 이상과 20대 계층 간의 미국과 중국에 대한 경험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III-2> 2010년 한국의 우호 국가: 정치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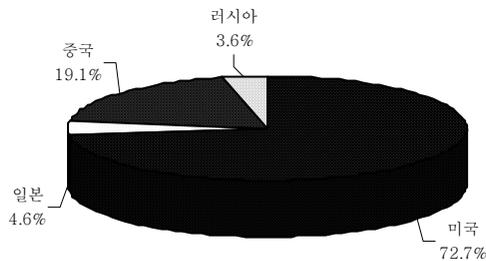
나. 안보 분야

안보 분야에서의 순위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안보 분야에서의 특이한 현상은 정치 분야와는 달리 미국에 대한 친밀도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미국이 72.7%로 5년 후인 2010년경에도 한국과 가장 가까운 안보 관계를 유지할 나라로 평가된 반면 중국은 19.1%에 머물렀다. 일본은 4.6%, 러시아는 3.6%에 머물렀다. 전 연령대에서 미국에 대한 친밀도가 높았으나,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그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다. 그리고 소득이 높을수록 미국과의 안보 친밀도를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순위를 가중하여 평균을 나타낸 수치를 보면 중국과 일본의 차이가 단순한 친밀도의 차이에 비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들의 이러한 인식은 지난 반세기 이상 한·미동맹 관계가 유지된 측면과 남북관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북핵문

제를 비롯해 여전히 한반도 안보상황이 불확실한 측면이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 국민의 이중적인 인식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안보 분야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것은 북한의 안보 위협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우리 국민이 느끼는 북한으로부터의 위협 인식은 과거보다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반면 2002년 7월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 사건 이후 증대한 반미감정에 따라서 한·미동맹관계의 재설정을 주장하는 여론도 많이 늘어났다. 또한 중국을 가깝게 느끼는 비중이 과거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미국과의 친밀관계를 유지해야 안보 차원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III-3> 2010년 한국의 우호 국가: 안보 분야



다. 경제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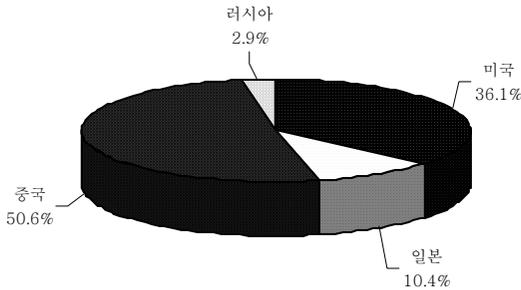
안보 분야에서의 우리 국민의 이중적인 인식에 대한 입장은 경제 분야에서의 5년 후에 대한 판단을 보면 분명히 드러난다. 경제 분야에서는 5년 후에 미국보다 중국이 훨씬 더 가까워질 나라로서 인식되었다. 중국은 50.6%로서 우리 국민 과반수가 5년 후에는 중국이 경제적으로 한국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반해 미국은 36.1%로 나타났으며, 일본은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 10.4%를 기록하였으며, 러시아는 단지 2.9%에 머물렀다.

경제 분야에서 우리 국민이 느끼는 주변국가와의 친밀도 예상은 현재의 교역 관계의 진전 상황이나 인적 교류의 증대, 그리고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홍콩을 포함할 경우, 미국에 앞서 우리의 제1교역국으로 등장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여러 대기업과 많은 중소기업들이 중국 시장으로의 진출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교역 규모를 제외하면 기술의 의존도나 자본 이동과 같은 주요 경제 지표들은 여전히 미국이나 일본과의 관계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우리 국민들이 주변국가와의 경제적 친밀도를 예상하는 데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 가지 특이한 현상은 연령 변수에서, 다른 연령대와는 달리 60대 이상에서는 여전히 미국이 가장 가까워질 나라로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우선순위를 가중하여 산출한 평균치에서는 중국과 미국의 차이가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국이 32.2%의 비중을 보인 데 반하여 미국은 29.7%의 비

중을 차지하였다. 남성의 경우는 중국 31.5%, 미국 30.8%로서 여성의 경우(중국 32.9%, 미국 28.7%)보다 그 차이가 더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4> 2010년 한국과 우호 국가: 경제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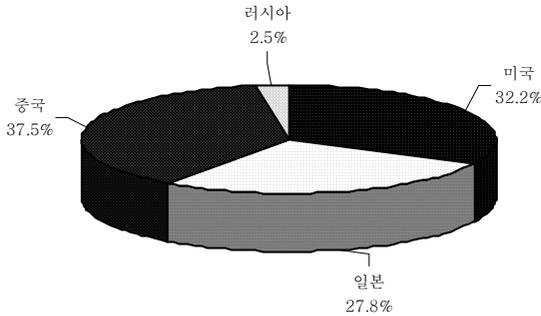
라. 문화 분야

한편 문화 분야에서는 정치, 안보, 경제 분야에서와는 달리 미국, 일본, 중국에 대한 친밀도가 분산되어 나타났다. 중국이 37.5%로서 미국의 32.2%와 일본의 27.8%보다 높은 비중으로서 가까워질 나라로 예상되었지만, 그 차이는 그렇게 큰 것으로 볼 수 없다. 러시아는 이들 세 나라와는 달리 2.5%의 비중을 차지하여 문화 분야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러시아에 대해 가장 낮은 친밀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중국, 미국, 일본 간의 차이는 우선순위를 가중한 평균치를 보면 거의 그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즉 중국이 29.4%로서 여전히 앞서 있

으나, 일본이 28.4%, 그리고 미국이 28.3%를 차지하였다. 비록 통계적 의미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으나 일본과 미국의 순위가 바뀐 것으로 나타난 것이 흥미롭다.

과거 우리나라와 중국간에 국교관계가 수립되지 않았을 때 중국에 대한 친밀도를 쉽게 평가하기 어려웠으나, 미국이나 일본과의 교류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중국에 대해 느끼는 친밀도는 낮았을 것이다. 1990년대 초 국교수립 이후 한·중 관계는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우리 국민의 중국 관광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중국의 우리 동포인 조선족 사회와의 인적 교류가 급증하였으며 우리 학생들의 중국 유학이 증대하는 한편, 중국의 한국 관광객도 꾸준히 늘어나고 경제 교역관계가 급격히 발전하고 있으며 한류로 불리는 우리 대중문화의 확산 등이 중국을 가장 친밀도가 높은 나라로서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의 오랜 교류와 일본과의 교류도 계속 유지되고 있음에 따라서 미국과 일본을 가장 가까워질 나라로서 평가하는 비중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미국의 비중이 약해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그 원인으로는 2002년 이후 우리 사회에서 부각된 반미감정과 일본에서도 중국에서와 마찬가지로 한류의 열풍이 일고 있는 현상을 우리 국민들이 의식하고 있는 것이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III-5> 2010년 한국의 우호 국가: 문화 분야



3. 통일을 위한 협력 국가

통일에 유리한 주변 환경이 조성되는 데에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동북아시아 강대국 간의 관계가 상호협력 및 의존의 양태로 발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2005년도에 나타난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과 같은 상황이 더욱 심화될 경우 우리의 통일 환경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능동적인 외교를 통하여 주변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한반도문제의 국제화 경향에 따라 주변 국가들의 이해관계의 대립이 통일의 저해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대주변국 외교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대상 국가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나라가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할 나라를 중요한 순서대로 기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 대상 국가는 역시 우리의 문제와 가장 관련을 맺고 있

는 한반도 주변 4개국으로 국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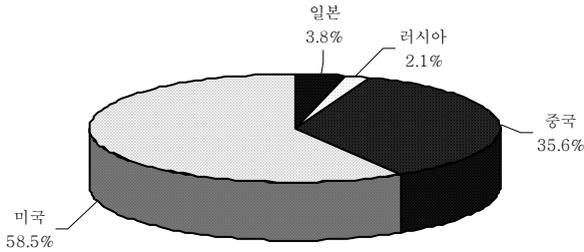
이에 대해 미국을 1순위로 지적한 응답자가 58.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국을 1순위로 지적한 응답자가 35.6%를 기록하였다. 일본과 러시아를 1순위로 응답한 사람은 각각 3.8%와 2.1%로서 일본과 러시아가 우리의 통일과정에 줄 영향을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그다지 중요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5년 이후 가장 가까워질 나라에 대한 응답에서와 같이 미국과 중국이 중요한 두 개의 나라로서 지적되었는데, 이는 향후 우리가 통일외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가 미국과 중국임을 말해주는 것이며, 두 나라 간의 관계 또한 우리의 통일과정에 매우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적 변수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재미있는 현상은 30대에서는 미국과 중국을 각각 47.7%와 42.7%로서 두 나라와의 협력관계의 비중이 5%밖에 차이가 나지 않은데 반하여, 20대에서는 28.3%, 40대에서는 16.6%, 50대에서는 29.1%, 60대 이상에서는 42.2%의 차이로 미국과의 협력을 중국과의 협력보다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 변수에서는 고학력일수록 미국과 중국과의 협력의 중요성의 차이가 크지 않은 데 반하여, 학력이 낮을수록 미국과의 협력이 중국과의 협력보다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직업, 소득, 도시규모, 거주 지역, 고향, 북한에 친척이 있는지의 여부 등의 배경변수는 미국과 중국은 물론 일본과 러시아에 대한 협력의 중요도를 차별화 짓는 데 별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여 우리 국민들은 그러한 배경변수들과는 무관하게 대체적으로 미국과의 협력을 가장

중요시하고, 다음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중요시하고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우선순위의 가중종합 평균치나 순위의 단순 평균치에서도 뒷받침된다. 다만, 미국과 중국 간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가 향후 통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을 가장 역점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할 나라로서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III-6> 통일을 위한 협력 국가



4. 한·미동맹이 통일에 미치는 영향

앞서 지적되었지만 2002년 이후 우리 사회에서의 반미감정이 높아지고 한·미동맹관계를 재정립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핵문제를 비롯하여 전반적인 대북정책에서도 양국 간의 정책조율을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한·미동맹관계의 변화에 대한 의견 차이도 발생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한·미동맹관계가 한국의 신장된 국력, 변화하는 남북관계, 동북아 안보환경을 비롯한 정세의 변화, 미국의 안보전략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여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한·미관계는 새로운 동맹관계의 규범을 만들어야 하며, 그러한 맥락에서 한·미 양국 간에 안보정책구상(security policy initiative)을 위한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안보 차원에서 우리 국민들이 여전히 5년 후에도 미국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72.7%)하고 있으며, 통일 달성을 위해 협력관계를 유지할 나라에 관해서도 미국을 가장 중요한 파트너(1순위 지적 응답자 58.5%)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 4국 중에서 미국이 비록 낮은 비율(23.2%)이지만 한반도 통일에 가장 우호적인 국가로 평가되었다. 그렇다면 한·미동맹이 통일에 미치는 영향도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질문에서는 한·미동맹관계에 대한 변화의 요구, 한·미간 갈등관계에 대한 우려 등 우리 사회에서 일고 있는 변화를 간접적으로 알아보고, 또 과연 한·미동맹관계의 유지가 통일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귀하는 한·미동맹이 통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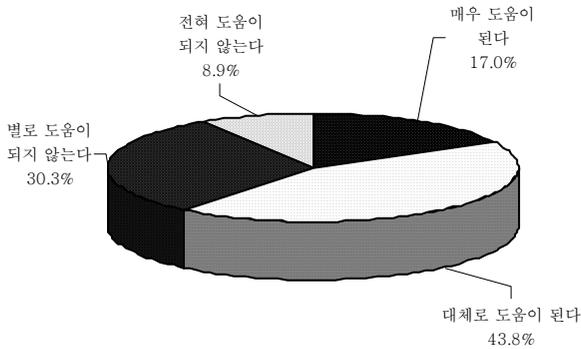
이에 대해 ‘매우 도움이 된다’가 17%, ‘대체로 도움이 된다’가 43.8%로서 우리 국민들의 60.8%가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통일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8.9%,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30.3%로서 우리 국민의 39.2%가 한·미동맹의 유지가 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들의 과반수가 주변 국가들이 우리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고 본 인식을 고려하면, 한·미동맹의 유지가 통일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40% 가까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배경변수로 볼 때, 30대에서는 한·미동맹의 유지가 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율이 52.3%로서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비율 47.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대와 40대에서는 각각 ‘도움이 된다’가 56.9%와 54.9%로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의 비율 43.1%와 45.1%보다 10% 이상의 차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한·미동맹의 유지가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비중이 75% 안팎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령층과는 달리 30대에서 한·미동맹관계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향후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져야 할 나라 등의 질문에서와 같이 미국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나빠져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다른 배경변수들 중에서는 학력이 낮을수록 한·미동맹의

유지가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비율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한·미동맹의 유지가 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비율이 높아졌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한·미동맹의 유지가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비율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 비율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7> 한·미동맹이 통일에 미치는 영향



<표 III-1> 통일에 우호적인 주변국

		사례수	러시아	일본	중국	미국	어느 나라도 한반도 통일을 바라지 않음	유의도
전체		1000	8.2	3.8	15.8	23.2	49	
성별	남성	490	8	2.7	12.7	26.5	50.2	$\chi^2=14.294$ $p=0.006$
	여성	510	8.4	4.9	18.8	20	47.8	
연령	20대	216	8.8	4.6	17.6	14.4	54.6	$\chi^2=65.838$ $p=0$
	30대	218	9.2	2.8	13.8	15.6	58.7	
	40대	235	7.7	4.7	20	20.4	47.2	
	50대	165	9.1	3.6	14.5	28.5	44.2	
	60대 이상	166	6	3	11.4	43.4	36.1	
학력	고졸 이하	518	8.9	3.7	16.4	29.7	41.3	$\chi^2=40.464$ $p=0$
	전문대학	90	8.9	6.7	16.7	18.9	48.9	
	4년제 대학	358	7	3.4	15.6	15.4	58.7	
	대학원 이상	34	8.8	2.9	5.9	17.6	64.7	
직업	전문직	73	5.5	4.1	17.8	21.9	50.7	$\chi^2=40.424$ $p=0.146$
	공무원 및 사회단체	20	10	0	10	25	55	
	기업체/은행/금융업	82	6.1	4.9	13.4	20.7	54.9	
	판매/서비스직	125	8.8	0.8	14.4	24	52	
	생산직	48	14.6	6.3	16.7	22.9	39.6	
	농어민	59	10.2	5.1	15.3	37.3	32.2	
	학생	132	9.8	2.3	15.9	10.6	61.4	
	주부	300	7.3	5	17.3	23.3	47	
	무직/기타	161	7.5	3.7	14.9	29.2	44.7	
지역	서울	221	7.7	4.1	10	28.1	50.2	$\chi^2=40.345$ $p=0.02$
	부산/울산/경남	158	8.2	1.9	18.4	25.3	46.2	
	대구/경북	115	6.1	5.2	14.8	25.2	48.7	
	인천/경기	253	9.1	3.6	17	15.8	54.5	
	광주/전라	114	11.4	6.1	18.4	25.4	38.6	
	대전/충청	102	2.9	2.9	17.6	19.6	56.9	
본인 소득	강원	37	16.2	2.7	21.6	32.4	27	$\chi^2=18.976$ $p=0.089$
	120만원 미만	593	8.4	4.6	17	25.1	44.9	
	120~199만원	105	5.7	4.8	14.3	19	56.2	
	200만원 이상	211	6.6	1.9	12.8	20.9	57.8	
가구 소득	없음	91	13.2	2.2	16.5	20.9	47.3	$\chi^2=26.983$ $p=0.008$
	200만원 미만	317	10.7	5	13.2	30.3	40.7	
	200~299만원	281	7.1	3.9	17.4	18.5	53	
	300~399만원	270	7.4	2.2	17	22.2	51.1	
고향	400만원 이상	132	6.1	3.8	15.9	18.2	56.1	$\chi^2=38.150$ $p=0.096$
	서울	164	7.9	2.4	10.4	18.3	61	
	경기/인천	89	7.9	4.5	11.2	23.6	52.8	
	강원	50	12	6	22	22	38	
	대전/충청	158	4.4	3.8	20.9	23.4	47.5	
	광주/전라	205	12.2	4.9	17.1	20	45.9	
	대구/경북	144	9	4.2	16	29.2	41.7	
부산/울산/경남	171	6.4	2.9	15.2	24.6	50.9		
해외/이북기타	19	0	0	15.8	42.1	42.1		

<표 III-2> 2010년 한국의 우호 국가: 정치 분야

		사례수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유의도
전체		1000	45.2	6.7	42.4	5.7	
성별	남성	490	48.8	6.5	38.8	5.9	$\chi^2=5.816$ $p=0.121$
	여성	510	41.8	6.9	45.9	5.5	
연령	20대	216	39.8	10.2	44	6	$\chi^2=26.773$ $p=0.008$
	30대	218	41.7	5	45	8.3	
	40대	235	44.3	5.5	43.4	6.8	
	50대	165	44.2	7.9	43.6	4.2	
	60대 이상	166	59	4.8	34.3	1.8	
학력	고졸 이하	518	47.1	7.1	40.5	5.2	$\chi^2=12.998$ $p=0.163$
	전문대학	90	43.3	7.8	44.4	4.4	
	4년제 대학	358	41.9	6.4	45.8	5.9	
	대학원 이상	34	55.9	0	29.4	14.7	
직업	전문직	73	49.3	8.2	39.7	2.7	$\chi^2=20.264$ $p=0.682$
	공무원 및 사회단체	20	60	15	20	5	
	기업체/은행/금융업	82	43.9	3.7	43.9	8.5	
	판매/서비스직	125	44	7.2	43.2	5.6	
	생산직	48	39.6	6.3	45.8	8.3	
	농어민	59	52.5	1.7	40.7	5.1	
	학생	132	40.9	8.3	43.2	7.6	
	주부	300	42.7	6	45.7	5.7	
	무직/기타	161	50.3	8.1	37.9	3.7	
지역	서울	221	45.7	7.2	39.8	7.2	$\chi^2=18.380$ $p=0.431$
	부산/울산/경남	158	42.4	3.8	49.4	4.4	
	대구/경북	115	47.8	3.5	41.7	7	
	인천/경기	253	48.2	7.1	40.7	4	
	광주/전라	114	36	8.8	48.2	7	
	대전/충청	102	49	7.8	37.3	5.9	
	강원	37	43.2	13.5	37.8	5.4	
본인 소득	120만원 미만	593	44.9	6.6	43.5	5.1	$\chi^2=12.885$ $p=0.168$
	120~199만원	105	36.2	10.5	48.6	4.8	
	200만원 이상	211	49.3	4.7	39.8	6.2	
	없음	91	48.4	7.7	34.1	9.9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317	47.3	6.9	40.7	5	$\chi^2=14.128$ $p=0.118$
	200~299만원	281	47.3	8.9	37	6.8	
	300~399만원	270	38.9	5.2	50	5.9	
	400만원 이상	132	48.5	4.5	42.4	4.5	
고향	서울	164	44.5	9.1	40.9	5.5	$\chi^2=26.554$ $p=0.186$
	경기/인천	89	50.6	5.6	39.3	4.5	
	강원	50	36	4	56	4	
	대전/충청	158	50.6	6.3	35.4	7.6	
	광주/전라	205	37.1	10.7	45.9	6.3	
	대구/경북	144	45.1	4.9	45.1	4.9	
	부산/울산/경남	171	49.1	2.9	42.1	5.8	
해외/이북기타	19	57.9	5.3	36.8	0		

<표 III-3> 2010년 한국의 우호 국가: 안보 분야

		사례수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유의도
전체		1000	72.7	4.6	19.1	3.6	
성별	남성	490	76.9	3.7	15.9	3.5	$\chi^2=9.305$ $p=0.025$
	여성	510	68.6	5.5	22.2	3.7	
연령	20대	216	65.3	7.4	22.7	4.6	$\chi^2=27.985$ $p=0.006$
	30대	218	68.3	6.9	19.3	5.5	
	40대	235	74.5	2.1	20	3.4	
	50대	165	74.5	4.2	18.8	2.4	
학력	60대 이상	166	83.7	1.8	13.3	1.2	$\chi^2=14.106$ $p=0.119$
	고졸 이하	518	73.2	4.6	18	4.2	
	전문대학	90	70	4.4	22.2	3.3	
	4년제 대학	358	72.6	3.9	21.2	2.2	
직업	대학원 이상	34	73.5	11.8	5.9	8.8	$\chi^2=26.096$ $p=0.348$
	전문직	73	79.5	4.1	15.1	1.4	
	공무원 및 사회단체	20	80	10	10	0	
	기업체/은행/금융업	82	74.4	6.1	14.6	4.9	
	판매/서비스직	125	72	4	17.6	6.4	
	생산직	48	70.8	4.2	18.8	6.3	
	농어민	59	84.7	1.7	11.9	1.7	
	학생	132	62.9	4.5	27.3	5.3	
지역	주부	300	71.7	4.3	21.7	2.3	$\chi^2=17.782$ $p=0.47$
	무직/기타	161	74.5	5.6	16.8	3.1	
	서울	221	75.6	3.2	17.2	4.1	
	부산/울산/경남	158	71.5	3.2	22.8	2.5	
	대구/경북	115	66.1	6.1	23.5	4.3	
	인천/경기	253	74.3	6.3	17.4	2	
본인 소득	광주/전라	114	66.7	4.4	21.9	7	$\chi^2=23.850$ $p=0.005$
	대전/충청	102	77.5	4.9	13.7	3.9	
	강원	37	75.7	2.7	18.9	2.7	
	120만원 미만	593	72.7	4	19.7	3.5	
가구 소득	120~199만원	105	71.4	7.6	16.2	4.8	$\chi^2=7.516$ $p=0.584$
	200만원 이상	211	80.1	2.8	15.6	1.4	
	없음	91	57.1	8.8	26.4	7.7	
	200만원 미만	317	71.6	4.7	19.6	4.1	
고향	200~299만원	281	71.9	5.7	17.4	5	$\chi^2=28.205$ $p=0.134$
	300~399만원	270	73	4.1	20	3	
	400만원 이상	132	76.5	3	19.7	0.8	
	서울	164	73.8	6.1	18.3	1.8	
	경기/인천	89	77.5	1.1	20.2	1.1	
	강원	50	66	4	26	4	
	대전/충청	158	77.8	5.1	13.3	3.8	
부산/울산/경남	171	70.8	6.4	19.9	2.9		
해외/이북/기타	19	89.5	0	5.3	5.3		

<표 III-4> 2010년 한국의 우호 국가: 경제 분야

		사례수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유의도
전체		1000	36.1	10.4	50.6	2.9	
성별	남성	490	41	9	47.1	2.9	$\chi^2=10.583$ $p=0.014$
	여성	510	31.4	11.8	53.9	2.9	
연령	20대	216	37	17.6	43.1	2.3	$\chi^2=44.752$ $p=0$
	30대	218	28.4	10.1	56.4	5	
	40대	235	32.3	9.8	55.3	2.6	
	50대	165	35.8	6.7	53.9	3.6	
	60대 이상	166	50.6	6	42.8	0.6	
학력	고졸 이하	518	38.4	8.7	49.6	3.3	$\chi^2=11.458$ $p=0.246$
	전문대학	90	31.1	13.3	52.2	3.3	
	4년제 대학	358	33	12.6	52.5	2	
	대학원 이상	34	47.1	5.9	41.2	5.9	
직업	전문직	73	37	6.8	56.2	0	$\chi^2=45.256$ $p=0.006$
	공무원 및 사회단체	20	45	15	35	5	
	기업체/은행/금융업	82	35.4	4.9	56.1	3.7	
	판매/서비스직	125	28.8	8	60.8	2.4	
	생신직	48	35.4	14.6	43.8	6.3	
	농어민	59	49.2	5.1	44.1	1.7	
	학생	132	34.1	14.4	48.5	3	
	주부	300	29.7	11.3	55.7	3.3	
지역	무직/기타	161	49.7	11.8	36	2.5	$\chi^2=19.029$ $p=0.39$
	서울	221	37.1	8.1	52.5	2.3	
	부산/울산/경남	158	34.2	13.9	50.6	1.3	
	대구/경북	115	37.4	10.4	48.7	3.5	
	인천/경기	253	34.8	7.9	54.2	3.2	
	광주/전라	114	35.1	11.4	47.4	6.1	
	대전/충청	102	36.3	16.7	45.1	2	
본인 소득	강원	37	45.9	5.4	45.9	2.7	$\chi^2=12.366$ $p=0.193$
	120만원 미만	593	35.1	10.3	51.4	3.2	
	120~199만원	105	32.4	12.4	54.3	1	
	200만원 이상	211	39.3	7.1	51.2	2.4	
가구 소득	없음	91	39.6	16.5	39.6	4.4	$\chi^2=20.573$ $p=0.015$
	200만원 미만	317	41	7.6	47.3	4.1	
	200~299만원	281	37	13.5	47	2.5	
	300~399만원	270	29.3	12.2	55.6	3	
고향	400만원 이상	132	36.4	6.8	56.1	0.8	$\chi^2=14.874$ $p=0.829$
	서울	164	34.1	9.1	53	3.7	
	경기/인천	89	37.1	9	50.6	3.4	
	강원	50	32	8	58	2	
	대전/충청	158	37.3	13.9	45.6	3.2	
	광주/전라	205	33.7	9.3	52.7	4.4	
	대구/경북	144	38.9	9	50.7	1.4	
	부산/울산/경남	171	37.4	13.5	47.4	1.8	
해외/이북/기타	19	42.1	0	57.9	0		

<표 III-5> 2010년 한국의 우호 국가: 문화 분야

		사례수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유의도
전체		1000	32.2	27.8	37.5	2.5	
성별	남성	490	34.7	25.9	36.5	2.9	$\chi^2=3.810$ $p=0.283$
	여성	510	29.8	29.6	38.4	2.2	
연령	20대	216	27.3	35.2	34.7	2.8	$\chi^2=41.237$ $p=0$
	30대	218	23.4	25.2	46.8	4.6	
	40대	235	35.3	29.4	33.6	1.7	
	50대	165	32.7	23	41.2	3	
	60대 이상	166	45.2	24.1	30.7	0	
학력	고졸 이하	518	33.6	27.2	36.5	2.7	$\chi^2=5.612$ $p=0.778$
	전문대학	90	27.8	30	40	2.2	
	4년제 대학	358	30.7	29.1	38.3	2	
	대학원 이상	34	38.2	17.6	38.2	5.9	
직업	전문직	73	37	30.1	31.5	1.4	$\chi^2=27.324$ $p=0.29$
	공무원 및 사회단체	20	35	10	50	5	
	기업체/은행/금융업	82	35.4	23.2	39	2.4	
	판매/서비스직	125	28	28.8	40.8	2.4	
	생산직	48	43.8	33.3	22.9	0	
	농어민	59	37.3	20.3	40.7	1.7	
	학생	132	27.3	34.1	35.6	3	
	주부	300	27	28.7	41.3	3	
	무직/기타	161	39.8	24.8	32.9	2.5	
지역	서울	221	35.3	28.5	35.3	0.9	$\chi^2=18.892$ $p=0.399$
	부산/울산/경남	158	34.2	24.7	39.9	1.3	
	대구/경북	115	27.8	30.4	40	1.7	
	인천/경기	253	31.6	30	35.6	2.8	
	광주/전라	114	27.2	27.2	38.6	7	
	대전/충청	102	32.4	25.5	39.2	2.9	
	강원	37	37.8	21.6	37.8	2.7	
본인소득	120만원 미만	593	29.2	29.3	39.3	2.2	$\chi^2=20.478$ $p=0.015$
	120~199만원	105	29.5	33.3	36.2	1	
	200만원 이상	211	36	23.7	37.4	2.8	
	없음	91	46.2	20.9	27.5	5.5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317	32.8	24.6	39.1	3.5	$\chi^2=10.045$ $p=0.347$
	200~299만원	281	31.7	33.5	32.4	2.5	
	300~399만원	270	31.1	27	40	1.9	
	400만원 이상	132	34.1	25	39.4	1.5	
고향	서울	164	31.7	30.5	34.8	3	$\chi^2=26.054$ $p=0.204$
	경기/인천	89	36	32.6	30.3	1.1	
	강원	50	32	18	50	0	
	대전/충청	158	38.6	22.8	35.4	3.2	
	광주/전라	205	25.9	29.8	39.5	4.9	
	대구/경북	144	30.6	26.4	41.7	1.4	
	부산/울산/경남	171	32.2	29.8	36.8	1.2	
해외/이북/기타	19	47.4	21.1	31.6	0		

<표 III-6> 통일을 위한 협력 국가

		사례수	일본	러시아	중국	미국	유의도
전체		1000	3.8	2.1	35.6	58.5	
성별	남성	490	1.6	2.2	36.7	59.4	$\chi^2=12.450$ $p=0.006$
	여성	510	5.9	2	34.5	57.6	
연령	20대	216	4.2	0.9	33.3	61.6	$\chi^2=30.793$ $p=0.002$
	30대	218	5.5	4.1	42.7	47.7	
	40대	235	4.7	2.1	38.3	54.9	
	50대	165	3	2.4	32.7	61.8	
	60대 이상	166	0.6	0.6	28.3	70.5	
학력	고졸 이하	518	3.9	2.5	33.6	60	$\chi^2=12.754$ $p=0.174$
	전문대학	90	2.2	4.4	38.9	54.4	
	4년제 대학	358	3.9	0.6	37.2	58.4	
	대학원 이상	34	5.9	5.9	41.2	47.1	
직업	전문직	73	5.5	1.4	45.2	47.9	$\chi^2=29.843$ $p=0.19$
	공무원 및 사회단체	20	0	5	40	55	
	기업체/은행/금융업	82	1.2	1.2	42.7	54.9	
	판매/서비스직	125	1.6	4	32	62.4	
	생산직	48	0	4.2	43.8	52.1	
	농어민	59	3.4	0	39	57.6	
	학생	132	5.3	1.5	36.4	56.8	
	주부	300	6.3	2.3	32	59.3	
	무직/기타	161	1.9	1.2	32.3	64.6	
지역	서울	221	3.2	1.4	30.3	65.2	$\chi^2=16.281$ $p=0.573$
	부산/울산/경남	158	3.8	1.9	42.4	51.9	
	대구/경북	115	5.2	1.7	35.7	57.4	
	인천/경기	253	3.6	2.8	32.8	60.9	
	광주/전라	114	5.3	3.5	41.2	50	
	대전/충청	102	3.9	2	37.3	56.9	
강원	37	0	0	35.1	64.9		
본인소득	120만원 미만	593	4.4	2.4	33.7	59.5	$\chi^2=5.998$ $p=0.74$
	120~199만원	105	2.9	2.9	40	54.3	
	200만원 이상	211	2.4	1.4	39.3	56.9	
	없음	91	4.4	1.1	34.1	60.4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317	3.2	2.2	35	59.6	$\chi^2=5.928$ $p=0.747$
	200~299만원	281	5.3	1.8	37	55.9	
	300~399만원	270	3	3	35.9	58.1	
	400만원 이상	132	3.8	0.8	33.3	62.1	
고향	서울	164	4.3	1.2	36	58.5	$\chi^2=13.023$ $p=0.908$
	경기/인천	89	3.4	1.1	33.7	61.8	
	강원	50	0	2	40	58	
	대전/충청	158	3.8	2.5	32.3	61.4	
	광주/전라	205	4.9	2.9	36.1	56.1	
	대구/경북	144	4.2	1.4	38.2	56.3	
	부산/울산/경남	171	3.5	2.9	37.4	56.1	
해외/이북/기타	19	0	0	15.8	84.2		

<표 III-7> 한·미동맹이 통일에 미치는 영향

		사례수	매우 도움	대체로 도움	별로 도움 되지 않음	전혀 도움 되지 않음	종합			유의도
							도움	도움 되지 않음	4점 평균	
전체		1000	17	43.8	30.3	8.9	60.8	39.2	2.69	
성별	남성	490	23.5	40.8	26.5	9.2	64.3	35.7	2.79	$\chi^2=30.199$ $p=0$
	여성	510	10.8	46.7	33.9	8.6	57.5	42.5	2.6	
연령	20대	216	12	44.9	32.9	10.2	56.9	43.1	2.59	$\chi^2=86.485$ $p=0$
	30대	218	7.8	39.9	39	13.3	47.7	52.3	2.42	
	40대	235	13.6	41.3	35.7	9.4	54.9	45.1	2.59	
	50대	165	24.2	49.7	23.6	2.4	73.9	26.1	2.96	
	60대 이상	166	33.1	45.2	14.5	7.2	78.3	21.7	3.04	
학력	고졸 이하	518	18.7	45.8	28	7.5	64.5	35.5	2.76	$\chi^2=12.534$ $p=0.185$
	전문대학	90	16.7	43.3	31.1	8.9	60	40	2.68	
	4년제 대학	358	13.7	42.7	33	10.6	56.4	43.6	2.59	
	대학원 이상	34	26.5	26.5	35.3	11.8	52.9	47.1	2.68	
직업	전문직	73	15.1	41.1	34.2	9.6	56.2	43.8	2.62	$\chi^2=48.854$ $p=0.002$
	공무원 및 사회단체	20	20	30	35	15	50	50	2.55	
	기업체/은행/금융업	82	11	46.3	30.5	12.2	57.3	42.7	2.56	
	판매/서비스직	125	20	32	36.8	11.2	52	48	2.61	
	생산직	48	16.7	43.8	33.3	6.3	60.4	39.6	2.71	
	농어민	59	23.7	40.7	28.8	6.8	64.4	35.6	2.81	
	학생	132	11.4	43.2	36.4	9.1	54.5	45.5	2.57	
	주부	300	12.7	52	29	6.3	64.7	35.3	2.71	
	무직/기타	161	28.6	41	19.9	10.6	69.6	30.4	2.88	
지역	서울	221	21.7	44.3	29.9	4.1	66.1	33.9	2.84	$\chi^2=22.660$ $p=0.204$
	부산/울산/경남	158	12.7	48.1	28.5	10.8	60.8	39.2	2.63	
	대구/경북	115	12.2	42.6	33	12.2	54.8	45.2	2.55	
	인천/경기	253	15.4	42.7	32	9.9	58.1	41.9	2.64	
	광주/전라	114	16.7	41.2	28.9	13.2	57.9	42.1	2.61	
	대전/충청	102	20.6	42.2	29.4	7.8	62.7	37.3	2.75	
본인 소득	강원	37	24.3	45.9	27	2.7	70.3	29.7	2.92	$\chi^2=12.795$ $p=0.172$
	120만원 미만	593	16.7	45.2	29.3	8.8	61.9	38.1	2.7	
	120~199만원	105	14.3	44.8	33.3	7.6	59	41	2.66	
	200만원 이상	211	19	36	32.7	12.3	55	45	2.62	
가구 소득	없음	91	17.6	51.6	27.5	3.3	69.2	30.8	2.84	$\chi^2=24.486$ $p=0.004$
	200만원 미만	317	20.2	46.4	23.7	9.8	66.6	33.4	2.77	
	200~299만원	281	17.8	45.2	32.7	4.3	63	37	2.77	
	300~399만원	270	13.3	40.7	35.6	10.4	54.1	45.9	2.57	
고향	400만원 이상	132	15.2	40.9	30.3	13.6	56.1	43.9	2.58	$\chi^2=28.641$ $p=0.123$
	서울	164	21.3	44.5	26.8	7.3	65.9	34.1	2.8	
	경기/인천	89	13.5	46.1	31.5	9	59.6	40.4	2.64	
	강원	50	10	50	32	8	60	40	2.62	
	대전/충청	158	18.4	43.7	26.6	11.4	62	38	2.69	
	광주/전라	205	16.1	39	35.6	9.3	55.1	44.9	2.62	
	대구/경북	144	19.4	38.9	34	7.6	58.3	41.7	2.7	
부산/울산/경남	171	11.7	49.7	29.2	9.4	61.4	38.6	2.64		
	해외/이북/기타	19	42.1	47.4	5.3	5.3	89.5	10.5	3.26	

IV

대북정책관련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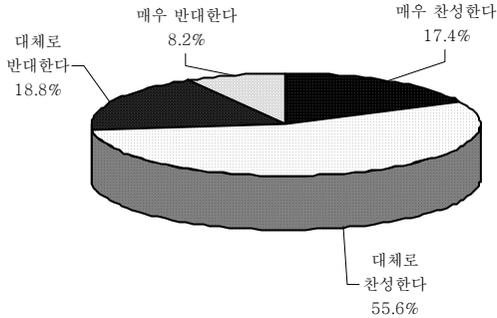
1. 평화변영정책 평가

평화변영정책은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하는 한편, 포괄적 국가전략이며, 동북아차원의 평화변영을 추구하며, 대내적 합의기반을 중시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평화변영정책은 한반도평화증진과 공동변영을 추구하며,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상호신뢰 우선과 호혜주의, 남북당사자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이라는 원칙을 지니고 있다.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견해를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현 정부의 평화변영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응답자의 73%는 찬성한다고 한 반면 27%만이 반대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국민들 다수는 현 정부의 평화변영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의 경우 ‘매우 찬성한다’가 17.4%, ‘대체로 찬성한다’는 55.6%였다. 반대의 경우 ‘대체로 반대한다’는 18.8%, ‘매우 반대한다’는 8.2%였다.

배경변수별로는 연령, 거주 지역, 고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20대와 30대에서 찬성의 비율이 각각 75.9%, 78%로 나타나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60대 이상의 찬성비율은 66.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거주 지역에 있어서는 광주·전라가 88.6%로 찬성비율이 가장 높았고, 반면 서울(67.4%)과 대구·경북(67%)이 가장 낮았다. 고향의 경우에도 광주·전라가 고향인 응답자의 찬성비율이 85.9%로 가장 높았다. 반면 고향이 해외·이북·기타 지역인 경우 찬성비율이 57.9%로 가장 낮게 나왔다.

<그림 IV-1> 평화변영정책 평가



2. 평화변영정책과 햇볕정책 비교

평화변영정책은 여러 가지 점에서 햇볕정책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평화변영정책은 북한 실체 인정, 점진적·단계적 통일추구, 사실상의 통일 추구, 가능한 분야의 협력 확대 등의 측면에서 햇볕정책과 기본방향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평화변영정책은 평화와 번영이라는 민족 공통의 목표 추구, 동북아차원으로 남북협력의 확대, 대내적 합의기반 중시 등의 측면에서 햇볕정책과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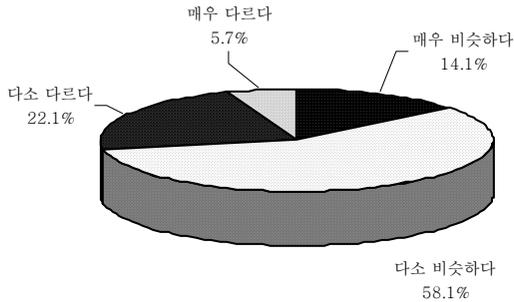
평화변영정책과 햇볕정책의 유사성에 대한 조사 결과, ‘비슷하다’는 응답(72.7%)이 ‘다르다’는 응답(27.8%)보다 높게 나왔다. 국민들의 다수가 평화변영정책을 햇볕정책과 유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것을 달리 해석하면, 평화변영정책과 햇

별정책의 차별성이 적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배경변수 가운데 유의미한 것은 연령과 본인 소득이었다. 연령의 경우 50대(77.6%)와 60대 이상(75.35)이 20대(65.35)와 30대(70.2%)보다 상대적으로 평화번영정책이 햇볕정책과 유사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0만원 이상(80.6%)의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두 정책간의 유사성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2> 평화번영정책과 햇볕정책 비교



3. 대북지원 및 경협 평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대화를 비롯하여 각 분야별로 남북관계가 진전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되는 것은 대북지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제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북지원 및 남북경협은 북한의 대남의존도를 높이고 실질적으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대북지원 및 남북경협은 ‘대북 퍼주기’ 논쟁을 일으키는 쟁점이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북지원, 금강산관광사업, 개성공단사업, 남북경협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견해를 알아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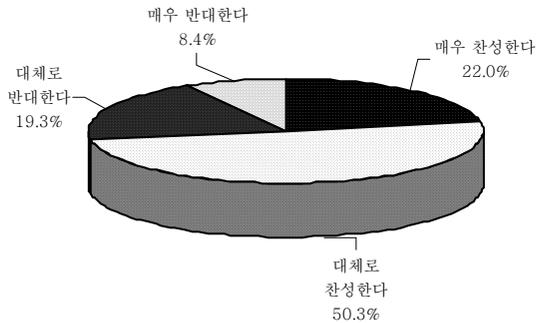
가. 대북지원

일반국민들의 경우 대북지원정책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72.3%, 반대한다는 응답이 27.7%를 차지하였다. 찬성의 경우 ‘매우 찬성한다’가 22%, ‘대체로 찬성한다’가 50.3%를 차지하였고, 반대의 경우에는 ‘대체로 반대한다’ 19.3%, ‘매우 반대한다’가 8.4%로 나타났다.

배경변수별로는 성별, 연령, 학력, 지역, 고향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남성(77.6%)가운데 여성(67.3%)보다 찬성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연령층에서는 찬성한다는 비율이 20대(79.6%)에서 가장 높았고, 50대(63%)에서 가장 낮았다. 학력이 높을수록 찬성비율(고졸 이하 68.3%, 전문대학 70%, 4년제 대학 77.9%, 대학원 이상 79.4%)이 높게 나타났다.

다. 지역에서는 찬성비율이 광주·전라(87.7%)에서 가장 높았고, 대전·충청(63.7%)과 강원(64.9%)에서 낮았다. 고향이 광주·전라(84.9%)인 경우 찬성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대전·충청(65.8%)과 대구·경북(66%)에서 가장 낮았다.

<그림 IV-3> 대북지원정책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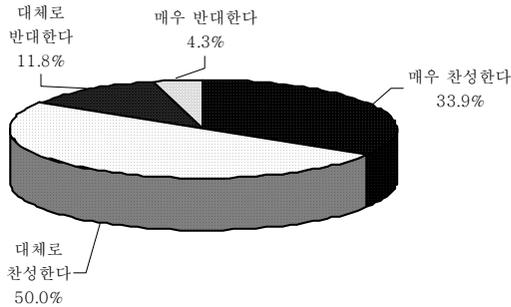
나. 금강산 관광사업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해서는 대북지원정책보다도 찬성비율이 더욱 높게 나타나 찬성한다는 견해가 83.9%를 차지하였다. 구체적인 응답비율은 ‘매우 찬성한다’ 33.9%, ‘대체로 찬성한다’ 50%, ‘대체로 반대한다’ 11.8%, ‘매우 반대한다’ 4.3%였다.

배경변수에 있어서는 성별, 연령, 직업, 가구소득, 북한친척 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남성(81.4%) 보다는 여성(86.3%)의 찬성비율이 높았고, 나이가 많을수록

찬성비율(20대 90.3%, 30대 89.9%, 40대 87.7%, 50대 78.2%, 60대 이상 68.1%)은 낮게 나타났다. 전문직(90.4%), 공무원·사회단체(90%), 학생(90.9%)의 찬성비율이 가장 높았고, 무직·기타(76.4%)의 경우가 가장 낮았다. 가구소득에 있어서는 특별한 경향성은 보이지 않았으나 200만원 미만(77.9%)의 최하위 소득계층의 찬성비율이 가장 낮았다. 북한친척 유무에 따라서는 친척이 있는 경우(69.7%)보다 없는 경우(84.9%)의 찬성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IV-4> 금강산 관광사업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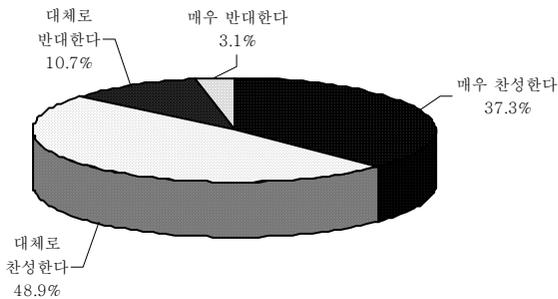


다. 개성공단사업

개성공단사업에 대해서도 찬성한다는 견해는 86.2%('매우 찬성한다' 37.3%, '대체로 찬성한다' 48.9%)인 반면 반대한다는 견해는 13.8%('대체로 반대한다' 10.7%, '매우 반대한다' 3.1%)로 나타나 매우 높은 찬성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배경변수별로는 연령, 학력, 직업, 본인소득, 가구소득, 고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나이가 적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찬성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나이에 따른 찬성비율은 나이가 들수록(20대 89.8%, 30대 89.9%, 40대 89.4%, 50대 83%, 60대 이상 75.3%)로 낮아지는 반면, 학력에 따른 찬성비율은 학력이 높을수록(고졸 이하 83.4%, 전문대학 85.6%, 4년제 대학 89.4%, 대학원 이상 97.1%) 증가했다. 직업의 경우 전문직(93.2%), 공무원·사회단체(95%), 학생(92.4%)에서 찬성비율이 가장 높았다. 본인소득에 있어서는 200만원 이상(88.6%) 최상위 계층의 찬성비율이 가장 높았다. 가구소득에서는 200만원 미만(80.8%)의 최하위 소득계층의 찬성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고향이 광주·전라(90.2%)인 응답자와 부산·울산·경남(91.2%)인 응답자의 찬성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다소 의외의 결과이다.

<그림 IV-5> 개성공단사업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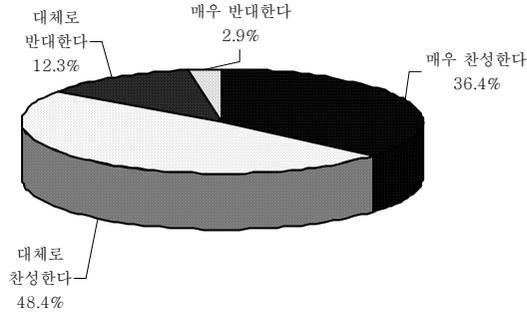


라. 남북경협사업

대북정책 중 남북경협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찬성비율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84.8%(‘매우 찬성한다’ 36.4%, ‘대체로 찬성한다’ 48.4%)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15.2%(‘대체로 반대한다’ 12.3%, ‘매우 반대한다’가 2.9%)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본인소득, 가구소득, 고향 등 거의 모든 배경변수에서 나타나고 있다. 찬성한다는 비율은 남성(86.5%)이 여성(83.1%)보다 높았다. 연령에 따라서는 30대(89.4%)의 찬성비율이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76.5%)의 찬성비율이 가장 낮았다. 학력이 높을수록 찬성비율(고졸 이하 81.7%, 전문대학 86.7%, 4년제 대학 88%, 대학원 이상 94.1%)이 높게 나타났다. 공무원·사회단체(95%), 전문직(91.8%), 학생(88.6%) 등의 직업군에서 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본인소득이 높을수록 찬성비율(‘없음’ 81.3%, ‘120만원 미만’ 83.6%, ‘120~199만원’ 87.6%, ‘200만원 이상’ 88.2%)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가구소득에 있어서는 중간 소득계층(‘200~299만원’ 86.5%, ‘300~399만원’ 87.4%)이 최하위(‘200만원 미만’ 81.4%) 및 최상위(‘400만원 이상’ 84.1%) 소득계층보다 찬성비율이 높았다. 고향이 광주·전라인 응답자의 찬성비율은 90.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강원(88%)과 부산·울산·경남(87.7%)이 차지하였다.

<그림 IV-6> 남북경협사업 평가



4. 대북정책의 문제점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슈별로 보면 대북지원 정도, 안보문제의 우선순위, 한·미공조 등에 관해서 견해차이가 크다. 그리고 대북정책의 추진과정과 관련하여 국민적 합의, 정책투명성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북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하였다.

대북정책의 문제점으로 ‘국민적 합의부족’(26.4%)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 ‘과도한 대북지원’(26%), ‘정책투명성 부족’(22.4%), ‘안보문제 소홀’(13.3%), ‘한·미공조 부족’(9.1%)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책추진과 관련된 국민적 합의와 정책투명성에 대한 응답 비율을 합하면 약 50%에 이른다. 따라서

국민들은 대북지원, 안보문제 소홀 등 구체적 문제보다 대북 정책의 결정 및 정책추진 과정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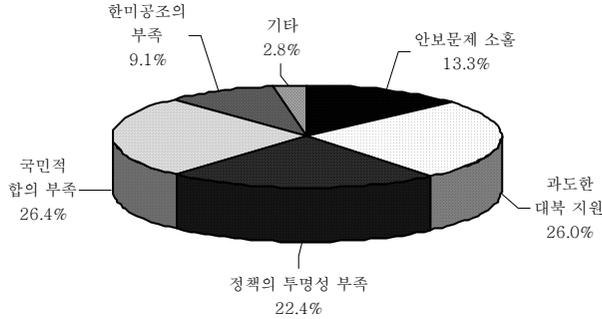
배경변수별로 보면, 유의성이 있는 가운데 분명한 특징을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대구·경북 거주자 가운데 ‘과도한 대북 지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정도(33.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05년 조사 결과를 2003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국민적 합의부족’과 ‘정책투명성 부족’이 대북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정도는 대체로 비슷하였다. 주목되는 것은 2003년에 비해서 2005년에 ‘과다한 대북지원’이 문제라고 응답한 사람이 현격하게 감소한 반면, ‘안보문제 소홀’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비교 결과를 보면, 대북지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한 비율이 감소한 반면, 안보문제 및 한·미공조에 대한 우려는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표 IV-①> 2003년 조사와 2005년 조사 결과 비교

	안보문제 소홀	과다한 대북지원	정책투명성 부족	국민적 합의부족	한·미공조 부족
2003년 조사	4.7%	42.2%	26.0%	27.1%	-
2005년 조사	13.3%	26%	22.4%	26.4%	9.1%

<그림 IV-7> 대북정책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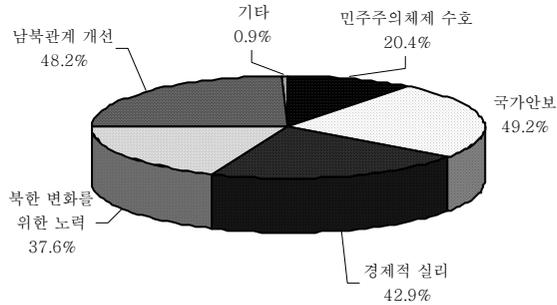
5. 대북정책의 주안점

대북정책의 목표에 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대체로 보수적인 사람들은 대북정책이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는 가운데 민주주의 체제 수호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목표로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면 실용주의적 사람들은 경제적 실리와 남북관계 개선을 대북정책의 목표로 추구해야 한다고 여긴다.

대북정책의 주안점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 2가지를 복수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국가안보'(49.2%)가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 '남북관계 개선'(48.2%), '경제적 실리'(42.9%), '북한 변화 노력'(37.6%), '민주주의 체제 수호'(20.4)로 나타났다. 응답

결과를 종합하면, 국가안보를 중시하는 보수적 입장과 남북관계 개선, 경제적 실리를 중시하는 실용주의적 입장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배경변수별로는 의미있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IV-8> 대북정책의 주안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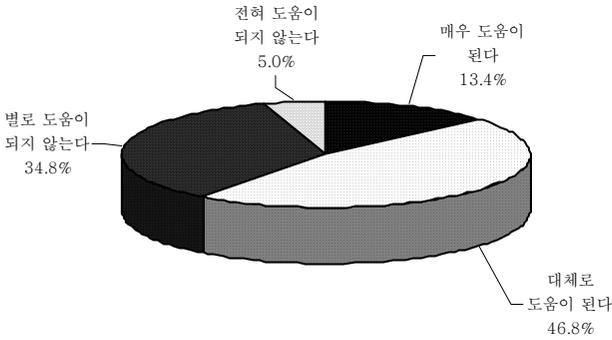
6.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원칙의 효과

2002년 10월 이후 북핵문제가 재발된 이후 상황이 악화되다가 2005년 2월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공식 선언했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정부의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이 북핵문제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60.2%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39.8%)에 비해 훨씬 많음으로써, 우리 국민들은 평화적 해결 원칙의 순기능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의견 분포를 보면, ‘매우 도움이 된다’(13.4%), ‘대체로 도움이 된다’(46.8%),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34.8%),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5%)로 조사되었다.

배경변수별로는 성별과 본인소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도움이 된다’는 의견(64.3%)이 전체평균보다 높았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35.7%)은 전체평균보다 떨어진 반면, 여성의 경우 ‘도움이 된다’는 의견(56.3%)이 전체평균보다 낮았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43.7%)은 전체평균보다 높았다. 대체적으로 본인소득이 높을수록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원칙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본인소득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69.2%), 120~199만원인 경우(64.8%)의 순이었고, 역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두 소득층에서 가장 낮아서, 각각 30.8%와 35.2%로 나타났다.

<그림 IV-9>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원칙의 효과



7. 북핵문제 해결에서 한·미공조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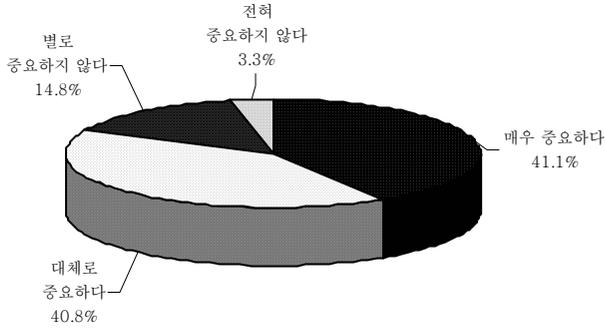
북핵문제는 범세계적인 핵비확산 체제에 저촉되는 외교적인 문제임과 동시에 한국의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군사안보적인 사안이다. 이러한 점에서, 북핵문제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서 “귀하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공조가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의견이 81.9%로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18.1%)에 비해 월등이 많았다. 우리 국민들이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한·미공조의 중요성에 대단한 무게를 두고 있다는 뜻이다. 구체적인 의견 분포를 보면, ‘매우 중요하다’(41.1%),

‘대체로 중요하다’(40.8%), ‘별로 중요하지 않다’(14.8%), ‘전혀 중요하지 않다’(3.3%)로 나타났다. 물론 이렇게 한·미공조를 중시하는 의견이 소위 남과 북이 협력한다는 민족공조를 우선 시하는 의견을 압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2003년 여론조사의 경우, 북핵문제 해법으로서의 ‘남북협력’과 ‘한·미협력’의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남북협력을 우선 시하는 의견이 매우 높았다. 30세 이하에서는 69.1%가 그리고 31세 이상에서는 59.3%가 한·미협력에 비해서 남북협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적이 있다.

배경변수별로는 성별, 연령 그리고 직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48.2%)이 ‘대체로 중요하다’는 의견(35.1%)보다 많았고, 여성의 경우에는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34.3%)에 비해서 ‘대체로 중요하다’는 의견(46.3%)이 훨씬 많았다. 30대부터는 연령에 따른 선호도의 추세가 일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공조를 중시하는 의견은 30대에서 60대로 갈수록 지속적으로 증가한(73.9% → 90.4%) 반면 중시하지 않는 의견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26.1% → 9.6%). 20대의 경우 한·미공조를 중시하는 의견(80.6%)이 30대(73.9%)와 40대(79.1%)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에서는 기업체·은행·금융업(73.2%), 생산직(75%) 그리고 학생(79.5%)이 한·미공조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0> 북핵문제 해결에서 한·미공조의 중요성



8. 북핵문제 악화시 남북관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 중에 있지만 그간의 과정을 돌아볼 때, 이 문제의 해결 방향을 속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북핵문제가 악화되는 경우 남북간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알아보고자 “귀하는 북한 핵문제가 악화될 경우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사업, 대북지원 등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했다.

가. 금강산 관광사업

금강산 관광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해서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9.4%, ‘그대로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42.5%로 과반수 이상(51.9%)의 국민들이 북핵문제가 악화되더라도 금강산 관광사업이 지속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서,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21.5%와 26.6%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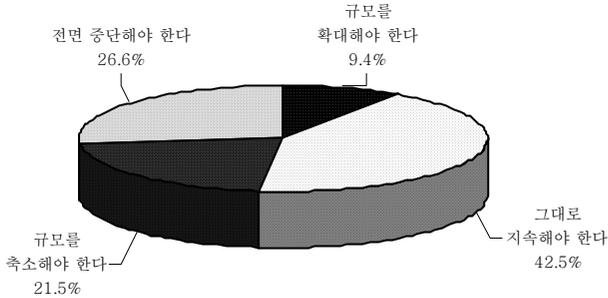
거의 모든 배경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대로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12.2%, 43.7%)이 여성(6.7%, 41.4%)에 비해서 높았고, ‘규모를 축소하거나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은 여성(24.5%, 27.5%)이 남성(18.4%, 25.7%)에 비해서 높았다. 여성의 반대의견이 강하다는 뜻이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규모 확대에 반대하는 반면 전면중단에 찬성하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20대에서 60대로 가면서 지속적으로 감소(12.5% → 5.4%)한 반면,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은 30대에서 60대로 가면서 지속적으로 증가(18.3% → 47%)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보면,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대학원 이상(17.6%)에서 가장 높았고, ‘그대로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은 4년제 대학(47.8%)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전문대학(32.2%)에서 가장 높았고,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은 고졸(32.6%)과 대학원 이상(32.4%)에서 비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그대로 지속해야 한다’

는 의견에서 전문직(49.3%), 기업체·은행·금융업(48.8%) 및 판매·서비스직(48.8%)이 49%대의 지지율을 나타낸 반면, 주부(38.3%)와 무직·기타(35.4%)는 평균치를 밑도는 지지율을 보였다.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의 경우 전문직(17.8%)과 학생(15.9%)이 낮은 지지율을 보인 반면, 주부(32.3%)와 무직·기타(36%)는 평균치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본인소득 부분에서는 120만원 이상의 소득자들이 ‘그대로 지속해야 한다’에 대해 평균보다 높은 49%대의 지지율을 보인 반면, 본인 소득이 1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데 대한 지지율(30.7%)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 부분에서는 400만원 이상의 소득자들이 ‘그대로 지속해야 한다’에 대해 가장 높은 지지율(49.2%)을 보였고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데 대해 가장 낮은 지지율(19.7%)을 보였다. 반면, 200만원 미만의 소득자들은 ‘그대로 지속해야 한다’에 대해 가장 낮은 지지율(34.7%)을 보였고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데 대해 가장 높은 지지율(33.8%)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향 부분에서, ‘그대로 지속해야 한다’에 대해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인 곳은 강원(50.0%)과 서울(49.4%)이고,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데 찬성하는 의견이 가장 많은 곳은 해외·이북·기타(52.6%) 그리고 경기·인천(34.8%)이었다. 마지막으로, 북한에 친척이 있는 경우에는 규모를 확대하거나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34.9%)보다 규모를 축소하거나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65.2%)이 월등히 많음으로써 실향민들의 정서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1> 북핵문제 악화시 금강산 관광사업



나. 개성공단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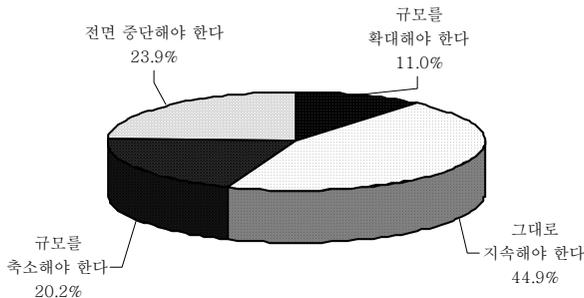
개성공단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해서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11.0%, ‘그대로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44.9%로 과반수 이상(55.9%)의 국민들이 북핵문제가 악화되더라도 개성공단사업이 지속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서,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20.2%와 23.9%로 나타났다.

성별, 연령, 학력 및 북한친척 유무 부분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대로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14.5%, 45.7%)이 여성(7.6%, 44.1%)에 비해서 높았고, ‘규모를 축소하거나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은 여성(22.9%, 25.3%)이 남성(17.3%, 22.4%)에 비해서 높았다. 여성의 반대의견이 강하다는 뜻이다. 연령이 높아

질수록 그대로 지속하는데 반대하는 반면 전면중단을 찬성하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대로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은 30대에서 60대로 가면서 지속적으로 감소(51.4% → 36.1%)한 반면,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은 30대에서 60대로 가면서 지속적으로 증가(16.1% → 42.8%)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보면,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대학원 이상(17.6%)에서 가장 높았고, ‘그대로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은 4년제 대학(48.6%)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전문대학(25.6%)에서 가장 높았고,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은 고졸(28.8%)과 대학원 이상(29.4%)에서 비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북한에 친척이 있는 경우에는 규모를 확대하거나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34.9%)보다 규모를 축소하거나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65.2%)이 월등이 많았다. 역시 실향민들의 대북사업에 대한 거부감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림 IV-12> 북핵문제 악화시 개성공단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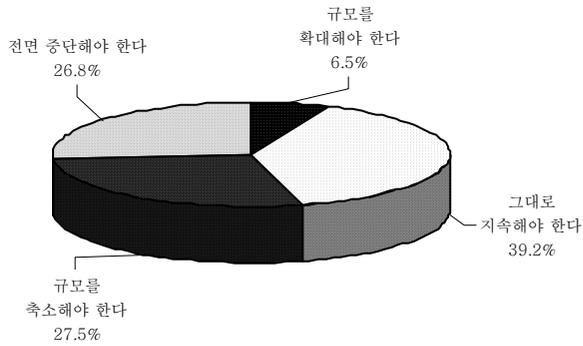
다. 대북지원

대북지원의 지속 여부에 대해서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6.5%, ‘그대로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39.2%로 합계가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45.7%) 나타났다. 반면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27.5%이고,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26.8%에 달함으로써 북핵문제가 악화되는 경우 대북지원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른 분야의 남북관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 국민들이 대북지원에서는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과 달리 가시적인 이익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연령, 학력 및 북한친척 유무 부분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규모 확대에 반대하는 반면 전면중단에 찬성하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그대로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은 30대에서 60대로 가면서 지속적으로 감소(46.3% → 31.9%)한 반면,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은 30대에서 60대로 가면서 지속적으로 증가(18.3% → 45.8%)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보면,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대학원 이상(14.7%)에서 가장 높았고, ‘그대로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은 4년제 대학(41.6%)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에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전문대학(36.7%)에서 가장 높았고,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은 대학원 이상(32.4%)과 고졸(30.9%)에서 비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북한에 친척이 있는 경우에는 규모를 확대하거나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28.8%)보다 규모를 축소하

거나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71.2%)이 월등이 많았다. 실
 향민들이 대북지원에도 반대할 뿐만 아니라 반대의 정도가 금
 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사업에 비해 높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그림 IV-13> 북핵문제 악화시 대북지원



<표 IV-1> 평화변영정책 평가

		사례수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대체로 반대	매우 반대	종합		4점 평균	유의도
							찬성	반대		
전체		1000	17.4	55.6	18.8	8.2	73	27	2.82	
성별	남성	490	18.6	52.9	18.8	9.8	71.4	28.6	2.8	$\chi^2=5.042$ $p=0.169$
	여성	510	16.3	58.2	18.8	6.7	74.5	25.5	2.84	
연령	20대	216	14.8	61.1	19	5.1	75.9	24.1	2.86	$\chi^2=21.941$ $p=0.038$
	30대	218	18.8	59.2	15.1	6.9	78	22	2.9	
	40대	235	18.3	52.3	22.1	7.2	70.6	29.4	2.82	
	50대	165	15.8	57	18.8	8.5	72.7	27.3	2.8	
	60대 이상	166	19.3	47	18.7	15.1	66.3	33.7	2.7	
학력	고졸 이하	518	18	56.2	17.2	8.7	74.1	25.9	2.83	$\chi^2=8.888$ $p=0.448$
	전문대학	90	24.4	48.9	17.8	8.9	73.3	26.7	2.89	
	4년제 대학	358	15.4	56.1	20.7	7.8	71.5	28.5	2.79	
	대학원 이상	34	11.8	58.8	26.5	2.9	70.6	29.4	2.79	
직업	전문직	73	15.1	54.8	24.7	5.5	69.9	30.1	2.79	$\chi^2=24.075$ $p=0.457$
	공무원 및 사회단체	20	25	55	15	5	80	20	3	
	기업체/은행/금융업	82	20.7	53.7	14.6	11	74.4	25.6	2.84	
	판매/서비스직	125	17.6	56	18.4	8	73.6	26.4	2.83	
	생산직	48	14.6	52.1	20.8	12.5	66.7	33.3	2.69	
	농어민	59	25.4	50.8	16.9	6.8	76.3	23.7	2.95	
	학생	132	13.6	64.4	18.2	3.8	78	22	2.88	
	주부	300	15.3	57.7	19.7	7.3	73	27	2.81	
	무직/기타	161	20.5	48.4	18	13	68.9	31.1	2.76	
지역	서울	221	17.6	49.8	21.3	11.3	67.4	32.6	2.74	$\chi^2=33.281$ $p=0.015$
	부산/울산/경남	158	12.7	62	20.3	5.1	74.7	25.3	2.82	
	대구/경북	115	11.3	55.7	21.7	11.3	67	33	2.67	
	인천/경기	253	18.6	54.2	18.2	9.1	72.7	27.3	2.82	
	광주/전라	114	27.2	61.4	7.9	3.5	88.6	11.4	3.12	
	대전/충청	102	17.6	54.9	21.6	5.9	72.5	27.5	2.84	
	강원	37	16.2	56.8	18.9	8.1	73	27	2.81	
본인 소득	120만원 미만	593	16.9	56.7	18.9	7.6	73.5	26.5	2.83	$\chi^2=6.277$ $p=0.712$
	120~199만원	105	14.3	58.1	21	6.7	72.4	27.6	2.8	
	200만원 이상	211	21.3	50.7	17.5	10.4	72	28	2.83	
	없음	91	15.4	57.1	18.7	8.8	72.5	27.5	2.79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317	18.3	53.3	17.4	11	71.6	28.4	2.79	$\chi^2=11.191$ $p=0.263$
	200~299만원	281	18.9	58.4	17.8	5	77.2	22.8	2.91	
	300~399만원	270	15.9	57	19.3	7.8	73	27	2.81	
	400만원 이상	132	15.2	52.3	23.5	9.1	67.4	32.6	2.73	
고향	서울	164	16.5	53	17.7	12.8	69.5	30.5	2.73	$\chi^2=48.758$ $p=0.001$
	경기/인천	89	18	55.1	21.3	5.6	73	27	2.85	
	강원	50	12	66	18	4	78	22	2.86	
	대전/충청	158	16.5	53.2	24.1	6.3	69.6	30.4	2.8	
	광주/전라	205	27.3	58.5	9.3	4.9	85.9	14.1	3.08	
	대구/경북	144	11.1	55.6	22.2	11.1	66.7	33.3	2.67	
	부산/울산/경남	171	14	55.6	22.2	8.2	69.6	30.4	2.75	
	해외/이북/기타	19	15.8	42.1	21.1	21.1	57.9	42.1	2.53	

<표 IV-2> 평화번영정책과 햇볕정책 비교

	사례수	매우 비슷	다소 비슷	다소 다름	매우 다름	총합		4점 평균	유의도	
						비슷	다름			
전체	1000	14.1	58.1	22.1	5.7	72.2	27.8	2.81		
성별	남성	490	16.9	59.2	18.6	5.3	76.1	23.9	2.88	$\chi^2=11.360$ $p=0.01$
	여성	510	11.4	57.1	25.5	6.1	68.4	31.6	2.74	
연령	20대	216	9.7	55.6	30.6	4.2	65.3	34.7	2.71	$\chi^2=23.093$ $p=0.027$
	30대	218	11.9	58.3	24.8	5	70.2	29.8	2.77	
	40대	235	16.2	58.3	18.3	7.2	74.5	25.5	2.83	
	50대	165	15.2	62.4	17.6	4.8	77.6	22.4	2.88	
	60대 이상	166	18.7	56.6	17.5	7.2	75.3	24.7	2.87	
학력	고졸 이하	518	14.3	58.3	21.2	6.2	72.6	27.4	2.81	$\chi^2=7.195$ $p=0.617$
	전문대학	90	16.7	51.1	30	2.2	67.8	32.2	2.82	
	4년제 대학	358	13.1	60.1	20.9	5.9	73.2	26.8	2.8	
	대학원 이상	34	14.7	52.9	26.5	5.9	67.6	32.4	2.76	
직업	전문직	73	21.9	56.2	15.1	6.8	78.1	21.9	2.93	$\chi^2=31.954$ $p=0.128$
	공무원 및 사회단체	20	15	65	20	0	80	20	2.95	
	기업체/은행/금융업	82	11	64.6	19.5	4.9	75.6	24.4	2.82	
	판매/서비스직	125	21.6	55.2	20	3.2	76.8	23.2	2.95	
	생산직	48	8.3	60.4	25	6.3	68.8	31.3	2.71	
	농어민	59	11.9	66.1	15.3	6.8	78	22	2.83	
	학생	132	10.6	55.3	29.5	4.5	65.9	34.1	2.72	
	주부	300	10.7	61.3	22	6	72	28	2.77	
무직/기타	161	18	49.7	24.2	8.1	67.7	32.3	2.78		
지역	서울	221	15.4	55.7	21.7	7.2	71	29	2.79	$\chi^2=11.681$ $p=0.863$
	부산/울산/경남	158	14.6	57.6	24.1	3.8	72.2	27.8	2.83	
	대구/경북	115	9.6	57.4	26.1	7	67	33	2.7	
	인천/경기	253	14.6	60.9	20.2	4.3	75.5	24.5	2.86	
	광주/전라	114	13.2	60.5	19.3	7	73.7	26.3	2.8	
	대전/충청	102	13.7	58.8	23.5	3.9	72.5	27.5	2.82	
본인 소득	강원	37	18.9	48.6	21.6	10.8	67.6	32.4	2.76	$\chi^2=19.327$ $p=0.023$
	120만원 미만	593	13.3	56.8	23.6	6.2	70.2	29.8	2.77	
	120~199만원	105	8.6	63.8	21.9	5.7	72.4	27.6	2.75	
	200만원 이상	211	19.4	61.1	14.2	5.2	80.6	19.4	2.95	
가구 소득	없음	91	13.2	52.7	30.8	3.3	65.9	34.1	2.76	$\chi^2=14.791$ $p=0.097$
	200만원 미만	317	15.1	53.3	24.9	6.6	68.5	31.5	2.77	
	200~299만원	281	10.7	66.5	19.2	3.6	77.2	22.8	2.84	
	300~399만원	270	16.7	54.4	22.6	6.3	71.1	28.9	2.81	
고향	400만원 이상	132	13.6	59.1	20.5	6.8	72.7	27.3	2.8	$\chi^2=20.413$ $p=0.495$
	서울	164	15.9	53.7	22.6	7.9	69.5	30.5	2.77	
	경기/인천	89	18	53.9	24.7	3.4	71.9	28.1	2.87	
	강원	50	14	48	26	12	62	38	2.64	
	대전/충청	158	13.3	63.9	19	3.8	77.2	22.8	2.87	
	광주/전라	205	14.1	62.4	18	5.4	76.6	23.4	2.85	
	대구/경북	144	9.7	59.7	24.3	6.3	69.4	30.6	2.73	
부산/울산/경남	171	14	57.3	24.6	4.1	71.3	28.7	2.81		
해외/이북/기타	19	21.1	42.1	26.3	10.5	63.2	36.8	2.74		

<표 IV-3> 대북지원정책 평가

		사례수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대체로 반대	매우 반대	종합		4점 평균	유의도
							찬성	반대		
전체		1000	22	50.3	19.3	8.4	72.3	27.7	2.86	
성별	남성	490	24.1	53.5	14.3	8.2	77.6	22.4	2.93	$\chi^2=16.392$ $p=0.001$
	여성	510	20	47.3	24.1	8.6	67.3	32.7	2.79	
연령	20대	216	17.6	62	12	8.3	79.6	20.4	2.89	$\chi^2=31.641$ $p=0.002$
	30대	218	26.1	50	17.9	6	76.1	23.9	2.96	
	40대	235	21.3	48.9	20.9	8.9	70.2	29.8	2.83	
	50대	165	23	40	29.1	7.9	63	37	2.78	
	60대 이상	166	22.3	47.6	18.7	11.4	69.9	30.1	2.81	
학력	고졸 이하	518	23	45.4	23.2	8.5	68.3	31.7	2.83	$\chi^2=28.457$ $p=0.001$
	전문대학	90	23.3	46.7	15.6	14.4	70	30	2.79	
	4년제 대학	358	18.7	59.2	15.1	7	77.9	22.1	2.9	
	대학원 이상	34	38.2	41.2	14.7	5.9	79.4	20.6	3.12	
직업	전문직	73	24.7	54.8	15.1	5.5	79.5	20.5	2.99	$\chi^2=33.105$ $p=0.102$
	공무원 및 사회단체	20	15	65	10	10	80	20	2.85	
	기업체/은행/금융업	82	28	47.6	14.6	9.8	75.6	24.4	2.94	
	판매/서비스직	125	27.2	44.8	17.6	10.4	72	28	2.89	
	생산직	48	18.8	47.9	22.9	10.4	66.7	33.3	2.75	
	농어민	59	28.8	40.7	25.4	5.1	69.5	30.5	2.93	
	학생	132	20.5	62.9	12.1	4.5	83.3	16.7	2.99	
	주부	300	17.7	48	24.7	9.7	65.7	34.3	2.74	
지역	무직/기타	161	22.4	50.3	18.6	8.7	72.7	27.3	2.86	$\chi^2=30.807$ $p=0.03$
	서울	221	20.8	49.3	19.9	10	70.1	29.9	2.81	
	부산/울산/경남	158	21.5	51.9	18.4	8.2	73.4	26.6	2.87	
	대구/경북	115	16.5	53	18.3	12.2	69.6	30.4	2.74	
	인천/경기	253	22.5	49.8	22.5	5.1	72.3	27.7	2.9	
	광주/전라	114	31.6	56.1	7.9	4.4	87.7	12.3	3.15	
	대전/충청	102	21.6	42.2	24.5	11.8	63.7	36.3	2.74	
본인 소득	강원	37	16.2	48.6	21.6	13.5	64.9	35.1	2.68	$\chi^2=11.175$ $p=0.264$
	120만원 미만	593	19.6	50.4	21.8	8.3	70	30	2.81	
	120~199만원	105	23.8	49.5	20	6.7	73.3	26.7	2.9	
	200만원 이상	211	26.1	51.2	13.3	9.5	77.3	22.7	2.94	
가구 소득	없음	91	26.4	48.4	16.5	8.8	74.7	25.3	2.92	$\chi^2=14.976$ $p=0.092$
	200만원 미만	317	20.2	46.1	24.6	9.1	66.2	33.8	2.77	
	200~299만원	281	22.1	54.8	17.1	6	76.9	23.1	2.93	
	300~399만원	270	22.2	49.3	18.5	10	71.5	28.5	2.84	
고향	400만원 이상	132	25.8	53	12.9	8.3	78.8	21.2	2.96	$\chi^2=38.731$ $p=0.011$
	서울	164	15.9	56.1	17.7	10.4	72	28	2.77	
	경기/인천	89	22.5	49.4	20.2	7.9	71.9	28.1	2.87	
	강원	50	24	46	24	6	70	30	2.88	
	대전/충청	158	23.4	42.4	25.9	8.2	65.8	34.2	2.81	
	광주/전라	205	30.7	54.1	10.2	4.9	84.9	15.1	3.11	
	대구/경북	144	19.4	46.5	22.9	11.1	66	34	2.74	
해외/이북기타	부산/울산/경남	171	18.7	50.3	21.1	9.9	69	31	2.78	
	19	10.5	68.4	15.8	5.3	78.9	21.1	2.84		

<표 IV-4> 금강산 관광사업 평가

		사례수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대체로 반대	매우 반대	종합		4점 평균	유의도
							찬성	반대		
전체		1000	33.9	50	11.8	4.3	83.9	16.1	3.14	
성별	남성	490	36.5	44.9	13.1	5.5	81.4	18.6	3.12	$\chi^2=11.531$ $p=0.009$
	여성	510	31.4	54.9	10.6	3.1	86.3	13.7	3.15	
연령	20대	216	38	52.3	6.5	3.2	90.3	9.7	3.25	$\chi^2=53.726$ $p=0$
	30대	218	39	50.9	7.3	2.8	89.9	10.1	3.26	
	40대	235	35.3	52.3	8.5	3.8	87.7	12.3	3.19	
	50대	165	27.9	50.3	17.6	4.2	78.2	21.8	3.02	
	60대 이상	166	25.9	42.2	23.5	8.4	68.1	31.9	2.86	
학력	고졸 이하	518	31.5	49.8	13.9	4.8	81.3	18.7	3.08	$\chi^2=12.871$ $p=0.169$
	전문대학	90	42.2	46.7	8.9	2.2	88.9	11.1	3.29	
	4년제 대학	358	33.8	51.7	10.3	4.2	85.5	14.5	3.15	
	대학원 이상	34	50	44.1	2.9	2.9	94.1	5.9	3.41	
직업	전문직	73	37	53.4	8.2	1.4	90.4	9.6	3.26	$\chi^2=41.617$ $p=0.014$
	공무원 및 사회단체	20	20	70	10	0	90	10	3.1	
	기업체/은행/금융업	82	37.8	47.6	8.5	6.1	85.4	14.6	3.17	
	판매/서비스직	125	46.4	36	11.2	6.4	82.4	17.6	3.22	
	생산직	48	25	56.3	16.7	2.1	81.3	18.8	3.04	
	농어민	59	35.6	45.8	13.6	5.1	81.4	18.6	3.12	
	학생	132	37.1	53.8	6.8	2.3	90.9	9.1	3.26	
	주부	300	27.7	56.3	12	4	84	16	3.08	
지역	무직/기타	161	33.5	42.9	17.4	6.2	76.4	23.6	3.04	$\chi^2=21.503$ $p=0.255$
	서울	221	32.6	52	11.8	3.6	84.6	15.4	3.14	
	부산/울산/경남	158	32.3	53.2	10.8	3.8	85.4	14.6	3.14	
	대구/경북	115	28.7	55.7	11.3	4.3	84.3	15.7	3.09	
	인천/경기	253	39.9	43.9	10.7	5.5	83.8	16.2	3.18	
	광주/전라	114	37.7	51.8	8.8	1.8	89.5	10.5	3.25	
	대전/충청	102	25.5	51	16.7	6.9	76.5	23.5	2.95	
본인 소득	강원	37	35.1	40.5	21.6	2.7	75.7	24.3	3.08	$\chi^2=10.589$ $p=0.305$
	120만원 미만	593	30.2	52.6	12.6	4.6	82.8	17.2	3.08	
	120~199만원	105	39	46.7	11.4	2.9	85.7	14.3	3.22	
	200만원 이상	211	37.9	47.4	10	4.7	85.3	14.7	3.18	
가구 소득	없음	91	42.9	42.9	11	3.3	85.7	14.3	3.25	$\chi^2=22.448$ $p=0.008$
	200만원 미만	317	29	48.9	16.7	5.4	77.9	22.1	3.02	
	200~299만원	281	38.1	51.2	8.2	2.5	89.3	10.7	3.25	
	300~399만원	270	31.5	51.5	11.5	5.6	83	17	3.09	
고향	400만원 이상	132	41.7	47	8.3	3	88.6	11.4	3.27	$\chi^2=32.565$ $p=0.051$
	서울	164	34.1	47	11.6	7.3	81.1	18.9	3.08	
	경기/인천	89	31.5	47.2	14.6	6.7	78.7	21.3	3.03	
	강원	50	32	44	20	4	76	24	3.04	
	대전/충청	158	28.5	55.1	12.7	3.8	83.5	16.5	3.08	
	광주/전라	205	41.5	50.2	7.8	0.5	91.7	8.3	3.33	
	대구/경북	144	33.3	50	11.1	5.6	83.3	16.7	3.11	
부산/울산/경남	171	32.2	53.2	11.1	3.5	85.4	14.6	3.14		
해외/이북/기타	19	31.6	31.6	26.3	10.5	63.2	36.8	2.84		

<표 IV-5> 개성공단사업 평가

		사례수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대체로 반대	매우 반대	총합		4점 평균	유의도
							찬성	반대		
전체		1000	37.3	48.9	10.7	3.1	86.2	13.8	3.2	
성별	남성	490	41.6	45.5	10	2.9	87.1	12.9	3.26	$\chi^2=7.716$ $p=0.052$
	여성	510	33.1	52.2	11.4	3.3	85.3	14.7	3.15	
연령	20대	216	36.6	53.2	7.4	2.8	89.8	10.2	3.24	$\chi^2=32.656$ $p=0.001$
	30대	218	45.4	44.5	8.3	1.8	89.9	10.1	3.33	
	40대	235	39.1	50.2	7.7	3	89.4	10.6	3.26	
	50대	165	33.9	49.1	13.9	3	83	17	3.14	
	60대 이상	166	28.3	47	19.3	5.4	75.3	24.7	2.98	
학력	고졸 이하	518	33.8	49.6	12.5	4.1	83.4	16.6	3.13	$\chi^2=19.340$ $p=0.022$
	전문대학	90	38.9	46.7	10	4.4	85.6	14.4	3.2	
	4년제 대학	358	39.7	49.7	8.9	1.7	89.4	10.6	3.27	
	대학원 이상	34	61.8	35.3	2.9	0	97.1	2.9	3.59	
직업	전문직	73	47.9	45.2	6.8	0	93.2	6.8	3.41	$\chi^2=54.996$ $p=0$
	공무원 및 사회단체	20	15	80	5	0	95	5	3.1	
	기업체/은행/금융업	82	45.1	40.2	8.5	6.1	85.4	14.6	3.24	
	판매/서비스직	125	52	36.8	8.8	2.4	88.8	11.2	3.38	
	생산직	48	31.3	50	16.7	2.1	81.3	18.8	3.1	
	농어민	59	39	44.1	15.3	1.7	83.1	16.9	3.2	
	학생	132	38.6	53.8	6.8	0.8	92.4	7.6	3.3	
	주부	300	29	55.3	10.7	5	84.3	15.7	3.08	
무직/기타	161	35.4	46	15.5	3.1	81.4	18.6	3.14		
지역	서울	221	36.7	48.4	10.4	4.5	85.1	14.9	3.17	$\chi^2=19.436$ $p=0.365$
	부산/울산/경남	158	32.9	53.8	10.1	3.2	86.7	13.3	3.16	
	대구/경북	115	33	55.7	8.7	2.6	88.7	11.3	3.19	
	인천/경기	253	42.3	46.2	8.7	2.8	88.5	11.5	3.28	
	광주/전라	114	42.1	45.6	9.6	2.6	87.7	12.3	3.27	
	대전/충청	102	32.4	48	16.7	2.9	80.4	19.6	3.1	
강원	37	37.8	40.5	21.6	0	78.4	21.6	3.16		
본인 소득	120만원 미만	593	32	53.8	10.8	3.4	85.8	14.2	3.15	$\chi^2=21.903$ $p=0.009$
	120~199만원	105	45.7	40	12.4	1.9	85.7	14.3	3.3	
	200만원 이상	211	45.5	43.1	8.1	3.3	88.6	11.4	3.31	
	없음	91	42.9	40.7	14.3	2.2	83.5	16.5	3.24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317	32.5	48.3	14.5	4.7	80.8	19.2	3.09	$\chi^2=23.717$ $p=0.005$
	200~299만원	281	39.1	50.2	9.3	1.4	89.3	10.7	3.27	
	300~399만원	270	34.8	53	9.3	3	87.8	12.2	3.2	
	400만원 이상	132	50	39.4	7.6	3	89.4	10.6	3.36	
고향	서울	164	36.6	48.8	8.5	6.1	85.4	14.6	3.16	$\chi^2=43.959$ $p=0.002$
	경기/인천	89	38.2	47.2	9	5.6	85.4	14.6	3.18	
	강원	50	40	44	16	0	84	16	3.24	
	대전/충청	158	32.9	50	15.2	1.9	82.9	17.1	3.14	
	광주/전라	205	47.8	42.4	9.3	0.5	90.2	9.8	3.38	
	대구/경북	144	35.4	46.5	12.5	5.6	81.9	18.1	3.12	
	부산/울산/경남	171	31.6	59.6	7	1.8	91.2	8.8	3.21	
해외/이북기타	19	21.1	52.6	21.1	5.3	73.7	26.3	2.89		

<표 IV-6> 남북경협사업 평가

	사례수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대체로 반대	매우 반대	종합		4점 평균	유의도	
						찬성	반대			
전체		1000	36.4	48.4	12.3	2.9	84.8	15.2	3.18	
성별	남성	490	40.8	45.7	10.8	2.7	86.5	13.5	3.25	$\chi^2=8.501$ $p=0.037$
	여성	510	32.2	51	13.7	3.1	83.1	16.9	3.12	
연령	20대	216	35.2	51.4	10.2	3.2	86.6	13.4	3.19	$\chi^2=23.235$ $p=0.026$
	30대	218	43.1	46.3	7.8	2.8	89.4	10.6	3.3	
	40대	235	37.4	50.2	9.8	2.6	87.7	12.3	3.23	
	50대	165	34.5	46.1	16.4	3	80.6	19.4	3.12	
	60대 이상	166	29.5	47	20.5	3	76.5	23.5	3.03	
학력	고졸 이하	518	33	48.6	14.5	3.9	81.7	18.3	3.11	$\chi^2=19.465$ $p=0.022$
	전문대학	90	40	46.7	10	3.3	86.7	13.3	3.23	
	4년제 대학	358	38	50	10.3	1.7	88	12	3.24	
	대학원 이상	34	61.8	32.4	5.9	0	94.1	5.9	3.56	
직업	전문직	73	39.7	52.1	8.2	0	91.8	8.2	3.32	$\chi^2=41.340$ $p=0.015$
	공무원 및 사회단체	20	20	75	5	0	95	5	3.15	
	기업체/은행/금융업	82	43.9	41.5	9.8	4.9	85.4	14.6	3.24	
	판매/서비스직	125	49.6	38.4	9.6	2.4	88	12	3.35	
	생산직	48	35.4	47.9	14.6	2.1	83.3	16.7	3.17	
	농어민	59	42.4	39	18.6	0	81.4	18.6	3.24	
	학생	132	35.6	53	9.8	1.5	88.6	11.4	3.23	
	주부	300	28.3	53.7	14	4	82	18	3.06	
지역	무직/기타	161	36.6	44.7	14.3	4.3	81.4	18.6	3.14	$\chi^2=16.444$ $p=0.562$
	서울	221	34.4	48.9	14	2.7	83.3	16.7	3.15	
	부산/울산/경남	158	33.5	52.5	12.7	1.3	86.1	13.9	3.18	
	대구/경북	115	33	53.9	11.3	1.7	87	13	3.18	
	인천/경기	253	39.9	46.6	9.5	4	86.6	13.4	3.23	
	광주/전라	114	41.2	46.5	9.6	2.6	87.7	12.3	3.26	
본인 소득	대전/충청	102	36.3	40.2	18.6	4.9	76.5	23.5	3.08	$\chi^2=17.773$ $p=0.038$
	강원	37	32.4	51.4	13.5	2.7	83.8	16.2	3.14	
	120만원 미만	593	31.5	52.1	13.2	3.2	83.6	16.4	3.12	
	120~199만원	105	45.7	41.9	10.5	1.9	87.6	12.4	3.31	
	200만원 이상	211	43.1	45	9.5	2.4	88.2	11.8	3.29	
가구 소득	없음	91	41.8	39.6	15.4	3.3	81.3	18.7	3.2	$\chi^2=19.579$ $p=0.021$
	200만원 미만	317	34.7	46.7	14.2	4.4	81.4	18.6	3.12	
	200~299만원	281	34.9	51.6	12.5	1.1	86.5	13.5	3.2	
	300~399만원	270	34.4	53	9.6	3	87.4	12.6	3.19	
고향	400만원 이상	132	47.7	36.4	12.9	3	84.1	15.9	3.29	$\chi^2=36.150$ $p=0.021$
	서울	164	34.1	51.2	9.8	4.9	85.4	14.6	3.15	
	경기/인천	89	36	48.3	10.1	5.6	84.3	15.7	3.15	
	강원	50	34	54	10	2	88	12	3.2	
	대전/충청	158	31	47.5	17.7	3.8	78.5	21.5	3.06	
	광주/전라	205	47.3	42.9	9.3	0.5	90.2	9.8	3.37	
	대구/경북	144	36.1	44.4	15.3	4.2	80.6	19.4	3.13	
부산/울산/경남	171	33.3	54.4	11.7	0.6	87.7	12.3	3.2		
해외/이북/기타	19	21.1	52.6	21.1	5.3	73.7	26.3	2.89		

〈표 IV-7〉 대북정책의 문제점

		사례수	안보 문제 소홀	과도한 대북 지원	정책의 투명성 부족	국민적 합의 부족	한·미 공조의 부족	기타	유의도
전체		1000	13.3	26	22.4	26.4	9.1	2.8	
성별	남성	490	14.3	21.4	23.3	27.6	10.2	3.3	$\chi^2=11.258$ $p=0.047$
	여성	510	12.4	30.4	21.6	25.3	8	2.4	
연령	20대	216	17.6	23.6	25.5	25	7.9	0.5	$\chi^2=37.577$ $p=0.01$
	30대	218	10.1	23.4	30.7	25.2	8.7	1.8	
	40대	235	8.9	29.8	19.1	29.4	9.4	3.4	
	50대	165	17	26.1	19.4	24.2	8.5	4.8	
	60대 이상	166	14.5	27.1	15.1	27.7	11.4	4.2	
학력	고졸 이하	518	14.3	28.6	20.3	24.7	9.1	3.1	$\chi^2=21.910$ $p=0.11$
	전문대학	90	11.1	28.9	30	21.1	5.6	3.3	
	4년제 대학	358	12.8	23.5	23.5	28.5	9.5	2.2	
	대학원 이상	34	8.8	5.9	23.5	44.1	14.7	2.9	
직업	전문직	73	8.2	16.4	28.8	32.9	5.5	8.2	$\chi^2=65.749$ $p=0.006$
	공무원 및 사회단체	20	25	20	25	20	10	0	
	기업체/은행/금융업	82	13.4	23.2	28	29.3	4.9	1.2	
	판매/서비스직	125	9.6	25.6	20	30.4	11.2	3.2	
	생산직	48	12.5	27.1	31.3	16.7	8.3	4.2	
	농어민	59	6.8	28.8	27.1	27.1	5.1	5.1	
	학생	132	22	21.2	23.5	23.5	9.8	0	
	주부	300	12.7	33.3	20.7	23	8	2.3	
무직/기타	161	13.7	21.7	16.1	31.1	14.3	3.1		
지역	서울	221	15.4	25.3	16.7	29	8.6	5	$\chi^2=45.687$ $p=0.033$
	부산/울산/경남	158	19	27.8	23.4	20.3	8.2	1.3	
	대구/경북	115	12.2	33.9	20	26.1	5.2	2.6	
	인천/경기	253	7.9	24.9	24.1	28.5	12.3	2.4	
	광주/전라	114	15.8	16.7	26.3	27.2	12.3	1.8	
	대전/충청	102	12.7	28.4	26.5	27.5	2.9	2	
	강원	37	10.8	27	24.3	18.9	13.5	5.4	
본인 소득	120만원 미만	593	13.7	30	19.1	25.8	9.1	2.4	$\chi^2=32.550$ $p=0.005$
	120~199만원	105	11.4	18.1	31.4	28.6	5.7	4.8	
	200만원 이상	211	11.8	19	27	29.4	8.5	4.3	
	없음	91	16.5	25.3	23.1	20.9	14.3	0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317	12.3	29.3	20.8	24.3	9.1	4.1	$\chi^2=12.562$ $p=0.636$
	200~299만원	281	13.9	25.6	25.3	24.2	9.6	1.4	
	300~399만원	270	14.4	23.3	20.7	30.7	8.5	2.2	
	400만원 이상	132	12.1	24.2	23.5	27.3	9.1	3.8	
고향	서울	164	15.2	27.4	23.8	22	9.1	2.4	$\chi^2=49.897$ $p=0.049$
	경기/인천	89	14.6	29.2	22.5	19.1	11.2	3.4	
	강원	50	6	24	28	30	8	4	
	대전/충청	158	9.5	25.3	23.4	31	7	3.8	
	광주/전라	205	12.7	15.6	22	34.6	12.7	2.4	
	대구/경북	144	14.6	35.4	19.4	18.8	9	2.8	
	부산/울산/경남	171	17.5	29.2	21.6	24.6	5.3	1.8	
해외/이북/기타	19	0	21.1	21.1	36.8	15.8	5.3		

<표 IV-8> 대북정책의 주안점

		사례수	민주주의 체제 수호	국가 안보	경제적 실리	북한 변화를 위한 노력	남북 관계 개선	기타	유의도
전체		1000	20.4	49.2	42.9	37.6	48.2	0.9	
성별	남성	490	23.1	49.8	39.4	38	48.2	1	$\chi^2=6.067$ p=0.3
	여성	510	17.8	48.6	46.3	37.3	48.2	0.8	
연령	20대	216	23.1	44.4	34.7	45.8	50.5	0.9	$\chi^2=21.293$ p=0.38
	30대	218	19.3	43.6	46.3	36.2	52.8	1.4	
	40대	235	17.9	46.4	44.3	41.3	48.1	0.4	
	50대	165	22.4	53.3	47.9	33.3	41.8	0.6	
	60대 이상	166	19.9	62.7	42.2	27.7	45.8	1.2	
학력	고졸 이하	518	20.5	50.2	42.1	36.1	48.8	1	$\chi^2=10.987$ p=0.754
	전문대학	90	24.4	45.6	40	43.3	44.4	1.1	
	4년제 대학	358	17.6	48.9	45.5	39.1	48	0.8	
	대학원 이상	34	38.2	47.1	35.3	29.4	50	0	
직업	전문직	73	17.8	38.4	54.8	42.5	43.8	1.4	$\chi^2=56.491$ p=0.044
	공무원 및 사회단체	20	20	55	45	35	45	0	
	기업체/은행/금융업	82	17.1	50	48.8	34.1	50	0	
	판매/서비스직	125	18.4	38.4	48.8	40	52.8	0	
	생산직	48	25	54.2	35.4	37.5	47.9	0	
	농어민	59	22	50.8	44.1	35.6	42.4	1.7	
	학생	132	26.5	40.2	31.1	48.5	53	0.8	
	주부	300	16	55.3	46	34.3	47.3	0.7	
무직/기타	161	26.1	55.3	35.4	33.5	46	2.5		
지역	서울	221	19	53.8	46.6	30.3	50.2	0	$\chi^2=38.314$ p=0.142
	부산/울산/경남	158	20.3	46.8	38.6	38	55.1	0.6	
	대구/경북	115	19.1	52.2	45.2	37.4	43.5	1.7	
	인천/경기	253	19.4	47.8	43.5	39.5	47.4	1.2	
	광주/전라	114	28.9	42.1	38.6	38.6	50	1.8	
	대전/충청	102	17.6	50	39.2	50	39.2	1	
	강원	37	21.6	51.4	51.4	29.7	45.9	0	
본인 소득	120만원 미만	593	20.4	50.1	41	37.1	49.6	1.3	$\chi^2=12.494$ p=0.641
	120~199만원	105	17.1	44.8	48.6	35.2	53.3	0	
	200만원 이상	211	19.9	46.4	45.5	40.3	46	0.5	
	없음	91	25.3	54.9	42.9	37.4	38.5	0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317	21.8	54.3	38.8	31.5	50.8	1.6	$\chi^2=22.737$ p=0.09
	200~299만원	281	20.6	48.8	45.2	39.5	44.8	0.7	
	300~399만원	270	21.1	43.3	44.1	43	48.5	0	
	400만원 이상	132	15.2	50	45.5	37.1	48.5	1.5	
고향	서울	164	18.3	51.2	51.8	34.1	43.9	0.6	$\chi^2=35.154$ p=0.461
	경기/인천	89	20.2	55.1	49.4	29.2	44.9	1.1	
	강원	50	18	36	52	34	60	0	
	대전/충청	158	19.6	48.1	35.4	46.2	46.8	0.6	
	광주/전라	205	24.4	42	40.5	40.5	51.2	1	
	대구/경북	144	20.1	52.8	41	36.1	47.9	1.4	
	부산/울산/경남	171	18.7	53.8	40.9	36.8	48.5	0.6	
해외/이북/기타	19	26.3	57.9	31.6	31.6	47.4	5.3		

<표 IV-9> 복핵문제 평화적 해결원칙의 효과

	사례수	매우 도움	대체로 도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종합		4점 평균	유의도	
						도움	도움 되지 않음			
전체	1000	13.4	46.8	34.8	5	60.2	39.8	2.69		
성별	남성	490	15.5	48.8	31.4	4.3	64.3	35.7	2.76	$\chi^2=8.113$ p=0.044
	여성	510	11.4	44.9	38	5.7	56.3	43.7	2.62	
연령	20대	216	7.9	51.4	35.6	5.1	59.3	40.7	2.62	$\chi^2=14.277$ p=0.283
	30대	218	11.9	46.3	37.6	4.1	58.3	41.7	2.66	
	40대	235	16.6	42.6	34.5	6.4	59.1	40.9	2.69	
	50대	165	13.9	49.1	33.3	3.6	63	37	2.73	
	60대 이상	166	17.5	45.2	31.9	5.4	62.7	37.3	2.75	
학력	고졸 이하	518	12.5	46.9	35.7	4.8	59.5	40.5	2.67	$\chi^2=11.679$ p=0.232
	전문대학	90	8.9	47.8	34.4	8.9	56.7	43.3	2.57	
	4년제 대학	358	14.5	46.4	34.4	4.7	60.9	39.1	2.71	
	대학원 이상	34	26.5	47.1	26.5	0	73.5	26.5	3	
직업	전문직	73	12.3	45.2	39.7	2.7	57.5	42.5	2.67	$\chi^2=32.980$ p=0.105
	공무원 및 사회단체	20	15	65	15	5	80	20	2.9	
	기업체/은행/금융업	82	17.1	47.6	32.9	2.4	64.6	35.4	2.79	
	판매/서비스직	125	17.6	49.6	29.6	3.2	67.2	32.8	2.82	
	생산직	48	8.3	64.6	22.9	4.2	72.9	27.1	2.77	
	농어민	59	18.6	42.4	35.6	3.4	61	39	2.76	
	학생	132	6.8	51.5	36.4	5.3	58.3	41.7	2.6	
	주부	300	11	43.7	39	6.3	54.7	45.3	2.59	
	무직/기타	161	18	41	34.2	6.8	59	41	2.7	
지역	서울	221	9.5	47.1	38.9	4.5	56.6	43.4	2.62	$\chi^2=23.475$ p=0.173
	부산/울산/경남	158	13.9	44.3	32.3	9.5	58.2	41.8	2.63	
	대구/경북	115	13	48.7	33.9	4.3	61.7	38.3	2.7	
	인천/경기	253	15.8	44.3	35.6	4.3	60.1	39.9	2.72	
	광주/전라	114	20.2	50.9	26.3	2.6	71.1	28.9	2.89	
	대전/충청	102	10.8	48	37.3	3.9	58.8	41.2	2.66	
	강원	37	5.4	51.4	37.8	5.4	56.8	43.2	2.57	
본인 소득	120만원 미만	593	11.3	45	38.1	5.6	56.3	43.7	2.62	$\chi^2=23.120$ p=0.006
	120~199만원	105	9.5	55.2	33.3	1.9	64.8	35.2	2.72	
	200만원 이상	211	20.9	48.3	26.1	4.7	69.2	30.8	2.85	
	없음	91	14.3	45.1	35.2	5.5	59.3	40.7	2.68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317	12.9	45.4	37.2	4.4	58.4	41.6	2.67	$\chi^2=8.915$ p=0.445
	200~299만원	281	15.7	50.2	30.6	3.6	65.8	34.2	2.78	
	300~399만원	270	11.5	47	35.6	5.9	58.5	41.5	2.64	
	400만원 이상	132	13.6	42.4	36.4	7.6	56.1	43.9	2.62	
고향	서울	164	11	50.6	34.8	3.7	61.6	38.4	2.69	$\chi^2=20.340$ p=0.5
	경기/인천	89	15.7	46.1	34.8	3.4	61.8	38.2	2.74	
	강원	50	4	50	40	6	54	46	2.52	
	대전/충청	158	12.7	46.8	34.8	5.7	59.5	40.5	2.66	
	광주/전라	205	19	47.8	28.8	4.4	66.8	33.2	2.81	
	대구/경북	144	13.2	44.4	36.8	5.6	57.6	42.4	2.65	
	부산/울산/경남	171	11.7	45.6	36.3	6.4	57.3	42.7	2.63	
해외/이북기타	19	10.5	26.3	57.9	5.3	36.8	63.2	2.42		

<표 IV-10> 복핵문제 해결에서 한·미공조의 중요성

		사례수	매우 중요	대체로 중요	별로 중요 하지 않음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종합		4점 평균	유의도
							중요	중요 하지 않음		
전체		1000	41.1	40.8	14.8	3.3	81.9	18.1	3.2	
성별	남성	490	48.2	35.1	13.5	3.3	83.3	16.7	3.28	$\chi^2=20.461$ $p=0$
	여성	510	34.3	46.3	16.1	3.3	80.6	19.4	3.12	
연령	20대	216	33.3	47.2	17.1	2.3	80.6	19.4	3.12	$\chi^2=63.120$ $p=0$
	30대	218	32.6	41.3	20.6	5.5	73.9	26.1	3.01	
	40대	235	35.7	43.4	15.7	5.1	79.1	20.9	3.1	
	50대	165	49.1	40.6	9.7	0.6	89.7	10.3	3.38	
	60대 이상	166	62	28.3	7.8	1.8	90.4	9.6	3.51	
학력	고졸 이하	518	42.7	41.7	12.9	2.7	84.4	15.6	3.24	$\chi^2=8.773$ $p=0.458$
	전문대학	90	45.6	35.6	14.4	4.4	81.1	18.9	3.22	
	4년제 대학	358	36.9	41.6	17.6	3.9	78.5	21.5	3.11	
	대학원 이상	34	50	32.4	14.7	2.9	82.4	17.6	3.29	
직업	전문직	73	38.4	43.8	13.7	4.1	82.2	17.8	3.16	$\chi^2=43.589$ $p=0.009$
	공무원 및 사회단체	20	50	45	0	5	95	5	3.4	
	기업체/은행/금융업	82	32.9	40.2	24.4	2.4	73.2	26.8	3.04	
	판매/서비스직	125	43.2	41.6	12.8	2.4	84.8	15.2	3.26	
	생산직	48	41.7	33.3	20.8	4.2	75	25	3.13	
	농어민	59	45.8	39	11.9	3.4	84.7	15.3	3.27	
	학생	132	31.1	48.5	18.2	2.3	79.5	20.5	3.08	
	주부	300	38.3	44	15.3	2.3	82.3	17.7	3.18	
무직/기타	161	55.3	29.2	9.3	6.2	84.5	15.5	3.34		
지역	서울	221	44.8	36.7	15.8	2.7	81.4	18.6	3.24	$\chi^2=13.196$ $p=0.78$
	부산/울산/경남	158	34.8	47.5	12.7	5.1	82.3	17.7	3.12	
	대구/경북	115	38.3	41.7	18.3	1.7	80	20	3.17	
	인천/경기	253	41.5	41.1	13.8	3.6	82.6	17.4	3.21	
	광주/전라	114	43	39.5	13.2	4.4	82.5	17.5	3.21	
	대전/충청	102	40.2	42.2	14.7	2.9	82.4	17.6	3.2	
본인 소득	강원	37	48.6	32.4	18.9	0	81.1	18.9	3.3	$\chi^2=5.500$ $p=0.789$
	120만원 미만	593	39.8	41.5	15	3.7	81.3	18.7	3.17	
	120~199만원	105	42.9	43.8	12.4	1	86.7	13.3	3.29	
	200만원 이상	211	42.2	37.4	16.6	3.8	79.6	20.4	3.18	
가구 소득	없음	91	45.1	40.7	12.1	2.2	85.7	14.3	3.29	$\chi^2=9.029$ $p=0.435$
	200만원 미만	317	45.1	37.5	14.2	3.2	82.6	17.4	3.25	
	200~299만원	281	42.3	40.2	14.2	3.2	82.6	17.4	3.22	
	300~399만원	270	40	43	14.1	3	83	17	3.2	
고향	400만원 이상	132	31.1	45.5	18.9	4.5	76.5	23.5	3.03	$\chi^2=18.134$ $p=0.64$
	서울	164	45.7	37.2	12.8	4.3	82.9	17.1	3.24	
	경기/인천	89	39.3	43.8	14.6	2.2	83.1	16.9	3.2	
	강원	50	30	46	20	4	76	24	3.02	
	대전/충청	158	41.1	39.2	17.1	2.5	80.4	19.6	3.19	
	광주/전라	205	40.5	41	14.1	4.4	81.5	18.5	3.18	
	대구/경북	144	44.4	41	12.5	2.1	85.4	14.6	3.28	
부산/울산/경남	171	35.7	45	16.4	2.9	80.7	19.3	3.13		
해외/이북/기타	19	68.4	15.8	10.5	5.3	84.2	15.8	3.47		

<표 IV-11> 북핵문제 악화시 금강산 관광사업

		사례수	규모 확대	그대로 지속	규모 축소	전면 중단	유의도
전체		1000	9.4	42.5	21.5	26.6	
성별	남성	490	12.2	43.7	18.4	25.7	$\chi^2=13.252$ $p=0.004$
	여성	510	6.7	41.4	24.5	27.5	
연령	20대	216	12.5	44.4	24.1	19	$\chi^2=62.516$ $p=0$
	30대	218	9.6	48.2	23.9	18.3	
	40대	235	9.4	46	23.8	20.9	
	50대	165	9.1	39.4	16.4	35.2	
	60대 이상	166	5.4	30.7	16.9	47	
학력	고졸 이하	518	9.7	39.6	18.1	32.6	$\chi^2=33.902$ $p=0$
	전문대학	90	8.9	40	32.2	18.9	
	4년제 대학	358	8.4	47.8	24.6	19.3	
	대학원 이상	34	17.6	38.2	11.8	32.4	
직업	전문직	73	9.6	49.3	23.3	17.8	$\chi^2=36.533$ $p=0.049$
	공무원 및 사회단체	20	5	40	35	20	
	기업체/은행/금융업	82	8.5	48.8	20.7	22	
	판매/서비스직	125	11.2	48.8	18.4	21.6	
	생산직	48	12.5	43.8	18.8	25	
	농어민	59	8.5	42.4	22	27.1	
	학생	132	11.4	47	25.8	15.9	
	주부	300	6.7	38.3	22.7	32.3	
지역	서울	221	8.1	46.2	20.4	25.3	$\chi^2=14.754$ $p=0.679$
	부산/울산/경남	158	9.5	41.1	25.9	23.4	
	대구/경북	115	10.4	35.7	20	33.9	
	인천/경기	253	7.1	45.5	22.1	25.3	
	광주/전라	114	13.2	38.6	21.1	27.2	
	대전/충청	102	9.8	42.2	20.6	27.5	
본인소득	강원	37	16.2	40.5	13.5	29.7	$\chi^2=19.228$ $p=0.023$
	120만원 미만	593	8.6	38.4	22.3	30.7	
	120~199만원	105	8.6	49.5	18.1	23.8	
	200만원 이상	211	11.4	49.8	19.4	19.4	
가구소득	없음	91	11	44	25.3	19.8	$\chi^2=22.083$ $p=0.009$
	200만원 미만	317	11.4	34.7	20.2	33.8	
	200~299만원	281	8.2	46.6	19.6	25.6	
	300~399만원	270	8.1	44.1	25.2	22.6	
고향	400만원 이상	132	9.8	49.2	21.2	19.7	$\chi^2=35.409$ $p=0.025$
	서울	164	5.5	49.4	21.3	23.8	
	경기/인천	89	5.6	37.1	22.5	34.8	
	강원	50	12	50	16	22	
	대전/충청	158	10.1	43.7	19.6	26.6	
	광주/전라	205	11.7	44.9	22.9	20.5	
	대구/경북	144	6.3	44.4	21.5	27.8	
부산/울산/경남	171	14.6	32.7	22.8	29.8		
해외/이북/기타	19	0	26.3	21.1	52.6		

<표 IV-12> 복핵문제 악화시 개성공단사업

		사례수	규모 확대	그대로 지속	규모 축소	전면 중단	유의도
전체		1000	11	44.9	20.2	23.9	
성별	남성	490	14.5	45.7	17.3	22.4	$\chi^2=15.497$ $p=0.001$
	여성	510	7.6	44.1	22.9	25.3	
연령	20대	216	12.5	43.5	25.9	18.1	$\chi^2=57.764$ $p=0$
	30대	218	12.4	51.4	20.2	16.1	
	40대	235	10.2	48.9	22.1	18.7	
	50대	165	12.7	41.2	15.8	30.3	
	60대 이상	166	6.6	36.1	14.5	42.8	
학력	고졸 이하	518	11	43.1	17.2	28.8	$\chi^2=23.539$ $p=0.005$
	전문대학	90	12.2	42.2	25.6	20	
	4년제 대학	358	10.1	48.6	24	17.3	
	대학원 이상	34	17.6	41.2	11.8	29.4	
직업	전문직	73	11	52.1	23.3	13.7	$\chi^2=35.083$ $p=0.067$
	공무원 및 사회단체	20	10	45	25	20	
	기업체/은행/금융업	82	9.8	48.8	18.3	23.2	
	판매/서비스직	125	14.4	51.2	18.4	16	
	생산직	48	18.8	41.7	20.8	18.8	
	농어민	59	11.9	42.4	20.3	25.4	
	학생	132	11.4	45.5	27.3	15.9	
	주부	300	8	43	19	30	
무직/기타	161	11.8	39.8	16.8	31.7		
지역	서울	221	8.6	48	20.4	23.1	$\chi^2=15.895$ $p=0.6$
	부산/울산/경남	158	13.3	43	22.8	20.9	
	대구/경북	115	8.7	43.5	17.4	30.4	
	인천/경기	253	8.7	49.4	19.4	22.5	
	광주/전라	114	14	41.2	20.2	24.6	
	대전/충청	102	15.7	39.2	21.6	23.5	
본인 소득	강원	37	16.2	35.1	18.9	29.7	$\chi^2=15.846$ $p=0.07$
	120만원 미만	593	9.8	42.2	20.6	27.5	
	120~199만원	105	11.4	48.6	19	21	
	200만원 이상	211	14.2	51.2	18.5	16.1	
가구 소득	없음	91	11	44	23.1	22	$\chi^2=16.420$ $p=0.059$
	200만원 미만	317	12	38.8	18.9	30.3	
	200~299만원	281	11	45.2	19.9	23.8	
	300~399만원	270	9.3	48.9	21.9	20	
고향	400만원 이상	132	12.1	50.8	20.5	16.7	$\chi^2=29.786$ $p=0.036$
	서울	164	9.1	48.2	20.1	22.6	
	경기/인천	89	9	40.4	16.9	33.7	
	강원	50	16	44	20	20	
	대전/충청	158	12.7	46.2	20.3	20.9	
	광주/전라	205	10.2	49.8	22	18	
	대구/경북	144	7.6	47.9	18.8	25.7	
부산/울산/경남	171	15.2	37.4	21.1	26.3		
해외/이북기타	19	5.3	21.1	21.1	52.6		

<표 IV-13> 복핵문제 악화시 대북지원

		사례수	규모 확대	그대로 지속	규모 축소	전면 중단	유의도
전체		1000	6.5	39.2	27.5	26.8	
성별	남성	490	8.2	39.4	26.5	25.9	$\chi^2=4.705$ $p=0.195$
	여성	510	4.9	39	28.4	27.6	
연령	20대	216	9.3	40.7	30.1	19.9	$\chi^2=54.543$ $p=0$
	30대	218	5.5	46.3	29.8	18.3	
	40대	235	7.2	38.7	30.2	23.8	
	50대	165	7.9	35.8	24.2	32.1	
학력	60대 이상	166	1.8	31.9	20.5	45.8	$\chi^2=19.201$ $p=0.024$
	고졸 이하	518	6	38.4	24.7	30.9	
	전문대학	90	6.7	35.6	36.7	21.1	
	4년제 대학	358	6.4	41.6	30.2	21.8	
직업	대학원 이상	34	14.7	35.3	17.6	32.4	$\chi^2=29.061$ $p=0.218$
	전문직	73	8.2	38.4	34.2	19.2	
	공무원 및 사회단체	20	5	20	50	25	
	기업체/은행/금융업	82	6.1	47.6	22	24.4	
	판매/서비스직	125	8	42.4	28	21.6	
	생산직	48	8.3	41.7	27.1	22.9	
	농어민	59	5.1	33.9	28.8	32.2	
	학생	132	9.8	40.2	31.1	18.9	
지역	주부	300	4.3	38	25.7	32	$\chi^2=16.245$ $p=0.575$
	무직/기타	161	6.2	37.9	24.2	31.7	
	서울	221	6.3	39.8	27.1	26.7	
	부산/울산/경남	158	5.1	40.5	31.6	22.8	
	대구/경북	115	4.3	34.8	26.1	34.8	
	인천/경기	253	4.7	43.1	26.9	25.3	
본인소득	광주/전라	114	11.4	35.1	25.4	28.1	$\chi^2=8.349$ $p=0.499$
	대전/충청	102	9.8	36.3	27.5	26.5	
	강원	37	8.1	37.8	27	27	
	120만원 미만	593	5.9	38.3	26.8	29	
가구소득	120~199만원	105	7.6	41.9	24.8	25.7	$\chi^2=10.191$ $p=0.335$
	200만원 이상	211	8.5	41.7	28	21.8	
	없음	91	4.4	36.3	34.1	25.3	
	200만원 미만	317	6.3	36.9	24.9	31.9	
고향	200~299만원	281	6.4	39.5	27	27	$\chi^2=25.161$ $p=0.24$
	300~399만원	270	6.3	38.9	31.9	23	
	400만원 이상	132	7.6	44.7	25.8	22	
	서울	164	7.3	41.5	28.7	22.6	
	경기/인천	89	6.7	32.6	27	33.7	
	강원	50	8	44	28	20	
	대전/충청	158	7	41.1	25.9	25.9	
	광주/전라	205	7.3	44.4	26.3	22	
대구/경북	144	3.5	38.9	26.4	31.3		
해외/이북기타	부산/울산/경남	171	6.4	34.5	30.4	28.7	
	19	5.3	10.5	26.3	57.9		

V

국민적 합의형성관련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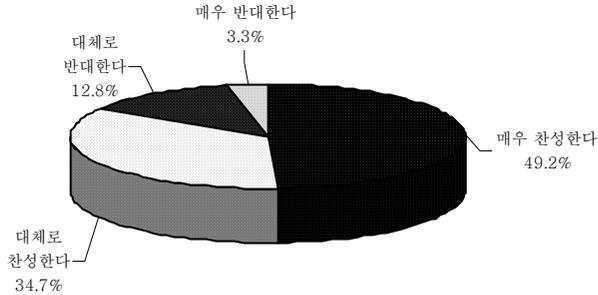
1. 통일의 당위성

통일이 반드시 달성해야 할 민족적 과업이라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대다수인 83.9%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다. 국민들은 통일의 당위성에 대부분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집단간에 변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성별과 연령이 집단 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인데 흥미있는 것은 남성보다 여성의 반대하는 입장이 높았다. 남성의 90.2%가 통일은 민족적 과업이라는 주장에 찬성한 반면 여성은 77.8%만 찬성한다고 응답하였다. 약 12%의 차이가 난다.

연령변수의 경우 나이가 많을수록 통일은 민족적 과업이라는 주장에 찬성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나이가 많을수록 통일을 민족문제라는 당위적 시각에서 감성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다른 문항에서 30대가 줄곧 진보적인 성향을 드러내었는데 이 문항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 30대는 일반적으로 통일문제에 대해서 진보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통일문제를 민족적 과업이라는 당위적 시각에서 바라보기 보다는 이념적이고 정책지향적인 측면에서 통일문제를 바라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V-1> 통일의 당위성



2. 통일이 필요한 이유

통일의 이유로는 위에서 물어 본 민족적 당위성이라는 것 외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 통일의 이유로 전쟁발생 방지라는 안보적 이유가 있다. 그리고 경제발전이라는 실리적 측면도 통일의 이유 가운데 한가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통일의 이유 가운데는 이산가족의 고통 해소, 북한 주민 삶의 개선 등과 같은 인도적 사항도 있다.

통일의 구체적 이유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단일 민족의 재결합'(35%)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국민들의 가장 많은 비율이 통일을 민족적 과업이며 단일 민족의 재결합이라는 당위적 측면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 통일이 '경제발전'(27.9%)에 기여할 것이라는 실리적 응답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국민들은 통일을 통해 경제발전의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

다. 한편, 통일이 ‘전쟁발생 방지’(20.4%) 때문에 필요하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것은 국민들이 전쟁발생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인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통일의 이유를 ‘이산가족 고통해소’(11.4%), ‘북한 주민 삶의 개선’(3.2%)이라는 인도적 측면에서 찾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배경변수 가운데 의미있는 것은 성별과 직업이다. 통일의 이유를 ‘단일 민족의 재결합’이라고 응답한 사람 가운데 남성(42.7%)이 여성(27.6%)보다 훨씬 많았다. 반면 통일의 이유를 ‘이산가족의 고통해소’라고 응답한 사람 가운데 여성(14.4%)이 남성(8.2%)보다 많았으며, ‘전쟁발생 방지’라고 응답한 사람 가운데 여성(25.7%)이 남성(14.9%)보다 많았다. 이 결과를 보면, 남성들이 통일을 민족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크며, 여성들은 주로 인도적 이유나 안보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업을 기준으로 하면, 통일의 이유를 ‘단일 민족의 재결합’이라고 응답한 사람 가운데 공무원(50%)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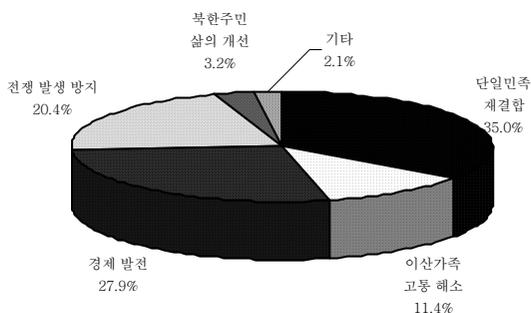
2005년 조사결과를 2003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가장 주목되는 것은 2003년에 비해서 단일민족 재결합을 통일 이유로 응답한 비율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것은 2003년에 비해서 그동안 민족주의 인식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이산가족 고통해소를 통일 이유라고 응답한 비율은 3분의 1로 감소하였다. 그것은 이산가족의 수가 감소하고 이산가족 상봉이 실시되면서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발전을 통일 이유라고 응답한 비율은 다소 증가하였으며, 전쟁발생 방지라고 응답한 비율은 감소하였다. 이것은 통일을 경제적

관점에서 인식하는 비율이 증가한 반면, 전쟁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V-①> 2003년 조사와 2005년 조사결과 비교

	단일민족 재결합	이산가족 고통해소	경제발전	전쟁발생 방지	북한주민 삶의 개선
2003년 조사	10.1%	32.2%	23.9%	26.8%	6.9%
2005년 조사	35%	11.4%	27.9%	20.4%	3.2%

<그림 V-2> 통일이 필요한 이유



3. 통일의 기대 이익

통일은 통일비용, 사회적 불안, 정치적 혼란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수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통일은 여러 가지 점에서 이익을 가져오는 측면도 있다. 이런 점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통일이 남한에게 얼마나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지를 물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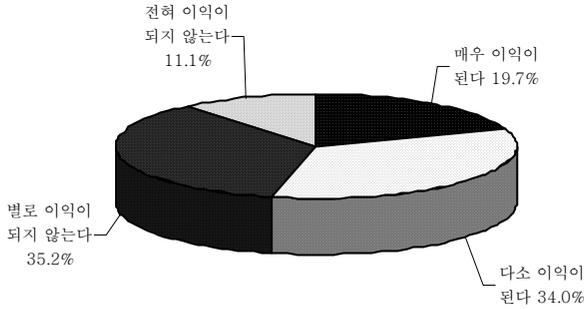
여기에서 통일로 인한 이익은 포괄적인 이익이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 뿐만 아니라 국제적 위상 강화, 사회적 통합 등 여러 가지 이익을 상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로 인한 이익은 일차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감안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통일이 남한에게 이익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53.7%)이 이익이 되지 않는다(46.3%)보다 많았다. 그러나 통일로 인한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약 과반수 정도를 차지함으로써 통일의 불이익에 대한 우려도 거의 과반수에 이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일 이익에 대한 기대는 특히 20대(59.7%), 30대(62.8%)에서 높게 나타났다. 직업을 볼 때도 20대 및 30대인 학생(62.9%)이 가장 높게 통일의 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가 통일을 실리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통일의 이익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조사결과를 2003년 조사결과와 분석하면 통일로 인한 이익에 대한 기대치는 대체로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2003년 조사는 설문 내용이 약간 달라서 통일 결과 기대 이익에 대해서 ‘남한에게 이익’(7.9%), ‘북한에게 이익’(37.1%),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55.0%) 라는 응답결과가 나왔다. 설문 내용이 약간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통일이 남한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기대는 5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V-3> 통일의 기대 이익



4. 통일 대비 국내적 기반 조성 과제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유형·무형의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담은 안정되고 평화로운 통일을 이룩하고 또 통일 이후 순조로운 내적 통합을 위한 사전 준비라고 할 수 있다.

국내적인 통일 기반의 조성은 통일의 기회가 도래하였을 때, 그 기회를 포착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통일을 대비하여 가장 중시하는 과제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귀하는 통일에 대비하여 남한이 국내적으로 어떤 점에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 ‘경제력 향상’을 지적한 응답자가 40.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국민화합 달성’이 36.3%의 비중으로서 중시되었다. ‘안보태세 강화’는 13.3%로 나타났으며, ‘민주화 정착’은

7.8%의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점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졌고, 또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서 안보적 상황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남북관계가 경제교류와 협력을 중심으로 진전되고 있으며, 우리의 대북지원이나 협력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서 경제력 향상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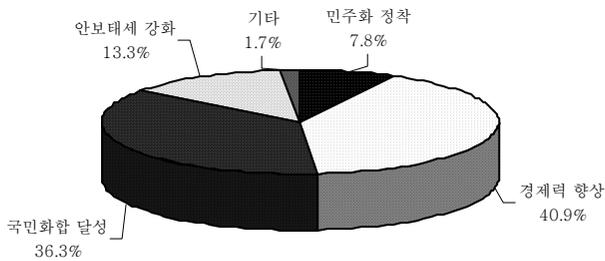
통일연구원에서 비슷한 설문을 1995년, 1998년과 1999년에도 하였는데 역시 '경제력 향상'과 유사한 '경제성장'을 지적한 응답자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었다. '경제성장'을 지적한 비율이 1995년 36.3%, 1998년 51.4%, 1999년 44.9%로 나타났으며, 2005년에는 '경제력 향상'이 40.9%로 가장 높았다. 즉 우리 국민들은 통일에 대비해서 물적 토대를 충당할 경제력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일에 대비한 과제로서 '민주화 정착'을 지적한 비율이 7.8%로서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경향은 통일연구원의 과거 국민 인식조사에서도 '정치적 민주화'를 지적한 비율이 1995년 36.9%, 1998년 24.4%, 1999년 23.4%의 추세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 것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민주화 진전을 어느정도 이룩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통일에 대비하여 '국민화합 달성'의 과제가 36.3%라는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1999년의 조사에서 '빈부격차'(16.4%), '지역감정'(9.8%), '세대갈등'(1.1%), '노사문제'(0.4%)를 모두 합한 27.7%보다도 약 10% 가깝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갈등 양상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배경변수로 보면, 다른 직업 종사자들과는 달리 기업체·은행·금융업의 종사자와 농어민은 ‘경제력 향상’보다도 ‘국민통합 달성’에 더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주·전라지역 거주자들은 다른 지역 거주자들과는 달리 ‘국민통합 달성’이 ‘경제력 향상’보다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과제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4> 통일 대비 국내적 기반 조성 과제



5. 통일비용 충당

통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이 가장 중요한 준비과제로서 지적한 것이 경제력의 향상이다. 그만큼 경제적 기반이 충분해야 통일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남북관계가 진전되면서 우리의 대북 경제적 지원이 식량이나 비료와 같은 인도적 차원의 지원 뿐만 아니라 점차 사회간접자본 건설의 분야에까지 확대될 것이다. 또한 남북경협이 본격화되기 시작하

면 경험자본의 대부분은 남한으로부터 충당되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은 통일을 위한 부담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이다. 통일과정을 원만하게 추진하고 통일 이후의 발전까지 생각하면 이러한 경제적 부담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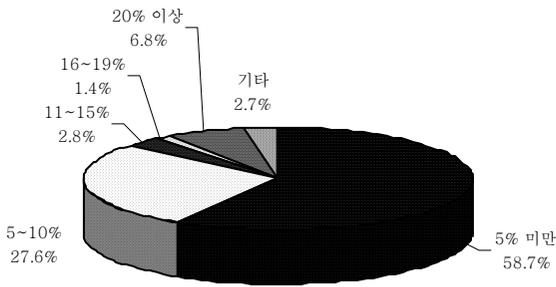
그러나 막상 경제적인 부담이 증가된다고 할 때 이를 기꺼이 수용하는 입장을 보이기에는 쉽지 않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의 비용부담에 대한 의사를 알아보기 위하여 “만약 통일비용 충당을 위하여 세금징수가 필요할 경우, 귀하는 현재 납부 세금의 몇 %의 세금인상을 부담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보았다.

이에 대해 응답자의 58.7%가 ‘5% 미만’을 부담할 수 있다고 답하였고, 27.6%가 ‘5~10%’의 인상을 부담할 수 있다고 답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압도적인 다수인 86.3%가 10% 이내의 인상을 부담할 수 있을 것으로 대답하였다. 우리 국민의 이러한 경향은 통일 비용 부담에 대해서 다소 인색한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응답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라는 인식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경제력이 향상되면 우리 국민의 소득이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통일 비용 충당을 위한 세금의 인상에 대해서도 비교적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통일에 대한 염원과 통일을 맞이하기 위한 실질적인 준비 자세 간에는 다소 괴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배경변수 측면에서 보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5~10%’의 세금 인상을 부담할 수 있다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경우에도 역시 ‘5% 미만’의 세금 인상을 부담할 수 있다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흥미로운 현상은 대학원 이상의 학력 보유자들의 경우, 다른 학력 보유자들과는 달리 ‘5~10%’의 세금 인상 부담에 대한 응답 비율이 58.8%로서 ‘5% 미만’ 부담 비율(26.5%)의 두 배 이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고향이 해외이거나 북한지역인 사람들의 경우, 피조사자로서의 수는 매우 적으나 ‘20% 이상’의 세금 인상을 부담할 있다는 비율이 26.3%, ‘16~19%’의 세금 인상을 부담할 수 있다는 비율이 10.5%로서 다른 지역을 고향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세금 인상을 부담할 수 있다는 성향을 나타냈다. 이것은 그만큼 두고 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림 V-5> 통일비용 부담



6. 통일 후 국내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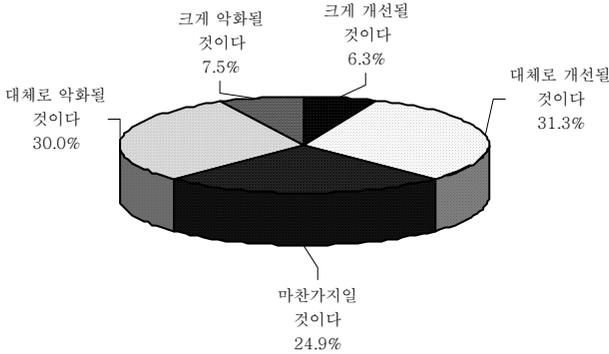
통일 이후 통일한국의 사회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살피보기 위하여 ‘정치적 민주화’, ‘경제성장’, ‘빈부격차’, ‘물가’, ‘실업문제’, ‘지역격차’, ‘주택문제’, ‘법치문제’, ‘가치관 혼란’, ‘국제적 위상’ 등 총 10개의 영역으로 나누고 “귀하는 통일 후 다음의 사항들이 통일 전에 비해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 가운데 ‘정치적 민주화’(37.6%), ‘경제성장’(47.4%), ‘국제적 위상’(79.1%) 항목을 제외한 7개 항목에서 다수가 부정적인 응답을 보여 통일한국의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감을 표출하였다. 국민들이 통일 이후 통일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크게 고양될 것으로 보았으나, 경제성장과 민주화에 대해서는 낙관적 전망과 우려가 교차되었다. 반면 ‘가치관 혼란’(75.9%), ‘빈부격차’(72.2%), ‘물가’(66.7%), ‘지역격차’(67.3%), ‘법치문제’(61.4%), ‘실업문제’(50.9%), ‘주택문제’(43.5%) 등에 대해서 우려감을 표시함으로써 통일 후 미래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수반될 경제 및 사회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전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더 부정적인 응답을 보여주었다. 통일 후 국내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통일 후 정치적 민주화가 통일 이전에 비해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대해서 ‘개선될 것이다’(37.6%)와 ‘악화될 것이다’(37.5%)란 응답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다만 남성(‘개선’ 44.9%, ‘악화’ 30.6%) 보다 여성(‘개선’ 30.6%, ‘악화’ 44.1%)이 ‘더 악화될 것이다’라고 응답하였다. 한편 직업군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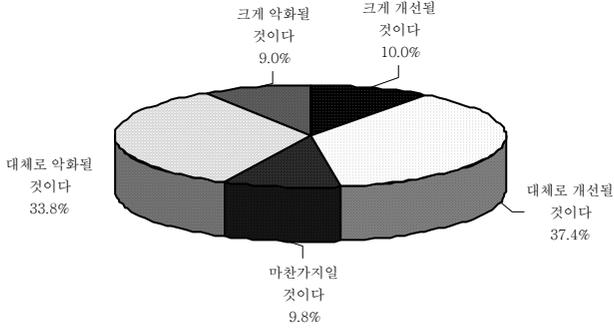
운데 특히 공무원 및 사회단체의 종사자 55%가 ‘개선될 것이다’라고 응답(‘악화’ 25%)하여 정치적 민주화의 전망을 밝게 보았다.

<그림 V-6> 통일 후 국내 상황: 정치적 민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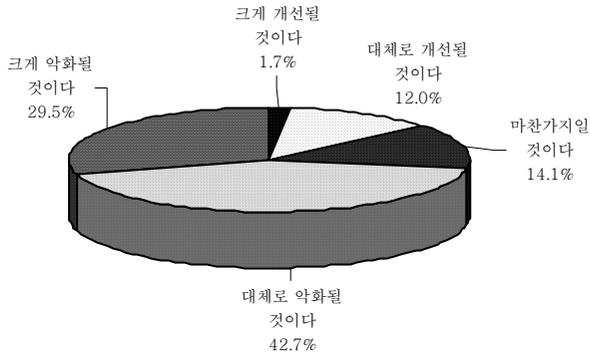
경제성장의 설문에 대해서는 47.4%가 ‘개선될 것이다’, 그리고 42.8%가 ‘악화될 것이다’고 응답하여 긍정적인 전망이 다소 우세하였다. 남성이 경제성장의 전망을 밝게 본(‘개선’ 52.2%, ‘악화’ 38.8%) 반면, 여성은 오히려 부정적으로 평가(‘개선’ 42.7%, ‘악화’ 46.7%)하였다. 직업군 가운데서는 공무원 및 사회단체, 기업체·은행·금융업 그리고 학생이 각각 50%, 52.4%, 52%로 상대적으로 경제성장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았다.

<그림 V-7> 통일 후 국내 상황: 경제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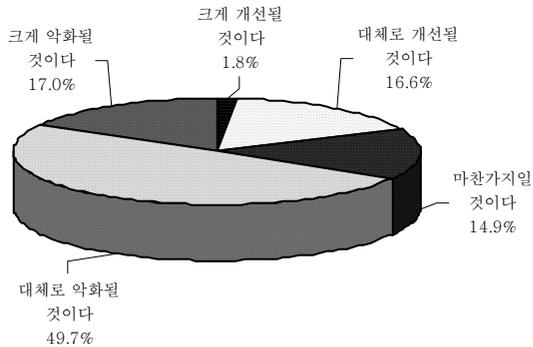
통일 후 빈부격차의 전망에 대해서는 72.2%가 ‘악화될 것이다’ (‘개선’ 13.7%)로 응답하여 절대적인 다수가 통일한국의 사회에서 빈부격차가 커다란 문제점이 될 것으로 보았다. 여기서도 여성 (‘악화’ 76.7%)이 남성(‘악화’ 67.6%)보다 더 부정적으로 전망하였으며, 이는 직업군에서 주부의 81.3%가 ‘악화될 것이다’(‘개선’ 7.3%)로 응답한데서도 명확하게 나타났다.

<그림 V-8> 통일 후 국내 상황: 빈부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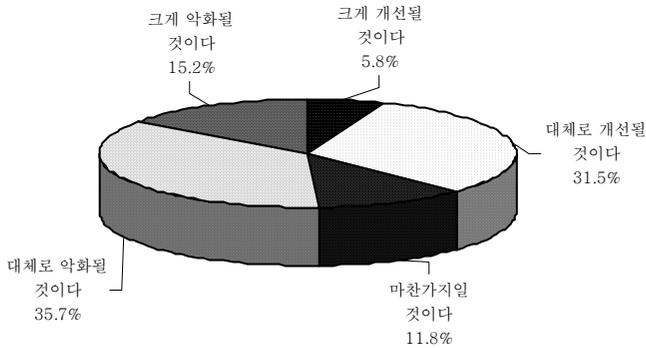
물가의 항목에서도 66.7%가 ‘악화될 것이다’(‘개선’ 18.4%)로 보았고, 역시 여성(‘악화’ 72%)이 남성(‘악화’ 61.2%) 보다 동일한 국에서 물가상승을 크게 우려하였다. 직업군 가운데도 주부의 76%가 악화될 것으로 평가하여 다른 직업군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부정적으로 전망하였다.

<그림 V-9> 통일 후 국내 상황: 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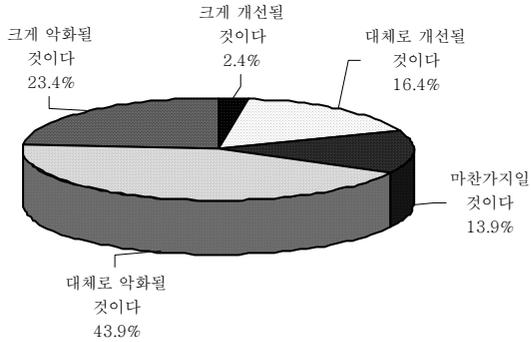
통일 후 실업문제는 어떻게 전망되는가의 질문에는 50.9%가 ‘악화될 것이다’로 그리고 37.3%가 ‘개선될 것이다’로 응답하여 역시 부정적인 평가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여기서도 남성(‘악화’ 49.6%) 보다 여성(‘악화’ 52.2%)이 실업문제를 더 크게 우려하였으나, 그 차이가 별로 크지 않아 실업문제에 대해서는 남녀 공히 큰 우려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직업군 가운데서는 생산직(‘악화’ 60.4%)이 다른 직업군 보다 훨씬 큰 비율로 통일 후 실업 문제가 크게 부각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림 V-10> 통일 후 국내 상황: 실업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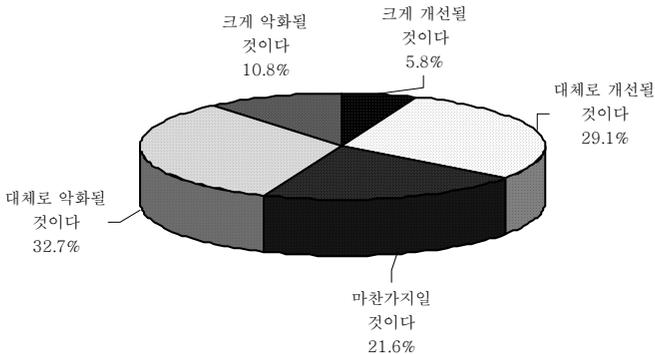
지역격차의 설문에서는 67.3%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반면, 개선될 것으로 평가한 비율은 18.8%에 불과하였다. 역시 여성(‘악화’ 69.2%)이 남성(‘악화’ 65.3%) 보다 다소 높게 부정적으로 보았으며, 직업군 가운데서는 판매·서비스직의 75.2%가 통일 이후에 지역격차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여 다른 직업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전망을 하였다. 특이한 점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지역격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것이다.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00~299만원, 300~399만원, 400만원 이상 등 네 경우가 각각 59.6% → 68.7% → 71.5% → 74.2%의 순으로 지역격차가 통일 후에 더 크게 벌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림 V-11> 통일 후 국내 상황: 지역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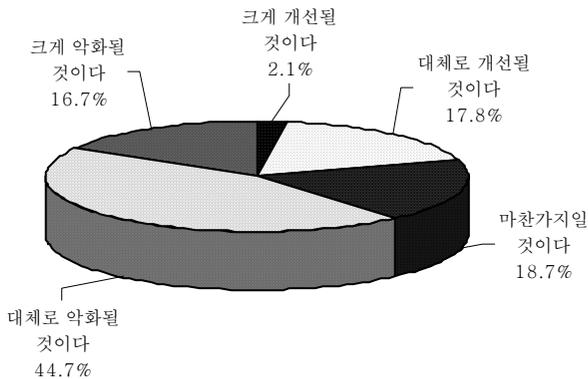
통일 이전보다 통일 이후 주택문제는 어떠한 양상을 보이게 될 것인가란 질문에 대해서는 ‘악화될 것이다’라는 응답이 43.5%를 보여 ‘개선될 것이다’라는 34.9% 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 개선과 악화에 대한 응답이 각각 39.4%와 39.2%로 나타나 오히려 주택문제가 호전될 것이란 기대가 조금 높게 나타났다. 반면 여성의 경우 악화(47.6%)가 개선(30.6%)보다 크게 높았다.

<그림 V-12> 통일 후 국내 상황: 주택문제



법치문제가 통일한국의 사회에서 어떠한 양상을 보일 것인가란 질문에 대해서는 61.4%가 악화될 것으로 응답하여 19.9%를 보인 개선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압도하였다. 역시 여성(67.8%)이 남성(54.7%)보다 법치문제가 큰 어려움으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직업군 가운데서는 전문직과 주부가 각각 71.2%와 70%로 악화될 것으로 밝혀 상대적으로 높은 우려감을 나타내었다. 가구소득별로는 전반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악화('200만원 미만' 56.5%, '200~299만원' 59.8%, '300~399만원' 67%, '400만원 이상' 65.2%)될 것으로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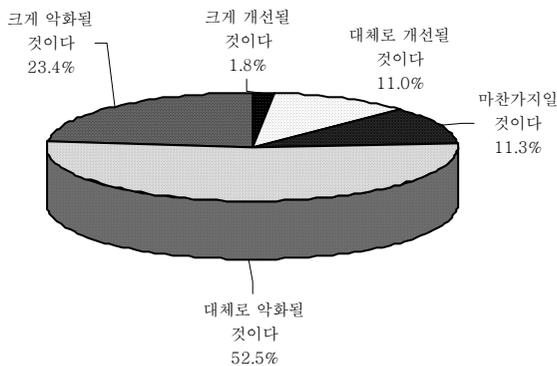
<그림 V-13> 통일 후 국내 상황: 법치문제



통일한국의 사회에서 가치관의 혼란은 어떻게 될 것인가란 질문에 대해서는 75.9%가 악화될 것으로 보아 12.8%의 개선전망을 압도하였다. 역시 여성의 81.8%가 부정적으로 판단하여 남성의 69.8%보다 가치관의 혼란을 더 우려하였다. 직업군에서는 특히 공무원 및 사회단체의 90%가 악화될 것으로 응답하여 다른 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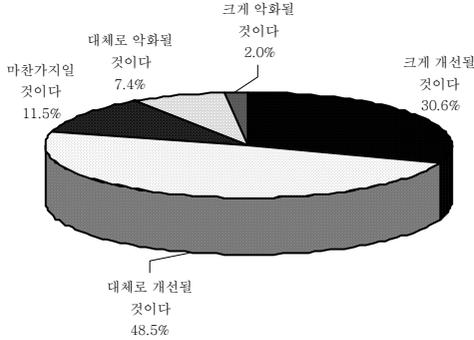
군 보다 더욱 가치관의 혼란을 전망하였다. 또한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가치관의 혼란을 더욱 크게 예상하였다(‘200만원 미만’ 72.6%, ‘200~299만원’ 76.2%, ‘300~399만원’ 78.5%, ‘400만원 이상’ 78%).

<그림 V-14> 통일 후 국내 상황: 가치관 혼란



마지막으로 통일 이후의 국제적 위상에 대해서는 개선 79.1%, 악화 9.4%로 절대적인 다수가 통일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여기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84.3%대 74.1%로 더 높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본인의 소득이 높을수록 국제적 위상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하였다(‘없음’ 74.7%, ‘120만원 미만’ 77.9%, ‘120~199만원’ 79%, ‘200만원 이상’ 84.4%).

<그림 V-15> 통일 후 국내 상황: 국제적 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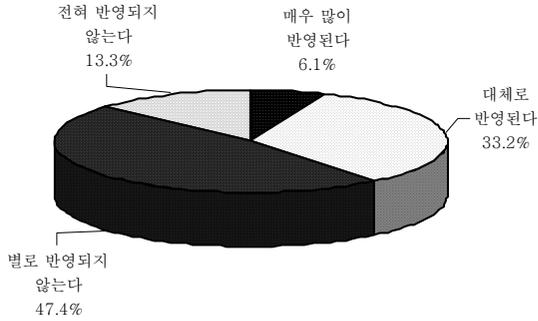


7. 통일정책과 국민적 합의

정부의 통일정책이 형성되고 추진되는 과정에서 국민여론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으며, 그 속에서 어떠한 집단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위해서 중요한 요인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하여 “귀하는 국민의 의견이 정부의 통일정책에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우리나라의 통일정책 추진과정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집단이 어느 집단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세 가지 질문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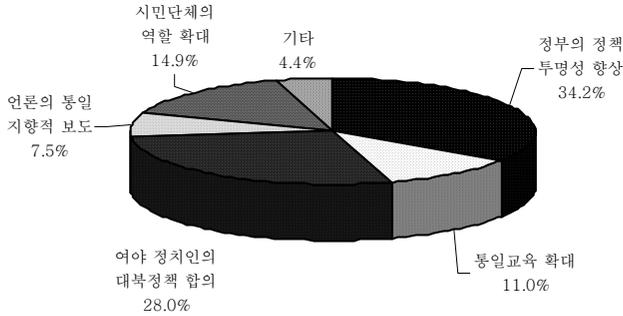
먼저 정부의 통일정책 수립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도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인 국민여론의 반영 정도에 대해서는 60.7%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반영된다’는 의견에는 39.3%만 공감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림 V-16> 국민의견의 정부 통일정책 반영도



다음으로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질문인 국민적 합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투명성 향상’에 대해 가장 많은 34.2%가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여야 정치인의 대북정책 합의’(28%)를 지적하였으며, 그다음 ‘시민단체의 역할 확대’(14.9%), ‘통일교육 확대’(11%), ‘언론의 통일지향적 보도’(7.5%), ‘기타’(4.4%)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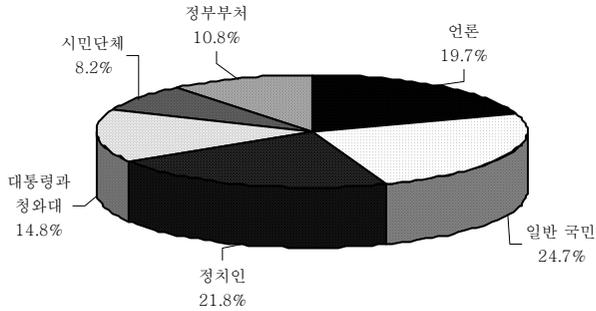
<그림 V-17>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시 우선순위



마지막으로 정부의 통일정책 형성에 대한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인 통일정책 추진과정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집단으로는 24.7%가 ‘일반 국민’을 지적하였다. 이는 앞선 설문에서 통일정책 형성에 국민여론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압도적인 다수가 지적한 결과와 대조를 이룬다. 국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통일정책 형성에는 여론반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평가인 것이다.

일반 국민 다음으로 ‘정치인’(21.8%), ‘언론’(19.7%), ‘대통령과 청와대’(14.8%), ‘정부부처’(10.8%), ‘시민단체’(8.2%)의 순으로 정책형성에서 중요한 영향력집단인 것으로 응답결과가 나타났다.

<그림 V-18> 통일정책 추진시 가장 영향력이 큰 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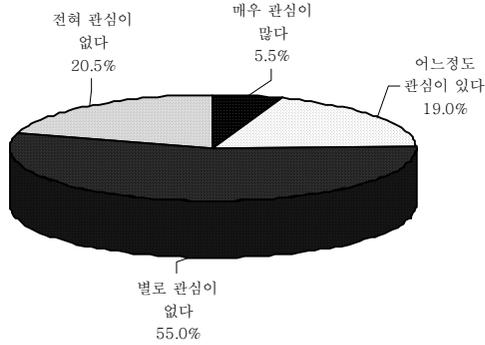


8. 청소년의 통일관심 정도

청소년들이 통일문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귀하는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통일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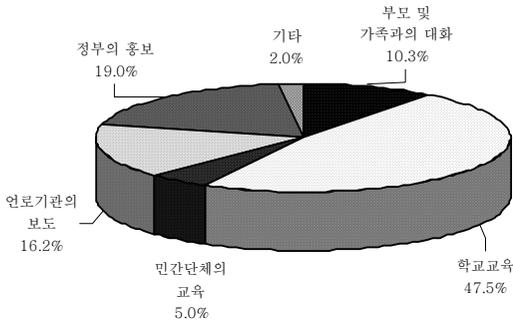
먼저 청소년들의 통일관심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에 대한 응답이 75.5%(‘전혀 관심이 없다’ 20.5%, ‘별로 관심이 없다’ 55%)를 차지하여 ‘관심이 있다’의 24.5%(‘매우 관심이 많다’ 5.5%,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 19%)를 압도하였다.

<그림 V-19> 청소년의 통일 관심 정도



다음으로 청소년들이 통일문제에 대해 관심을 더욱 많이 가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란 질문에는 ‘학교교육’을 47.5%가 지적하여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다음으로 ‘정부의 홍보’(19%), ‘언론기관의 보도’(16.2%), ‘부모 및 가족과의 대화’(10.3%), ‘민간단체의 교육’(5%), ‘기타’(2%)의 순이었다.

<그림 V-20> 청소년의 통일 관심 제고를 위한 우선순위



9.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고 남북관계가 진전됨에 따라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논란도 가열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이 문제는 정치적인 쟁점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된 느낌이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서 “귀하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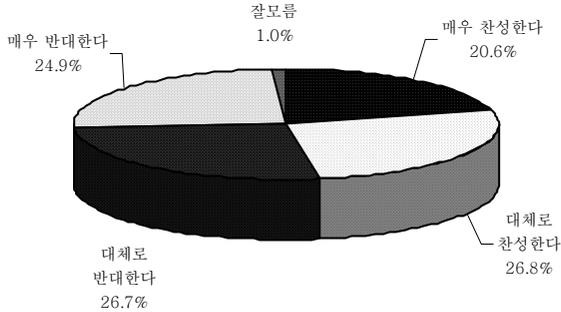
우리 국민들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47.4%)과 ‘반대한다’는 의견(51.6%)이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의견 분포를 보면, ‘매우 찬성한다’가 20.6%, ‘대체로 찬성한다’가 26.8%, ‘대체로 반대한다’가 26.7%, ‘매우 반대한다’가 24.9%로 조사되었다.

많은 배경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매우 찬성하거나 매우 반대한다’는 의견은 남성(23.3%, 27.1%)이 여성(18%, 22.7%)에 비해서 높았고, ‘대체로 찬성하거나 대체로 반대한다’는 의견은 여성(29%, 29%)이 남성(24.5%, 24.3%)에 비해서 높았다.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에 대해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극단적인 견해를 보인다는 뜻이다. 연령의 경우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반대하는 반면 연령이 낮을수록 찬성하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연령과 보수·진보성향과의 상관관계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30대에서 60대로 가면서 지속적으로 감소(62.8% → 27.7%)한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30대에서 60대로 가면서 지속적으로 증가(36.2% → 71.7%)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것은 20대의 경우 ‘찬성한다’는 의견이 54.6%이고 ‘반대한다’는 의견이 44.4%로서 30대에 비해서 보수적인 성향을 드러냈다. 학력별로 보면, 고학력일수록 찬성하는 의견이, 저학력일수록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대학원 이상(58.8%)에서 가장 높았고 고졸 이하(42.1%)에서 가장 낮았다.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고졸 이하(57.1%)에서 가장 높았고 대학원 이상(41.2%)에서 가장 낮았다.

직업별로는 ‘찬성한다’는 의견에 대해 전문직(53.4%), 기업체·은행·금융업(53.7%), 학생(57.6%)이 높은 지지율을 나타낸 반면, 농어민(44.1%), 주부(41%)와 무직·기타(43.5%)는 평균치를 밑도는 지지율을 보였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찬성한다는 의견과 정반대의 경향을 보였는데, 전문직(46.6%), 기업체·은행·금융업(46.3%), 학생(41.7%)이 낮은 지지율을 나타낸 반면, 농어민(55.9%), 주부(57.7%)와 무직·기타(55.9%)는 높은 지지율을 나타냈다. 본인소득 부분에서는 120만원 이상의 소득자들이 ‘찬성한다’에 대해 평균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인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에는 본인 소득이 120만원 미만(53.8%)과 무소득층(56%)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고향 부분에서, ‘찬성한다’에 대해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인 곳은 광주·전라(63.4%)였고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인 곳은 대구·경북(32.6%)이었으며, ‘반대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곳은 대구·경북(66.7%)이고 가장 적은 의견을 보인 곳은 광주·전라(35.6%)로 나타났다.

<그림 V-21>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



10. 한국의 반미정서

우리 사회에는 반미정서와 관련해서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 정치적으로 민주화되고 시민의식이 성숙하면서 잉태되어 온 반미정서는 2002년 여중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대중화되었으며, 이후 우리 사회의 중요한 여론으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반미정서가 한·미동맹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북핵 문제 해결을 포함한 우리 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반미정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정확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서 “귀하는 한국의 반미정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서 ‘지지한다’는 의견(50.3%)과 ‘반대한다’는 의견(49.7%)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의견 분포를 보면, ‘매우 지지한다’(13.3%), ‘대체로 지지한다’(37%), ‘대체로 반

대한다'(30.2%), '매우 반대한다'(19.5%)로 나타났다. 반미정서에 대한 견해는 상당 부분 한·미동맹에 대한 견해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반미정서를 야기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한·미동맹의 불평등성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불만도 큰 요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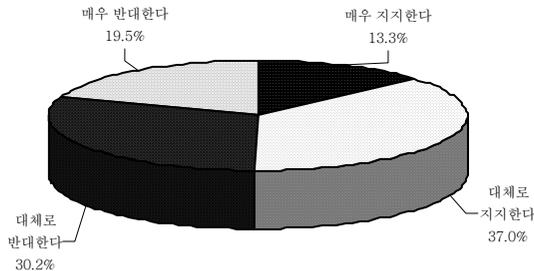
2003년도 여론조사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현 상태를 유지(25.3%)하거나 더욱 강화(16.6%)해야 한다는 의견에 비해서 대등한 구조로 개편(54.5%)하거나 완전 폐기(3.5%) 등 개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바 있다. 이것은 한·미동맹의 현실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불만이 비교적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2005년도 여론조사의 반미정서에 대한 견해를 배경변수별로 보면, 성별, 연령, 학력 그리고 직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지지한다'는 의견(45.7%)이 '반대한다'는 의견(54.3%)보다 적었고, 여성의 경우에는 '지지한다'는 의견(54.7%)이 '반대한다'는 의견(45.3%)에 비해서 많았다. 여성의 경우에 반미 의견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30대부터는 연령에 따른 선호도의 추세가 일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미정서를 지지하는 의견은 30대에서 60대로 갈수록 지속적으로 감소한(68.8% → 30.7%) 반면 반대하는 의견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31.2% → 69.3%). 20대의 경우 반미정서를 '지지한다'는 의견(60.6%)이 30대에 비해 낮았고 '반대한다'는 의견(39.4%)은 30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 부분에서는 전문대학에서 반미정서에 대한 가장 높은 지지율(58.9%)과 가장 낮은 찬성률(41.1%)을 보였다. 전문대학 이

상의 학력에서 모두 평균치보다 높은 지지율과 평균치보다 낮은 찬성률을 보인 반면, 고졸의 경우에는 반미정서를 지지하는 의견(45.2%)이 가장 낮았고, 반대하는 의견(54.8%)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부분에서는 ‘지지한다’는 의견에서 전문직(56.3%), 기업체·은행·금융업(57.3%), 학생(62.9%)이 높은 찬성율을 나타낸 반면, 생산직(31.3%), 농어민(39%)와 무직·기타(40.4%)는 평균치를 밑도는 지지율을 보였다. ‘반대한다’는 의견의 경우에는 찬성한다는 의견과 정반대의 경향을 보였는데, 전문직(43.8%), 기업체·은행·금융업(42.7%), 학생(37.1%)이 낮은 지지율을 나타낸 반면, 생산직(68.8%), 농어민(61%)과 무직·기타(59.6%)는 높은 지지율을 나타냈다.

<그림 V-22> 한국의 반미정서



<표 V-1> 통일의 당위성

		사례수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대체로 반대	매우 반대	총합		4점 평균	유의도
							찬성	반대		
전체		1000	49.2	34.7	12.8	3.3	83.9	16.1	3.3	
성별	남성	490	59	31.2	6.9	2.9	90.2	9.8	3.46	$\chi^2=48.379$ $p=0$
	여성	510	39.8	38	18.4	3.7	77.8	22.2	3.14	
연령	20대	216	44	34.3	18.1	3.7	78.2	21.8	3.19	$\chi^2=36.080$ $p=0$
	30대	218	43.6	39.4	11.9	5	83	17	3.22	
	40대	235	44.7	38.3	14.5	2.6	83	17	3.25	
	50대	165	52.1	34.5	10.9	2.4	86.7	13.3	3.36	
	60대 이상	166	66.9	24.1	6.6	2.4	91	9	3.55	
학력	고졸 이하	518	49.8	34.6	12.2	3.5	84.4	15.6	3.31	$\chi^2=10.159$ $p=0.338$
	전문대학	90	40	35.6	18.9	5.6	75.6	24.4	3.1	
	4년제 대학	358	49.2	35.5	12.8	2.5	84.6	15.4	3.31	
	대학원 이상	34	64.7	26.5	5.9	2.9	91.2	8.8	3.53	
직업	전문직	73	53.4	37	9.6	0	90.4	9.6	3.44	$\chi^2=31.300$ $p=0.145$
	공무원 및 사회단체	20	45	45	10	0	90	10	3.35	
	기업체/은행/금융업	82	47.6	31.7	15.9	4.9	79.3	20.7	3.22	
	판매/서비스직	125	53.6	32.8	8.8	4.8	86.4	13.6	3.35	
	생산직	48	52.1	35.4	6.3	6.3	87.5	12.5	3.33	
	농어민	59	52.5	35.6	10.2	1.7	88.1	11.9	3.39	
	학생	132	47	34.1	15.9	3	81.1	18.9	3.25	
	주부	300	41	39.3	16.3	3.3	80.3	19.7	3.18	
무직/기타	161	60.2	26.7	9.9	3.1	87	13	3.44		
지역	서울	221	51.1	33.5	11.3	4.1	84.6	15.4	3.32	$\chi^2=12.304$ $p=0.831$
	부산/울산/경남	158	48.1	36.1	12.7	3.2	84.2	15.8	3.29	
	대구/경북	115	43.5	36.5	13.9	6.1	80	20	3.17	
	인천/경기	253	47.4	34.8	15	2.8	82.2	17.8	3.27	
	광주/전라	114	57	30.7	11.4	0.9	87.7	12.3	3.44	
	대전/충청	102	48	37.3	10.8	3.9	85.3	14.7	3.29	
강원	37	51.4	35.1	13.5	0	86.5	13.5	3.38		
본인 소득	120만원 미만	593	46.7	35.1	14.7	3.5	81.8	18.2	3.25	$\chi^2=14.345$ $p=0.111$
	120~199만원	105	47.6	35.2	13.3	3.8	82.9	17.1	3.27	
	200만원 이상	211	56.9	33.6	6.2	3.3	90.5	9.5	3.44	
	없음	91	49.5	34.1	15.4	1.1	83.5	16.5	3.32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317	52.7	30.9	12.9	3.5	83.6	16.4	3.33	$\chi^2=4.567$ $p=0.87$
	200~299만원	281	47	37.4	13.2	2.5	84.3	15.7	3.29	
	300~399만원	270	48.5	35.9	12.2	3.3	84.4	15.6	3.3	
	400만원 이상	132	47	35.6	12.9	4.5	82.6	17.4	3.25	
고향	서울	164	45.1	36	15.2	3.7	81.1	18.9	3.23	$\chi^2=22.398$ $p=0.377$
	경기/인천	89	44.9	33.7	16.9	4.5	78.7	21.3	3.19	
	강원	50	46	38	16	0	84	16	3.3	
	대전/충청	158	51.3	34.8	11.4	2.5	86.1	13.9	3.35	
	광주/전라	205	56.6	32.7	8.8	2	89.3	10.7	3.44	
	대구/경북	144	45.8	34.7	13.2	6.3	80.6	19.4	3.2	
	부산/울산/경남	171	45.6	36.8	14	3.5	82.5	17.5	3.25	
해외/이북기타	19	73.7	21.1	5.3	0	94.7	5.3	3.68		

<표 V-2> 통일이 필요한 이유

		사례수	단일 민족의 재결합	이산 가족의 고통 해소	경제 발전	전쟁 발생 방지	북한 주민 삶의 개선	기타	유의도
전체		1000	35	11.4	27.9	20.4	3.2	2.1	
성별	남성	490	42.7	8.2	29.2	14.9	2.7	2.4	$\chi^2=41.188$ p=0
	여성	510	27.6	14.5	26.7	25.7	3.7	1.8	
연령	20대	216	31	13.4	32.9	18.5	2.3	1.9	$\chi^2=28.465$ p=0.099
	30대	218	29.4	12.8	30.3	21.1	4.6	1.8	
	40대	235	35.3	9.4	28.5	19.6	3.4	3.8	
	50대	165	35.2	13.3	24.2	23.6	2.4	1.2	
	60대 이상	166	47	7.8	21.1	19.9	3	1.2	
학력	고졸 이하	518	33	12	28.4	21.2	3.1	2.3	$\chi^2=18.869$ p=0.22
	전문대학	90	24.4	13.3	30	25.6	3.3	3.3	
	4년제 대학	358	39.4	10.1	28.2	18.2	2.8	1.4	
	대학원 이상	34	47.1	11.8	11.8	17.6	8.8	2.9	
직업	전문직	73	38.4	5.5	41.1	13.7	0	1.4	$\chi^2=66.295$ p=0.006
	공무원 및 사회단체	20	50	5	30	10	5	0	
	기업체/은행/금융업	82	36.6	9.8	32.9	15.9	2.4	2.4	
	판매/서비스직	125	41.6	5.6	29.6	19.2	2.4	1.6	
	생산직	48	27.1	18.8	33.3	8.3	6.3	6.3	
	농어민	59	37.3	13.6	22	15.3	6.8	5.1	
	학생	132	33.3	16.7	28	18.2	3	0.8	
	주부	300	28	13	25	27.7	3.7	2.7	
	무직/기타	161	41.6	9.9	23.6	21.7	2.5	0.6	
지역	서울	221	32.1	5.4	33	24	3.6	1.8	$\chi^2=40.698$ p=0.092
	부산/울산/경남	158	31.6	15.2	26.6	21.5	3.8	1.3	
	대구/경북	115	31.3	14.8	29.6	15.7	2.6	6.1	
	인천/경기	253	35.2	11.5	28.5	20.2	3.2	1.6	
	광주/전라	114	46.5	9.6	22.8	17.5	3.5	0	
	대전/충청	102	34.3	14.7	25.5	20.6	2	2.9	
	강원	37	43.2	16.2	16.2	18.9	2.7	2.7	
본인 소득	120만원 미만	593	33.6	12.6	24.8	23.4	3.5	2	$\chi^2=26.397$ p=0.034
	120~199만원	105	35.2	9.5	37.1	14.3	2.9	1	
	200만원 이상	211	39.3	6.6	32.7	15.6	2.4	3.3	
	없음	91	34.1	16.5	26.4	18.7	3.3	1.1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317	36.6	12.3	25.2	20.2	3.2	2.5	$\chi^2=7.087$ p=0.955
	200~299만원	281	32	10.7	29.9	20.6	4.6	2.1	
	300~399만원	270	35.2	11.9	28.1	21.1	2.2	1.5	
	400만원 이상	132	37.1	9.8	29.5	18.9	2.3	2.3	
고향	서울	164	22.6	8.5	37.8	26.8	2.4	1.8	$\chi^2=41.645$ p=0.204
	경기/인천	89	36	12.4	25.8	22.5	0	3.4	
	강원	50	48	14	18	12	4	4	
	대전/충청	158	38	12	24.1	20.3	4.4	1.3	
	광주/전라	205	42	9.8	26.8	16.6	3.9	1	
	대구/경북	144	31.9	12.5	29.2	20.1	3.5	2.8	
	부산/울산/경남	171	34.5	12.9	25.7	20.5	3.5	2.9	
	해외/이북/기타	19	31.6	15.8	31.6	21.1	0	0	

<표 V-3> 통일의 기대 이익

	사례수	매우 이익	다소 이익	별로 이익 되지 않음	전혀 이익 되지 않음	총합		4점 평균	유의도	
						이익	이익 되지 않음			
전체		1000	19.7	34	35.2	11.1	53.7	46.3	2.62	
성별	남성	490	25.1	34.5	30.8	9.6	59.6	40.4	2.75	$\chi^2=21.514$ p=0
	여성	510	14.5	33.5	39.4	12.5	48	52	2.5	
연령	20대	216	22.7	37	32.4	7.9	59.7	40.3	2.75	$\chi^2=26.482$ p=0.009
	30대	218	23.4	39.4	29.8	7.3	62.8	37.2	2.79	
	40대	235	17	29.4	39.1	14.5	46.4	53.6	2.49	
	50대	165	13.3	33.9	41.2	11.5	47.3	52.7	2.49	
	60대 이상	166	21.1	29.5	34.3	15.1	50.6	49.4	2.57	
학력	고졸 이하	518	18	31.5	38.4	12.2	49.4	50.6	2.55	$\chi^2=12.488$ p=0.187
	전문대학	90	16.7	37.8	32.2	13.3	54.4	45.6	2.58	
	4년제 대학	358	22.6	35.8	31.8	9.8	58.4	41.6	2.71	
	대학원 이상	34	23.5	44.1	29.4	2.9	67.6	32.4	2.88	
직업	전문직	73	24.7	30.1	37	8.2	54.8	45.2	2.71	$\chi^2=42.159$ p=0.012
	공무원 및 사회단체	20	15	35	45	5	50	50	2.6	
	기업체/은행/금융업	82	24.4	34.1	34.1	7.3	58.5	41.5	2.76	
	판매/서비스직	125	22.4	36.8	32	8.8	59.2	40.8	2.73	
	생산직	48	18.8	29.2	31.3	20.8	47.9	52.1	2.46	
	농어민	59	20.3	30.5	40.7	8.5	50.8	49.2	2.63	
	학생	132	22.7	40.2	28.8	8.3	62.9	37.1	2.77	
	주부	300	10.7	34.7	40	14.7	45.3	54.7	2.41	
무직/기타	161	28	29.8	31.7	10.6	57.8	42.2	2.75		
지역	서울	221	19	30.8	38	12.2	49.8	50.2	2.57	$\chi^2=13.978$ p=0.731
	부산/울산/경남	158	24.1	29.7	33.5	12.7	53.8	46.2	2.65	
	대구/경북	115	16.5	40.9	29.6	13	57.4	42.6	2.61	
	인천/경기	253	18.2	33.2	38.7	9.9	51.4	48.6	2.6	
	광주/전라	114	23.7	33.3	34.2	8.8	57	43	2.72	
	대전/충청	102	16.7	41.2	32.4	9.8	57.8	42.2	2.65	
	강원	37	21.6	37.8	29.7	10.8	59.5	40.5	2.7	
본인 소득	120만원 미만	583	17.9	33.2	36.8	12.1	51.1	48.9	2.57	$\chi^2=14.764$ p=0.098
	120~199만원	105	17.1	45.7	27.6	9.5	62.9	37.1	2.7	
	200만원 이상	211	26.1	30.3	33.6	10	56.4	43.6	2.73	
	없음	91	19.8	34.1	37.4	8.8	53.8	46.2	2.65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317	20.8	33.1	34.7	11.4	53.9	46.1	2.63	$\chi^2=7.811$ p=0.553
	200~299만원	281	20.6	34.5	37.4	7.5	55.2	44.8	2.68	
	300~399만원	270	17	34.8	35.2	13	51.9	48.1	2.56	
	400만원 이상	132	20.5	33.3	31.8	14.4	53.8	46.2	2.6	
고향	서울	164	19.5	29.9	35.4	15.2	49.4	50.6	2.54	$\chi^2=23.166$ p=0.335
	경기/인천	89	19.1	34.8	33.7	12.4	53.9	46.1	2.61	
	강원	50	20	30	36	14	50	50	2.56	
	대전/충청	158	16.5	37.3	37.3	8.9	53.8	46.2	2.61	
	광주/전라	205	22.9	33.7	35.6	7.8	56.6	43.4	2.72	
	대구/경북	144	15.3	38.9	34	11.8	54.2	45.8	2.58	
	부산/울산/경남	171	19.9	32.2	36.8	11.1	52	48	2.61	
해외/이북기타	19	47.4	31.6	10.5	10.5	78.9	21.1	3.16		

〈표 V-4〉 통일 대비 국내적 기반 조성 과제

		사례수	민주화 정착	경제력 향상	국민통합 달성	안보태세 강화	기타	유의도
전체		1000	7.8	40.9	36.3	13.3	1.7	
성별	남성	490	8.4	43.3	35.3	11.6	1.4	$\chi^2=4.397$ p=0.355
	여성	510	7.3	38.6	37.3	14.9	2	
연령	20대	216	9.7	43.1	34.7	10.6	1.9	$\chi^2=19.251$ p=0.256
	30대	218	7.8	41.7	37.6	9.6	3.2	
	40대	235	7.7	43.4	34.9	12.8	1.3	
	50대	165	7.3	37	39.4	15.2	1.2	
	60대 이상	166	6	37.3	35.5	20.5	0.6	
학력	고졸 이하	518	7.5	38.6	36.7	15.4	1.7	$\chi^2=9.315$ p=0.676
	전문대학	90	7.8	43.3	34.4	13.3	1.1	
	4년제 대학	358	7.5	43.3	36.3	10.9	2	
	대학원 이상	34	14.7	44.1	35.3	5.9	0	
직업	전문직	73	5.5	50.7	35.6	6.8	1.4	$\chi^2=42.791$ p=0.096
	공무원 및 사회단체	20	10	40	30	20	0	
	기업체/은행/금융업	82	6.1	39	45.1	7.3	2.4	
	판매/서비스직	125	9.6	48.8	36	5.6	0	
	생산직	48	6.3	45.8	29.2	18.8	0	
	농어민	59	10.2	27.1	44.1	13.6	5.1	
	학생	132	12.1	40.2	34.1	12.1	1.5	
	주부	300	6.7	39	36	16	2.3	
무직/기타	161	6.2	39.1	34.8	18.6	1.2		
지역	서울	221	8.6	40.3	37.6	12.7	0.9	$\chi^2=25.093$ p=0.401
	부산/울산/경남	158	5.1	44.3	31.6	18.4	0.6	
	대구/경북	115	6.1	43.5	36.5	10.4	3.5	
	인천/경기	253	7.1	41.5	35.6	14.2	1.6	
	광주/전라	114	7.9	36	43.9	10.5	1.8	
	대전/충청	102	12.7	41.2	35.3	8.8	2	
강원	37	10.8	32.4	32.4	18.9	5.4		
본인 소득	120만원 미만	593	7.1	38.8	37.4	14.7	2	$\chi^2=23.908$ p=0.021
	120~199만원	105	5.7	44.8	41	8.6	0	
	200만원 이상	211	9	46	35.1	8.1	1.9	
	없음	91	12.1	38.5	26.4	22	1.1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317	6.9	37.5	36.9	16.1	2.5	$\chi^2=11.399$ p=0.495
	200~299만원	281	9.6	40.6	35.6	12.8	1.4	
	300~399만원	270	7.4	42.2	35.6	13.3	1.5	
	400만원 이상	132	6.8	47	37.9	7.6	0.8	
고향	서울	164	11	41.5	31.7	14	1.8	$\chi^2=38.803$ p=0.084
	경기/인천	89	6.7	42.7	33.7	13.5	3.4	
	강원	50	6	36	38	16	4	
	대전/충청	158	12	38	38.6	10.8	0.6	
	광주/전라	205	6.8	35.6	46.8	9.8	1	
	대구/경북	144	6.3	45.1	28.5	18.8	1.4	
	부산/울산/경남	171	4.7	47.4	33.3	12.3	2.3	
	해외/이북/기타	19	5.3	31.6	36.8	26.3	0	

<표 V-5> 통일비용 부담

		사례수	5% 미만	5~10%	11~15%	16~19%	20% 이상	기타	유의도
전체		1000	58.7	27.6	2.8	1.4	6.8	2.7	
성별	남성	490	47.6	33.5	3.7	2.2	10.4	2.7	$\chi^2=58.257$ p=0
	여성	510	69.4	22	2	0.6	3.3	2.7	
연령	20대	216	56.5	34.3	4.2	0.9	2.8	1.4	$\chi^2=29.310$ p=0.082
	30대	218	63.3	24.8	0.9	1.4	6.9	2.8	
	40대	235	56.6	29.4	4.3	1.7	5.5	2.6	
	50대	165	59.4	24.8	1.8	1.2	9.7	3	
	60대 이상	166	57.8	22.9	2.4	1.8	10.8	4.2	
학력	고졸 이하	518	63.7	23.9	1.9	1	6.6	2.9	$\chi^2=34.958$ p=0.002
	전문대학	90	61.1	26.7	5.6	1.1	3.3	2.2	
	4년제 대학	358	53.9	30.2	3.4	2.2	7.8	2.5	
	대학원 이상	34	26.5	58.8	2.9	0	8.8	2.9	
직업	전문직	73	52.1	34.2	5.5	0	5.5	2.7	$\chi^2=86.576$ p=0
	공무원 및 사회단체	20	55	35	0	5	5	0	
	기업체/은행/금융업	82	47.6	36.6	0	3.7	9.8	2.4	
	판매/서비스직	125	55.2	28.8	4.8	2.4	5.6	3.2	
	생산직	48	52.1	31.3	4.2	0	8.3	4.2	
	농어민	59	50.8	27.1	1.7	5.1	13.6	1.7	
	학생	132	49.2	40.2	5.3	0	3.8	1.5	
	주부	300	71.3	19.3	2	0	4	3.3	
무직/기타	161	59.6	22.4	1.2	2.5	11.8	2.5		
지역	서울	221	61.1	25.8	1.4	1.4	6.3	4.1	$\chi^2=39.244$ p=0.12
	부산/울산/경남	158	55.7	33.5	1.9	1.9	4.4	2.5	
	대구/경북	115	63.5	27.8	2.6	0	4.3	1.7	
	인천/경기	253	61.3	26.1	2.8	1.6	5.5	2.8	
	광주/전라	114	52.6	27.2	3.5	0.9	14	1.8	
	대전/충청	102	57.8	20.6	5.9	2.9	10.8	2	
	강원	37	45.9	43.2	5.4	0	2.7	2.7	
본인 소득	120만원 미만	593	63.7	23.6	2.7	0.8	6.2	2.9	$\chi^2=44.166$ p=0
	120~199만원	105	59	24.8	2.9	1.9	6.7	4.8	
	200만원 이상	211	42.7	38.4	4.3	3.3	9.5	1.9	
	없음	91	62.6	31.9	0	0	4.4	1.1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317	65	21.5	1.9	1.6	7.6	2.5	$\chi^2=28.208$ p=0.02
	200~299만원	281	61.2	25.6	2.1	1.1	8.2	1.8	
	300~399만원	270	51.1	35.6	3	1.5	5.6	3.3	
	400만원 이상	132	53.8	30.3	6.1	1.5	4.5	3.8	
고향	서울	164	64	24.4	1.8	2.4	4.3	3	$\chi^2=60.091$ p=0.005
	경기/인천	89	62.9	23.6	2.2	0	9	2.2	
	강원	50	48	38	2	0	8	4	
	대전/충청	158	53.8	27.2	4.4	3.2	7.6	3.8	
	광주/전라	205	55.1	27.3	3.9	1	10.2	2.4	
	대구/경북	144	62.5	29.2	1.4	0.7	3.5	2.8	
	부산/울산/경남	171	62.6	29.8	2.9	0	3.5	1.2	
	해외/이북/기타	19	36.8	21.1	0	10.5	26.3	5.3	

<표 V-6> 통일 후 국내 상황: 정치적 민주화

	사례수	크게 개선	대체로 개선	마찬가지	대체로 악화	크게 악화	종합			5점 평균	유의도	
							개선	마찬가지	악화			
전체	1000	6.3	31.3	24.9	30	7.5	37.6	24.9	37.5	2.99		
성별	남성	490	9.2	35.7	24.5	24.3	6.3	44.9	24.5	30.6	3.17	$\chi^2=30.950$ $p=0$
	여성	510	3.5	27.1	25.3	35.5	8.6	30.6	25.3	44.1	2.81	
연령	20대	216	6	33.3	31.9	24.1	4.6	39.4	31.9	28.7	3.12	$\chi^2=21.662$ $p=0.154$
	30대	218	6.4	28	28.9	29.4	7.3	34.4	28.9	36.7	2.97	
	40대	235	6.4	34.9	20.9	30.2	7.7	41.3	20.9	37.9	3.02	
	50대	165	5.5	28.5	21.8	33.9	10.3	33.9	21.8	44.2	2.85	
학력	60대 이상	166	7.2	30.7	19.3	34.3	8.4	38	19.3	42.8	2.94	$\chi^2=27.741$ $p=0.006$
	고졸 이하	518	6	30.7	20.1	34.2	9.1	36.7	20.1	43.2	2.9	
	전문대학	90	6.7	26.7	41.1	20	5.6	33.3	41.1	25.6	3.09	
	4년제 대학	358	6.7	33	27.7	26.8	5.9	39.7	27.7	32.7	3.08	
직업	대학원 이상	34	5.9	35.3	26.5	26.5	5.9	41.2	26.5	32.4	3.09	$\chi^2=55.470$ $p=0.006$
	전문직	73	12.3	24.7	28.8	30.1	4.1	37	28.8	34.2	3.11	
	공무원 및 사회단체	20	10	45	20	15	10	55	20	25	3.3	
	기업체/은행/금융업	82	12.2	28	32.9	18.3	8.5	40.2	32.9	26.8	3.17	
	판매/서비스직	125	4	33.6	24	31.2	7.2	37.6	24	38.4	2.96	
	생산직	48	2.1	31.3	16.7	31.3	18.8	33.3	16.7	50	2.67	
	농어민	59	6.8	32.2	22	33.9	5.1	39	22	39	3.02	
	학생	132	6.1	37.9	28.8	23.5	3.8	43.9	28.8	27.3	3.19	
지역	주부	300	3	28	24.7	35	9.3	31	24.7	44.3	2.8	$\chi^2=17.409$ $p=0.831$
	무직/기타	161	9.3	32.9	21.1	31.1	5.6	42.2	21.1	36.6	3.09	
	서울	221	5	31.2	26.2	32.6	5	36.2	26.2	37.6	2.99	
	부산/울산/경남	158	8.9	31.6	22.8	29.1	7.6	40.5	22.8	36.7	3.05	
	대구/경북	115	3.5	33.9	25.2	26.1	11.3	37.4	25.2	37.4	2.92	
	인천/경기	253	5.5	29.6	27.3	29.2	8.3	35.2	27.3	37.5	2.95	
본인 소득	광주/전라	114	6.1	33.3	19.3	34.2	7	39.5	19.3	41.2	2.97	$\chi^2=21.118$ $p=0.049$
	대전/충청	102	10.8	29.4	25.5	26.5	7.8	40.2	25.5	34.3	3.09	
	강원	37	5.4	32.4	24.3	32.4	5.4	37.8	24.3	37.8	3	
	120만원 미만	593	5.7	29	25.8	31.5	7.9	34.7	25.8	39.5	2.93	
가구 소득	120~199만원	105	3.8	29.5	30.5	27.6	8.6	33.3	30.5	36.2	2.92	$\chi^2=10.013$ $p=0.615$
	200만원 이상	211	10	37.4	22.7	23.2	6.6	47.4	22.7	29.9	3.21	
	없음	91	4.4	34.1	17.6	38.5	5.5	38.5	17.6	44	2.93	
	200만원 미만	317	7.6	32.5	21.8	30.3	7.9	40.1	21.8	38.2	3.02	
고향	300~399만원	281	5	28.8	27	33.8	5.3	33.8	27	39.1	2.94	$\chi^2=21.052$ $p=0.823$
	400만원 이상	132	6.8	32.6	25	25.8	9.8	39.4	25	35.6	3.01	
	서울	164	4.3	28	29.3	29.3	9.1	32.3	29.3	38.4	2.89	
	경기/인천	89	7.9	30.3	30.3	24.7	6.7	38.2	30.3	31.5	3.08	
	강원	50	6	30	20	38	6	36	20	44	2.92	
	대전/충청	158	8.9	29.7	24.1	31.6	5.7	38.6	24.1	37.3	3.04	
	광주/전라	205	5.4	34.1	19.5	34.1	6.8	39.5	19.5	41	2.97	
고향	대구/경북	144	5.6	29.9	27.1	27.1	10.4	35.4	27.1	37.5	2.93	$\chi^2=21.052$ $p=0.823$
	부산/울산/경남	171	6.4	32.7	25.7	28.1	7	39.2	25.7	35.1	3.04	
	해외/이북/기타	19	10.5	47.4	15.8	21.1	5.3	57.9	15.8	26.3	3.37	

<표 V-7> 통일 후 국내 상황: 경제성장

		사례수	크게 개선	대체로 개선	마찬가지	대체로 악화	크게 악화	종합			5점 평균	유의도
								개선	마찬가지	악화		
전체		1000	10	37.4	9.8	33.8	9	47.4	9.8	42.8	3.06	
성별	남성	490	13.3	39	9	29.8	9	52.2	9	38.8	3.18	$\chi^2=16.103$ p=0.003
	여성	510	6.9	35.9	10.6	37.6	9	42.7	10.6	46.7	2.94	
연령	20대	216	13.9	35.2	12.5	30.6	7.9	49.1	12.5	38.4	3.17	$\chi^2=22.477$ p=0.128
	30대	218	11.5	40.8	11.5	27.5	8.7	52.3	11.5	36.2	3.19	
	40대	235	7.2	38.3	9.8	37	7.7	45.5	9.8	44.7	3	
	50대	165	6.7	35.2	6.7	41.2	10.3	41.8	6.7	51.5	2.87	
	60대 이상	166	10.2	36.7	7.2	34.3	11.4	47	7.2	45.8	3	
학력	고졸 이하	518	9.1	36.7	7.7	36.5	10	45.8	7.7	46.5	2.98	$\chi^2=15.899$ p=0.196
	전문대학	90	7.8	43.3	12.2	26.7	10	51.1	12.2	36.7	3.12	
	4년제 대학	358	11.7	37.4	11.2	32.4	7.3	49.2	11.2	39.7	3.14	
	대학원 이상	34	11.8	32.4	20.6	26.5	8.8	44.1	20.6	35.3	3.12	
직업	전문직	73	8.2	35.6	8.2	37	11	43.8	8.2	47.9	2.93	$\chi^2=40.078$ p=0.155
	공무원 및 사회단체	20	10	40	15	30	5	50	15	35	3.2	
	기업체/은행/금융업	82	13.4	39	15.9	26.8	4.9	52.4	15.9	31.7	3.29	
	판매/서비스직	125	8.8	37.6	10.4	33.6	9.6	46.4	10.4	43.2	3.02	
	생산직	48	8.3	37.5	6.3	29.2	18.8	45.8	6.3	47.9	2.88	
	농어민	59	11.9	32.2	6.8	37.3	11.9	44.1	6.8	49.2	2.95	
	학생	132	12.9	39.4	9.1	31.8	6.8	52.3	9.1	38.6	3.2	
	주부	300	5	36.3	11	39	8.7	41.3	11	47.7	2.9	
지역	무직/기타	161	16.8	39.1	6.8	28.6	8.7	55.9	6.8	37.3	3.27	$\chi^2=26.691$ p=0.319
	서울	221	8.1	35.7	11.3	39.4	5.4	43.9	11.3	44.8	3.02	
	부산/울산/경남	158	10.1	37.3	12	29.7	10.8	47.5	12	40.5	3.06	
	대구/경북	115	7	40	7.8	31.3	13.9	47	7.8	45.2	2.95	
	인천/경기	253	8.3	37.9	9.1	34	10.7	46.2	9.1	44.7	2.99	
	광주/전라	114	15.8	34.2	11.4	33.3	5.3	50	11.4	38.6	3.22	
	대전/충청	102	13.7	41.2	4.9	31.4	8.8	54.9	4.9	40.2	3.2	
본인 소득	강원	37	13.5	35.1	10.8	32.4	8.1	48.6	10.8	40.5	3.14	$\chi^2=5.983$ p=0.917
	120만원 미만	593	10.3	36.4	8.9	35.4	8.9	46.7	8.9	44.4	3.04	
	120~199만원	105	8.6	35.2	10.5	35.2	10.5	43.8	10.5	45.7	2.96	
	200만원 이상	211	11.4	39.8	10.9	29.4	8.5	51.2	10.9	37.9	3.16	
가구 소득	없음	91	6.6	40.7	12.1	31.9	8.8	47.3	12.1	40.7	3.04	$\chi^2=12.195$ p=0.43
	200만원 미만	317	12.9	37.2	7.9	31.9	10.1	50.2	7.9	42	3.11	
	200~299만원	281	9.3	41.3	10.7	31	7.8	50.5	10.7	38.8	3.13	
	300~399만원	270	8.9	35.6	10	37	8.5	44.4	10	45.6	2.99	
고향	400만원 이상	132	6.8	33.3	12.1	37.9	9.8	40.2	12.1	47.7	2.89	$\chi^2=42.780$ p=0.037
	서울	164	8.5	29.3	13.4	39	9.8	37.8	13.4	48.8	2.88	
	경기/인천	89	9	37.1	9	33.7	11.2	46.1	9	44.9	2.99	
	강원	50	10	32	10	44	4	42	10	48	3	
	대전/충청	158	11.4	38.6	11.4	32.9	5.7	50	11.4	38.6	3.17	
	광주/전라	205	9.8	43.9	8.3	31.7	6.3	53.7	8.3	38	3.19	
	대구/경북	144	7.6	36.8	6.3	36.8	12.5	44.4	6.3	49.3	2.9	
부산/울산/경남	171	9.9	39.2	9.9	28.7	12.3	49.1	9.9	40.9	3.06		
해외/이북/기타	19	36.8	31.6	10.5	15.8	5.3	68.4	10.5	21.1	3.79		

<표 V-8> 통일 후 국내 상황: 빈부격차

	사 례 수	크게 개선	대체로 개선	마찬 가지	대체로 악화	크게 악화	종합			5점 평균	유의도	
							개선	마찬 가지	악화			
전체	1000	1.7	12	14.1	42.7	29.5	13.7	14.1	72.2	2.14		
성별	남성	490	3.1	13.5	15.9	38.8	28.8	16.5	15.9	67.6	2.23	$\chi^2=18.090$ p=0.001
	여성	510	0.4	10.6	12.4	46.5	30.2	11	12.4	76.7	2.05	
연령	20대	216	0.5	12.5	20.4	35.2	31.5	13	20.4	66.7	2.15	$\chi^2=34.151$ p=0.005
	30대	218	2.8	7.8	12.8	45	31.7	10.6	12.8	76.6	2.05	
	40대	235	1.3	10.6	10.2	49.8	28.1	11.9	10.2	77.9	2.07	
	50대	165	1.2	13.9	11.5	47.9	25.5	15.2	11.5	73.3	2.18	
	60대 이상	166	3	16.9	15.7	34.3	30.1	19.9	15.7	64.5	2.28	
학력	고졸 이하	518	1.9	13.3	12	44.6	28.2	15.3	12	72.8	2.16	$\chi^2=14.006$ p=0.3
	전문대학	90	2.2	7.8	12.2	37.8	40	10	12.2	77.8	1.94	
	4년제 대학	358	1.1	11.5	17.6	40.8	29.1	12.6	17.6	69.8	2.15	
	대학원 이상	34	2.9	8.8	14.7	47.1	26.5	11.8	14.7	73.5	2.15	
직업	전문직	73	1.4	12.3	11	46.6	28.8	13.7	11	75.3	2.11	$\chi^2=55.070$ p=0.007
	공무원 및 사회단체	20	0	10	20	50	20	10	20	70	2.2	
	기업체/은행/금융업	82	2.4	12.2	15.9	37.8	31.7	14.6	15.9	69.5	2.16	
	판매/서비스직	125	4.8	8	12.8	42.4	32	12.8	12.8	74.4	2.11	
	생산직	48	2.1	12.5	8.3	47.9	29.2	14.6	8.3	77.1	2.1	
	농어민	59	3.4	16.9	15.3	40.7	23.7	20.3	15.3	64.4	2.36	
	학생	132	0	14.4	19.7	38.6	27.3	14.4	19.7	65.9	2.21	
	주부	300	0	7.3	11.3	49.7	31.7	7.3	11.3	81.3	1.94	
무직/기타	161	3.1	19.9	16.8	32.3	28	23	16.8	60.2	2.38		
지역	서울	221	2.3	11.3	12.2	43	31.2	13.6	12.2	74.2	2.1	$\chi^2=15.996$ p=0.888
	부산/울산/경남	158	1.3	12.7	15.8	45.6	24.7	13.9	15.8	70.3	2.2	
	대구/경북	115	0.9	13.9	13	39.1	33	14.8	13	72.2	2.1	
	인천/경기	253	0.8	11.9	15	41.5	30.8	12.6	15	72.3	2.1	
	광주/전라	114	1.8	8.8	14	45.6	29.8	10.5	14	75.4	2.07	
	대전/충청	102	4.9	12.7	14.7	42.2	25.5	17.6	14.7	67.6	2.29	
본인 소득	강원	37	0	16.2	13.5	40.5	29.7	16.2	13.5	70.3	2.16	$\chi^2=24.451$ p=0.018
	120만원 미만	593	0.8	12.8	14.2	41.8	30.4	13.7	14.2	72.2	2.12	
	120~199만원	105	1.9	10.5	19	38.1	30.5	12.4	19	68.6	2.15	
	200만원 이상	211	4.3	10.4	8.5	48.3	28.4	14.7	8.5	76.8	2.14	
가구 소득	없음	91	1.1	12.1	20.9	40.7	25.3	13.2	20.9	65.9	2.23	$\chi^2=50.672$ p=0
	200만원 미만	317	1.9	20.8	15.8	36	25.6	22.7	15.8	61.5	2.38	
	200~299만원	281	2.1	8.9	15.3	47.3	26.3	11	15.3	73.7	2.13	
	300~399만원	270	1.9	5.2	13	44.4	35.6	7	13	80	1.93	
고향	400만원 이상	132	0	11.4	9.8	45.5	33.3	11.4	9.8	78.8	1.99	$\chi^2=32.513$ p=0.254
	서울	164	1.2	7.9	11.6	41.5	37.8	9.1	11.6	79.3	1.93	
	경기/인천	89	1.1	18	12.4	40.4	28.1	19.1	12.4	68.5	2.24	
	강원	50	2	16	14	42	26	18	14	68	2.26	
	대전/충청	158	3.2	13.9	16.5	44.9	21.5	17.1	16.5	66.5	2.32	
	광주/전라	205	2	9.8	14.6	39.5	34.1	11.7	14.6	73.7	2.06	
	대구/경북	144	0.7	12.5	11.8	43.8	31.3	13.2	11.8	75	2.08	
	부산/울산/경남	171	1.2	12.3	14.6	48	24	13.5	14.6	71.9	2.19	
해외/이북/기타	19	5.3	10.5	31.6	26.3	26.3	15.8	31.6	52.6	2.42		

<표 V-9> 통일 후 국내 상황: 물가

	사 례 수	크게 개선	대체로 개선	마찬 가지	대체로 악화	크게 악화	종합			5점 평균	유의도	
							개선	마찬 가지	악화			
전체		1000	1.8	16.6	14.9	49.7	17	18.4	14.9	66.7	2.37	
성별	남성	490	2.9	19	16.9	46.1	15.1	21.8	16.9	61.2	2.48	$\chi^2=16.433$ $p=0.002$
	여성	510	0.8	14.3	12.9	53.1	18.8	15.1	12.9	72	2.25	
연령	20대	216	2.3	18.1	18.1	45.8	15.7	20.4	18.1	61.6	2.45	$\chi^2=15.455$ $p=0.492$
	30대	218	2.3	16.5	14.7	45	21.6	18.8	14.7	66.5	2.33	
	40대	235	0.4	14.5	13.6	55.3	16.2	14.9	13.6	71.5	2.28	
	50대	165	1.2	17.6	12.1	53.3	15.8	18.8	12.1	69.1	2.35	
	60대 이상	166	3	16.9	15.7	49.4	15.1	19.9	15.7	64.5	2.43	
학력	고졸 이하	518	1.4	16.4	16.2	49.8	16.2	17.8	16.2	66	2.37	$\chi^2=5.797$ $p=0.926$
	전문대학	90	2.2	15.6	14.4	48.9	18.9	17.8	14.4	67.8	2.33	
	4년제 대학	358	2.5	17	12.6	50	17.9	19.6	12.6	67.9	2.36	
	대학원 이상	34	0	17.6	20.6	47.1	14.7	17.6	20.6	61.8	2.41	
직업	전문직	73	1.4	19.2	15.1	46.6	17.8	20.5	15.1	64.4	2.4	$\chi^2=36.924$ $p=0.252$
	공무원 및 사회단체	20	5	15	15	55	10	20	15	65	2.5	
	기업체/은행/금융업	82	1.2	20.7	12.2	43.9	22	22	12.2	65.9	2.35	
	판매/서비스직	125	2.4	15.2	12.8	53.6	16	17.6	12.8	69.6	2.34	
	생산직	48	0	22.9	22.9	37.5	16.7	22.9	22.9	54.2	2.52	
	농어민	59	1.7	22	18.6	42.4	15.3	23.7	18.6	57.6	2.53	
	학생	132	3.8	19.7	17.4	43.2	15.9	23.5	17.4	59.1	2.52	
	주부	300	0.3	11.3	12.3	57.3	18.7	11.7	12.3	76	2.17	
무직/기타	161	3.1	18	16.8	47.8	14.3	21.1	16.8	62.1	2.48		
지역	서울	221	1.8	13.6	13.6	54.3	16.7	15.4	13.6	71	2.29	$\chi^2=27.984$ $p=0.261$
	부산/울산/경남	158	1.3	18.4	12	51.9	16.5	19.6	12	68.4	2.36	
	대구/경북	115	0.9	15.7	16.5	46.1	20.9	16.5	16.5	67	2.3	
	인천/경기	253	1.2	15.4	16.6	49.4	17.4	16.6	16.6	66.8	2.34	
	광주/전라	114	4.4	22.8	21.1	37.7	14	27.2	21.1	51.8	2.66	
	대전/충청	102	2.9	17.6	10.8	49	19.6	20.6	10.8	68.6	2.35	
본인 소득	강원	37	0	16.2	10.8	64.9	8.1	16.2	10.8	73	2.35	$\chi^2=7.746$ $p=0.805$
	120만원 미만	593	1.7	15.5	15.2	49.4	18.2	17.2	15.2	67.6	2.33	
	120~199만원	105	0	19	15.2	48.6	17.1	19	15.2	65.7	2.36	
	200만원 이상	211	2.8	19.4	13.3	49.8	14.7	22.3	13.3	64.5	2.46	
가구 소득	없음	91	2.2	14.3	16.5	52.7	14.3	16.5	16.5	67	2.37	$\chi^2=17.806$ $p=0.122$
	200만원 미만	317	2.2	21.5	15.8	47	13.6	23.7	15.8	60.6	2.52	
	200~299만원	281	1.4	13.5	16.7	52	16.4	14.9	16.7	68.3	2.32	
	300~399만원	270	1.1	14.1	13.3	52.2	19.3	15.2	13.3	71.5	2.26	
고향	400만원 이상	132	3	16.7	12.1	46.2	22	19.7	12.1	68.2	2.33	$\chi^2=33.345$ $p=0.223$
	서울	164	2.4	11	15.2	51.8	19.5	13.4	15.2	71.3	2.25	
	경기/인천	89	1.1	14.6	16.9	49.4	18	15.7	16.9	67.4	2.31	
	강원	50	0	20	18	54	8	20	18	62	2.5	
	대전/충청	158	1.9	19	12	52.5	14.6	20.9	12	67.1	2.41	
	광주/전라	205	2.9	18.5	18.5	42.4	17.6	21.5	18.5	60	2.47	
	대구/경북	144	0.7	13.9	15.3	50	20.1	14.6	15.3	70.1	2.25	
부산/울산/경남	171	0.6	19.9	10.5	53.2	15.8	20.5	10.5	69	2.36		
해외/이북기타	19	10.5	15.8	15.8	42.1	15.8	26.3	15.8	57.9	2.63		

〈표 V-10〉 통일 후 국내 상황: 실업문제

	사 례 수	크게 개선	대체로 개선	마찬가 지	대체로 악화	크게 악화	종합			5점 평균	유의도	
							개선	마찬 가지	악화			
전체	1000	5.8	31.5	11.8	35.7	15.2	37.3	11.8	50.9	2.77		
성별	남성	490	7.1	32.9	10.4	33.7	15.9	40	10.4	49.6	2.82	$\chi^2=6.558$ $p=0.161$
	여성	510	4.5	30.2	13.1	37.6	14.5	34.7	13.1	52.2	2.73	
연령	20대	216	6.5	30.1	13	35.6	14.8	36.6	13	50.5	2.78	$\chi^2=12.917$ $p=0.679$
	30대	218	7.3	35.8	11.9	29.4	15.6	43.1	11.9	45	2.9	
	40대	235	3.8	34	10.2	38.3	13.6	37.9	10.2	51.9	2.76	
	50대	165	6.7	26.1	13.9	38.2	15.2	32.7	13.9	53.3	2.71	
	60대 이상	166	4.8	29.5	10.2	38	17.5	34.3	10.2	55.4	2.66	
학력	고졸 이하	518	5.2	30.7	12.5	36.9	14.7	35.9	12.5	51.5	2.75	$\chi^2=6.009$ $p=0.916$
	전문대학	90	5.6	35.6	10	31.1	17.8	41.1	10	48.9	2.8	
	4년제 대학	358	6.7	32.4	10.6	34.6	15.6	39.1	10.6	50.3	2.8	
	대학원 이상	34	5.9	23.5	17.6	41.2	11.8	29.4	17.6	52.9	2.71	
직업	전문직	73	5.5	31.5	4.1	41.1	17.8	37	4.1	58.9	2.66	$\chi^2=38.887$ $p=0.187$
	공무원 및 사회단체	20	0	35	10	45	10	35	10	55	2.7	
	기업체/은행/금융업	82	8.5	34.1	11	28	18.3	42.7	11	46.3	2.87	
	판매/서비스직	125	8	30.4	8.8	40	12.8	38.4	8.8	52.8	2.81	
	생산직	48	4.2	25	10.4	37.5	22.9	29.2	10.4	60.4	2.5	
	농어민	59	5.1	45.8	15.3	23.7	10.2	50.8	15.3	33.9	3.12	
	학생	132	4.5	34.1	15.2	34.1	12.1	38.6	15.2	46.2	2.85	
	주부	300	3.3	30	13.7	38.7	14.3	33.3	13.7	53	2.69	
	무직/기타	161	9.9	28	11.2	32.3	18.6	37.9	11.2	50.9	2.78	
지역	서울	221	5.9	29.4	13.6	38.5	12.7	35.3	13.6	51.1	2.77	$\chi^2=31.602$ $p=0.137$
	부산/울산/경남	158	5.1	36.1	13.3	33.5	12	41.1	13.3	45.6	2.89	
	대구/경북	115	3.5	33.9	9.6	33	20	37.4	9.6	53	2.68	
	인천/경기	253	5.1	29.2	9.9	37.9	17.8	34.4	9.9	55.7	2.66	
	광주/전라	114	6.1	28.1	21.1	30.7	14	34.2	21.1	44.7	2.82	
	대전/충청	102	9.8	36.3	5.9	34.3	13.7	46.1	5.9	48	2.94	
	강원	37	8.1	29.7	2.7	40.5	18.9	37.8	2.7	59.5	2.68	
본인 소득	120만원 미만	593	5.4	31.7	13.7	34.7	14.5	37.1	13.7	49.2	2.79	$\chi^2=10.817$ $p=0.545$
	120~199만원	105	3.8	36.2	7.6	37.1	15.2	40	7.6	52.4	2.76	
	200만원 이상	211	8.1	30.8	8.5	37	15.6	38.9	8.5	52.6	2.79	
	없음	91	5.5	26.4	12.1	37.4	18.7	31.9	12.1	56	2.63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317	5.4	34.1	14.2	31.5	14.8	39.4	14.2	46.4	2.84	$\chi^2=24.224$ $p=0.019$
	200~299만원	281	5.7	28.8	13.2	37	15.3	34.5	13.2	52.3	2.73	
	300~399만원	270	5.9	33.7	12.2	35.9	12.2	39.6	12.2	48.1	2.85	
	400만원 이상	132	6.8	26.5	2.3	42.4	22	33.3	2.3	64.4	2.54	
고향	서울	164	5.5	25	10.4	38.4	20.7	30.5	10.4	59.1	2.56	$\chi^2=47.025$ $p=0.014$
	경기/인천	89	9	25.8	7.9	34.8	22.5	34.8	7.9	57.3	2.64	
	강원	50	6	32	4	42	16	38	4	58	2.7	
	대전/충청	158	10.1	33.5	9.5	36.1	10.8	43.7	9.5	46.8	2.96	
	광주/전라	205	4.9	32.7	20	31.7	10.7	37.6	20	42.4	2.89	
	대구/경북	144	4.9	35.4	10.4	32.6	16.7	40.3	10.4	49.3	2.79	
	부산/울산/경남	171	2.3	34.5	11.1	38.6	13.5	36.8	11.1	52	2.74	
	해외/이북/기타	19	5.3	26.3	10.5	36.8	21.1	31.6	10.5	57.9	2.58	

<표 V-11> 통일 후 국내 상황: 지역격차

	사 례 수	크게 개선	대체로 개선	마찬 가지	대체로 악화	크게 악화	종합			5점 평균	유의도	
							개선	마찬 가지	악화			
전체		1000	2.4	16.4	13.9	43.9	23.4	18.8	13.9	67.3	2.31	
성별	남성	490	3.9	18	12.9	42	23.3	21.8	12.9	65.3	2.37	$\chi^2=11.680$ p=0.02
	여성	510	1	14.9	14.9	45.7	23.5	15.9	14.9	69.2	2.24	
연령	20대	216	0.5	15.3	14.4	44.4	25.5	15.7	14.4	69.9	2.21	$\chi^2=17.079$ p=0.38
	30대	218	4.1	17.4	13.8	39.4	25.2	21.6	13.8	64.7	2.36	
	40대	235	0.9	16.6	11.9	47.7	23	17.4	11.9	70.6	2.25	
	50대	165	3	14.5	15.8	46.7	20	17.6	15.8	66.7	2.34	
	60대 이상	166	4.2	18.1	14.5	41	22.3	22.3	14.5	63.3	2.41	
학력	고졸 이하	518	2.7	16.8	15.1	44	21.4	19.5	15.1	65.4	2.35	$\chi^2=5.637$ p=0.933
	전문대학	90	2.2	14.4	10	50	23.3	16.7	10	73.3	2.22	
	4년제 대학	358	2	16.2	13.1	42.7	26	18.2	13.1	68.7	2.25	
	대학원 이상	34	2.9	17.6	14.7	38.2	26.5	20.6	14.7	64.7	2.32	
직업	전문직	73	5.5	19.2	9.6	38.4	27.4	24.7	9.6	65.8	2.37	$\chi^2=50.731$ p=0.019
	공무원 및 사회단체	20	5	20	5	55	15	25	5	70	2.45	
	기업체/은행/금융업	82	3.7	22	13.4	34.1	26.8	25.6	13.4	61	2.41	
	판매/서비스직	125	0.8	8.8	15.2	58.4	16.8	9.6	15.2	75.2	2.18	
	생산직	48	2.1	14.6	25	39.6	18.8	16.7	25	58.3	2.42	
	농어민	59	6.8	22	11.9	39	20.3	28.8	11.9	59.3	2.56	
	학생	132	0.8	15.2	14.4	48.5	21.2	15.9	14.4	69.7	2.26	
	주부	300	1	14.7	13.3	45.3	25.7	15.7	13.3	71	2.2	
	무직/기타	161	3.7	20.5	14.3	35.4	26.1	24.2	14.3	61.5	2.4	
지역	서울	221	2.7	13.1	18.1	43.4	22.6	15.8	18.1	66.1	2.3	$\chi^2=27.740$ p=0.271
	부산/울산/경남	158	0.6	19	15.8	44.3	20.3	19.6	15.8	64.6	2.35	
	대구/경북	115	2.6	19.1	7	44.3	27	21.7	7	71.3	2.26	
	인천/경기	253	1.6	17	11.5	45.1	24.9	18.6	11.5	70	2.25	
	광주/전라	114	2.6	17.5	19.3	37.7	22.8	20.2	19.3	60.5	2.39	
	대전/충청	102	5.9	15.7	8.8	48	21.6	21.6	8.8	69.6	2.36	
본인 소득	강원	37	2.7	10.8	16.2	43.2	27	13.5	16.2	70.3	2.19	$\chi^2=10.033$ p=0.613
	120만원 미만	593	2	16.7	14.3	42.5	24.5	18.7	14.3	66.9	2.29	
	120~199만원	105	1	20	10.5	47.6	21	21	10.5	68.6	2.32	
	200만원 이상	211	4.3	15.6	12.8	44.5	22.7	19.9	12.8	67.3	2.34	
가구 소득	없음	91	2.2	12.1	17.6	47.3	20.9	14.3	17.6	68.1	2.27	$\chi^2=20.850$ p=0.053
	200만원 미만	317	3.5	20.2	16.7	36.6	23	23.7	16.7	59.6	2.44	
	200~299만원	281	2.8	13.9	14.6	46.3	22.4	16.7	14.6	68.7	2.28	
	300~399만원	270	1.1	14.8	12.6	48.9	22.6	15.9	12.6	71.5	2.23	
고향	400만원 이상	132	1.5	15.9	8.3	46.2	28	17.4	8.3	74.2	2.17	$\chi^2=0.053$ p=0.075
	서울	164	2.4	12.2	14.6	40.9	29.9	14.6	14.6	70.7	2.16	
	경기/인천	89	1.1	19.1	12.4	38.2	29.2	20.2	12.4	67.4	2.25	
	강원	50	4	14	12	44	26	18	12	70	2.26	
	대전/충청	158	4.4	15.8	10.1	51.3	18.4	20.3	10.1	69.6	2.37	
	광주/전라	205	1.5	19	20	40	19.5	20.5	20	59.5	2.43	
	대구/경북	144	1.4	16	11.1	41.7	29.9	17.4	11.1	71.5	2.17	
부산/울산/경남	171	2.3	17	11.7	49.7	19.3	19.3	11.7	69	2.33		
해외/이북/기타	19	5.3	21.1	26.3	42.1	5.3	26.3	26.3	47.4	2.79		

〈표 V-12〉 통일 후 국내 상황: 주택문제

	사 례 수	크게 개선	대체로 개선	마찬 가지	대체로 악화	크게 악화	종합			5점 평균	유의도	
							개선	마찬 가지	악화			
전체	1000	5.8	29.1	21.6	32.7	10.8	34.9	21.6	43.5	2.86		
성별	남성	490	7.6	31.8	21.4	30.2	9	39.4	21.4	39.2	2.99	$\chi^2=12.343$ $p=0.015$
	여성	510	4.1	26.5	21.8	35.1	12.5	30.6	21.8	47.6	2.75	
연령	20대	216	4.2	31	18.5	33.8	12.5	35.2	18.5	46.3	2.81	$\chi^2=25.411$ $p=0.063$
	30대	218	9.2	30.3	19.7	30.7	10.1	39.4	19.7	40.8	2.98	
	40대	235	2.1	32.8	25.5	30.2	9.4	34.9	25.5	39.6	2.88	
	50대	165	7.3	22.4	19.4	40	10.9	29.7	19.4	50.9	2.75	
	60대 이상	166	7.2	26.5	24.7	30.1	11.4	33.7	24.7	41.6	2.88	
학력	고졸 이하	518	5.6	27.8	21.2	34	11.4	33.4	21.2	45.4	2.82	$\chi^2=6.945$ $p=0.861$
	전문대학	90	6.7	35.6	22.2	30	5.6	42.2	22.2	35.6	3.08	
	4년제 대학	358	5.9	29.3	21.2	31.8	11.7	35.2	21.2	43.6	2.86	
	대학원 이상	34	5.9	29.4	29.4	29.4	5.9	35.3	29.4	35.3	3	
직업	전문직	73	9.6	23.3	17.8	41.1	8.2	32.9	17.8	49.3	2.85	$\chi^2=34.751$ $p=0.338$
	공무원 및 사회단체	20	0	45	10	45	0	45	10	45	3	
	기업체/은행/금융업	82	7.3	31.7	20.7	26.8	13.4	39	20.7	40.2	2.93	
	판매/서비스직	125	8	28.8	19.2	32.8	11.2	36.8	19.2	44	2.9	
	생산직	48	4.2	27.1	27.1	31.3	10.4	31.3	27.1	41.7	2.83	
	농어민	59	5.1	27.1	28.8	33.9	5.1	32.2	28.8	39	2.93	
	학생	132	1.5	32.6	21.2	34.8	9.8	34.1	21.2	44.7	2.81	
	주부	300	4.3	27	22.3	34.7	11.7	31.3	22.3	46.3	2.78	
지역	무직/기타	161	9.3	31.1	21.7	24.8	13	40.4	21.7	37.9	2.99	$\chi^2=25.271$ $p=0.391$
	서울	221	5.4	25.3	25.3	36.7	7.2	30.8	25.3	43.9	2.85	
	부산/울산/경남	158	6.3	36.1	14.6	33.5	9.5	42.4	14.6	43	2.96	
	대구/경북	115	7	24.3	22.6	31.3	14.8	31.3	22.6	46.1	2.77	
	인천/경기	253	5.1	30.4	21.3	28.9	14.2	35.6	21.3	43.1	2.83	
	광주/전라	114	3.5	28.9	25.4	32.5	9.6	32.5	25.4	42.1	2.84	
	대전/충청	102	8.8	28.4	18.6	33.3	10.8	37.3	18.6	44.1	2.91	
본인 소득	강원	37	5.4	29.7	24.3	35.1	5.4	35.1	24.3	40.5	2.95	$\chi^2=13.862$ $p=0.31$
	120만원 미만	593	5.4	28.8	22.4	31.5	11.8	34.2	22.4	43.3	2.84	
	120~199만원	105	3.8	27.6	17.1	41	10.5	31.4	17.1	51.4	2.73	
	200만원 이상	211	9	31.8	19	31.8	8.5	40.8	19	40.3	3.01	
	없음	91	3.3	26.4	27.5	33	9.9	29.7	27.5	42.9	2.8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317	6.9	28.4	21.5	32.5	10.7	35.3	21.5	43.2	2.88	$\chi^2=11.821$ $p=0.46$
	200~299만원	281	6	28.5	24.6	32.4	8.5	34.5	24.6	40.9	2.91	
	300~399만원	270	5.2	31.9	19.3	33.7	10	37	19.3	43.7	2.89	
	400만원 이상	132	3.8	26.5	20.5	31.8	17.4	30.3	20.5	49.2	2.67	
고향	서울	164	6.1	23.8	18.9	38.4	12.8	29.9	18.9	51.2	2.72	$\chi^2=31.859$ $p=0.28$
	경기/인천	89	5.6	33.7	16.9	28.1	15.7	39.3	16.9	43.8	2.85	
	강원	50	4	34	26	32	4	38	26	36	3.02	
	대전/충청	158	7.6	26.6	24.7	33.5	7.6	34.2	24.7	41.1	2.93	
	광주/전라	205	4.4	33.7	25.4	28.3	8.3	38	25.4	36.6	2.98	
	대구/경북	144	7.6	26.4	20.1	29.2	16.7	34	20.1	45.8	2.79	
	부산/울산/경남	171	4.7	29.8	18.1	37.4	9.9	34.5	18.1	47.4	2.82	
해외/이북/기타	19	5.3	26.3	31.6	31.6	5.3	31.6	31.6	36.8	2.95		

<표 V-13> 통일 후 국내 상황: 법치문제

		사례수	크게 개선	대체로 개선	마찬가지	대체로 악화	크게 악화	종합			5점 평균	유의도
								개선	마찬가지	악화		
전체		1000	2.1	17.8	18.7	44.7	16.7	19.9	18.7	61.4	2.44	
성별	남성	490	3.3	21	21	41.4	13.3	24.3	21	54.7	2.6	$\chi^2=23.665$ p=0
	여성	510	1	14.7	16.5	47.8	20	15.7	16.5	67.8	2.29	
연령	20대	216	0.9	18.1	19.4	44.4	17.1	19	19.4	61.6	2.41	$\chi^2=18.582$ p=0.291
	30대	218	1.4	18.3	19.3	46.8	14.2	19.7	19.3	61	2.46	
	40대	235	1.7	15.3	19.6	44.7	18.7	17	19.6	63.4	2.37	
	50대	165	3	13.3	20.6	46.7	16.4	16.4	20.6	63	2.4	
	60대 이상	166	4.2	24.7	13.9	40.4	16.9	28.9	13.9	57.2	2.59	
학력	고졸 이하	518	2.5	18.7	18	45.2	15.6	21.2	18	60.8	2.47	$\chi^2=13.791$ p=0.314
	전문대학	90	0	14.4	12.2	48.9	24.4	14.4	12.2	73.3	2.17	
	4년제 대학	358	2	17.6	21.8	41.9	16.8	19.6	21.8	58.7	2.46	
	대학원 이상	34	2.9	14.7	14.7	55.9	11.8	17.6	14.7	67.6	2.41	
직업	전문직	73	2.7	13.7	12.3	50.7	20.5	16.4	12.3	71.2	2.27	$\chi^2=47.304$ p=0.04
	공무원 및 사회단체	20	5	15	20	50	10	20	20	60	2.55	
	기업체/은행/금융업	82	1.2	19.5	23.2	45.1	11	20.7	23.2	56.1	2.54	
	판매/서비스직	125	2.4	17.6	16	48.8	15.2	20	16	64	2.43	
	생산직	48	0	29.2	20.8	37.5	12.5	29.2	20.8	50	2.67	
	농어민	59	6.8	22	27.1	28.8	15.3	28.8	27.1	44.1	2.76	
	학생	132	0.8	20.5	22.7	42.4	13.6	21.2	22.7	56.1	2.52	
	주부	300	1	12.7	16.3	48.7	21.3	13.7	16.3	70	2.23	
	무직/기타	161	3.7	21.7	18.6	40.4	15.5	25.5	18.6	55.9	2.58	
지역	서울	221	3.2	16.7	18.1	48.9	13.1	19.9	18.1	62	2.48	$\chi^2=27.807$ p=0.268
	부산/울산/경남	158	2.5	22.8	19	43	12.7	25.3	19	55.7	2.59	
	대구/경북	115	0.9	20	15.7	40.9	22.6	20.9	15.7	63.5	2.36	
	인천/경기	253	0.8	15.8	19	46.6	17.8	16.6	19	64.4	2.35	
	광주/전라	114	2.6	14	28.1	41.2	14	16.7	28.1	55.3	2.5	
	대전/충청	102	2.9	18.6	13.7	42.2	22.5	21.6	13.7	64.7	2.37	
	강원	37	2.7	18.9	13.5	43.2	21.6	21.6	13.5	64.9	2.38	
본인 소득	120만원 미만	593	1.9	16.9	19.4	43.3	18.5	18.7	19.4	61.9	2.4	$\chi^2=11.940$ p=0.451
	120~199만원	105	0	19	18.1	45.7	17.1	19	18.1	62.9	2.39	
	200만원 이상	211	3.8	19.9	16.6	47.9	11.8	23.7	16.6	59.7	2.56	
	없음	91	2.2	17.6	19.8	45.1	15.4	19.8	19.8	60.4	2.46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317	3.2	22.4	18	38.8	17.7	25.6	18	56.5	2.55	$\chi^2=21.063$ p=0.05
	200~299만원	281	1.4	15.3	23.5	46.3	13.5	16.7	23.5	59.8	2.45	
	300~399만원	270	1.1	15.9	15.9	48.9	18.1	17	15.9	67	2.33	
	400만원 이상	132	3	15.9	15.9	47	18.2	18.9	15.9	65.2	2.39	
고향	서울	164	3	17.1	17.7	43.3	18.9	20.1	17.7	62.2	2.42	$\chi^2=19.797$ p=0.872
	경기/인천	89	2.2	21.3	20.2	37.1	19.1	23.6	20.2	56.2	2.51	
	강원	50	2	20	12	50	16	22	12	66	2.42	
	대전/충청	158	1.9	19	15.2	45.6	18.4	20.9	15.2	63.9	2.41	
	광주/전라	205	2	14.6	22	46.8	14.6	16.6	22	61.5	2.42	
	대구/경북	144	2.1	15.3	18.1	44.4	20.1	17.4	18.1	64.6	2.35	
	부산/울산/경남	171	1.2	20.5	19.3	47.4	11.7	21.6	19.3	59.1	2.52	
	해외/이북/기타	19	5.3	21.1	31.6	26.3	15.8	26.3	31.6	42.1	2.74	

<표 V-14> 통일 후 국내 상황: 가치관 혼란

		사례수	크게 개선	대체로 개선	마찬가지	대체로 악화	크게 악화	종합			유의도	
								개선	마찬가지	악화		
전체		1000	1.8	11	11.3	52.5	23.4	12.8	11.3	75.9	2.15	
성별	남성	490	2.4	13.9	13.9	49.2	20.6	16.3	13.9	69.8	2.28	$\chi^2=20.333$ p=0
	여성	510	1.2	8.2	8.8	55.7	26.1	9.4	8.8	81.8	2.03	
연령	20대	216	0	12	10.6	53.2	24.1	12	10.6	77.3	2.11	$\chi^2=16.896$ p=0.392
	30대	218	2.8	11	14.7	47.2	24.3	13.8	14.7	71.6	2.21	
	40대	235	2.6	8.5	10.2	53.2	25.5	11.1	10.2	78.7	2.09	
	50대	165	0.6	10.9	10.9	55.8	21.8	11.5	10.9	77.6	2.13	
	60대 이상	166	3	13.3	9.6	54.2	19.9	16.3	9.6	74.1	2.25	
학력	고졸 이하	518	2.1	11.6	10.2	54.8	21.2	13.7	10.2	76.1	2.19	$\chi^2=8.154$ p=0.773
	전문대학	90	1.1	8.9	11.1	52.2	26.7	10	11.1	78.9	2.06	
	4년제 대학	358	1.4	11.2	12.8	48.6	26	12.6	12.8	74.6	2.13	
	대학원 이상	34	2.9	5.9	11.8	58.8	20.6	8.8	11.8	79.4	2.12	
직업	전문직	73	2.7	15.1	6.8	50.7	24.7	17.8	6.8	75.3	2.21	$\chi^2=51.368$ p=0.016
	공무원 및 사회단체	20	0	10	0	70	20	10	0	90	2	
	기업체/은행/금융업	82	3.7	9.8	14.6	39	32.9	13.4	14.6	72	2.12	
	판매/서비스직	125	0.8	8	16.8	54.4	20	8.8	16.8	74.4	2.15	
	생산직	48	2.1	16.7	12.5	52.1	16.7	18.8	12.5	68.8	2.35	
	농어민	59	6.8	18.6	11.9	45.8	16.9	25.4	11.9	62.7	2.53	
	학생	132	0	14.4	12.1	53	20.5	14.4	12.1	73.5	2.2	
	주부	300	0.7	7	10	56.7	25.7	7.7	10	82.3	2	
지역	무직/기타	161	3.1	12.4	9.9	50.9	23.6	15.5	9.9	74.5	2.2	$\chi^2=26.161$ p=0.345
	서울	221	1.8	6.8	10.4	59.3	21.7	8.6	10.4	81	2.08	
	부산/울산/경남	158	0	12.7	10.1	51.9	25.3	12.7	10.1	77.2	2.1	
	대구/경북	115	0.9	13	12.2	49.6	24.3	13.9	12.2	73.9	2.17	
	인천/경기	253	1.6	11.5	11.5	50.2	25.3	13	11.5	75.5	2.14	
	광주/전라	114	2.6	11.4	14.9	55.3	15.8	14	14.9	71.1	2.3	
	대전/충청	102	4.9	12.7	10.8	43.1	28.4	17.6	10.8	71.6	2.23	
본인 소득	강원	37	2.7	13.5	8.1	56.8	18.9	16.2	8.1	75.7	2.24	$\chi^2=9.890$ p=0.626
	120만원 미만	593	1.3	10.8	11.6	51.1	25.1	12.1	11.6	76.2	2.12	
	120~199만원	105	1	11.4	11.4	52.4	23.8	12.4	11.4	76.2	2.13	
	200만원 이상	211	3.3	12.3	11.4	52.1	20.9	15.6	11.4	73	2.25	
가구 소득	없음	91	2.2	8.8	8.8	62.6	17.6	11	8.8	80.2	2.15	$\chi^2=14.564$ p=0.266
	200만원 미만	317	2.5	14.5	10.4	53	19.6	17	10.4	72.6	2.27	
	200~299만원	281	1.4	10	12.5	52	24.2	11.4	12.5	76.2	2.12	
	300~399만원	270	1.1	9.3	11.1	55.2	23.3	10.4	11.1	78.5	2.1	
고향	400만원 이상	132	2.3	8.3	11.4	47	31.1	10.6	11.4	78	2.04	$\chi^2=39.128$ p=0.079
	서울	164	3	6.7	9.1	51.2	29.9	9.8	9.1	81.1	2.02	
	경기/인천	89	1.1	16.9	10.1	44.9	27	18	10.1	71.9	2.2	
	강원	50	0	16	8	56	20	16	8	76	2.2	
	대전/충청	158	4.4	8.9	13.3	50.6	22.8	13.3	13.3	73.4	2.22	
	광주/전라	205	1.5	10.7	12.7	55.6	19.5	12.2	12.7	75.1	2.19	
	대구/경북	144	0	11.1	11.8	47.2	29.9	11.1	11.8	77.1	2.04	
	부산/울산/경남	171	0.6	12.9	11.1	59.1	16.4	13.5	11.1	75.4	2.22	
해외/이북/기타	19	5.3	10.5	10.5	52.6	21.1	15.8	10.5	73.7	2.26		

〈표 V-15〉 통일 후 국내 상황: 국제적 위상

		사 례 수	크게 개선	대체로 개선	마찬 가지	대체로 악화	크게 악화	종합			5점 평균	유의도
								개선	마찬 가지	악화		
전체		1000	30.6	48.5	11.5	7.4	2	79.1	11.5	9.4	3.98	
성별	남성	490	36.9	47.3	7.8	6.5	1.4	84.3	7.8	8	4.12	$\chi^2=27.146$ p=0
	여성	510	24.5	49.6	15.1	8.2	2.5	74.1	15.1	10.8	3.85	
연령	20대	216	28.2	47.2	15.3	5.6	3.7	75.5	15.3	9.3	3.91	$\chi^2=24.311$ p=0.083
	30대	218	32.6	46.8	13.8	4.6	2.3	79.4	13.8	6.9	4.03	
	40대	235	28.9	51.1	8.9	8.9	2.1	80	8.9	11.1	3.96	
	50대	165	28.5	53.9	8.5	9.1	0	82.4	8.5	9.1	4.02	
	60대 이상	166	35.5	43.4	10.2	9.6	1.2	78.9	10.2	10.8	4.02	
학력	고졸 이하	518	28	50.2	11	9.1	1.7	78.2	11	10.8	3.94	$\chi^2=16.464$ p=0.171
	전문대학	90	34.4	42.2	15.6	7.8	0	76.7	15.6	7.8	4.03	
	4년제 대학	358	32.1	48.3	11.2	5.3	3.1	80.4	11.2	8.4	4.01	
	대학원 이상	34	44.1	41.2	11.8	2.9	0	85.3	11.8	2.9	4.26	
직업	전문직	73	34.2	47.9	9.6	6.8	1.4	82.2	9.6	8.2	4.07	$\chi^2=47.118$ p=0.041
	공무원 및 사회단체	20	20	65	10	5	0	85	10	5	4	
	기업체/은행/금융업	82	42.7	39	9.8	8.5	0	81.7	9.8	8.5	4.16	
	판매/서비스직	125	33.6	44.8	12.8	6.4	2.4	78.4	12.8	8.8	4.01	
	생산직	48	31.3	47.9	8.3	6.3	6.3	79.2	8.3	12.5	3.92	
	농어민	59	23.7	64.4	8.5	3.4	0	88.1	8.5	3.4	4.08	
	학생	132	28.8	52.3	12.1	3.8	3	81.1	12.1	6.8	4	
	주부	300	25	50.3	15.3	7.3	2	75.3	15.3	9.3	3.89	
무직/기타	161	36	42.2	6.8	13	1.9	78.3	6.8	14.9	3.98		
지역	서울	221	30.3	48.9	13.1	5.9	1.8	79.2	13.1	7.7	4	$\chi^2=19.526$ p=0.723
	부산/울산/경남	158	27.8	51.9	10.8	8.2	1.3	79.7	10.8	9.5	3.97	
	대구/경북	115	29.6	49.6	11.3	7	2.6	79.1	11.3	9.6	3.97	
	인천/경기	253	32.8	42.7	10.3	11.1	3.2	75.5	10.3	14.2	3.91	
	광주/전라	114	29.8	54.4	11.4	2.6	1.8	84.2	11.4	4.4	4.08	
	대전/충청	102	34.3	48	10.8	5.9	1	82.4	10.8	6.9	4.09	
본인 소득	강원	37	24.3	51.4	16.2	8.1	0	75.7	16.2	8.1	3.92	$\chi^2=30.546$ p=0.002
	120만원 미만	593	25.3	52.6	12.5	7.8	1.9	77.9	12.5	9.6	3.92	
	120~199만원	105	34.3	44.8	13.3	5.7	1.9	79	13.3	7.6	4.04	
	200만원 이상	211	38.4	46	7.1	7.1	1.4	84.4	7.1	8.5	4.13	
가구 소득	없음	91	42.9	31.9	13.2	7.7	4.4	74.7	13.2	12.1	4.01	$\chi^2=11.096$ p=0.521
	200만원 미만	317	30.6	46.7	12.6	8.2	1.9	77.3	12.6	10.1	3.96	
	200~299만원	281	31	50.2	11.7	4.6	2.5	81.1	11.7	7.1	4.02	
	300~399만원	270	29.6	50.7	10.7	8.1	0.7	80.4	10.7	8.9	4	
고향	400만원 이상	132	31.8	44.7	9.8	9.8	3.8	76.5	9.8	13.6	3.91	$\chi^2=31.051$ p=0.315
	서울	164	30.5	40.9	14.6	11	3	71.3	14.6	14	3.85	
	경기/인천	89	33.7	47.2	7.9	9	2.2	80.9	7.9	11.2	4.01	
	강원	50	26	50	18	6	0	76	18	6	3.96	
	대전/충청	158	32.9	49.4	10.1	5.7	1.9	82.3	10.1	7.6	4.06	
	광주/전라	205	32.7	52.7	11.2	2.4	1	85.4	11.2	3.4	4.14	
	대구/경북	144	27.8	49.3	11.1	8.3	3.5	77.1	11.1	11.8	3.9	
부산/울산/경남	171	27.5	51.5	10.5	9.4	1.2	78.9	10.5	10.5	3.95		
해외/이북/기타	19	36.8	31.6	10.5	15.8	5.3	68.4	10.5	21.1	3.79		

<표 V-16> 국민의견의 정부 통일정책 반영도

	사례수	매우 많이 반영	대체로 반영	별로 반영 되지 않음	전혀 반영 되지 않음	종합			유의도	
						반영	반영 되지 않음	4점 평균		
전체	1000	6.1	33.2	47.4	13.3	39.3	60.7	2.32		
성별	남성	490	8	34.1	43.5	14.5	42	58	2.36	$\chi^2=9.823$ p=0.02
	여성	510	4.3	32.4	51.2	12.2	36.7	63.3	2.29	
연령	20대	216	2.8	33.8	50.5	13	36.6	63.4	2.26	$\chi^2=25.963$ p=0.011
	30대	218	4.1	30.3	52.3	13.3	34.4	65.6	2.25	
	40대	235	5.1	31.1	49.4	14.5	36.2	63.8	2.27	
	50대	165	7.9	35.2	43.6	13.3	43	57	2.38	
학력	60대 이상	166	12.7	37.3	38	12	50	50	2.51	$\chi^2=15.925$ p=0.068
	고졸 이하	518	7.5	37.5	43.1	12	45	55	2.41	
	전문대학	90	4.4	26.7	54.4	14.4	31.1	68.9	2.21	
	4년제 대학	358	4.7	29.3	51.4	14.5	34.1	65.9	2.24	
직업	대학원 이상	34	2.9	26.5	52.9	17.6	29.4	70.6	2.15	$\chi^2=48.717$ p=0.002
	전문직	73	2.7	31.5	54.8	11	34.2	65.8	2.26	
	공무원 및 사회단체	20	10	50	30	10	60	40	2.6	
	기업체/은행/금융업	82	2.4	30.5	48.8	18.3	32.9	67.1	2.17	
	판매/서비스직	125	4	28.8	52	15.2	32.8	67.2	2.22	
	생산직	48	8.3	33.3	52.1	6.3	41.7	58.3	2.44	
	농어민	59	13.6	39	32.2	15.3	52.5	47.5	2.51	
	학생	132	3.8	31.8	51.5	12.9	35.6	64.4	2.27	
	주부	300	4	34.7	50.7	10.7	38.7	61.3	2.32	
무직/기타	161	13	32.9	36.6	17.4	46	54	2.42		
지역	서울	221	4.1	32.1	51.1	12.7	36.2	63.8	2.28	$\chi^2=27.018$ p=0.079
	부산/울산/경남	158	6.3	33.5	43.7	16.5	39.9	60.1	2.3	
	대구/경북	115	5.2	36.5	43.5	14.8	41.7	58.3	2.32	
	인천/경기	253	5.9	27.3	55.7	11.1	33.2	66.8	2.28	
	광주/전라	114	10.5	43	35.1	11.4	53.5	46.5	2.53	
	대전/충청	102	4.9	34.3	47.1	13.7	39.2	60.8	2.3	
본인 소득	강원	37	10.8	35.1	35.1	18.9	45.9	54.1	2.38	$\chi^2=12.148$ p=0.205
	120만원 미만	593	6.1	34.6	47.7	11.6	40.6	59.4	2.35	
	120~199만원	105	3.8	36.2	49.5	10.5	40	60	2.33	
	200만원 이상	211	5.7	28.4	47.4	18.5	34.1	65.9	2.21	
가구 소득	없음	91	9.9	31.9	42.9	15.4	41.8	58.2	2.36	$\chi^2=34.004$ p=0
	200만원 미만	317	7.9	37.2	43.2	11.7	45.1	54.9	2.41	
	200~299만원	281	8.5	32	49.8	9.6	40.6	59.4	2.4	
	300~399만원	270	2.2	35.6	47.8	14.4	37.8	62.2	2.26	
고향	400만원 이상	132	4.5	21.2	51.5	22.7	25.8	74.2	2.08	$\chi^2=30.073$ p=0.091
	서울	164	6.1	24.4	53.7	15.9	30.5	69.5	2.21	
	경기/인천	89	4.5	31.5	52.8	11.2	36	64	2.29	
	강원	50	6	40	40	14	46	54	2.38	
	대전/충청	158	4.4	34.2	51.3	10.1	38.6	61.4	2.33	
	광주/전라	205	8.3	39	42.9	9.8	47.3	52.7	2.46	
	대구/경북	144	6.3	27.8	46.5	19.4	34	66	2.21	
부산/울산/경남	171	5.3	36.3	46.2	12.3	41.5	58.5	2.35		
해외/이북/기타	19	10.5	42.1	21.1	26.3	52.6	47.4	2.37		

<표 V-17>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시 우선순위

		사례수	정부의 정책 투명성 향상	통일 교육 확대	여야 정치인의 대북정책 합의	언론의 통일 지향적 보도	시민 단체의 역할 확대	기타	유의도
전체		1000	34.2	11	28	7.5	14.9	4.4	
성별	남성	490	32.7	10.4	31.4	7.3	14.3	3.9	$\chi^2=5.881$ $p=0.318$
	여성	510	35.7	11.6	24.7	7.6	15.5	4.9	
연령	20대	216	32.9	15.7	19	6.9	23.1	2.3	$\chi^2=61.013$ $p=0$
	30대	218	40.4	11.9	23.4	6.9	12.4	5	
	40대	235	36.6	10.6	28.5	7.2	12.3	4.7	
	50대	165	32.7	8.5	27.9	11.5	14.5	4.8	
	60대 이상	166	25.9	6.6	45.2	5.4	11.4	5.4	
학력	고졸 이하	518	30.5	9.7	31.9	7.1	15.1	5.8	$\chi^2=26.168$ $p=0.036$
	전문대학	90	38.9	12.2	18.9	10	17.8	2.2	
	4년제 대학	358	38.3	12.6	24.9	6.4	14.8	3.1	
	대학원 이상	34	35.3	11.8	26.5	17.6	5.9	2.9	
직업	전문직	73	43.8	11	26	8.2	6.8	4.1	$\chi^2=70.477$ $p=0.002$
	공무원 및 사회단체	20	45	10	30	5	10	0	
	기업체/은행/금융업	82	29.3	18.3	26.8	7.3	15.9	2.4	
	판매/서비스직	125	30.4	5.6	39.2	9.6	14.4	0.8	
	생산직	48	25	16.7	29.2	8.3	14.6	6.3	
	농어민	59	32.2	6.8	27.1	3.4	22	8.5	
	학생	132	33.3	16.7	14.4	8.3	25	2.3	
	주부	300	36.7	10.3	26	7.7	12.7	6.7	
지역	무직/기타	161	33.5	8.1	35.4	6.2	12.4	4.3	$\chi^2=34.442$ $p=0.264$
	서울	221	36.2	9.5	32.6	7.2	10.4	4.1	
	부산/울산/경남	158	31	12	23.4	9.5	20.9	3.2	
	대구/경북	115	40.9	7.8	24.3	7.8	12.2	7	
	인천/경기	253	29.6	11.9	31.6	7.5	14.6	4.7	
	광주/전라	114	33.3	10.5	23.7	8.8	20.2	3.5	
	대전/충청	102	34.3	12.7	26.5	3.9	16.7	5.9	
본인 소득	강원	37	48.6	16.2	24.3	5.4	5.4	0	$\chi^2=19.492$ $p=0.192$
	120만원 미만	593	32	11.5	27.8	6.7	16.7	5.2	
	120~199만원	105	37.1	6.7	33.3	7.6	10.5	4.8	
	200만원 이상	211	34.6	11.8	28.9	10.4	11.4	2.8	
가구 소득	없음	91	44	11	20.9	5.5	16.5	2.2	$\chi^2=22.700$ $p=0.091$
	200만원 미만	317	31.2	10.7	32.2	4.1	15.8	6	
	200~299만원	281	37.4	11.7	24.2	9.6	13.9	3.2	
	300~399만원	270	31.1	10.7	30	10	14.1	4.1	
고향	400만원 이상	132	40.9	10.6	22	6.1	16.7	3.8	$\chi^2=45.168$ $p=0.117$
	서울	164	35.4	13.4	25.6	10.4	9.8	5.5	
	경기/인천	89	31.5	10.1	37.1	4.5	12.4	4.5	
	강원	50	44	16	22	8	10	0	
	대전/충청	158	36.1	12.7	29.1	3.8	14.6	3.8	
	광주/전라	205	34.1	9.3	24.4	10.2	18	3.9	
	대구/경북	144	35.4	6.9	26.4	5.6	20.1	5.6	
	부산/울산/경남	171	31.6	11.7	28.7	8.8	15.2	4.1	
해외/이북/기타	19	10.5	10.5	57.9	0	10.5	10.5		

<표 V-18> 통일정책 추진시 가장 영향력이 큰 집단

		사례수	연론	일반 국민	정치인	대통령과 청와대	시민 단체	정부 부처	유의도
전체		1000	19.7	24.7	21.8	14.8	8.2	10.8	
성별	남성	490	20.2	28.8	18	15.9	8.8	8.4	$\chi^2=19.551$ $p=0.002$
	여성	510	19.2	20.8	25.5	13.7	7.6	13.1	
연령	20대	216	19.9	24.1	27.3	14.4	7.4	6.9	$\chi^2=54.673$ $p=0$
	30대	218	17.4	20.6	27.5	14.2	5.5	14.7	
	40대	235	19.6	17.4	19.6	18.7	10.2	14.5	
	50대	165	26.1	30.3	17.6	12.7	7.9	5.5	
학력	60대 이상	166	16.3	35.5	14.5	12.7	10.2	10.8	$\chi^2=15.213$ $p=0.436$
	고졸 이하	518	18.7	27.6	20.7	12.9	9.3	10.8	
	전문대학	90	17.8	18.9	24.4	18.9	7.8	12.2	
	4년제 대학	358	20.9	22.6	23.7	16.2	6.7	9.8	
직업	대학원 이상	34	26.5	17.6	11.8	17.6	8.8	17.6	$\chi^2=52.882$ $p=0.083$
	전문직	73	15.1	17.8	26	12.3	9.6	19.2	
	공무원 및 사회단체	20	30	20	35	15	0	0	
	기업체/은행/금융업	82	12.2	28	18.3	20.7	7.3	13.4	
	판매/서비스직	125	24.8	24	20.8	12.8	8.8	8.8	
	생산직	48	20.8	27.1	12.5	14.6	14.6	10.4	
	농어민	59	30.5	25.4	18.6	11.9	5.1	8.5	
	학생	132	20.5	25.8	25.8	14.4	8.3	5.3	
	주부	300	19	20.7	22.7	16	7	14.7	
지역	무직/기타	161	16.8	32.9	19.9	13.7	9.9	6.8	$\chi^2=30.498$ $p=0.44$
	서울	221	17.2	23.1	20.8	17.6	8.6	12.7	
	부산/울산/경남	158	21.5	24.1	17.7	17.7	8.2	10.8	
	대구/경북	115	24.3	26.1	28.7	9.6	5.2	6.1	
	인천/경기	253	17.8	23.7	19.8	17	9.1	12.6	
	광주/전라	114	23.7	28.1	21.9	7.9	9.6	8.8	
본인 소득	대전/충청	102	18.6	26.5	21.6	13.7	7.8	11.8	$\chi^2=10.059$ $p=0.816$
	강원	37	16.2	24.3	37.8	10.8	5.4	5.4	
	120만원 미만	593	19.7	23.4	23.3	13.8	8.9	10.8	
	120~199만원	105	17.1	25.7	24.8	11.4	8.6	12.4	
가구 소득	200만원 이상	211	20.4	26.5	17.1	18	7.1	10.9	$\chi^2=31.766$ $p=0.007$
	없음	91	20.9	27.5	19.8	17.6	5.5	8.8	
	200만원 미만	317	20.5	26.2	20.8	10.1	10.7	11.7	
	200~299만원	281	23.5	24.9	21.7	17.4	5.7	6.8	
고향	300~399만원	270	17.4	24.8	24.8	14.8	7.4	10.7	$\chi^2=33.447$ $p=0.543$
	400만원 이상	132	14.4	20.5	18.2	20.5	9.1	17.4	
	서울	164	18.3	22.6	23.8	15.2	7.3	12.8	
	경기/인천	89	21.3	20.2	20.2	19.1	9	10.1	
	강원	50	24	28	30	4	6	8	
	대전/충청	158	16.5	27.2	19.6	15.2	7.6	13.9	
	광주/전라	205	22.4	24.4	22.9	12.2	10.2	7.8	
해외/이북/기타	대구/경북	144	19.4	21.5	22.2	18.8	6.9	11.1	$\chi^2=33.447$ $p=0.543$
	부산/울산/경남	171	20.5	25.1	19.9	14.6	8.8	11.1	
	19	5.3	57.9	10.5	15.8	5.3	5.3		

<표 V-19> 청소년의 통일 관심 정도

	사례수	매우 관심 많음	어느 정도 관심	별로 관심 없음	전혀 관심 없음	종합		4점 평균	유의도	
						관심 있음	관심 없음			
전체	1000	5.5	19	55	20.5	24.5	75.5	2.1		
성별	남성	490	6.3	22.7	53.3	17.8	29	71	2.18	$\chi^2=11.998$ $p=0.007$
	여성	510	4.7	15.5	56.7	23.1	20.2	79.8	2.02	
연령	20대	216	1.9	19.9	56.9	21.3	21.8	78.2	2.02	$\chi^2=39.004$ $p=0$
	30대	218	0.9	19.7	55.5	23.9	20.6	79.4	1.98	
	40대	235	7.2	13.6	58.3	20.9	20.9	79.1	2.07	
	50대	165	9.7	17.6	55.8	17	27.3	72.7	2.2	
	60대 이상	166	9.6	25.9	46.4	18.1	35.5	64.5	2.27	
학력	고졸 이하	518	7.3	24.1	51.5	17	31.5	68.5	2.22	$\chi^2=36.846$ $p=0$
	전문대학	90	1.1	8.9	62.2	27.8	10	90	1.83	
	4년제 대학	358	3.9	13.7	59.2	23.2	17.6	82.4	1.98	
	대학원 이상	34	5.9	23.5	44.1	26.5	29.4	70.6	2.09	
직업	전문직	73	4.1	13.7	60.3	21.9	17.8	82.2	2	$\chi^2=39.956$ $p=0.022$
	공무원 및 사회단체	20	5	25	65	5	30	70	2.3	
	기업체/은행/금융업	82	2.4	15.9	57.3	24.4	18.3	81.7	1.96	
	판매/서비스직	125	4	20	56	20	24	76	2.08	
	생산직	48	4.2	22.9	50	22.9	27.1	72.9	2.08	
	농어민	59	11.9	35.6	44.1	8.5	47.5	52.5	2.51	
	학생	132	3	18.9	53.8	24.2	22	78	2.01	
	주부	300	5.7	14.3	59.3	20.7	20	80	2.05	
무직/기타	161	8.7	23	47.8	20.5	31.7	68.3	2.2		
지역	서울	221	2.7	17.2	53.8	26.2	19.9	80.1	1.96	$\chi^2=17.809$ $p=0.468$
	부산/울산/경남	158	5.1	19	56.3	19.6	24.1	75.9	2.09	
	대구/경북	115	7	21.7	52.2	19.1	28.7	71.3	2.17	
	인천/경기	253	6.3	15.8	57.3	20.6	22.1	77.9	2.08	
	광주/전라	114	7	22.8	57.9	12.3	29.8	70.2	2.25	
	대전/충청	102	6.9	23.5	49	20.6	30.4	69.6	2.17	
강원	37	5.4	18.9	56.8	18.9	24.3	75.7	2.11		
본인 소득	120만원 미만	593	6.4	20.2	51.6	21.8	26.6	73.4	2.11	$\chi^2=11.341$ $p=0.253$
	120~199만원	105	1.9	18.1	61.9	18.1	20	80	2.04	
	200만원 이상	211	5.2	14.7	61.1	19	19.9	80.1	2.06	
	없음	91	4.4	22	54.9	18.7	26.4	73.6	2.12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317	8.8	25.6	47.3	18.3	34.4	65.6	2.25	$\chi^2=41.520$ $p=0$
	200~299만원	281	3.9	19.2	61.2	15.7	23.1	76.9	2.11	
	300~399만원	270	2.6	14.8	58.1	24.4	17.4	82.6	1.96	
	400만원 이상	132	6.8	11.4	53.8	28	18.2	81.8	1.97	
고향	서울	164	4.9	9.8	54.9	30.5	14.6	85.4	1.89	$\chi^2=33.403$ $p=0.042$
	경기/인천	89	6.7	24.7	46.1	22.5	31.5	68.5	2.16	
	강원	50	4	14	60	22	18	82	2	
	대전/충청	158	5.7	19	54.4	20.9	24.7	75.3	2.09	
	광주/전라	205	6.3	22.4	59	12.2	28.8	71.2	2.23	
	대구/경북	144	6.9	21.5	54.2	17.4	28.5	71.5	2.18	
	부산/울산/경남	171	3.5	19.3	56.1	21.1	22.8	77.2	2.05	
해외/이북기타	19	5.3	26.3	42.1	26.3	31.6	68.4	2.11		

<표 V-20> 청소년의 통일 관심 제고를 위한 우선순위

		사례수	부모 및 가족과의 대화	학교 교육	민간 단체의 교육	언로 기관의 보도	정부의 홍보	기타	유의도
전체		1000	10.3	47.5	5	16.2	19	2	
성별	남성	490	10.2	49.2	5.7	12.7	19.4	2.9	$\chi^2=12.629$ $p=0.027$
	여성	510	10.4	45.9	4.3	19.6	18.6	1.2	
연령	20대	216	3.2	50	3.7	23.6	18.5	0.9	$\chi^2=83.375$ $p=0$
	30대	218	5	45.9	6	17.4	23.4	2.3	
	40대	235	7.2	53.2	4.7	15.7	17	2.1	
	50대	165	18.2	40	6.1	12.7	21.8	1.2	
	60대 이상	166	22.9	45.8	4.8	9	13.9	3.6	
학력	고졸 이하	518	14.5	42.9	6	13.3	21.2	2.1	$\chi^2=54.736$ $p=0$
	전문대학	90	2.2	40	3.3	28.9	22.2	3.3	
	4년제 대학	358	7.3	54.5	4.2	17	15.9	1.1	
	대학원 이상	34	0	64.7	2.9	17.6	8.8	5.9	
직업	전문직	73	8.2	52.1	4.1	13.7	20.5	1.4	$\chi^2=82.330$ $p=0$
	공무원 및 사회단체	20	0	50	0	30	20	0	
	기업체/은행/금융업	82	9.8	58.5	6.1	6.1	17.1	2.4	
	판매/서비스직	125	8.8	36.8	8.8	16	26.4	3.2	
	생산직	48	12.5	33.3	6.3	16.7	29.2	2.1	
	농어민	59	25.4	30.5	5.1	8.5	23.7	6.8	
	학생	132	1.5	55.3	4.5	23.5	14.4	0.8	
	주부	300	12	49.7	3.7	17.7	16	1	
	무직/기타	161	11.8	47.8	5	14.9	18	2.5	
지역	서울	221	10.4	51.6	5	14.5	16.7	1.8	$\chi^2=33.608$ $p=0.297$
	부산/울산/경남	158	10.8	48.1	4.4	19.6	16.5	0.6	
	대구/경북	115	6.1	42.6	8.7	13.9	23.5	5.2	
	인천/경기	253	7.9	50.2	5.1	17	18.2	1.6	
	광주/전라	114	16.7	41.2	2.6	13.2	25.4	0.9	
	대전/충청	102	11.8	43.1	4.9	18.6	18.6	2.9	
본인 소득	강원	37	13.5	48.6	2.7	16.2	16.2	2.7	
	120만원 미만	593	10.5	48.6	3.5	16.9	18.4	2.2	$\chi^2=12.297$ $p=0.656$
	120~199만원	105	12.4	42.9	8.6	14.3	20	1.9	
	200만원 이상	211	9.5	47.4	5.7	14.2	21.3	1.9	
없음	91	8.8	46.2	8.8	18.7	16.5	1.1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317	14.8	43.5	5.7	11	22.4	2.5	$\chi^2=26.193$ $p=0.036$
	200~299만원	281	9.3	49.8	4.3	17.4	17.8	1.4	
	300~399만원	270	8.5	48.5	4.1	19.3	17.8	1.9	
	400만원 이상	132	5.3	50	6.8	19.7	15.9	2.3	
고향	서울	164	8.5	48.2	3.7	25.6	12.2	1.8	$\chi^2=55.078$ $p=0.017$
	경기/인천	89	6.7	58.4	5.6	13.5	15.7	0	
	강원	50	18	44	2	14	20	2	
	대전/충청	158	14.6	43.7	3.8	13.3	22.8	1.9	
	광주/전라	205	12.2	42	5.9	14.6	23.9	1.5	
	대구/경북	144	6.9	53.5	3.5	11.8	19.4	4.9	
	부산/울산/경남	171	7.6	49.1	7.6	17	17.5	1.2	
해외/이북/기타	19	15.8	31.6	10.5	21.1	15.8	5.3		

〈표 V-21〉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

	사 례 수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대체로 반대	매우 반대	잘 모름	종합			4점 평균	유의도	
							찬성	반대	잘 모름			
전체		1000	20.6	26.8	26.7	24.9	1	47.4	51.6	1	2.44	
성별	남성	490	23.3	24.5	24.3	27.1	0.8	47.8	51.4	0.8	2.44	$\chi^2=9.589$ p=0.048
	여성	510	18	29	29	22.7	1.2	47.1	51.8	1.2	2.43	
연령	20대	216	18.1	36.6	28.2	16.2	0.9	54.6	44.4	0.9	2.57	$\chi^2=108.422$ p=0
	30대	218	29.4	33.5	20.2	16.1	0.9	62.8	36.2	0.9	2.77	
	40대	235	23.4	23.8	29.8	21.7	1.3	47.2	51.5	1.3	2.5	
	50대	165	15.8	21.8	34.5	26.7	1.2	37.6	61.2	1.2	2.27	
학력	60대 이상	166	13.3	14.5	21.1	50.6	0.6	27.7	71.7	0.6	1.9	$\chi^2=24.814$ p=0.016
	고졸 이하	518	18	24.1	29.2	28	0.8	42.1	57.1	0.8	2.32	
	전문대학	90	17.8	30	28.9	21.1	2.2	47.8	50	2.2	2.45	
	4년제 대학	358	23.5	30.4	24	20.9	1.1	53.9	45	1.1	2.57	
직업	대학원 이상	34	38.2	20.6	11.8	29.4	0	58.8	41.2	0	2.68	$\chi^2=53.583$ p=0.01
	전문직	73	24.7	28.8	28.8	17.8	0	53.4	46.6	0	2.6	
	공무원 및 사회단체	20	15	35	20	25	5	50	45	5	2.42	
	기업체/은행/금융업	82	23.2	30.5	29.3	17.1	0	53.7	46.3	0	2.6	
	판매/서비스직	125	22.4	28	28.8	18.4	2.4	50.4	47.2	2.4	2.56	
	생산직	48	29.2	18.8	31.3	20.8	0	47.9	52.1	0	2.56	
	농어민	59	20.3	23.7	23.7	32.2	0	44.1	55.9	0	2.32	
	학생	132	18.2	39.4	25	16.7	0.8	57.6	41.7	0.8	2.6	
	주부	300	17	24	29.3	28.3	1.3	41	57.7	1.3	2.3	
지역	무직/기타	161	23	20.5	19.9	36	0.6	43.5	55.9	0.6	2.31	$\chi^2=35.477$ p=0.062
	서울	221	19.9	24	25.8	28.5	1.8	43.9	54.3	1.8	2.36	
	부산/울산/경남	158	20.3	27.8	26.6	24.7	0.6	48.1	51.3	0.6	2.44	
	대구/경북	115	17.4	31.3	26.1	24.3	0.9	48.7	50.4	0.9	2.42	
	인천/경기	253	17.8	26.9	29.2	25.7	0.4	44.7	54.9	0.4	2.37	
	광주/전라	114	35.1	28.1	20.2	14.9	1.8	63.2	35.1	1.8	2.85	
	대전/충청	102	17.6	30.4	24.5	26.5	1	48	51	1	2.4	
본인 소득	강원	37	18.9	10.8	43.2	27	0	29.7	70.3	0	2.22	$\chi^2=22.053$ p=0.037
	120만원 미만	593	18.7	26.3	27	26.8	1.2	45	53.8	1.2	2.37	
	120~199만원	105	20	33.3	30.5	16.2	0	53.3	46.7	0	2.57	
	200만원 이상	211	28.9	23.7	22.3	23.7	1.4	52.6	46	1.4	2.59	
가구 소득	없음	91	14.3	29.7	30.8	25.3	0	44	56	0	2.33	$\chi^2=21.030$ p=0.05
	200만원 미만	317	17.4	22.7	28.1	30.9	0.9	40.1	59	0.9	2.27	
	200~299만원	281	22.1	32.7	26.3	17.4	1.4	54.8	43.8	1.4	2.6	
	300~399만원	270	21.9	27	24.8	25.6	0.7	48.9	50.4	0.7	2.46	
고향	400만원 이상	132	22.7	23.5	28	25	0.8	46.2	53	0.8	2.44	$\chi^2=69.814$ p=0
	서울	164	18.3	29.9	20.7	29.9	1.2	48.2	50.6	1.2	2.37	
	경기/인천	89	19.1	23.6	32.6	22.5	2.2	42.7	55.1	2.2	2.4	
	강원	50	22	14	44	20	0	36	64	0	2.38	
	대전/충청	158	17.1	27.8	28.5	25.9	0.6	44.9	54.4	0.6	2.36	
	광주/전라	205	32.7	30.7	22.4	13.2	1	63.4	35.6	1	2.84	
	대구/경북	144	11.1	21.5	33.3	33.3	0.7	32.6	66.7	0.7	2.1	
부산/울산/경남	171	21.1	27.5	24	26.3	1.2	48.5	50.3	1.2	2.44		
해외/이북/기타	19	10.5	31.6	10.5	47.4	0	42.1	57.9	0	2.05		

<표 V-22> 한국의 반미정서

		사례수	매우 지지	대체로 지지	대체로 반대	매우 반대	종합		4점 평균	유의도
							지지	반대		
전체		1000	13.3	37	30.2	19.5	50.3	49.7	2.44	
성별	남성	490	11.8	33.9	28.8	25.5	45.7	54.3	2.32	$\chi^2=22.522$ p=0
	여성	510	14.7	40	31.6	13.7	54.7	45.3	2.56	
연령	20대	216	19.4	41.2	27.8	11.6	60.6	39.4	2.69	$\chi^2=138.743$ p=0
	30대	218	22.9	45.9	24.3	6.9	68.8	31.2	2.85	
	40대	235	9.4	39.1	32.3	19.1	48.5	51.5	2.39	
	50대	165	4.2	30.3	41.8	23.6	34.5	65.5	2.15	
	60대 이상	166	7.2	23.5	26.5	42.8	30.7	69.3	1.95	
학력	고졸 이하	518	9.8	35.3	31.3	23.6	45.2	54.8	2.31	$\chi^2=21.504$ p=0.011
	전문대학	90	18.9	40	26.7	14.4	58.9	41.1	2.63	
	4년제 대학	358	16.5	38.5	30.2	14.8	55	45	2.57	
	대학원 이상	34	17.6	38.2	23.5	20.6	55.9	44.1	2.53	
직업	전문직	73	13.7	42.5	26	17.8	56.2	43.8	2.52	$\chi^2=62.273$ p=0
	공무원 및 사회단체	20	5	35	50	10	40	60	2.35	
	기업체/은행/금융업	82	15.9	41.5	29.3	13.4	57.3	42.7	2.6	
	판매/서비스직	125	12	41.6	24.8	21.6	53.6	46.4	2.44	
	생산직	48	16.7	14.6	47.9	20.8	31.3	68.8	2.27	
	농어민	59	8.5	30.5	33.9	27.1	39	61	2.2	
	학생	132	18.2	44.7	25.8	11.4	62.9	37.1	2.7	
	주부	300	12.7	38.7	33.3	15.3	51.3	48.7	2.49	
	무직/기타	161	11.8	28.6	25.5	34.2	40.4	59.6	2.18	
지역	서울	221	10.4	31.2	31.7	26.7	41.6	58.4	2.25	$\chi^2=28.683$ p=0.052
	부산/울산/경남	158	16.5	33.5	30.4	19.6	50	50	2.47	
	대구/경북	115	13	46.1	24.3	16.5	59.1	40.9	2.56	
	인천/경기	253	15	38.3	32.8	13.8	53.4	46.6	2.55	
	광주/전라	114	14.9	44.7	25.4	14.9	59.6	40.4	2.6	
	대전/충청	102	9.8	34.3	32.4	23.5	44.1	55.9	2.3	
본인 소득	강원	37	10.8	32.4	29.7	27	43.2	56.8	2.27	$\chi^2=2.688$ p=0.975
	120만원 미만	593	13.5	37.6	30	18.9	51.1	48.9	2.46	
	120~199만원	105	16.2	33.3	32.4	18.1	49.5	50.5	2.48	
	200만원 이상	211	11.4	37.4	30.3	20.9	48.8	51.2	2.39	
가구 소득	없음	91	13.2	36.3	28.6	22	49.5	50.5	2.41	$\chi^2=12.133$ p=0.206
	200만원 미만	317	13.2	31.9	29.7	25.2	45.1	54.9	2.33	
	200~299만원	281	12.1	40.2	30.2	17.4	52.3	47.7	2.47	
	300~399만원	270	13.7	38.9	31.1	16.3	52.6	47.4	2.5	
고향	400만원 이상	132	15.2	38.6	29.5	16.7	53.8	46.2	2.52	$\chi^2=30.739$ p=0.078
	서울	164	12.2	34.8	29.3	23.8	47	53	2.35	
	경기/인천	89	12.4	39.3	29.2	19.1	51.7	48.3	2.45	
	강원	50	16	38	32	14	54	46	2.56	
	대전/충청	158	11.4	35.4	33.5	19.6	46.8	53.2	2.39	
	광주/전라	205	14.1	41.5	28.8	15.6	55.6	44.4	2.54	
	대구/경북	144	10.4	34.7	35.4	19.4	45.1	54.9	2.36	
부산/울산/경남	171	18.7	38	25.1	18.1	56.7	43.3	2.57		
해외/이북/기타	19	0	15.8	31.6	52.6	15.8	84.2	1.63		

VI

사안별 심층 분석

1. 통일관련 국제환경

가. 통일에 우호적 주변국과 한·미동맹이 통일에 미치는 영향

한·미동맹의 유지가 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 비율이 40% 가까이 나타난 현상의 의미는 한반도 통일에 가장 우호적인 나라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과 한·미동맹이 통일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교차 분석한 결과를 통해 보다 잘 이해된다. 즉 우리 국민 중에 한·미동맹이 통일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한반도 주변 4국 중 미국이 한반도 통일에 가장 우호적인 나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미동맹이 통일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서는 미국보다는 중국이 한반도의 통일에 가장 우호적인 나라로서 인식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

또한 한·미동맹이 통일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적으로 볼수록 주변 4국 중 어떠한 나라도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고 보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변 4국 중 미국을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주변국들이 한반도 통일에 대해 우호적이라고 보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록 비율은 낮지만 중국을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응답자들은 한·미동맹이 통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표 VI-1> 통일에 우호적 주변국과 한·미동맹이 통일에 미치는 영향

한반도 주변 4국 중 한반도 통일에 가장 우호적	한·미동맹이 통일에 미치는 영향				유의도
	매우 도움	대체로 도움	별로 도움 안됨	전혀 도움 안됨	
러시아	7.1	8.0	9.9	5.6	$\chi^2=71.194$ $P=0.000$
일본	3.5	4.1	3.0	5.6	
중국	8.8	16.9	17.5	18.0	
미국	40.0	27.4	11.9	9.0	
어느 나라도 한반도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	40.6	43.6	57.8	61.8	
전체 %(N)	100.0(170)	100.0(438)	100.0(303)	100.0(89)	

나. 통일에 우호적 주변국과 2010년 한국의 우호 국가

한반도 통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변국가로 하여금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고 협력하도록 하는 통일외교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물론 일본과 러시아도 우리에게서 통일추진과정에서 많은 협력을 얻어야 할 나라들이다. 따라서 향후 우리 국민이 주변 4국과의 친밀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와 그 나라들이 한반도 통일에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인식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즉 한반도 통일에 가장 우호적인 나라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과 분야별로 향후 5년 후에 가장 가까워질 주변국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과의 관계를 교차분석하였다.

교차분석 결과, 정치, 안보, 경제, 문화 분야에서 향후 5년 후 가장 가까워질 나라로서 미국을 지적한 사람들이 미국을 한반도 통일에 가장 우호적인 나라로 지적한 비율과 가장 높은 일

관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와 안보 분야에서 5년 후에 가장 가까워질 나라로서 중국을 지적한 응답자 중에서는 중국을 한반도 통일에 가장 우호적인 나라로 지적한 응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으나, 경제와 문화 분야에서 중국을 가장 가까워질 나라로서 지적한 응답자 중에서는 한반도 통일에 가장 우호적인 나라로서 미국의 비중이 중국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2> 통일에 우호적 주변국과 2010년 한국의 우호 국가: 정치 분야

한반도 주변 4국중 한반도 통일에 가장 우호적	정치 분야					유의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러시아	6.6	9.0	9.0	14.0	$\chi^2=60.163$ $P=0.000$	
일본	1.8	11.9	4.5	5.3		
중국	9.7	11.9	22.4	19.3		
미국	29.2	19.4	17.9	19.3		
어느 나라도 한반도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	52.7	47.8	46.2	42.1		
전체 %(N)	100.0(452)	100.0(67)	100.0(424)	100.0(57)		

<표 VI-3> 통일에 우호적 주변국과 2010년 한국의 우호 국가: 안보 분야

한반도 주변 4국중 한반도 통일에 가장 우호적	안보분야				유의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러시아	6.7	10.9	12.0	13.9	$\chi^2=41.559$ $P=0.000$
일본	3.4	10.9	2.6	8.3	
중국	14.3	15.2	21.5	16.7	
미국	26.7	6.5	13.1	27.8	
어느 나라도 한반도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	48.8	56.5	50.8	33.3	
전체 %(N)	100.0(727)	100.0(46)	100.0(191)	100.0(36)	

<표 VI-4> 통일에 우호적 주변국과 2010년 한국의 우호 국가: 경제 분야

한반도 주변 4국중 한반도 통일에 가장 우호적	경제분야				유의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러시아	8.6	2.9	8.1	24.1	$\chi^2=35.971$ $P=0.000$
일본	3.3	7.7	3.4	3.4	
중국	11.6	19.2	17.8	20.7	
미국	29.6	20.2	20.0	10.3	
어느 나라도 한반도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	46.8	50.0	50.8	41.4	
전체 %(N)	100.0(361)	100.0(104)	100.0(506)	100.0(29)	

<표 VI-5> 통일에 우호적 주변국과 2010년 한국의 우호 국가: 문화 분야

한반도 주변 4국중 한반도 통일에 가장 우호적	문화 분야				유의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러시아	5.9	9.0	9.3	12.0	$\chi^2=21.692$ $P=0.041$
일본	4.3	3.6	3.7	0.0	
중국	15.2	16.5	15.2	24.0	
미국	30.4	21.9	18.9	8.0	
어느 나라도 한반도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	44.1	48.9	52.8	56.0	
전체 %(N)	100.0(322)	100.0(278)	100.0(375)	100.0(25_)	

<표 VI-6> 통일에 우호적 주변국과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할 국가

한반도 주변 4국중 한반도 통일에 가장 우호적	협력관계를 유지해야할 국가				유의도
	일본	러시아	중국	미국	
러시아	2.6	28.6	9.0	7.4	$\chi^2=71.592$ $P=0.000$
일본	7.9	0.0	3.7	3.8	
중국	26.3	9.5	23.3	10.8	
미국	10.5	9.5	13.8	30.3	
어느 나라도 한반도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	52.6	52.4	50.3	47.9	
전체 %(N)	100.0(38)	100.0(21)	100.0(356)	100.0(585)	

2. 북핵문제와 반미정서

가. 북한의 핵보유 선언과 한국의 반미정서

반미정서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503명 가운데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에 대해서 위협을 느낀다는 의견과 느끼지 않는다는 의견은 252명 대 251명으로서 50 대 50으로 양분되었다. 반면 반미정서에 반대한다고 응답한 497명 중에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에 대해서 위협을 느낀다는 의견이 전체의 59.8%에 달하는 297명이었고,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는 의견은 200명으로서 전체의 40.2%에 불과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선언에 대해 위협을 느끼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는 의견이 54.9%였음을 감안할 때, 반미정서를 지지하는 경우에는 북한의 핵보유에 대해서 위협을 느낀다는 수가 줄어들었고, 반면 반미정서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위협을 느끼는 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한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반미정서가 북한의 핵보유에 대한 인식에 다소의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반미정서가 약할수록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서 한국 국민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미국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도 있다.

<표 VI-7> 북한의 핵보유 선언과 한국의 반미정서

북한의 핵보유 선언	한국의 반미정서				유의도
	매우 지지	대체로 지지	대체로 반대	매우 반대	
매우 위협 느낌	15.0	11.4	13.6	28.2	$\chi^2=50.199$ $P=0.00$
다소 위협을 느낌	30.8	40.3	43.0	36.4	
별로 위협을 느끼지 않음	28.6	34.6	32.1	21.0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음	25.6	13.8	11.3	14.4	
전체 %(N)	100.0(133)	100.0(370)	100.0(302)	100.0(195)	

나.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의 효과와 한국의 반미정서

반미정서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503명 가운데 정부의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이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었다는 의견과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의견은 320명 대 183명으로 비율로는 63.6% 대 36.4%로 나타났다. 반면 반미정서에 반대한다고 응답한 497명 중에는 정부의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이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었다는 의견이 전체의 56.7%에 달하는 282명이었고,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의견은 215명으로서 전체의 4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이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는 의견이 60.2%였음을 감안할 때, 반미정서를 지지하는 경우에는 평화적 해결 원칙이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는 수가 늘어났고, 반면 반미정서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한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반미정서가 우리 정부가 북핵문제 초기부터 견지하고 있는 평화적 해결 원칙을 보는 관점에도 다소의 영향을 미친다

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서 반미정서가 강할수록 정부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지지하는 반면, 반미정서가 약할수록 평화적 해결원칙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북핵문제의 해법을 둘러싸고 한미 간에 표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차이점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전반적인 인식에도 그대로 투영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표 VI-8>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의 효과와 한국의 반미정서

정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원칙이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정도	한국의 반미정서				유의도
	매우 지지	대체로 지지	대체로 반대	매우 반대	
매우 도움	15.8	17.0	9.6	10.8	χ ² =18.463 P=0.03
대체로 도움	48.9	46.2	49.3	42.6	
별로 도움 안됨	29.3	33.2	36.8	38.5	
전혀 도움 안됨	6.0	3.5	4.3	8.2	
전체 %(N)	100.0(133)	100.0(370)	100.0(302)	100.0(195)	

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공조의 중요성과 한국의 반미정서

반미정서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503명 가운데 정부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공조가 중요하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은 392명 대 111명으로서 비율로는 77.9% 대 22.1%로 나타났다. 반면 반미정서에 반대한다고 응답한 497명 중에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공조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의견이 전체의 85.9%에 달하는 427명이었고,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70명으로서 전체의 14.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공조의 중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의견이 81.9%였음을 감안할 때, 반미정서를 지지하는 경우에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공조가 중요하다라는 수가 줄어들었고, 반면 반미정서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한·미공조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한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반미정서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공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다소의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서, 반미정서가 강할수록 한·미공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약해졌고, 반미정서가 약할수록 한·미공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핵문제의 해법에 대한 여론이 민족공조 대 국제공조로 구분되는 점을 감안할 때, 반미정서가 강할수록 민족공조를 중시하는 경향이 높고, 반미정서가 약할수록 민족공조를 중시하는 경향이 낮아진다는 사실도 유추할 수 있다.

<표 VI-9>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공조의 중요성과 한국의 반미정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공조의 중요성	한국의 반미정서				유의도
	매우 지지	대체로 지지	대체로 반대	매우 반대	
매우 중요	35.3	29.5	43.4	63.6	$\chi^2=108.171$ $P=0.000$
대체로 중요	31.6	52.4	41.4	24.1	
별로 중요하지 않음	22.6	16.8	13.6	7.7	
전혀 중요하지 않음	10.5	1.4	1.7	4.6	
전체 %(N)	100.0(133)	100.0(370)	100.0(302)	100.0(195)	

3. 대북정책과 이념갈등¹

2002년 대선 과정 이후 한국 사회에서 나타난 사회적 갈등은 이념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것은 그 이전의 정치적 갈등이 지역주의적인 기반을 갖고 전개되었던 것과는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남남갈등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러한 이념적 대립과 갈등은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시각의 차이를 노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여론조사에서 각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자신의 이념적 성향을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이를 보수, 중도, 진보의 세 부류로 분류하고 이들 각 집단이 갖는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표 VI-10> 북한에 대한 이념별 인식

	지원 대상	협력 대상	경쟁 대상	경계 대상	적대 대상	합계(N)
진보	25.3	52.0	2.5	13.0	7.2	100.0(277)
중도	22.4	43.1	4.7	18.0	11.9	100.0(362)
보수	22.2	32.7	4.4	29.9	10.8	100.0(361)
Chi-square=44.5 p<0.01						

<표 VI-10>은 북한을 어떤 대상으로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이념성향별 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이념별 입장에 따라 북한을 바라보는 인식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진보성향을 갖는 응답자 가운데 77.3%가 북한을 지원 대상이거나 협력 대상으로 바라보는 반면, 보수성향을 지닌 응답자 가운데 그런 인식을 갖는 이들의 비율

¹ 이 부분은 다음의 분석에 의존한 것임. 강원택, “대북정책의 이념갈등 요소,”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2005. 8. 30).

은 55% 정도에 머물러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북한을 경계해야 한다는 인식은 보수성향을 갖는 집단에서는 29.9%로 나타난 반면, 진보성향을 갖는 집단에서는 그 비율이 13%에 그쳤다. 북한이 경계나 적대 대상이라는 부정적 인식은 진보성향 집단에서 20.2%인 반면, 보수성향의 집단에서는 40.7%로 그 두 배에 달한다. 그리고 중도적인 이념성향을 갖는 이들은 이 두 집단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념에 따라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 분명한 차별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즉 진보적일수록 북한에 대해 지원 대상이나 협력 대상과 같은 긍정적인 인식이 강하게 나타나는 반면, 보수적일수록 북한에 대해 경계 대상이나 적대 대상과 같은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 한 가지 언급할 점은 북한을 ‘경쟁의 대상’으로 보는 응답자의 수는 이념적 입장과 무관하게 극히 적었다. 이미 남북한간 국력의 수준 차이가 현격하게 벌어진 만큼 북한과의 경쟁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인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것은 통일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인가에 대한 시각도 이념별로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표 VI-11>에서 보는 대로, 진보적 성향을 갖는 응답자 가운데 통일이 남한 사회에 이익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응답이 62.8%로 나타난 반면, 보수적인 입장으로 갈수록 그 비율은 줄어들었다. 보수적인 성향을 갖는 이들의 견해는 이익이 될 것이라는 시각과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각각 절반으로 나뉘었지만,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조금 높았다. 이처럼 북한과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

이 우리 국민들의 이념성향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VI-11>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이념별 차이

	매우 이익 (A)	다소 이익(B)	A+B	별로 이익 안됨 (C)	전혀 이익 안됨 (D)	C+D	합계(N)
진보	27.1	35.7	62.8	27.4	9.7	37.1	100.0(277)
중도	17.1	34.0	51.1	38.4	10.5	48.5	100.0(362)
보수	16.6	32.7	49.3	38.0	12.7	50.7	100.0(361)
계	19.7	34.0	53.7	35.2	11.1	46.3	100.0(1000)
Chi-square= 19.1 p<0.01							

이번에는 이러한 특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통일은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민족적 과업이라는 주장’에 대한 이념성향별 응답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이러한 질문은 그동안 누구도 공개적으로 부인하기 어려운 통일의 규범적 당위성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표 VI-12>에서 보듯이, 이념성향별로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차이가 생겨났다.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 진보성향을 갖는 이들의 55.2%가 매우 공감을 표시했고, 전체적으로는 90% 정도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그러나 보수성향을 갖는 이들 가운데서 그 응답의 비율은 낮아진다. 보수성향 응답자들은 통일이 달성해야 할 민족적 과업이라는 데 대해 찬성한 이들은 80%가 안되는 비율에 그쳤으며, 이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20%를 넘었다. 중도 성향을 갖는 이들의 응답 비율은 대체로 진보-보수 두 집단의 사이에 놓여 있었다. <표 VI-11>과 <표 VI-12>의 결과는 이념적 입장에 따라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생겨났음을 강하게 시사

해 주며, 보수성향을 갖는 이들이 진보성향을 갖는 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통일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소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음을 알게 한다.

<표 VI-12> “통일이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민족적 과업이라는 주장”에 대한 이념성향별 응답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대체로 반대	매우 반대	합계(N)
진보	55.2	34.7	7.2	2.9	100.0(277)
중도	48.3	35.9	13.3	2.5	100.0(362)
보수	45.4	33.5	16.6	4.4	100.0(361)
Chi-square=16.6 p<0.05					

통일에 대한 이념성향별 인식의 차이를 좀 더 확인하기 위해 이번에는 통일 이후 예상되는 현상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표 VI-13>에는 모두 10개 항목으로 통일 이후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 진보, 중도, 보수성향 국민들의 응답을 정리하였다. 여기서 몇 가지 흥미로운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거의 대부분의 항목에서 이념별 입장에 따라 낙관적 평가와 비관적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교차분석 결과 9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이념별 입장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항목은 ‘국제적 위상’에 대한 것과 ‘주택 문제’ 정도였다. 나머지 8개 항목에서는 각 이념성향에 따른 시각 차이가 분명하게 구분되었다. 즉 이념성향에 따라 통일에 따른 변화를 바라보는 시각, 혹은 통일 이후의 현상에 대한 기대감에 차이가 분명하게 다르다는 사실이 <표 VI-13>에서 확인된다.

둘째, 전체적으로 볼 때 진보성향의 응답자들 가운데서는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응답이 대체로 높게 나타난 반면 보수성향의 응답자들 가운데는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응답이 높았다. 응답 항목에 따라 전반적으로 낙관과 비관의 정도는 서로 다르게 나타났지만, (주택 문제를 제외하면) 모든 항목에 걸쳐 일관된 형태로 보수성향을 갖는 응답자들로부터의 비관적 평가는 진보성향이나 중도 성향을 갖는 응답자들의 비율보다 뚜렷하게 높았다. 즉 보수성향의 응답자들은 통일 이후의 상황을 그리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낙관적 평가에 대한 차이보다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비관적 평가와 관련하여 이념적 성향에 따른 시각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특히 진보성향과 보수성향 응답자의 두 집단만을 두고 비관적 평가에 대한 차이를 보면, 국제적 위상에 대한 평가의 차이(3.9%)를 제외하면 모두 10% 이상의 응답률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그 가운데 경제 성장에 대한 시각 차이는 16.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VI-13>에 나타난 이러한 몇 가지 특성을 요약하면, 이념성향에 따라 통일 이후의 변화에 대한 평가는 분명한 차이를 갖는데 진보성향을 갖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평가가 높은 반면 보수성향을 갖는 이들 가운데 비관적인 평가가 높았다. 이러한 점은, 앞의 <표 VI-11>, <표 VI-12>에서 본 대로, 보수성향 응답자들이 통일이 남한에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소극적이고 비관적인 응답의 패턴을 나타냈던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표 VI-13> 통일 이후 예상 변화에 대한 이념별 평가

		개선	마찬가지	악화
정치 민주화	진보	42.2	27.1	30.7
	중도	37.6	25.1	37.3
	보수	34.1	23.0	42.9
	Chi-square= 10.1 p<0.05			
경제 성장	진보	57.8	10.5	31.8
	중도	43.9	9.9	46.1
	보수	42.9	9.1	47.9
	Chi-square= 20.0 p<0.01			
빈부 격차	진보	18.8	17.7	63.5
	중도	11.0	14.6	74.3
	보수	12.5	10.8	76.7
	Chi-square= 17.0 p<0.01			
물가	진보	22.4	19.1	58.5
	중도	18.2	14.6	67.1
	보수	15.5	11.9	72.6
	Chi-square= 14.2 p<0.01			
실업문제	진보	41.2	14.4	44.4
	중도	32.9	14.9	52.2
	보수	38.8	6.6	54.6
	Chi-square= 19.3 p<0.01			
지역격차	진보	24.2	15.9	59.9
	중도	15.5	15.2	69.3
	보수	18.0	11.1	70.9
	Chi-square= 13.0 p<0.05			
주택문제	진보	40.8	22.7	36.5
	중도	31.8	21.8	46.4
	보수	33.5	20.5	46.0
	Chi-square= 8.7 p<0.1			
법치문제	진보	24.2	22.7	53.1
	중도	17.1	21.0	61.9
	보수	19.4	13.3	67.3
	Chi-square= 18.3 p<0.01			
가치관 혼란	진보	15.5	16.6	67.9
	중도	11.0	11.0	77.9
	보수	12.5	7.5	80.1
	Chi-square= 17.5 p<0.01			
국제적 위상	진보	81.9	10.8	7.2
	중도	76.8	13.8	9.4
	보수	79.2	9.7	11.1
	Chi-square= 5.8 p>0.1			

통일 문제뿐만 아니라 대북정책에 대한 시각도 이념성향별로 차이가 확인된다. 이번에는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태도를 이념성향에 따라 살펴보았다. <표 VI-14>에 나타난 결과는 전반적으로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게 한다. 전체 조사자의 73%가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것은 대북정책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 이후 계속되어 온 대북화해·협력정책에 대해 점차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전반적인 합의의 분위기 속에서도 이념적 입장에 따라 대북정책에 대한 찬성의 비율은 분명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진보적 이념을 갖는 이들 가운데 80.9%가 정부의 현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으며 19.1%만이 반대 의사를 나타냈지만, 중도 이념을 갖는 이들 가운데서 찬성의 비율은 75.7%로 줄어들고 그만큼 반대의 비율이 높아졌다. 한편 보수성향의 이념집단에서는 대북정책에 공감하는 비율이 64.3%로 낮아지는 반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반대의 응답 비율은 35.7%로 나타났다.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보수성향 집단의 반대 비율은 진보성향 집단에 비해 거의 두 배 가까운 것이다. 요약하면, 전반적으로 대북정책에 대한 찬성의 비율이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념성향에 따라 분명한 시각의 차이가 확인되고 있다.

<표 VI-14>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이념별 찬성과 반대의 비율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	찬성	반대	합계(N)
진보	80.9	19.1	100.0(277)
중도	75.7	24.3	100.0(362)
보수	64.3	35.7	100.0(361)
	Chi-square=24.0 p<0.01		

대북정책에 대한 이와 같은 이념별 시각의 차이는 구체적인 대북정책의 내용에 따라 더욱 분명하게 거리감이 확인된다. <표 VI-15>는 우선 진보성향의 국민들이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준다. 네 가지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대체로 다 높게 나타났는데, 개성공단사업의 경우는 진보성향 응답자의 94.3%가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이들은 남북경협사업에 대해서는 90.9%,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해서는 88.9%가 찬성한다고 응답했지만, 대북지원정책에 대한 찬성의 비율은 81.2%로 상대적으로 조금 낮았다.

그러나 보수적인 성향을 갖는 국민들의 반응은 이들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전반적으로 대북 관련 정책에 대한 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특히 ‘매우 찬성한다’는 적극적인 지지의 비율은 더욱 낮았다. 네 가지 구체적인 정책 가운데서 특히 ‘대북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보수성향을 갖는 국민의 37.1%가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대북 퍼주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이 사안에 대한 이념별 시각 차이가 유독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수성향 집단 가운데 나머지 대북사업에 대해서도 모두 비슷한 비율로 반대 입장이 진보나 중도성향의 국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남북경협사

업에 대해서는 22.8%,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해서 22.7%, 그리고 개성공단사업에 대해서는 22.1%가 각각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표 VI-15> 구체적인 대북정책 내용에 대한 이념별 시각의 차이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대체로 반대	매우 반대	합계(N)
대북지원 정책	진보	29.2	52.0	13.0	5.8	100.0(277)
	중도	23.5	51.4	16.9	8.3	100.0(362)
	보수	15.0	47.9	26.6	10.5	100.0(361)
	Chi-square=36.7 p<0.01					
금강산 관광 사업	진보	41.2	47.7	9.0	2.2	100.0(277)
	중도	37.8	48.9	9.9	3.3	100.0(362)
	보수	24.4	52.9	15.8	6.9	100.0(361)
	Chi-square=33.9 p<0.01					
개성공단 사업	진보	47.7	46.6	4.7	1.1	100.0(277)
	중도	37.6	50.8	9.4	2.2	100.0(362)
	보수	29.1	48.8	16.6	5.5	100.0(361)
	Chi-square=48.3 p<0.01					
남북경협 사업	진보	45.8	45.1	7.9	1.1	100.0(277)
	중도	35.6	51.9	10.5	1.9	100.0(362)
	보수	29.9	47.4	17.5	5.3	100.0(361)
	Chi-square=36.9 p<0.01					

이러한 시각의 차이는 아래의 <표 VI-16>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된다. 대북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진보적인 성향을 갖는 이들 가운데 다수는 국민적 합의의 부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들었고 그 다음으로 투명성 결여를 문제점으로 꼽았다.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부족’이라는 응답은 사실 이념과 무관하게 대체로 높은 응답이 나왔지만 특히 진보성향의 응답자들 가운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는 달리 보수적인 성향의 응답자들의 다수는 과도한 지원, 곧 ‘퍼주기 지원’을 문제로 삼았다. 이것은 앞의 <표 VI-15>에서 발견한 대로 보수성향 국민들 가운데 대북지원에 대한 거부감이 높았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응답이다. 진보적 성향을 갖는 이들이 대북정책에 대해 대북지원이나 정부의 정책 기조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합의 구축이나 투명성 제고 등 정책형성 절차와 집행과정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면, 보수성향의 국민들의 대북지원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VI-16> 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한 이념별 응답

이념	현 정부의 대북정책 중 가장 큰 문제점						합계(N)
	안보 소홀	과도한 지원	정책의 투명성 부족	국민합의 부족	한·미공조 부족	기타	
진보	11.9	18.1	24.2	31.4	11.2	3.2	100.0(277)
중도	14.9	26.2	23.5	26.0	7.2	2.2	100.0(362)
보수	12.7	31.9	19.9	23.0	9.4	3.0	100.0(361)
Chi-square = 22.06 p<0.05							

이러한 시각 차이는 자연히 북한 핵문제와 대북사업의 연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낳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북한 핵문제가 악화될 경우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사업, 대북지원 등’ 대북사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의 응답 패턴에 대해 살펴보았다. <표 VI-17>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이념성향별로 분명한 시각의 차이가 나타났다. 보수적인 성향을 갖는 이들은 대북사업의 규모 축소나 전면 중단을 요구한 응답이 많았던 반면 진보

적인 성향을 갖는 응답자 가운데 대북사업을 그대로 지속하거나 오히려 사업 규모를 확대하라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보수적인 성향을 갖는 이들 가운데 북한 핵문제에 따른 대북사업의 향방에 대해서 단순한 규모 축소보다 전면 중단하라는 응답의 비율이 <표 VI-17>에 포함된 세 문항 모두에서 보다 높게 나온 것도 무척 흥미롭다. 즉 보수적이면서 동시에 대북사업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이들 가운데는 단순한 사업 규모의 축소보다 ‘아예 그만두라’는 강경한 시각을 갖는 이들이 상당수 된다는 사실을 시사해 준다. 보수성향의 응답자들 가운데 대북지원에 대해서 60.7%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는데 그 가운데 31.3%는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진보적 성향의 응답자 가운데 그러한 응답을 한 이들의 비율은 45.8%였다. 한편 보수성향의 응답자들은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해서도 54%가 축소하거나 중단해야 한다고 했는데 30.5%는 전면 중단을 주장했다. 개성공단사업에 대해서는 보수성향 응답자들 가운데 축소하거나 중단하라는 비율은 49.9%였는데, 다른 항목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28%는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를 통해 대북사업에 대한 보수성향 집단의 강한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

<표 VI-17> 북한 핵문제와 대북사업의 연계에 대한
이념 집단별 인식의 차이

		규모 확대	그대로 지속	규모 축소	전면 중단	합계
금강산 관광 사업	진보	12.6	48.4	19.9	19.1	100.0(277)
	중도	9.7	41.2	20.7	28.5	100.0(362)
	보수	6.6	39.3	23.5	30.5	100.0(361)
	Chi-square=18.7 p<0.01					
개성공단 사업	진보	14.1	52.3	17.7	15.9	100.0(277)
	중도	11.9	41.7	20.4	26.0	100.0(362)
	보수	7.8	42.4	21.9	28.0	100.0(361)
	Chi-square=22.8 p<0.01					
대북지원	진보	9.4	44.8	27.4	18.4	100.0(277)
	중도	7.2	38.4	25.7	28.7	100.0(362)
	보수	3.6	35.7	29.4	31.3	100.0(361)
	Chi-square=23.2 p<0.01					

대북정책에 대한 이러한 시각 차이는 대북정책 추진에 대한 소외감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표 VI-18>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의 의견이 정부의 통일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도 이념성향별로 차이가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정책 과정에서 국민들의 소외감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특히 앞의 여러 표에서 확인된 대로 현 대북정책이나 대북지원 방식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보수성향의 응답자들 가운데서 통일 정책에 대한 소외감의 정도는 보다 높게 나타났다. 보수성향을 갖는 이들 가운데 16.6%는 의견이 정책과정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별로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응답까지 합치면 68.4%, 즉 보수성향의 응답자 3명 가운데 2명은 국민의 의견이 통일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느끼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보수성향 집단이 대북정책에 대해 지니고 있는 불만감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지표가 된다고 생각된다. 반면 진보성향의 응답자 가운데 의견이 정책과정에서 ‘반영된다’는 응답과 ‘반영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대체로 각각 절반 정도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18> “국민의 의견이 정부 통일정책에 반영되느냐”에 대한 이념별 응답률

국민의 의견이 통일 정책에	매우 많이 반영	대체로 반영	별로 반영 안됨	전혀 반영 안됨	합계(N)
진보	7.6	39.4	42.6	10.5	100.0(277)
중도	5.8	35.4	46.7	12.2	100.0(362)
보수	5.3	26.3	51.8	16.6	100.0(361)
Chi-square=18.2 p<0.01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보수와 진보성향을 갖는 두 집단간 대북정책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여러 가지 점에서 확연하게 확인되는 것은, 대북정책 혹은 북한을 바라보는 인식이 우리 사회의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성향의 차이를 만들어 내는 매우 중요한 한 변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서구 정치에서 나타나는 보수·진보가 계급 정치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부각되고 있는 보수와 진보 집단간의 이념 갈등의 기반에는 북한에 대한 태도, 대북정책 등과 같은 과거 냉전 시대의 역사적 유산이 이념성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본 대로, 보수성향을 갖는 이들은 대북지원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이고, 북한에 대해서도 적대적이며 통일에 대해서도 비교적

비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또한 보수성향 집단 가운데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갖거나 소외감을 느끼는 이들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진보적인 성향을 갖는 이들에게서는 이와는 정반대의 태도가 확인된다.

대북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보다 통합적인 형태로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진보성향 집단과 보수성향 집단의 의견이 확연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중도적인 성향을 갖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대북정책을 둘러싼 여론의 형성과 흐름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4. 국민적 합의형성

가. 통일미래상에 대한 전망

통일은 장기간에 걸친 복잡한 과정이다. 통일에 이르는 과정은 남북한의 대내적 조건, 남북관계의 진전 정도, 국제적 상황 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통일 후 체제통합은 이질적인 남북한을 동일한 목표와 틀에 입각하여 부문별로 조정하는 복잡한 과정이다. 통일한국의 미래상은 통일당시의 대내외적 상황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통일 이전에 미래상에 대해서 논의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미래상을 논의하는 것은 중요한 의

미를 지닌다. 남북한은 체제의 정당성과 통일의 미래상을 둘러싸고 경쟁하고 있다. 남북한은 각기 대내적 체제건설을 통해서 상대방에 대한 우위를 주장하는 동시에 자기 체제가 통일한국의 미래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통일한국의 미래상에 대한 논의는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또한 통일미래상에 대한 논의는 통일한국의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통일한국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통일한국의 청사진이 제시됨으로써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형성될 수 있다. 아울러 통일한국의 미래상이 제시됨으로써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담해야 할 비용과 대가에 대한 준비도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통일한국의 미래상 제시를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되어야 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즉 남북한 각각의 내부적 측면에서 그리고 남북관계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과제를 제시한다.

또한 통일한국의 미래상은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다양한 입장을 지니고 있으며, 통일한국의 대외정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지니고 있다. 통일과정에서 주변 국가들의 협력을 얻고 통일 후 주변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통일의 미래상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 통일미래상과 관련하여 통일 후 각 분야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통일 후 분야별 전망은

통일의 구체적인 실상에 대한 것이다. 통일은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을 수반한다. 통일 후 각 분야별 미래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통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통일 후 체제통합을 이루기 위한 기초 작업이다. 특히 통일 후 예상되는 우려사항을 파악함으로써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은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사항이다.

통일미래상에 관한 국민여론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2005년의 조사결과를 2003년과 1992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였다.² 두 개의 조사는 동일 문항에 대해서 동일기관에 의해 13년의 기간을 두고 행해졌기 때문에 비교분석을 위한 적실성을 지니고 있다. 지난 13년 동안 국제환경, 남북관계, 남북한의 대내적 상황 등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통일미래상에 대한 국민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는 일은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1) 통일 후 분야별 전망: 개관

독일은 통일을 달성함으로써 2차 대전의 유산을 극복하고 유럽의 중추국가로 거듭 태어났다. 독일 통일에 대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독일 통일 후 지난 15년 동안 여러 분야에서 통일후유증이 나타난 것도 사실이다. 구서독 주민들은 경제성장의 둔화, 실업증가, 주택난, 세금증가 등 통일로 인해 자신들의 기득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² 최수영 외, 『1999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서울: 통일연구원, 1999); 최진욱 외, 『남북관계의 진전과 국내적 영향』 (서울: 통일연구원, 2003) 참조.

있다. 과거의 동독 주민들도 가치관 혼란, 실업, 상대적 열등의식, 사회적 신분상승 기회의 제약 등으로 시달리고 있다.

남북한의 통일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공유하고 있다. 통일은 단일 민족국가의 달성이라는 당위적 측면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통일은 남북한 통합으로 인한 시장확대와 북한지역에 대한 투자효과, 남한의 자본 및 기술과 북한지역의 노동력 및 자원의 결합, 동북아지역과 통일한국의 경제적 통합 등 경제적 실리를 지니고 있다. 또한 통일은 분단으로 인한 정치적 질곡과 이념적 제약을 완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통일은 국제적으로 위상을 제고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활동영역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한편 통일은 장미빛 미래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가지 문제를 수반할 수 있다. 통일에 대해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경제적 효과에 못지않게 경제적 비용이 막대하다는 것이다. 경제적 통합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통일한국의 경제적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경제통합과정에서 실업, 물가 인상, 투자 저하, 생산성 하락, 재정적자 증가 등의 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정치적으로도 남북한의 정치적 통합과정에서 권력구조, 중앙과 지방의 권력분배, 정치엘리트 층위 등과 관련하여 정치적 갈등이 첨예화될 수 있다. 그리고 통일 후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계층갈등, 지역갈등, 세대갈등, 청소년문제, 범죄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통일 후 각 분야별 실상에 대한 전망은 통일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통일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대한 인식이 통일 접근방식에 대해 영향을 미치

기 때문이다. 통일의 긍정적 측면이 부정적 측면을 상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통일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통일의 효과를 극대화하기를 희망한다. 반면 통일의 부정적 측면을 우려하는 사람들은 통일이 점진적으로 충격을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여긴다. 이러한 측면에서 통일 후 분야별 전망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는 것은 통일 후 역점을 두어야 할 분야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된다.

통일한국의 구체적 모습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분야의 핵심적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정치 분야에 대해서는 민주화 전망에 대해서 그리고 경제분야에 대해서는 경제성장, 주택문제, 물가, 실업, 지역격차, 빈부격차 등을, 사회분야에 대해서는 가치관 혼란, 법치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그리고 포괄적인 측면에서 통일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관해 질문하였다.

2005년 조사결과를 2003년과 1992년의 조사결과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한 ‘국제적 위상’ 항목을 제외하고 9가지의 동일한 질문을 한 2003년의 경우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경제성장’(48.2%)과 ‘민주화’(40.7%)에 대해서는 통일 후 다소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반면 ‘가치관 혼란’(75.7%), ‘빈부격차’(71.5%), ‘물가’(65.8%), ‘지역격차’(62.8%), ‘법치문제’(58.1%), ‘실업’(56.4%), ‘주택문제’(42.9%) 등은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³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2003년보다 2005년의 경우에 통일

³ 최진욱 외, 『남북관계의 진전과 국내적 영향』 (서울: 통일연구원, 2003), pp. 202~203 참조.

이후 전망에 대한 기대치는 낮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선 긍정적으로 응답한 경제성장과 정치적 민주화의 경우에도 2003년보다 2005년에 각각 48.2%→47.4%, 40.7%→37.6%로 낮아졌다. 또한 부정적으로 평가한 다른 항목에서도 2005년이 2003년보다 높게(‘가치관 혼란’ 75.7%→75.9%, ‘빈부격차’ 71.5%→72.2%, ‘물가’ 65.8%→66.7%, ‘지역격차’ 62.8%→67.3%, ‘법치문제’ 58.1%→61.4%, ‘주택문제’ 42.9%→43.5%) 나타났다. 다만 ‘실업’(56.4%→50.9%)의 경우 다른 부정적인 항목과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큰 비율로 부정적인 평가가 줄어들었다. 2년 전과 비교할 때 경제성장과 민주화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치가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실업문제를 제외하고는 경제문제와 사회질서 전반에 걸쳐 부정적 전망을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우려도가 훨씬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⁴

2005년의 결과를 1992년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92년에는 금년과 2003년에 조사한 ‘법치문제’란 항목대신에 ‘범죄문제’를 조사항목으로 하였다. 1992년의 조사결과 통일 이후 개선될 것이라는 분야는 ‘경제성장’(66.4%), ‘민주화’(64.3%), ‘주택문제’(43.2%) 등이었으며, 통일 이후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분야는 ‘가치관 혼란’(61%), ‘범죄문제’(54.9%), ‘물가’(45.6%), ‘실업’(41.9%), ‘지역격차’(41.5%), ‘빈부격차’(40.8%) 등이었다.

이를 살펴보면 2005년의 경우 1992년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항목이 3개(‘경제성장’, ‘민주화’, ‘주택문제’)에서 2개(‘경제성장’, ‘민주화’)로 줄어들었으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항목의 경우에도 응답률이 크게 줄어들었고(‘경제성장’의 경우 66.4%

⁴ 위의 책, pp. 202~203 참조.

→47.4%, ‘민주화’의 경우 64.3%→37.6%), 반면 부정적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부정적인 응답률이 모든 분야에 걸쳐 크게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가치관 혼란’ 61%→75.9%, ‘빈부격차’ 40.8%→72.2%, ‘물가’ 45.6%→66.7%, ‘지역격차’ 41.5%→67.3%, ‘법치문제·범죄문제’ 54.9%→61.4%, ‘실업문제’ 41.9%→50.9%로 증가하였다. 1992년에 긍정적으로 평가한 ‘주택문제’의 경우에도 당시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27.5%였으나 2005년에는 43.5%로 나타나 부정적인 응답률이 크게 증가하였다. 결국 13년 전에 비하여 현재 통일 이후 한국의 사회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전 분야에 걸쳐 줄어들었고, 악화될 것으로 평가한 분야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비율이 크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⁵

한편 통일 후 분야별 전망에 대한 전체적 평균치를 알아보기 위해서 각 문항별로 ‘크게 악화될 것이다’는 응답에 1점을 부여하고 ‘크게 개선될 것이다’는 응답에 5점을 부여하는 변량분석(ANOVA)을 하였으며, 그 결과와 이를 2003년 및 1992년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5년 조사결과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 ‘국제적 위상’(3.98), ‘경제성장’(3.06), ‘정치적 민주화’(2.99), ‘주택문제’(2.86), ‘실업문제’(2.77) 등에 대해서는 5점 만점의 중간치 이상의 평가가 나온 반면, ‘법치문제’(2.44), ‘물가’(2.37), ‘지역격차’(2.31), ‘가치관 혼란’(2.15), ‘빈부격차’(2.14) 등 5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5점 만점의 중간치 이하의 평가가 나왔다.

2005년 변량분석 결과를 2003년 변량분석 결과와 비교해 보면

⁵ 위의 책, pp. 202~203 참조.

통일전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제적 위상’을 제외한 2003년 조사결과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 ‘민주화’(3.12), ‘경제성장’(3.11), ‘주택문제’(2.88), ‘실업’(2.63), ‘법치문제’(2.53) 등 5개 항목에 대해서 5점 만점의 중간치 이상의 평가가 나온 반면, 중간치 이하의 평가를 받은 항목은 ‘물가’(2.41), ‘지역격차’(2.39), ‘빈부격차’(2.16), ‘가치관 혼란’(2.15) 등 4개 항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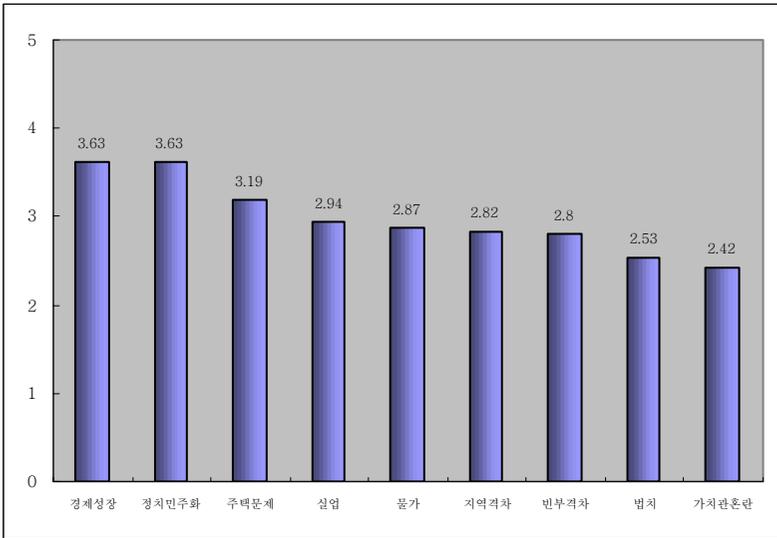
2005년의 경우 법치항목이 중간치 이하로 추가되었으며, 중간치 이하로 평가된 각 항목에 있어서도 2005년의 조사결과가 2003년 것 보다 낮게 평가되었다. ‘물가’의 경우 2.41→2.37, ‘지역격차’의 경우 2.39→2.31, ‘빈부격차’의 경우 2.16→2.14와 같이 2005년이 낮게 평가되었으며, 다만 ‘가치관 혼란’의 경우에는 2.15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또한 중간치 이상으로 평가된 항목에서도 2005년의 조사결과가 2003년보다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경제성장’의 경우 3.11→3.06, ‘정치적 민주화’의 경우 3.12→2.99, ‘주택문제’의 경우 2.88→2.86으로 변화되었으며, 다만 ‘실업문제’의 경우 2.63→2.77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2005년의 변량분석 결과를 1992년의 변량분석 결과와 비교해 보면 13년 후인 현재 통일전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크게 높아졌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다. 1992년 조사결과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 ‘정치적 민주화’(3.63), ‘경제성장’(3.63), ‘주택문제’(3.19), ‘실업’(2.94), ‘물가’(2.87), ‘지역격차’(2.82), ‘빈부격차’(2.80) 등 7개 항목에 대해서 5점 만점의 중간치 이상의 평가가 나온 반면, 다만 2가지 항목인 ‘범죄문제’(2.53), ‘가치관 혼란’(2.42)만이 중간치 이하의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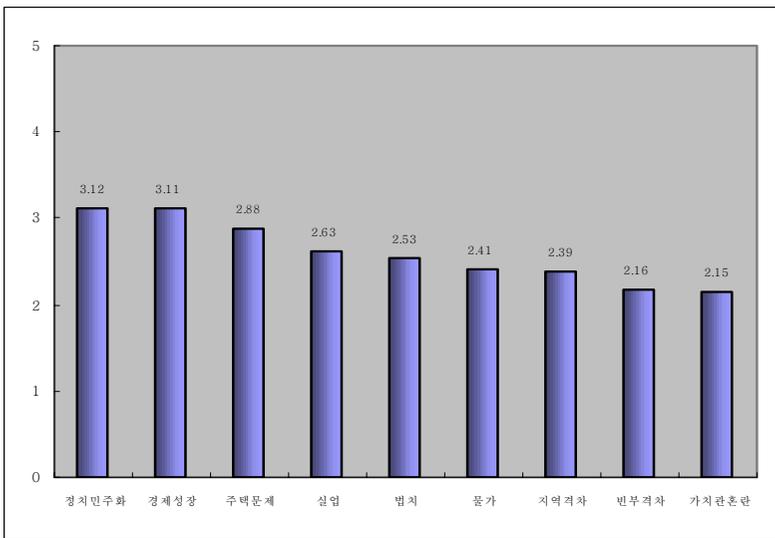
후인 현재 국민들이 통일 이후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항목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목별로도 평가점수가 상당히 낮아졌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정치적 민주화’의 경우 3.63→2.99, ‘경제성장’의 경우 3.63→3.06, ‘주택문제’의 경우 3.19→2.86, ‘실업’의 경우 2.94→2.77, ‘물가’의 경우 2.87→2.37, ‘지역격차’의 경우 2.82→2.31, ‘빈부격차’의 경우 2.80→2.14, ‘법치문제·범죄문제’의 경우 2.53→2.44, ‘가치관혼란’의 경우 2.42→2.15로 2005년의 평가결과가 각각 낮아졌다.

이와 같이 13년 전과 2년 전에 비하여 통일 이후 전망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가 낮아진 현실은 국민들이 그동안 통일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통일후유증에 대해서 현실적인 인식을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일 이후 독일이 겪고 있는 경제 및 사회분야에서의 어려움에 학습효과, 북한의 경제난 지속, 통일 당시 동독경제에 비하여 북한의 경제가 비할 수 없이 낙후된 점, 통일 당시의 서독 경제력과 남한의 경제력 비교, 동서독과 남북한 간의 인구비교 등의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통일 이후 우리의 상황이 독일의 상황보다 더욱 나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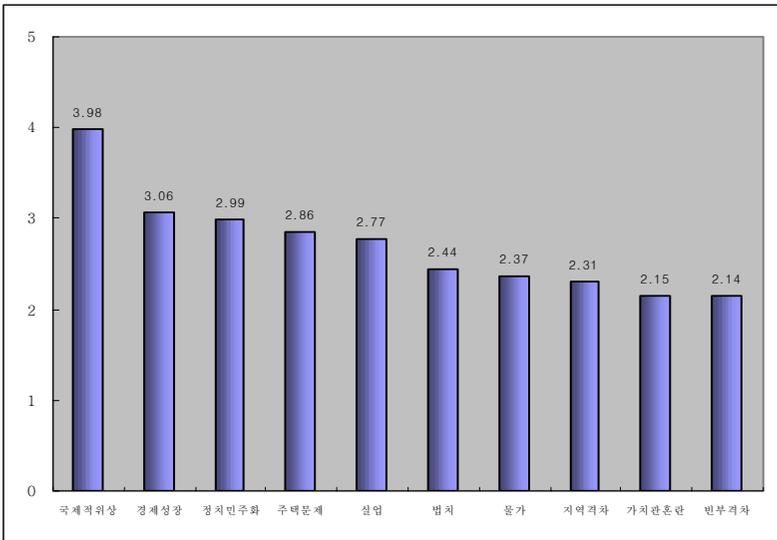
<그림 VI-1> 통일 후 분야별 전망 변량분석(ANOVA): 1992년 조사



<그림 VI-2> 통일 후 분야별 전망 변량분석(ANOVA): 2003년 조사



<그림 VI-3> 통일 후 분야별 전망 변량분석(ANOVA): 2005년 조사



(2) 통일 후 분야별 전망

(가) 정치적 민주화

한반도의 분단과 한국정치의 권위주의의 현상 및 냉전적 정치 문화는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1980년대까지 한국의 권위주의체제는 북한과의 이념적 대결을 이유로 진보적 세력 및 친사회주의적 세력의 정치활동을 엄격하게 제약했다. 권위주의체제는 분단체제를 이용하여 국내 정치적으로 억압구조와 통제장치를 가동하였다. 그 결과 분단체제의 고착화로 인해서 냉전적 사고방식과 관행이 사회 각 부분에 폭 넓게 자리잡았다. 이런 점에서 민주화세력들은 권위주의체제의 민주화와 통일을 동일한 맥락에서 접근하였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통일이 달성되면, 권위주의적 통치방식과 냉전적 정치문화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던 분단체제가 해체됨으로써 민주화가 촉진 될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이 반드시 정치적 민주화에 순기능적인 역할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 통일 후 권력구조,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 갈등의 해결방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첨예화되고 국론이 분열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각종 사회적 갈등이 제도화된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양한 형태와 방법을 통한 이해관계의 표명으로 사회적 통합이 저해될 수 있다. 특히 정치적 통합과정에서 특정지역이 정치적으로 소외되거나 경제적 혜택이 불공평하게 분배된다고 판단될 경우, 정치적 불만은 증폭될 수 있다. 독일에서도 통일 후 사회적 혼란으로 말미암아 신나치운동과 인종차별주의운동 등의 극우세력이 등장하는 등 정치적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통일 후 정치적 민주화가 진전될 것이라는 의견(37.6%)과 악화될 것이라는 의견(37.5%)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 것은 이러한 기대감과 우려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를 1992년과 2003년의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이 급격히 줄어들고(64.3%→40.7%→37.6%), 반면 악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급격히 늘어난 것(18.9%→32.7%→37.5%)을 알 수 있다(<표 VI-19> 참조). 여기에는 남북관계가 활성화 되고 민간사회단체의 정치적 의견 표현이 자유롭게 됨에 따라 최근 적극적으로 표출된 남남갈등이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VI-19> 통일 후 정치적 민주화에 대한 전망: 연도별 비교
(단위: %)

	개선	마찬가지	악화
2005	37.6	24.9	37.5
2003	40.7	26.5	32.7
1992	64.3	16.8	18.9

한편 통일 후 정치적 민주화에 대한 전망을 배경변수별로 변량분석 해 보면 학력이 높고 기업체·은행·금융업의 종사자, 본인소득 200만원 이상의 사람들이 민주화에 대한 기대치를 상대적으로 높게 표명하였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집단이 한국의 중산층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의 중산층이 대체로 통일 후 민주화에 대해서 희망적인 견해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도 민주화의 전망을 높게 평가하여, 통일에 대한 젊은 세대의 긍정적인 기대감을 나타냈다(<표 V-6> 참조).

(나) 경제성장

국민들은 한반도 통일이 통일한국의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통일이 될 경우 시장이 확대되어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고, 남한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노동력·토지·자원이 결합됨으로써 경제의 시너지효과가 창출되어 새로운 경제도약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통일 후 북한지역 경제재건으로 인해 경제특수가 발생할 것에 대한 기대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고려에 의해 통일 후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47.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가 악화될 것으

로 전망하는 평가도 42.8%에 이르고 있어 주목된다. 현재 한국의 경제가 IMF체제를 완전히 극복하였다고 자평하기 어려운 현실, 북한의 경제가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통일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크게 호전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전망, 동서독과 남북한의 경제력 및 경제수준 비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통일 후의 경제상황에 대하여 낙관적으로만 평가할 수 없다는 심리가 반영된 결과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1992년 66.4% 달하던 경제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IMF체제를 거치면서 2003년 48.2%로 하강 곡선을 보였고, 2005년에는 이보다 약간 낮은 47.4%를 보인 설문조사결과 간의 비교에서도 알 수 있다(<표 VI-20 > 참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우려보다 일관되게 높게 나타난 것은 통일이 수반할 경제적 성장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VI-20> 통일 후 경제성장에 대한 전망: 연도별 비교
(단위: %)

	개선	마찬가지	악화
2005	47.4	9.8	42.8
2003	48.2	10.9	40.9
1992	66.4	11.5	22.1

한편 통일 후 경제성장 전망을 배경변수별로 변량분석한 결과 남성, 20~30대의 젊은층, 대졸 이상자, 기업체·은행·금융업 종사자, 해외·이북·기타지역이 고향인 사람 가운데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높게 나타났다(<표 V-7> 참조).

(다) 빈부격차

통일 후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기타의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우려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빈부격차’ 72.2%, ‘물가’ 66.7%, ‘실업’ 50.9%, ‘지역격차’ 67.3%, ‘주택문제’ 43.5%의 비율로 악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개선될 것이란 의견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이다.

그 중에서 특히 통일 후 빈부격차의 항목에서 악화될 것이란 의견이 상대적으로 월등하게 높게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개선될 것이란 응답은 13.7%에 머물렀다. 특히 1992년과 비교할 때 2005년의 빈부격차가 개선될 것이란 의견 13.7%는 1992년 27.4%의 반에 불과하다.

<표 VI-21> 통일 후 빈부격차에 대한 전망: 연도별 비교 (단위: %)

	개선	마찬가지	악화
2005	13.7	14.1	72.2
2003	13.0	15.5	71.5
1992	27.4	31.7	40.8

이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나타난 북한 경제난의 심화에 따라 통일 후 남북주민 간에 빈부격차가 크게 나타날 것이란 전망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물론 여기에는 통일이 경제적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회가 오히려 빈부격차를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결과이기도 하다. 통일이라는 기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부의 증식과 새로운 일자리를 얻은 사람과 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사람간의 경제적 격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통일 후 빈부격차문제는 계층갈등과 관련되어 있다. 남한의 기업가들은 통일로 인한 양질의 노동력 및 자원의 확보, 새로운 시장의 등장, 북한지역 경제건설의 특수 등을 새로운 기회로 인식할 것이다. 남한의 노동계층은 북한지역으로부터 대량의 노동자층의 유입으로 인하여 북한지역의 노동자들과 경쟁해야 하며 임금협상을 포함한 자본가와와의 협상에서 노동시장의 풍부로 통일 전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다. 또한 남한의 노동자계층은 주택난, 실업, 물가인상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직접 피부로 느끼게 될 것이다.

북한지역의 노동자·농민들도 통일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서 통일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인식하게 될 것이다. 북한지역의 저소득층은 소비제품의 대량공급과 경제적 수준의 향상 기회에도 불구하고 실업과 인플레이션, 주택난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통일의 결과가 모두에게 동등하게 분배되는 것은 아니라는 현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특히 북한의 국영기업노동자 가운데 다수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지역의 체제전환과정에서 시장경제질서의 원리에 재빠르게 적응하여 부를 축적하거나 남한지역의 친인척 및 연고관계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한 사람들은 북한지역의 새로운 상류계층으로 등장할 것이다. 반면 북한의 노동당간부, 군장교, 고급관료 등 기득권 계층들은 통일 후 신분격하와 생활수준 저하를 경험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좌절감을 느낄 것이다.⁶

⁶ 서재진 “통일한국의 계급문제: 통일이 북한주민의 직업적 위신의 변화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통일한국의 새로운 이념과 질서의 모색』, 한국정치학회 제3회 한국정치세계화학회 (한국정치학회, 1993), pp. 134~135 참조

통일 후 빈부격차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 여성, 50대 및 60대 이상, 무직·기타와 농어민, 본인소득이 없거나 가구소득이 낮은 자가 빈부격차에 대해서 우려를 높게 보였다. 즉 경제적 활동의 기회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여성, 경제적 활동에 대한 경쟁력이 낮은 노년층 그리고 저소득층이 통일 후 빈부격차를 더욱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V-8> 참조).

(라) 물가

통일 후 물가에 대한 우려도 높게 나타났다. 통일 후 물가가 ‘악화’(66.7%)될 것이라는 전망이 ‘마찬가지’(14.9%)나 ‘개선’(18.4%)될 것이라는 전망보다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다. 통일 후 북한 지역 경제 재건과 생필품의 소요 증대, 사회복지비용의 증가로 인해서 재정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물가가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재정지출과 외국의 투자 및 차관 도입 등으로 유동성 자금이 증가하게 되면 이를 활용해서 부동산투자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어 역시 물가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독일도 통일 후 물가인상과 이로 인한 실질 생활수준의 악화를 경험하였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통일 후 물가인상에 대한 우려는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1992년 33.5%에 달했던 물가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은 2003년, 2005년 각각 18.2%, 18.4%로 크게 낮아졌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의 경제난 심화와 향후 전망에 대한 불투명, 한국의 IMF체제 경험 등이 반영된 영향이라 할 것이다.

<표 VI-22> 통일 후 물가에 대한 전망: 연도별 비교

(단위: %)

	개선	마찬가지	악화
2005	18.4	14.9	66.7
2003	18.2	16.1	65.8
1992	33.5	20.8	45.6

통일 후 물가상황에 대해 배경변수별로 변량분석한 결과 남성보다 경제활동에 민감한 여성이, 직업별로는 주부가 물가인상에 대한 우려를 높게 표명했다. 그러나 연령, 학력, 직업, 도시규모, 소득 등을 불문하고 전반적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고르게 높게 나타나고 있음이 주목된다(<표 V-9> 참조).

(마) 실업문제

통일 후 실업문제도 우려되고 있다. 통일 후 실업이 ‘악화’(50.9%) 될 것이라는 견해가 ‘마찬가지’(11.8%)나 ‘개선’(37.3%)될 것이라는 견해보다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문제에 대해서는 빈부격차나 물가보다 우려하는 정도가 낮다. 통일 후 북한지역 노동력의 유입으로 인해서 취업기회가 줄어들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통일 후 경제재건을 위한 투자로 인해 고용기회가 증가하는 측면도 있다는 고려가 작용한 것이라 판단된다.

다만 남북한 경제통합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경제성장이 둔화되면 고용기회가 줄어들지 않을 수 없어 전반적으로 실업은 증가할 것이란 판단에서 개선보다는 악화에 더 많은 평가를 내렸다. 물론 여기에는 독일이 통일 후 겪고 있는 실업증가의 현실도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실업문제에 대해 2003년 32.0%였던 개선에 대한 전망이 2005년

37.3%로 증가한 것은 최근 우리 경제의 회복세에 기인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실업문제에 대해 배경변수별로 변량분석해 보면 직업별로는 생산직이, 도시규모별로는 읍면보다 중소 및 대도시 거주자가 실업문제를 우려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만 가구소득별로 볼 때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실업문제를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한 것이 특이하다(<표 V-10> 참조).

<표 VI-23> 통일 후 실업문제에 대한 전망: 연도별 비교

(단위: %)

	개선	마찬가지	악화
2005	37.3	11.8	50.9
2003	32.0	11.6	56.4
1992	40.4	17.6	41.9

(바) 지역격차

통일 후 지역격차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 후 지역격차가 악화될 것이란 견해가 67.3%로 나타난 반면, 개선될 것이라는 견해는 18.8%에 불과하였다. 또한 지역격차에 대해 1992년 31.2%였던 개선될 것이란 의견이 2003년 18.5%, 2005년 18.8%로 낮아진 것은 북한이 경제난을 겪고 있으며, 회생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 할 것이다.

<표 VI-24> 통일 후 지역격차에 대한 전망: 연도별 비교

(단위: %)

	개선	마찬가지	악화
2005	18.8	13.9	67.3
2003	18.5	18.8	62.8
1992	31.2	27.3	41.5

독일의 경우 통일 후 구 서독주민을 지칭하는 “아니꼬운 있는자”를 의미하는 “베시스”(Wessis)라는 용어와 구 동독주민을 지칭하는 “못사는 촌뜨기”를 의미하는 “오시스”(Ossis)라는 용어가 동서독주민 간에 서로 경멸적으로 사용된 사실은 양쪽 주민들 간의 심리적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동서독지역 간의 갈등은 심리적 차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동서독지역 주민간의 소득격차, 동독 5개주의 미약한 재정자립도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⁷

우리의 경우 통일 이전에 존재하는 남한지역에서의 영·호남 갈등과 북한지역에서의 함경도·평안도간 갈등에 통일 이후에는 남북갈등이 더하여져 통일 후 심리적 불만, 정치·경제적 혼란, 정체성 상실 등으로 인해 생긴 불만이 다양한 지역갈등으로 표출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남북지역간 극단적인 지역갈등으로 집약적인 형태로 표출될 수도 있다.

남한지역 주민들은 통일 후 세금부담이 가중되고 사회질서가 혼란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북한지역 주민들은 시장경제에 적응하는 어려움, 개인주의 및 성과주의

⁷ Stephan Eisel, “The Politics of United Germany,” *Daedalus*, Vol. 123 No. 1 (Winter 1994), pp. 160~161.

원칙에 대한 이질감, 북한지역 주민 전체가 이등국민으로 몰락함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심한 정체성위기에 시달릴 것이다.

남북간 갈등은 심리적 차원에서의 박탈감이나 지역정서적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일 후 경제발전정책,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권한배분, 엘리트층원, 분배정책 등과 관련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형성될 것이다. 남북간 지역갈등은 이념갈등과 정책갈등요인을 내포하고, 통일 후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가치의 배분과 관련하여 갈등의 총체적 표출이란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또한 지역갈등은 남한지역과 북한지역을 단일지역으로 하여 발생하기보다는 남북한을 횡단하여 다층화된 양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북한지역 내에서도 통일 전 개혁정책의 혜택을 많이 입었던 해안지역 및 경제특구지역의 주민과 경제개혁의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내륙지방 주민들 간에 정치의식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통일 후 북한 경제체제의 전환 및 투자과정에서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경제발전정책이 실시될 경우 발전정책에서 소외된 지역에서 불만은 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다.

통일 후 지역격차에 대한 전망을 배경변수별로 변량분석한 결과 직업별로 판매·서비스직 종사자, 가구소득이 높은 자가 지역격차에 대해서 우려하는 정도가 높았다(<표 V-11> 참조).

(사) 주택문제

통일 후 주택문제에 대해서는 ‘악화’될 것이라는 견해가 43.5%

로 ‘마찬가지’(21.6%)나 ‘개선’(34.9%)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통일 후 경제상황 가운데 주택문제에 대해서 우려하는 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통일로 인해 북한주민의 남한 내 유입으로 주택난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통일이 북한지역을 새로운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 제공의 계기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감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1992년의 경우 통일이 주택문제를 개선하는 계기로 판단한 견해가 다수였던 사실에서도 나타난다. 2003년에 비해 2005년 조사결과 주택문제가 악화될 것이라는 견해가 높게 나타난 것은 그간 진행되었던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과 이로 인해 통일 시 북한주민의 남한으로의 대규모 유입을 우려하는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독일의 경우 구동독지역 주민들의 서독이주로 인해서 서독 지역에서 주택난이 발생한 반면 많은 동독지역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공동(空洞)화 지역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동독지역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경제가 회복해 감에 따라 동독지역에 대한 주택건설이 새로운 경기활력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표 VI-25> 통일 후 주택문제에 대한 전망: 연도별 비교

(단위: %)

	개선	마찬가지	악화
2005	34.9	21.6	43.5
2003	36.0	21.0	42.9
1992	43.2	29.3	27.5

통일 후 주택문제에 대해 배경변수별로 변량분석을 한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크게 우려하였으며, 30대 가운데서 주택문제에 대해서 우려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표 V-12> 참조).

(아) 법치문제와 범죄문제

통일 후 사회질서의 안정도 중요한 관심사항 가운데 하나이다. 통일 후 법치문제에 대해서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61.4%로 ‘마찬가지’(18.7%)나 ‘개선’(19.9%)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통일 후 어려운 경제상황과 빈부격차 및 지역격차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여 치안유지가 어려워지고 사회질서가 혼란한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한 결과이다. 즉 사회질서 유지에 대한 우려가 법치문제의 악화에 대한 전망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2005년의 경우 법치문제가 악화될 것으로 밝힌 견해가 61.4%로 2003년의 58.1%, 1992년의 54.9%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해 통일 후 빈부격차와 지역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통일 후 법치문제의 전망에 대해 배경변수별로 변량분석을 해 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우려감을 보였으며, 40대, 직업별로는 전문직과 주부, 도시거주자, 가구소득이 높은 층 가운데서 법치문제에 대해서 우려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V-13> 참조).

<표 VI-26> 통일 후 법치문제·범죄문제에 대한 전망: 연도별 비교
(단위: %)

	개선	마찬가지	악화
2005 (법치문제)	19.9	18.7	61.4
2003 (법치문제)	20.3	21.6	58.1
1992 (범죄문제)	18.0	27.2	54.9

(자) 가치관 혼란

통일 후 사회적으로 가장 우려되는 사항은 가치관의 혼란으로 나타났다. 75.9%가 가치관의 혼란이 악화될 것으로 밝혔으며, 11.3%가 마찬가지일 것으로 그리고 12.8%가 개선될 것으로 보았다. 이질적인 남북한 체제가 통일되면서 상이한 가치관이 충돌하는 것이 가장 큰 사회적인 문제로 지적된 것이다. 가치관 혼란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하는 견해가 1992년, 2003년, 2005년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늘어난 것은 역시 북한 경제난에 따라 남북한간 격차가 커진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지역의 주민들은 시장경제체제, 개인주의, 개방주의 등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혹독한 시련을 겪을 것이다. 북한지역 주민들은 국가주의와 집단주의적 사고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냉혹한 시장경제의 경쟁 원리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가치관과 행동원칙들이 무시되는 상황에서 소외감과 허탈감을 느낄 것이다. 또한 남한지역의 주민들도 통일 후 냉엄한 현실을 인식하고 정신적 혼란을 느낄 것이다. 그들은 북한지역의 재건을 위해 많은 경제적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통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부작용을 해

결하는 과정에서 통일의 결과에 대해서 냉소적인 태도를 지닐 수도 있다.

<표 VI-27> 통일 후 가치관 혼란에 대한 전망: 연도별 비교
(단위: %)

	개선	마찬가지	악화
2005	12.8	11.3	75.9
2003	10.0	14.3	75.7
1992	19.3	19.6	61.0

한편 통일 후 북한지역에서 가치관의 혼란은 세대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중장년층은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그만큼 그들의 불만도 클 것이다. 중장년층 가운데 직업교육과 재취업의 기회가 있는 기능직 종사자들은 현실적응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사무직 종사자나 인문·사회분야 종사자들은 현실에 적응하는 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북한지역의 젊은 층들은 중장년층에 비해 새로운 체제에 상대적으로 빨리 적응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생기는 불만과 좌절감도 클 것이다. 특히 북한지역에서 사회적응에 실패하고 하층집단으로 전락한 청소년층 가운데 독일의 스킨헤드와 같이 극단주의적 집단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이들을 중심으로 한 범죄와 극우정치이데올로기의 확대는 심각한 정치사회적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

통일 후 가치관 혼란에 대해 배경변수별로 변량분석한 결과 남성보다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우려감을 보였으며, 직업별로는 공무원 및 사회단체의 종사자와 주부, 대도시 거주자, 가구소득이 높은 층 가운데서 가치관혼란을 우려하는 정도가 상

대적으로 높았다(<표 V-14> 참조).

(차) 국제적 위상

통일 후 사회상에 관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된 항목이 통일한국의 국제적 위상이었다.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이 79.1%에 이른 반면, 11.5%가 마찬가지로 그대로 그리고 단지 9.4%만이 악화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분단의 극복을 통해 민족국가 건설을 이룬데 대한 자부심, 독립국가로서의 자주성 강화, 국력의 신장과 규모의 경제 실현 가능성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통일 후 국제적 위상에 대해 배경변수별로 변량분석을 해 보면 경제적 상황에 대한 여성의 부정적 평가와는 반대로 국제적 위상에 대해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40대 이상,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본인의 소득이 높을수록 국제적 위상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하였다(<표 V-15> 참조).

나. 통일정책과 국민적 합의

통일정책은 통일방안을 염두에 두고 정부에 의해 추진되거나 정부와 관련한 공식적인 결정 또는 실행계획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공공성을 지닌 중·장기적인 정책으로서, 미시적이고 단기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현안에 대한 대책인 대북정책을 포함하는 공공정책이다. 통일정책의 결정과정은 분단국가의 특징을 지닌 우리 정치체제의 핵심적 활동으로서 국민 모

두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통일정책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는 자신들의 현재와 미래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통일정책의 결정과정에 자신의 견해를 통합하려는 영향력의 행사 또는 국민들의 “자치역량”(empowerment)⁸의 행사라고 할 수 있다.

최근 통일정책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특징 중의 하나는 국민들의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과 도전이 이념적 분극화 현상과 결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햇볕정책”의 영향으로 분단 반세기 이상 동안 형성·지속된 우리 사회의 이념적 지평에 균열양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이념 갈등이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사회 전반의 문제와 결합되면서 국민들이 이념적 스펙트럼에 관계없이 모두 통일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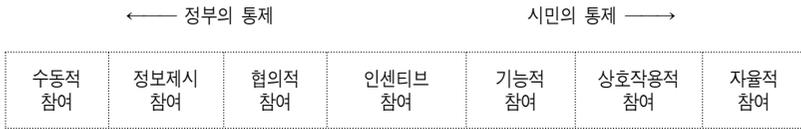
통일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를 프리티(J. Pretty)⁹의 참여유형 분류를 활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적극적인 참여를 의미하는 “자율적 참여”는 정부의 개입 없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국민들이 정책을 개발하며, 여기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유형이다. 이에 반하여 가장 소극적인 참여유형인 “수동적 참여”는 국민들이 어떤 통일문제가 이슈화되고 있고, 어떤 통일정책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관해

⁸ 자치역량이란 사람, 조직 및 공동체가 자신들의 일에 대한 통제력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R. C. Rich, M. Edelstein, W. K. Hallman and A. Wandersman, “Citizen Participation and Empowerment: The Case of Local Environment Hazard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No. 23 (1995), p. 657.

⁹ J. Pretty, *A Trainer's Guide for Participatory Learning and Action* (London: IIED, 1995) 참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견해를 듣기만 하는 형태이다. 현재 국민들의 통일정책에 대한 참여욕구는 과거의 수동적 참여에서 벗어나 자율적 참여로 진전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

<그림 VI-4> 시민참여와 자치역량의 스펙트럼



출처: 주성수, 『시민참여와 정부정책』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4), p. 64.

특히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진전이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크게 고조시켰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발전해 왔다.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하여 장관급회담과 장성급회담, 각종 경제 등 분야별 실무회담이 개최되고 있으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경의선 및 동해선의 철도·도로 연결 등 대규모 경협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 사회·문화 분야에서도 각종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진전으로 인해 우리 사회 내에서는 북한 및 통일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냉전적 시각에서 탈피하여 화해와 협력을 지향하고 북한을 포용하는 양상으로 점진적으로 바뀌고 있다.¹⁰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남북관계의 진전이 한국사회의 이념

¹⁰ 2003년 통일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국민지지도는 64.1%였다. 최진욱 외, 『남북관계의 진전과 국내적 영향』, pp. 125~126. 그러나 이번에 실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현재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국민지지도는 73%, 대북지원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72.3%, 남북경협사업에 대한 지지도는 8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 갈등과 통일문제에 대한 시각차를 첨예화시키는 측면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요청된다. 정부의 통일정책이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 속에 추진될 경우 국내적 갈등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국내적 실천력이 증가하고 대북 설득력도 크게 증가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 참여가 없는, 국민여론이 반영되지 않는 통일정책은 신뢰성을 상실하게 되어 기관손실(agency loss)을 증가시키게 되고 사회비용의 증대를 유발한다. 반면 국민의 참여가 가능하게 될 경우 국민들은 정부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가능하게 되고, 정부와 국민이 통일정책에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정책공동체의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통일정책 수립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도를 파악하기 위한 “귀하는 국민의 의견이 정부의 통일정책에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39.3%만이 반영된다고 응답한 반면, 60.7%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를 배경변수별로 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좀 더 반영되지 않는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직업별로 살펴보면 공무원 및 사회단체 종사자와 농어민을 제외한 모든 직업군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고학력자, 도시거주자, 본인소득과 가구소득이 높은 층 가운데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부정적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투명성 향상'(34.2%), '여야 정치인의 대북정책 합의'(28%), '시민단체의 역할 확대'(14.9%), '통일교육 확대'(11%), '언론의 통일지향적 보도'(7.5%), '기타'(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배경변수별로 살펴보면 직업군 가운데서 판매·서비스직과 생산직은 '여야 정치인의 대북정책 합의'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연령별로 살펴보면 '정부의 정책투명성 향상'에는 30대, '통일교육 확대'에는 20대, '야 정치인의 대북정책 합의'에는 60대 이상, '언론의 통일지향적 보도'에는 50대, '시민단체의 역할 확대'에는 20대가 각각 가장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성별로 보면 남성과 여성 공히 다른 분야에서는 비슷한 견해를 표명하였으나, '여야 정치인의 대북정책 합의'에 대해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상당한 차이를 두고 중요하다고 밝혔다.

<표 VI-28> 국민적 합의에 중요한 요인: 성별

(단위: %)

	정부의 정책투명성 향상	통일교육 확대	여야 정치인의 대북정책 합의	언론의 통일지향적 보도	시민단체의 역할 확대	기타
남성	32.7	10.4	31.4	7.3	14.3	3.9
여성	35.7	11.6	24.7	7.6	15.5	4.9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통일정책 추진과정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집단이 어느 집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란 질문에 가장 많은 24.7%가 ‘일반 국민’을 들었고, 다음으로 ‘정치인’(21.8%), ‘언론’(19.7%), ‘대통령과 청와대’(14.8%), ‘정부부처’(10.8%), ‘시민단체’(8.2%)의 순으로 정책형성에 중요한 영향력집단으로

판단하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언론’에는 50대, ‘일반 국민’에는 60대 이상, ‘정치인’에는 30대, ‘대통령과 청와대’에는 40대, ‘시민단체’에는 40대와 60대 이상이 각각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판단하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일반 국민’(28.8%), ‘언론’(20.2%), ‘정치인’(18%), ‘대통령과 청와대’(15.9%), ‘시민단체’(8.8%), ‘정부부처’(8.4%)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정치인’(25.5%)을 가장 중요하게 보았고, 다음으로 ‘일반 국민’(20.8%), ‘언론’(19.2%), ‘대통령과 청와대’(13.7%), ‘정부부처’(13.1%), ‘시민단체’(7.6%)의 순으로 지적하였다. 남녀 공히 정부정책의 입안을 주도하는 ‘정부부처’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한 점이 특이하였다.

다. 청소년의 통일관심

청소년들은 앞으로 통일을 이끌어내야 할 주역인 동시에, 통일에 따를 이익을 누릴 뿐 아니라 그 비용도 감당해야 할 당사자들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하여 건전한 시각과 관심을 가져야 함은 당연하다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국정홍보처가 (주)월드리서치를 통해 2005년 5월 27~6월 13일간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중학교 523명, 고등학교 477명)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통일 의식 조사’의 하나로 질문한 “통일의 방식, 시기, 통일 후 문제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통일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에 대하여 중·고교 청소년들의 58.8%가 ‘관심을 갖고 있다’(매우 관심 5.7%, 어느 정도 관심 53.1%)는 견해를 제시하였고, ‘관심이 없다’(전혀 관심없음 6.3%, 별로 관심없음 34.9%)는 의견은 41.2%로 나타났다.¹¹

반면 통일연구원이 2004년 통일교육의 방향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전국의 고등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북한·통일문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란 질문에 대해 청소년 가운데 ‘관심이 없다’(별로 관심이 없다 45.2%, 전혀 관심이 없다 12.2%)가 57.4%로서 다수를 차지하였고,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42.6%(약간 관심이 있다 35.5%, 매우 관심이 있다 7.1%)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또한 “북한·통일문제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란 질문과 함께 모두 4가지 응답항목을 제시한 결과 <표 VI-30>과 같은 응답을 보였다. 즉 북한·통일문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이다’에 49.9%, ‘딱딱하고 재미없는 주제이다’에 45.4%, ‘청소년보다는 성인들의 문제이다’에 41.7%, 그리고 ‘나와는 상관없는 문제이다’에 33.9%가 그렇다는 응답을 보였다.¹²

¹¹ (주)월드리서치, 『청소년 통일의식 조사』 (서울: 월드리서치, 2005. 6) 참조.

¹² 고정식 외,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4), p. 68.

<표 VI-29> 청소년의 통일에 대한 관심도

(단위: %)

	관심 있음		관심 없음	
	아주 관심	조금 관심	별로 무관심	전혀 무관심
[국정홍보처2005]	58.8		41.2	
	5.7	53.1	34.9	6.3
[통일연구원2004]	42.6		57.4	
	7.1	35.5	45.2	12.2
성인들의 평가 [통일연구원2005]	24.5		75.5	
	5.5	19	55	20.5

<표 VI-30> 청소년의 북한·통일문제에 대한 태도

(단위: %)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	66.1		33.9	
	13.0	53.1	27.5	6.4
청소년보다는 성인들의 문제	58.2		41.7	
	11.4	46.8	34.7	7.0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	50.1		49.9	
	9.2	40.9	43.9	6.0
딱딱하고 재미없는 주제	54.6		45.4	
	11.8	42.8	36.8	8.6

한편 (사)한국사회조사연구소가 2004년 9~12월 전국 467개 초·중·고교 학생 27,650명(초등 117개교 10,075명, 중학교 120개교 9,052명, 고등학교 230개교 8,523명)을 대상으로, 2003년 10~12월 전국 272개 초·중·고교 학생 16,297명(초등학생 69개교 4,151명, 중학교 69개교 4,355명, 고등학교 134개교 7,791명)을 대상으로, 그리고 2002년에는 11~12월 광주광역시 초·중·고등학교 학생 2,393명(초등학생 1,052명, 중학

생 661명, 고등학생 6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더라도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청소년들의 의견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였다(<표 VI-31> 참조).¹³ 이상에서 살펴본 듯이 조사기관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청소년들의 거의 과반수가 통일문제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I-31> 한국사회조사연구소의 설문조사: 통일에 대한 의견

(단위: %)

	꼭 통일이 되어야 한다	통일이 되지 않아도 상관없다	모르겠다	무응답
2004년 (전국)	47.9	39.5	11.4	1.2
2003년 (전국)	47.5	40.8	11.4	0.4
2002년 (광주)	63.9	28.5	7.2	0.5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청소년들의 통일문제 관심에 관한 자체평가를 성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의 설문과 비교한 결과이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75.5%가 ‘관심이 없다’(‘매우 관심이 없다’ 20.5%, ‘별로 관심이 없다’ 55%), 24.5%가 ‘관심이 있다’(‘매우 관심이 많다’ 5.5%,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 19%)고 응답하여, 성인들이 청소년 자신보다 청소년의 통일문제 무관심에 대해서 훨씬 높은 비율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배경변수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71%)보다 여성(79.8%)

¹³ (사)한국사회조사연구소,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결과”
<<http://www.ksrc.or.kr/youth.html>> 참조.

이, 도시규모별로는 읍면(63.7%)보다 도시(‘서울·광역시’ 76.9%, ‘중소도시’ 76.8%) 거주자들이 청소년들이 통일문제에 더 관심이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직업별로 보면 전문직이 82.2%로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였고, 반면에 농민들은 47.5%가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여 대조를 보였다. 한편 학생들도 78%가 ‘관심이 없다’라고 답하여 평균을 상회하였다.

한편 통일문제에 관심이 없는 청소년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란 질문에 47.5%가 ‘학교교육’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으며, 다음으로 ‘정부의 홍보’ 19%, ‘언론기관의 보도’ 16.2%, ‘부모 및 가족과의 대화’ 10.3%, ‘민간단체의 교육’ 5% 등의 순으로 지적하였다.

배경변수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학교교육’(49.2%) 다음으로 ‘정부의 홍보’(19.4%)를 더욱 필요하다고 본 반면에 여성은 ‘학교교육’(45.9%) 다음으로 ‘언론기관의 보도’(19.6%)를 지적하였다. 한편 설문에 참여한 20대의 학생들은 ‘학교교육’ 항목에 평균보다 높은 55.3%를 우선시 한 반면, ‘부모 및 가족과의 대화’의 항목에는 단지 1.5%만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여 평균인 10.3%와는 상당한 낮은 평가를 내렸다. 학생들이 부모 및 가족과의 대화가 청소년들의 통일관심 제고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은 오늘날의 가족관계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 및 사회단체 종사자들 가운데 ‘부모 및 가족과의 대화’(0%)를 중요하다고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으며, 이들은 또한 ‘민간단체의 교육’의 중요성도 0%로 평가하였다. 가구소득으로 볼 때 소득이 높을수록 ‘언론기관 보도’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였고(11%→17.4%→19.3%→19.7%), 반면 ‘부모 및 가족과의 대화’(14.8%→9.3%→8.5%→5.3%)와 ‘정부 홍보’(22.4%→17.8%→17.8%→15.9%)의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였다.

VII

요약 및 결론

1. 북한관련 인식

통일을 이루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대한 국민들의 응답은 향후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본 틀이 될 것이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북한과 관련한 질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었다.

첫째,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을 ‘협력대상’ 혹은 ‘지원대상’이라고 인식하는 응답자가 전체의 64.9%에 달했다. 이것은 2003년에 실시한 조사결과(55.4%)와 비교했을 때 10% 가량 높은 수치이다. 특히 2003년에 비해 북한을 ‘경계대상’ 혹은 ‘적대대상’이라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률이 41.1%에서 31.1%로 감소했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들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금강산관광사업, 개성공단사업, 철도·도로 연결사업과 같은 남북경협사업의 순조로운 진행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남북경협사업이 보다 활기를 띠게 되고 남북한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류가 활발해진다면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인 인식은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많은 응답자들은 북한이 변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북한이 변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68.4%) 변화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자들(31.6%) 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런 수치는 과거 조사 결과와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북한이 핵개발을 하는 이유 중 39.5%가 ‘체제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 다음으로 ‘협상력제고’라고 응답한 사람이 36.9%였고, ‘대남위협’과 북한의 ‘대내결속’이 이유라는 응답은 각각 14.8%, 8.8%로 낮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국민들 다수가 북한의 핵개발이 우리에게 위협적이라기보다는 북한 자체의 생존과 이익 때문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증가한 것과 연관이 있다.

넷째,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 이유를 생존과 이익 때문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핵무기 보유선언에 대해서는 위협을 느낀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많았다. 즉, 북한의 핵보유 선언에 대해 위협을 느끼는 국민(54.9%)이 그렇지 않은 국민(45.1%)보다 약 1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북한이 무력도발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응답자들은 가능성이 ‘전혀없다’나 ‘별로없다’고 대답했다.(57%) 이는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자(43%)보다 14%정도 높은 수치로 과거 조사와도 큰 차이를 보였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 10년간의 조사 결과 중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을 가장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전쟁도발 가능성이 없다는 응답은 1995년 45.3%, 1998년 38.9%, 1999년 50.8%, 2003년 39.9%였다).

여섯째,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에 살고 있는 북한 이주민에 대한 감정은 과반수 정도가 별감정이 없다고 대답했지만, 거리감이 느껴진다는 응답자(16.9%)보다는 친근감이 느껴진다

는 응답자(36.3%)의 비율이 훨씬 높아, 새터민에 대한 애정 또는 연민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 우리 국민들은 점차 북한에 대해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으며,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낮게 보고 있다. 즉 북한을 적이나 경쟁상대가 아니라 협력의 대상 혹은 원조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바람직한 통일정책을 형성하고 적극적으로 통일을 추진해 나가는 데 국민적 지지와 성원을 받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2. 통일관련 국제환경 인식

통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변 환경을 우리의 정책과 조화시키는 것이 외교적으로 중요한 과제이다. 통일외교의 노력은 주변 4국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국가이익과 정책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여론조사의 결과가 나타내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잘 파악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정책 방향을 강구하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해서 집행해야 할 것이다.

첫째, 주변 4국 어느 나라도 한반도 통일에 우호적인 나라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과반수에 이른다는 점이 주목된다. 주변 4국은 공식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공식적인 입장 표명과 실질적인 지지와 협력은 별개의 문제이다. 이들 국가는 한반도 통일이 자국의 국

익과 전략적 안보이익에 도움이 되거나 적어도 그에 대한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없다고 판단할 때 우리의 통일 노력에 대해 실질적인 협력과 지지를 보낼 것이다. 우리나라가 세계 11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로서 성장하였지만, 한반도 주변 4국은 경제력, 군사력, 국제정치적 영향력 등의 분야에서 여전히 우리나라를 압도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주변 4국이 한반도 통일에 실질적으로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입장을 지니도록 하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특이한 현상은 우리 사회에서 주변국가, 특히 미국에 대한 인식이 20대와 30대층에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에 대한 인식은 한·미 동맹 관계의 새로운 정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증대하는 것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양국의 국내적 변화, 국제정치경제질서, 한반도 정세의 변화 등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하여 보다 포괄적이며 상호 이익을 교환하는 관계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20대와 30대 연령층에서 중국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이 다른 연령층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각성과 중국과의 관계 확대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연령층도 안보 분야에서는 미국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관계를 실용주의적으로 보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는 자세를 가지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셋째, 본 조사 결과 향후 우리나라의 통일외교 추진과정에서

는 미국과 중국이 가장 중요한 나라임이 확인되고 있다.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자회담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한·미간의 정책협력의 중요성과 함께 중국의 역할이 확대되는 현실은 우리 국민의 인식과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통일 외교 추진과정에서 이들 두 나라와의 관계는 보다 중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일본과 러시아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매우 약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하여 이들 국가의 역할이 경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일본의 역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것은 2005년도에 일본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의 지속, 일본의 과거사왜곡, 독도문제 등으로 일본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이 더욱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경제 및 문화 관계 등의 측면에서는 물론 북·일 관계와 남북관계의 상관성,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체제 등 모든 측면에서 한·일 관계는 여전히 우리의 국가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러시아와의 관계 또한 경시될 수 없다. 특히 통일을 준비하는 과제로서 경제력의 향상을 가장 중시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인식을 보면, 미국, 중국, 일본 및 러시아의 주변 4국이 모두 우리의 유리한 통일 환경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나라들이다.

3. 대북정책관련 인식

가. 대북정책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야말로 향후 정부가 통일정책을 추진해 나가기위해 귀기울여야 하는 사항이 될 것이다. 대북정책에 대한 여론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였다.

우선,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평화번영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73%가 찬성한 반면, 27%만이 반대한다고 하였다.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한 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지지는 향후 대북정책 추진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평화번영정책과 과거 햇볕정책과의 유사성에 대한 조사 결과, 비슷하다는 의견(72.7%)이 다르다는 응답(27.8%)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국민들의 다수가 평화번영정책을 햇볕정책과 유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평화번영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이 평화와 번영이라는 민족 공통의 목표 추구, 동북아차원으로 남북협력의 확대, 대내적 합의 기반의 중시 등 햇볕정책과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알림으로써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이번 조사 결과 국민들이 대북지원사업 및 남북경협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응답자들은 대

북지원정책에는 72.3%, 금강산관광산업에는 83.9%, 개성공단 사업에는 86.7%, 남북경협사업에는 84.8%라는 높은 수치의 찬성율을 보였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대북지원사업이 다른 남북협력사업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반대율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대북지원사업이 일방적인 ‘대북퍼주기식’이라는 인식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일방적인 대북지원보다는 개성공단이나 남북경협과 같이 남한과 북한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보다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일방적인 대북지원보다는 남과 북이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대북사업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응답자들은 대북정책의 문제점으로 ‘국민적 합의부족’(26.4%), ‘과도한 대북지원’(26%), ‘정책투명성 부족’(22.4%), ‘안보문제 소홀’(13.3%), ‘한·미공조 부족’(9.1%) 순으로 꼽았다. 정책추진과 관련된 국민적 합의와 정책투명성에 대한 응답 비율을 합하면 약 50%에 이른다. 따라서 국민들은 대북지원, 안보문제 소홀 등 구체적인 문제보다 대북정책의 결정 및 정책추진과정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고 실현가능한 대북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정책의 수립과정과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다섯째, 국민들은 대북정책의 주안점으로 ‘국가안보’(49.2%)를 꼽았다. 그러나 ‘남북관계개선’(48.2%)과 ‘경제적 실리’(42.9%)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들은 국가안보를 중시하는 보수적인 입장과 남북관계 개선이나 경제적 실

리를 중시하는 실용주의적인 입장이 거의 비슷하게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면에서 평화변영정책은 안보와 경제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으며, 이것은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지지율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나. 북핵문제

북한 핵문제에 대해 국민들은 평화적 해결원칙이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며,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미공조가 중요하며, 북핵문제가 악화될 경우에도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이 지속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사안별로 보면, 국민들은 정부의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이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60.2%)이 그렇지 않다는 의견(39.8%)보다 높았다. 이런 결과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의 순기능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북핵문제 해결에 한·미공조가 중요하다는 응답은 81.9%로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18.1%)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런 의견이 남북협력보다 한·미협력을 중요시한다고는 단정지을 수 없으며, 북핵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의 입장조율이 필요하며 미국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런 응답이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다.

셋째, 북핵문제가 악화될 경우, 남북경협이 지속되거나 확대되어야 한다고 응답(금강산 관광 51.9%, 개성공단사업 55.9%)한 수가 많았다. 대북지원에 대해서는 45.7%가 지속되거나 규

모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은 북한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그 해결과정에서 미국과의 공조를 중시한다. 또한 북핵문제가 악화되더라도 대북지원과 남북경협이 지속되기를 희망했다.

4. 국민적 합의형성관련 인식

가. 통일 후 국내 상황

국민들은 통일 이후의 사회상황과 관련하여 통일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크게 고양될 것으로 보았으며, 경제성장과 민주화에 대해서는 낙관적 전망과 우려를 함께 표명하였다. 반면 ‘가치관 혼란’, ‘빈부격차’, ‘물가’, ‘지역격차’, ‘법치문제’, ‘실업문제’, ‘주택문제’ 등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감을 표시하였다. 특히 전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더 큰 우려감을 보였다.

첫째, 정치적 민주화에 대해서는 통일 후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과 악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 기대감과 우려를 동시에 보여주었다. 1992년과 2003년의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통일후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이 크게 줄어들었다.

둘째, 통일 후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47.4%이지만 악화될 전망도 42.8%에 이르렀다. 이것은 남북한의 경제력에 대한 평가, 통일후 독일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통일한국

의 경제상황에 대하여 낙관적으로만 평가할 수 없다는 심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만 1992년 및 2003년과 비교할 때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심리가 하향곡선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이 우려보다 일관되게 높게 나타난 것은 통일이 수반할 경제적 성장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경제성장을 제외한 통일 후의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부정적 전망이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빈부격차’(72.2%), ‘물가’(66.7%), ‘실업’(50.9%), ‘지역격차’(67.3%), ‘주택문제’(43.5%)에 대해 통일이후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이다. 그 중에서 특히 통일 후 빈부격차의 항목에서 악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 북한 경제난의 심화에 따라 통일 후 남북한 주민 간에 빈부격차가 크게 나타날 것이란 전망을 보여주었다.

2003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2005년의 경우 경제상황에 대한 상기 항목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2003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1992년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2005년의 경우 부정적으로 평가한 모든 항목에서 부정적 응답률이 크게 상승하였다. 북한의 경제난, 한국의 IMF 등을 거치면서 국민들이 통일 이후 경제문제 전반에 걸쳐 깊은 우려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통일 후 사회적으로 가장 우려되는 사항은 가치관의 혼란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5.9%가 가치관의 혼란이 악화될 것으로 밝혔다. 또한 통일 후 법치문제에 대해서도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통일 후 어려운 경제상황과 빈부격차 및 지역격차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여 가치관과 사회질서가 혼란한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다섯째, 통일 후 통일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이 월등하게 많았다. 이러한 기대에는 통일을 이룩한 데 대한 자부심, 독립국가로서의 자주성 강화, 국력의 신장과 규모의 경제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통일정책과 국민적 합의

정부의 통일정책이 형성되고 추진되는 과정에서 다수의 국민들은 국민여론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무엇이 가장 중요한 요인인가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투명성 향상’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여야 정치인의 대북정책 합의’, ‘시민단체의 역할 확대’, ‘통일교육 확대’, ‘언론의 통일지향적 보도’ 등의 순으로 지적하였다.

한편 국민들은 정부의 통일정책 형성에 대한 가장 영향력이 큰 집단으로 ‘일반국민’을 지적하여, 통일정책 형성에 현재 국민의 여론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대조를 이루었다. 이것은 국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통일정책 형성에는 여론반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평가인 것이다. ‘일반국민’ 다음으로 ‘정치인’, ‘언론’, ‘대통령과 청와대’, ‘정

부부처’, ‘시민단체’의 순으로 정책형성에 중요한 영향력집단으로 지적되었다.

다. 청소년의 통일관심

설문조사 응답자의 75.5%가 청소년들이 통일문제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다른 설문조사에서 청소년들의 거의 과반수가 통일문제에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결과와 비교해 보면, 성인들이 청소년의 통일문제 무관심을 훨씬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청소년들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학교 교육’을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다음으로 ‘정부의 홍보’, ‘언론기관의 보도’, ‘부모 및 가족과의 대화’, ‘민간단체의 교육’을 지적하였다.

5. 결론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보다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과거 북한을 적대국가 혹은 경쟁대상으로 보던 인식이 줄어들어 반면, 북한을 협력대상 또는 지원대상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은 북한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이 무력도발할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 이주민들에 대해서도 애정과 연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북한에 대

한 긍정적인 인식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금강산관광, 남북경협, 개성공단사업 등의 결과라고 생각된다. 또한 이산가족상봉이나 8.15 공동행사와 같은 남북한간의 공동 문화행사 개최를 통해 북한이 더 이상 적이나 아닌 같은 민족임을 인식하게 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향후 대북사업이 보다 활발해지고 민간교류가 빈번해진다면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한반도 통일환경에서 주변 4개국들이 한반도 통일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다고 인식한다. 비록 주변국들은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이들의 실질적 이해관계는 좀 더 복잡하다는 것을 국민들도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민들은 한반도 통일에 미국과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른 강대국들의 역할의 중요성도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

평화변영정책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하고 있으며, 대북지원 및 남북경협도 대체로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평화변영정책과 햇볕정책과의 차별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대북정책이 국민적인 합의와 정책적인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원하고 있다. 국민들은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한·미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핵문제 악화시에도 대북지원과 남북경협의 동력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통일 후 국내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 과반수가 통일후 정치적 민주화가 개선될 것이라는 견해

를 나타냈다. 그리고 대다수가 경제성장, 빈부격차, 물가, 실업률 등 경제적인 문제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관의 혼란도 악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반면, 다수가 통일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높아질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들이 통일에 대해 기대하고 있으면서도 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 준다.

그리고 국민들은 정부의 통일정책에 여론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국민들이 정부의 통일정책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을 일반국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정책투명성을 향상하고 국민여론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통일문제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이 적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통일관련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03-01	북한의 인권부문 외교의 전개방향	최의철	저	6,000원
2003-02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이우영	저	5,000원
2003-03	『조선녀성』 분석	임순희	저	6,000원
2003-04	북한의 개인송배 및 정치사회화의 효과에 대한 평가연구	서재진	저	6,500원
2003-05	21세기 미,중,일,러의 한반도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여인곤 외	공저	8,500원
2003-06	부시 행정부의 군사안보전략	이현경	저	5,000원
2003-07	일본의 군사안보전략과 한반도	김영춘	저	4,000원
2003-08	중국의 한반도 안보전략과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최춘흠	저	3,500원
2003-09	한반도 평화정착 추진전략	박영호 외	공저	8,500원
2003-10	핵문제 전개 및 내부 정치변동의 항배와 북한 변화	박형중	저	7,000원
2003-11	미국의 대이라크전쟁 이후 북·미관계 전망	최진욱	저	5,000원
2003-12	북한의 후계자론	이교덕	저	4,500원
2003-13	김정일 정권의 안보정책: 포괄적 안보개념의 적용	박영규	저	5,500원
2003-14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전현준	저	4,000원
2003-15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남북관계 및 북한 경제지원 시나리오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3-16	통일예측모형 연구	박영호 외	공저	8,000원
2003-17	동북아 안보·경제 협력체제 형성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3-18	국제적 통일역량 강화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3-19	북한 재산권의 비공식 이행	임강택 외	공저	5,000원
2003-20	북한 노동력 활용방안	최수영	저	3,500원
2003-21	대북 인도적 지원의 영향력 분석	이금순	저	5,500원
2004-01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저	6,000원
2004-02	A CRITICAL JUNCTURE	최진욱	저	4,000원
2004-03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임순희	저	5,000원
2004-04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5	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지역패권 변화 연구	황병덕 외	공저	9,500원
2004-06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	김영춘	저	4,000원
2004-07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한국의 국가안보	홍관희	저	4,500원
2004-08	남북경협 실패사례 연구: 대북 경험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	김영윤	저	7,500원
2004-09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과 북·미관계	정영태	저	5,000원
2004-10	미국의 대북인권정책 연구	김수암	저	6,000원
2004-11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4-12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문제	박영호	저	5,500원
2004-13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외자유치 전략 :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공저	6,000원

2004-14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서재진	저	7,500원
2004-15	CSCE/OSCE의 분석과 동북아안보협력에 주는 시사점	손기웅	저	5,000원
2004-16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내적 기반구축방안 : 통일문제의 갈등구조 해소를 중심으로	조한범	저	4,500원
2004-17	국제적 통일역량 실태분석	여인곤 외	공저	9,000원
2004-18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연구	이금순	저	5,000원
2004-19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 전망 : 실질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최수영	저	4,000원
2004-20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이 석	저	9,000원
2005-01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Non-Nuclear Policy : A Case of South Korea	전성훈	저	7,000원
2005-02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	최의철	저	8,000원
2005-03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체계: 형성과 변화	조정아	저	7,000원
2005-04	Energ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Issues and Suggestions	김규륜	저	4,500원
2005-05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안보전략	김영춘	저	5,000원
2005-06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이금순	저	6,500원
2005-07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임순희	저	5,500원
2005-08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황병덕	저	9,000원
2005-09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 방안 연구	김영윤	저	7,000원
2005-10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 방안	손기웅	저	5,500원
2005-11	러시아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조한범	저	6,000원
2005-12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 국가 및 지역차원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13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	김수암	저	7,000원
2005-14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 지속과 변화	허문영	저	7,500원
2005-15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과정과의 비교분석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5-1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전망	조 민	저	6,000원
2005-17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이 석	저	7,000원
2005-18	북한의 산업구조 연구	최수영	저	5,500원
2005-19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배정호	저	6,500원
2005-20	부시행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	김국신	저	5,000원
2005-21	미국 외교정책에서의 정책연구기관(Think Tanks)의 역할과 한반도 문제	박영호	저	8,500원
2005-22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23	미국과 중국의 대북 행정책 및 한반도 구상과 한국의 정책공간	박형중	저	5,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3	서재진 외 공저	9,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3</i>	서재진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4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4</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03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3~2004		6,000원
2004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4~2005		6,000원
200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5~2006		6,000원

학술회의총서

2003-01 신정부 국정과제 추진방향		5,000원
2003-02 한반도 평화변영과 국제협력		5,500원
2004-01 김정일 정권 10년: 변화와 전망		10,000원
2004-02 한반도 안보정세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10,000원
2004-03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8,000원
2004-04 남북한 교류(화해)·협력과 NGO의 역할		7,500원
2004-05 한반도 평화회담의 과거와 현재		5,500원
2004-06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6,500원
2004-07 한국 및 미국의 국내환경변화와 한반도 평화		10,000원
2004-08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변영과 한·중 협력		9,000원
2005-01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8,000원
2005-02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10,000원
2005-03 Infrastructure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Current Status and Tasks		10,000원
2005-04 Implementing the Six-Party Joint Statement and the Korean Peninsula		10,000원
2005-05 북한 광물자원 개발 전망과 정책방안		10,000원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12권 1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2권 2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1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2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1호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2, No. 1 (2003)	9,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2, No. 2 (200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1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2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1 (2005)	10,000원

영문초록

2003-1 KINU Research Abstracts '02	10,000원
------------------------------------	---------

협동연구총서

2003-01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			10,000원
2003-02	통일정책 추진체계 실태연구	허문영 외	공저	10,000원
2003-03	남북관계의 진전과 국내적 영향	최진욱 외	공저	10,000원
2003-04	법·제도분야 통일인프라 실태 연구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3-05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3-06	국내적 통일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 경제분야	이상만 외	공저	10,000원
2003-07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3-08	종합결과보고서: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조사	박영규 외	공저	9,000원
2004-01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10,000원
2004-02	정보화시대 통일정책 거버넌스 개선방안	여인곤 외	공저	7,000원
2004-03	남북관계 개선의 국내적 수용력 확대방안 : 분야별 갈등의 원인 및 해소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4	통일관련 법적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4-05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고정식 외	공저	10,000원
2004-06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4-07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금순 외	공저	8,500원
2004-08	종합결과보고서: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 방안	김영춘 외	공저	5,500원
2004-09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10,000원
2004-1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아시아			

	인식의 모색	오명석 외	공저	5,500원
2004-11	동북아문화공동체와 유럽문화공동체의 공통성과 차별성	김명섭 외	공저	5,000원
2004-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국·중국·일본의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비교연구	양영균 외	공저	10,000원
2004-13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 연구와 관리	박경하 외	공저	10,000원
2004-14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동남아 문화 공동체 형성 가능성 분석	서중석 외	공저	10,000원
2004-15	동북아 평화문화 비교 연구	조한범 외	공저	9,500원
2004-16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	최진욱 외	공저	6,500원
2004-17	동북아공동체의 행정조직 구축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의 행정부인 집행위원회 조직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윤종설 외	공저	5,000원
2004-1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실태 및 개발 동향과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 가능성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4-1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기반 구축방안	전재경 외	공저	8,000원
2004-2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방안 : 형사법제를 중심으로	이진국 외	공저	6,000원
2004-2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교류협력방안	김이선 외	공저	8,500원
2004-2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협력 연구	윤철경 외	공저	10,000원
2004-23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분야 교류·협력의 실태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4-24	동북아 국가간 관광교류협력 방안(1) : 잠재력과 장애요인	박기홍 외	공저	6,000원
2004-25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1)	김광익 외	공저	4,000원
2004-26	종합결과보고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김광익	저	4,500원
2005-01-01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사례	김명섭 외	공저	9,500원
2005-01-0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일 대중문화 교류의 현황 및 증진 방안 연구	문옥표 외	공저	10,000원
2005-01-03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를 위한 동남아시아 정치 사회 문화 인프라 연구	서중석 외	공저	9,000원
2005-01-04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전성훈 외	공저	10,000원
2005-01-05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5-01-06	동북아 지역인권체제(포럼) 구성 추진	최의철 외	공저	10,000원
2005-01-07	동북아공동체의 정책결정기구 구축에 관한 연구	윤종설 외	공저	10,000원
2005-01-0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인프라 분석과 공동체 형성 방향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5-01-0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지원방안 연구(II)	전재경 외	공저	10,000원
2005-01-10	변화하는 동북아 시대의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장준오 외	공저	8,000원
2005-01-1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김이선 외	공저	10,000원
2005-01-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			

구축 연구	오해십 외	공저	9,000원
2005-01-13 동북아시아 3국 학생 및 교원의 상호이해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한만길 외	공저	9,000원
2005-08-01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10,000원
2005-08-02 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 방안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5-08-03 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 제도혁신과 가치합의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08-04 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 방안	이철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5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박광기 외	공저	10,000원
2005-08-06 남북한 경제통합의 인프라 확장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7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5-08-08 종합결과보고서: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김영춘 외	공저	10,000원
2005-09-01 동북아 NGO 백서	전봉근 외	공저	10,000원
2005-09-02 동북아 NGO 연구총서	조한범 외	공저	10,000원

◆ 비매품 ◆

통일정세분석

2003-01	중국의 통일외교안보정책 전망: 10기 전인대 1차회의 결과분석		신상진
2003-02	북한 핵문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향후 전망		임강택
2003-03	북한 인권실태에 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임순희
2003-04	한·미 정상회담과 공조방향		이현경, 박영호
2003-05	일본의 안보개혁과 유사법제 정비		배정호
2003-06	북한 병력제도 변화와 병력감축 가능성		박형중, 정영태
2003-07	11기 1차 최고인민회의 개최 동향 분석		박형중
2004-01	2004년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박형중, 전현준, 이교덕, 최진욱	
2004-02	최근 북한 변화 및 개혁 동향		북한연구실
2004-03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분석 및 전망		조한범
2004-04	최근 북한의 주요 대남논조: 「민족공조」론 강조의 배경과 의도		박형중
2004-05	미 국무부의 '2004년 북한 인권보고서' 분석		최의철
2004-06	제2차 6자회담 분석과 전망		전성훈
2004-07	제4대 러시아 대선결과 분석		여인곤
2004-08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2차 회의 결과분석		이석, 최진욱
2004-09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우리의 고려사항		최의철, 임순희
2004-10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방문 결과 분석		이교덕, 신상진
2004-11	2차 북·일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영춘
2004-12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추진 실태		전성훈
2004-13	2004년 상반기 북한 동향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서재진, 이교덕	
2004-14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 분석		김영춘

2004-15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방안	김영윤, 박정란
2004-16	미의회 '북한인권법': 의미와 전망	김수암, 이금순
2004-17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Ⅰ) : 케리 민주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김국신
2004-18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Ⅱ) : 부시 공화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김국신, 박영호
2004-19	중국공산당 16기4중대회 결과분석	전병곤
2004-20	2004년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 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4-21	중국의 동북공정과 우리의 대응책	전병곤
2005-01	2005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및 정책 전망 이교덕, 서재진,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2005-02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김영윤, 최수영
2005-03	북한의 「핵보유」 선언 배경과 향후 입장 전망	정영태
2005-04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 박영호, 김영춘, 여인곤, 전병곤	
2005-05	북한인권 관련 미 국무부 보고서 분석 및 정책전망	최의철, 김수암
2005-06	중국 10기전인대 제3차회의 결과 분석	전병곤
2005-07	일본의 보수우경화 동향분석	김영춘
2005-08	농업분야 대북 협력 방안	김영윤, 최수영
2005-09	2004년 북한 영향실태조사결과 보고서 분석	이금순, 임순희
2005-10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제11기 제3차 회의 결과 분석	박형중, 최진욱
2005-11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을 중심으로	최의철, 임순희
2005-12	최근 중·일관계와 갈등요인 분석	배정호
2005-13	북한인권국제대회 동향과 향후 전망	김수암
2005-14	북한 주권국가 인정문제의 국제법적 조명: 동·서독 사례와 향후 통일정책 과제	황병덕
2005-15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손기웅
2005-16	일본 총선 결과 분석	김영춘
2005-17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김영윤, 이 석, 손기웅, 조 민, 서재진, 최수영
2005-18	미·일동맹의 강화와 주일미군의 재편	배정호
2005-19	주변4국과의 연쇄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박영호, 배정호, 최춘흠
2005-20	APEC 정상회의의 의의와 한국의 역할	김규륜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05-01	북핵보유선언: 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2005-02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현안과 대책 이기동, 서보혁, 김용현, 이정철, 정영철, 전병곤, 곽진오	
2005-03	6·15 남북공동선언 재조명: 이론과 실제	홍용표, 조한범
2005-04	광복 60년과 한반도: 한미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문제	김근식
2005-05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조성렬

Studies Series

2004-01	The Successor Theory of North Korea	Kyo Duk Lee
2004-02	Nine Scenarios for North Korea's Internal Development	Hyeong Jung Park
2004-03	The Impact of Personality Cult in North Korea	Jae Jean Suh
2004-04	The Unofficial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n North Korea	Kang-Taeg Lim and Sung Chull Kim
2004-05	A Study of the Social Control System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Hyun Joon Chon
2005-01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a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through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Kang-Taeg Lim & Sung-Hoon Lim
2005-02	The Food Crisis and the Changing Roles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Women	Lim Soon Hee
2005-03	Evaluatio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Task for Success	Young-Yoon Kim
2005-04	North Korea's Market Economy Society from Below	Jae Jean Suh
2005-05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and the Role of Party Organizations under the Kim Jong-il's Reign	Hyeong-Jung Park and Kyo-Duk Lee
2005-06	The DPRK Famine of 1994-2000: Existence and Impact	Suk Lee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제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 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